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 박형중 · 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

연구책임자: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사현 (사단법인 임진강 대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 KINU 연구총서 18-21


발행일 2018년 12월 14일
저자 한동호, 박형중, 최사현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929-5 93340
가격 14,0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9
I. 서론 한동호·박형중	13
II. 이론적 검토 박형중	21
1. 스탈린주의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24
2.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52
3. 소결	74
III.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모델 시론 박형중	77
1. 신-전체주의 모델 개념들의 적용	79
2.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소련/중국과 비교한 특징	91
3. 소결	121

IV. 북한식 전체주의와 조직생활사회 최사현·박형중	125
1. 기본 특성	127
2. 하부구조	144
3. 제도와 운영	177
4. 문화적 특징과 변천	216
5. 소결	254
V.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인권적 관점	
한동호	259
1.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262
2.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와 북한인권 침해현상	269
3. 조직생활 '동학'의 변화와 그 추세	284
4. 소결	300
VI. 요약과 정책적 함의 박형중·한동호	303
참고문헌	3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7

표 차례

〈표 IV-1〉 조직생활 단위와 혁명초소 단위의 비교	180
〈표 IV-2〉 소학교 행정과 소년단 조직의 비교	192
〈표 IV-3〉 생산행정과 청년동맹 조직의 비교	195
〈표 IV-4〉 주거 행정조직과 주거 생활조직의 비교	202
〈표 V-1〉 최근 10년 간 남한 유입 북한이탈주민 숫자	298

그림 차례

〈그림 IV-1〉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1일 보고체계 209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비교 사회주의 및 비교 정치학적 연구를 통해 북한체제를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들 및 인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냉전 종결 이후에 재정립된 신-전체주의론은 각 국가가 ‘총체적 통제’의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지, 대내외 여건, 실현수준과 양상 등이 국가별 혹은 시기별로 다르며, 국가에 의한 통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순응, 적응, 저항, 회피 등 쌍방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소련, 중국, 북한을 비교할 때, 북한식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조직생활 사회 모델이다. 북한의 조직생활은 정권의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 시도라는 전체주의적 의도를 가장 철저하게 또한 북한식으로 체현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은 표현의 자유, 각종 부패현상, 체제 이탈 등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서 질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의 전개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국가-사회 관계, 전체주의, 총체적 통제, 조직생활 사회, 북한 인권 침해

Abstract

State-Society Relations in North Korea from Comparative and Human-Rights Perspective

Dong-ho Han, Hyeong-jung Park, and Sa-hyun Choi.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state-society relations in North Korea. The research reviews theories and debates on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studies on the Stalinist period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North Korean system is defined as North Korean-style totalitarian, industrial society. This means that the North Korea regime's totalitarian project of 'totalistic control' has to address and be inter-penetrated with various pre-existing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of geo-politics, and the simultaneous effort for industrialization. This research also emphasizes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regime's project of 'totalistic control' and the various reactions on the part of the population.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systems are differentiated from the Soviet one, in terms of shared elements or structures for much stronger 'totalistic control.' In addition, the degree of political determination for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totalistic control' has not been the same in the discrete periods in North Korea. In tandem, their unintended

consequences and various adaptive reactions on the part of the population have not remained the same. Both have been the strongest between mid-1970s to mid-1980s. Since then, North Korean totalitarianism has entered into a long process of decay. The changing modes of state-society relations have important ramifications on degree and way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Keywords: State-Society Relations, Totalitarianism, Totalistic Control, Society Constituted by Regimented Life in Organizational Unit,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I

서론

한동호 · 박형중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북한을 상정하는 이미지도 변화해 왔다. 이와 관련 핵심사항은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한 현실과 인식에서의 변화였다.

198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인식은 국가/정권이 사회/개인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를 실현시키는 메커니즘으로써, 지도자 개인에 대한 극단적 권력집중을 의미하는 수령독재, 당조직의 사회 침투의 철저성, 주체사상의 내면화, 생활총화와 주민등록과 평정서와 같은 개인통제 체제, 계획경제와 배급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권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조직의 개인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인식되어, 개인 또는 사회의 대응이나 동태는 연구주제로서 설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인식은 보다 쌍방향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국가/정권 뿐 아니라 사회의 동태가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등장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 1990년대에는 북한식 고전 사회주의 기본체계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일부가 심각히 붕괴 또는 약화되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였다. 가장 심각하게 약화된 것은 계획경제와 배급제였다. 정권의 재정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정권 기관의 특권 상업활동이 확산되었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통제 능력이 약화되고, 주민의 상업적 생계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사회적 과제 부여가 증가하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수령독재의 기본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당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이 약화되었다. 취약해진 국가/정권의 사회 장악을 보완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군부, 비사회주의 투쟁과 관련 검열, 행정부 및 인민보안성 등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형법체계를 가다듬고 경찰력과 법 집

행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개총살 등을 활용한 공포정치로 체제를 유지했다. 1990년대 선군체제를 거쳐, 2010년대 초중반 당 중심의 체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첫째 과제는 국가-사회 관계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북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는 1980년대까지는 국가의 압도적 우세에서 ‘사회’라는 것은 존재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반대로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사회의 상호 작용 양상, ‘사회’의 위치와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식의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고전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국가-사회 관계에서 쌍방향의 상호 작용이 존재했고, 그것이 북한체제 전체의 동태성과 역사적 진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국가는 압도적 규정력을 가지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애초부터 무모한 것이어서 다양한 양태의 혼란과 역기능과 대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총체적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대응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초래한 혼란과 역기능을 활용하는 한편, 수동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 회피, 일상적 저항을 만들어 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Ⅱ장에서 이와 관련 있는 주요한 선행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했다. 그 중에서 특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서방 연구에서 그리고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쟁되고 개념화되고 자리매김되었는가를 살폈다. 두 맥락의 연구에서 냉전시기 주류였던 전체주의론은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에서 국가의 사회에 대한 압도적 규정

력만을 강조했다.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수정주의는 국가의 규정력 대신에 ‘아래로부터’의 즉 ‘사회’의 형성력을 일반적으로 강조했다. 그런데 두 조류는 냉전 종결 이후 상호 통합되었고, 그리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 ‘위로부터의 압도적 규정력’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반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시각이 우세하게 되었다.

제Ⅲ장은 앞서 전개한 이론 리뷰를 통해 획득한 통찰을 북한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기서는 냉전 시기 전통 전체주의 이론 대신에 신-전체주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는 두 가지 인식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총체적 통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그 실현 양태는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신-전체주의 이론을 적용하면, 북한체제는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라고 설정된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북한 고유의 전통과 문화 및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저발전 국가에서의 공업화 추진 맥락에서의 상호 작용과 상호 침투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련-중국-북한의 체제들이 비교·검토된다. 중국과 북한에서 체제 건설은 건국 초기에 당시 소련의 ‘절정기 스탈린주의’(1946~1950)를 전범으로 하여 건설되었다.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스탈린 통치 시기를 통틀어 국가의 사회 통제에 관한 의지와 능력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다. 중국에 도입된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은 1950년대 중반 중국에서 급진화되었고, 재차 북한에 수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북한에 소련과 구별되는 유형의 국가-사회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핵심적 특징은 국가의 사회 통제가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운영의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련과 비교할 때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는 특징은 도시-농촌의 이주 금지와 차별, 직장 이동의 금지, 공업관리에서 당의 주도권, 단위/직장이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고, 개인에 매우 포괄적 통제를 한다는 것, 성분제적 차별의 존재, 소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학습 및 비판-상호 비판의 정치의례가 전 주민에게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

제Ⅳ장은 제Ⅲ장에서 도출된 북한체제 기본 모델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여기서는 소련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이 동일 모델이라 할 수 있지만, 재차 북한을 중국과 구별시켜주는 하위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중국에서의 모택동 체제는 1960년대 중후반 ‘문화혁명’의 극단화를 거쳐, 1970년대에는 덜 극단적인 수준에서 안정화되다가 1979년 이후 개혁개방 과정에서 대체로 폐기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60년대 초까지 북한식 ‘총체적 통제’의 기본 체계를 수립한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총체적 통제’의 수준을 현격히 강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완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점차로 약화된다. 그 이후 1990년대 중반에서 2012년 김정은 정권 수립까지는 전통적인 ‘총체적 통제’의 기본구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가운데, 비사회주의 투쟁과 검열의 빈도 증가 등 새로운 통제 방식이 시도되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은 ‘당의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발표하는데, 이는 북한이 적어도 ‘총체적 통제’에 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총체적 통제’에 대한 정권의 의지와 능력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제Ⅳ장에서의 핵심적 관심은 ‘총체적 통제’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높았던 1970년대 중반에 성립한 조직생활사회의 하부 구조, 조직과 운영의 방식,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되었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리고 주민의 대응이다. 1970년대 중반 조직생활사회는 남북경쟁의 본격화, 북한이 당시 당면했던 내부적

과제의 해결,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프로젝트의 진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출범했다. 조직생활사회의 하부구조로서는 동원경제와 배급제, 대안의 사업체계, 주체사상, 그리고 주민등록과 성분제, 대규모 소개와 추방, 여행증 제도 등을 거론했다. 여기서는 특히 1970년대 중반 동원경제를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의도가 결과적으로 ‘총체적 통제’의 현격한 강화라는 정치적 필요성을 탄생시킨 중요 배경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또한 조직생활사회의 제도와 운영과 관련, 혁명초소(직장)별 조직생활의 구성, 조직의 개인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 그리고 소년단, 사로청, 노동당, 직맹, 여맹, 그리고 인민반에서의 조직생활에 대해 서술했다. 아울러 IV장은 정권측의 이러한 시도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어떠한 적응과 대응을 초래했는가를 조직생활문화라는 개념을 빌어 서술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조직생활의 의도와 현실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이의 일반 특징과 시기별 특징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제V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여러 논의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여기서 제시된 인권적 관점이라 함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의한 국제인권기준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다룸에 있어 이러한 인권적 관점은 적실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연구 자체가 협의의 의미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사회간 관계맺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즉,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전반적 추세로서의 국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초기 연구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모델 시론을 다룬 제II장과 III장은 북한정치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IV장은 앞장에서 언급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북한체제의 경험적 실재를 묘사하고 서술한다. IV장의 서술에는 이론적 분석과 함께 그 체제를 직접 살아본 경험자의 시각과 직접 경험이 여러 일화와 경험적 소회를 통해 반영된다. 마지막 제V장의 경우,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권리별 분석이 시도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있어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사실, 그리고 인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사회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틀을 정립했지만, 이를 북한의 역사와 경험적 현실에 보다 더 완전하게 적용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의 초점은 국가-사회 관계의 북한식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1970년대 중반의 조직생활사회의 기본체제와 동태성이다. 그 이외의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관해서는 초보적 연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관련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도 초보적 방향 제시에 그쳤다. 여러 동향을 보면, 김정은 시대에는 정권이 재차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국가의 사회 장악을 강화하고자 한다 해도, 1980년대 말과 같은 전형적 상황은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는 1990년대 이후 정권-사회의 양측 변화를 공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측의 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될지 또는 분야별로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것인지는 앞으로도 관찰과 분석을 요한다.



II

이론적 검토

박형중 (통일연구원)

국가-사회 관계라는 주제는 북한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 주제로 설정되고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그렇지만 상층 권력관계 연구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그 외 북한 정치 연구 관련 많은 주제는 국가-사회 관계라는 개념틀 아래 포괄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연구에서 전통적 주제 중의 하나인 정권의 사회 통제와 관련한 연구이다. 나아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연구도 국가-사회 관계 연구의 일부로 설정될 수 있다. 그 연구의 핵심 주제는 국가/정권이 개인 또는 사회(그룹)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정권의 시장 현상에 대한 대응 등도 국가-사회 관계라는 문제틀에 포괄될 수 있다.

국가-사회 관계라는 문제는 정치 철학 및 비교정치학의 일반 주제 중의 하나이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다양한 상황과 관련하여 적용되었다.¹⁾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공산주의 연구에서 국가-사회관계가 어떻게 개념 설정되고 이론화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소련연구와 중국연구 성과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여기의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가장 깊고 집중적이며 또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연구와 중국연구에서도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한 문제 설정의 구체적 방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소련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제상으로는 스탈린주의 연구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적 시도들에 대해 주목한다. 그 이유는 소련연구 중에서도 스탈린주의 시대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라

1) Beth A. Mitchneck, *State, Society, and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 2011); Joel S. Migdal,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1); Jefferey M. Sellers, "State-Society Relations," Mark Bevir (ed.), *The SAGE Handbook of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 2011), pp. 124~141.

는 화두가 논의의 핵심 축이었고, 또한 그 연구가 매우 다양하고 깊
이 있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연구는
개혁개방이 초래한 정치 및 사회 변화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대체로 중국연구는 모택동 시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일체
화되어 있던 것으로 상정하는 한편, 개혁개방 과정을 통해 점차 국
가와 사회가 상호 구별되는 실체로 등장하는 현상에 주로 주목한다.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II장 서술의 일차적 목적은 소련과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라는 문제 설정이 어떠한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 다루어져 왔는가를
이론사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이론적 통찰을
토대로 III장에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이론 모델’을 만들어내
는 시도가 행해질 것이다.

1. 스탈린주의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공산주의 연구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또한 오랜 동안 지배적이었
던 개념은 전체주의론이다. 공산주의 연구는 단순화하면 전체주의
이론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축으로 사실상 전개되
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체주의론에 관한 논란은 이중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한 축은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냉전시기 반공산주의적
투쟁 구호로 활용되었다는 것과 관련한다. 정치적 투쟁 구호인 전체
주의를 학문적 논의에 등장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전체주의론이다. 다른 학문적 개
념처럼 전체주의론도 그 이론과 설명이 분석적 차원에서 얼마나 올

바른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산주의 연구는 오랫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었다.²⁾ 여기서는 그것의 중요한 일부가 전체주의론을 둘러싸고 일종의 정-반-합의 대결과 논쟁을 전개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첫째 단계인 1950~1960년대에는 국가 및 억압 중심의 전체주의 개념이 지배적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둘째 단계인 1970~1980년대에는 전체주의의 기본틀을 수정한다는 의미의 수정주의가 등장했다. 전체주의론은 공산정권에는 단지 위로부터 억압과 감시만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는 오류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국가만 행위주체가 아니라 사회도 행위의 주체이며, 위에서 아래로 억압과 감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사회적 지지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에서 1980년대 학문적 주류로 정착한다. 그렇지만 셋째 단계인 1990년대 들어서서, 전체주의와 수정주의는 공히 비판 받고 동시에 각기 새로이 해석되는 것을 통해 통합된다. 즉 신-전체주의 겸 탈-수정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을 국가-사회 관계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또한 핵심 명제를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사회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논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소련연구 중에서 스탈린주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문제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한다. 스탈린주의 연구는 그 자체로서 소련연구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며, 여러 세대의 많은 학자들이 관여했고, 다양하고 또한 깊게 연구되었다. 또한 소련연구 중에서 적어도 1990년대 들어서 러시아의 국

2) 미국에서 소련연구의 전반 역사에 관하여, Vladimir Shlapentokh, "American Sovietology from 1917~1991: an Attempt at Diagnosis," *Russian History*, vol. 22, issue 1, pp. 406~432; 스탈린주의 연구에 관하여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213~243 참조.

가 아카이브의 개방이라는 환경 아래서 진행되었던 연구 분야이다. 스탈린주의 연구라 할 때 그 포괄 시기는 통상적으로 (농업집단지화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를 위한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던) 1929년부터 스탈린 사망 시기인 1953년까지이다.

스탈린주의 연구에서 특히 개념적 차원의 학술 연구에서 핵심 주제는 국가-사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인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한 이론 동향의 연구와 실제 스탈린주의 연구에서의 핵심 쟁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서는 먼저 스탈린주의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주요 명제의 변화를 전체주의론의 시기, 수정주의론의 시기, 후-전체주의 겸 탈-수정주의 시기의 3단계로 개괄적으로 서술한다.

가. 전체주의론

먼저 1950~1960년대 공산주의 연구의 지배적 개념은 전체주의론이었다. 1920~1930년대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독일의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볼셰비즘(Bolshevism)에서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공통성을 보았다. 그리하여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전체주의라는 동류의 한통속으로 이해했다. 2차대전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패배한 이후 냉전시기 전체주의론의 현실 대상으로서는 공산주의만 존재했다. 그리하여 전체주의론은 1950~1960년대 소련과 동유럽,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국가를 분석하고 또한/또는 투쟁하는 데 적용되었다.³⁾

3) Eckhard Jesse, "The Two Major Instances of Totalitarianism: Observ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oviet Communism and National Socialism," Achim Siegel (ed.), *The Totalitarian Paradigm After the End of Communism* (Amsterdam: Rodopi B.V., 1998), pp. 129~150.

다시 말해 전체주의는 이 사회들에 대한 학문적 분석틀이자 반공주의적인 냉전의 정치투쟁의 구호였다.

전체주의론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했지만,⁴⁾ 이것들을 전체주의라고 통칭할 수 있는 공통적 명제는 국가가 개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해 총체적(totalistic)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체주의는 통상적인 독재(dictatorship) 또는 전제 autocracy)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다.⁵⁾ 이 두 체제는 보통 정치적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권만을 제한하지만, 전체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 뿐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다원주의도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권만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전체주의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서도 냉전 시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론은 Friedrich와 Brzezinski가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1965)에서 전개한 주장이다.⁶⁾ 여기서 전체주의는 “이 정권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 특히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위를 통제하는 것”⁷⁾을 특징으로 한다.

4) 미국 뿐 아니라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도 전체주의론이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독일에서 전체주의론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는 나치즘과 동독 사회주의의 경험 때문이었다. 독일의 전체주의론자들은 나치즘과 동독사회주의를 종종 비교했고, 또한 전체주의를 ‘정치종교’로 간주하는 논리, 또는 사상지배체제(ideocracy)론도 발전시켰다. Bruno Seidel and Siegfried Jenkner (eds.), *Wege der Totalitarismus-Forsch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4); Hans Maier, “‘Totalitarismus’ und ‘Politische Religionen’: Konzepte des Diktaturvergleich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Jahrgang 43 (1995), heft 3, pp. 387~405; Uwe Backes and Steffen Kailitz (eds.), *Ideocracies in Comparison: Legitimation-Cooptation-Repression* (London: Routledge, 2015); Johannes Gerschewski, “Weltweites Ende oder Renaissance des Totalitarismus,?” *GIGA Focus*, no. 4 (2008) 참조.

5)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p. 15.

6) 서방 세계 출판 저작으로 이밖에도,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2』, (파주: 한길 그래이트북스, 2006) 참조.

7)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 16.

전체주의 정권을 전체주의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차이와 혁신은, “대중 사회의 총체적 파괴와 재건에 헌신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이 존재하고, 이들이 꿈꾸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총체적 통제가 행해지며, 그 총체적 통제는 현대 기술적 수단에 바탕한 조직과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란 “현대의 정치적 기술적 조건 하에서 총체주의적(totalistic) 의도를 실현시키는 통치 체제”이다. 총체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존재하는 경우 여섯 가지의 증후군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등장한다. 여섯 가지의 증후군은 “통치의 구조, 제도와 절차”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통상 일인이 이끄는 단일정당, 테러적 경찰, 의사소통 독점, 무기 독점, 중앙 지령경제이다. 이 여섯 가지 증후군은 고전 전체주의 이론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식별해 내는 핵심 기준이었다. 자세히 보면,⁹⁾

1. 정교한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는 공식 교리체계를 가지는데 사람의 생존의 모든 주요 측면을 포괄한다. 해당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야 한다. 적어도 수동적으로라도 그러해야 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완전한 종말 상태를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이 이데올로기는 천년왕국설적 주장을 내세운다. 이 주장은 현존 사회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며, 현존 세계를 정복하여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2. 단일한 대중정당: 통상 일인 즉 “독재자”가 이 정당을 지도한다. 이 정당은 전체 주민의 비교적 작은 비율(10% 정도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당의 핵심 추종자는 이데올로기에 정열적이고

8) *Ibid.*, p. 17.

9) *Ibid.*, p. 22.

의문없이 헌신하며, 그 이데올로기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도록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 정당은 위계적이고 과두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통상 정부 관료체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완전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

3. 테러 체계: 이는 육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다. 테러는 당과 비밀-경찰에 기반한 통제를 통해 실현된다. 이 테러체계는 정당을 뒷받침하지만 지도자를 대신하여 당을 감독하기도 한다. 테러체계는 통상 정권의 분명한 '적들'을 향해 행사되지만, 주민 중에서 다소간 자의적으로 선택된 일부 계급을 향해서도 행사된다. 비밀경찰 또는 당이 지도하는 바의 사회적 압박 또는 테러는 현대 과학,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심리학을 활용한다.
4. 당과 정부가 신문, 라디오와 영화와 같은 효과적 대중적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거의 완전하게 독점적으로 통제: 이러한 통제에는 기술적으로 제약만이 존재한다.
5. 유사하게, 군사 전투의 모든 무기에 대한 효과적 사용이 거의 완전한 독점: 여기에는 기술적 제약만 존재한다.
6. 전체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지령: 관료적 조정을 통해 과거에는 자율적이었던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결사와 그룹 행동을 중앙집권적으로 지령하고 통제한다.

그런데 총체주의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총체적 통제가 반드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은 “고도로 중요한 효과를 남긴다.”¹⁰⁾ 다시 말해 전체주의란 정권이 ‘총체적 통제’를 완전히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추진하고, 그에 의해 “중요한

10) *Ibid.*, p. 17.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총체적 통제의 의도가 반드시 완전히 실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도와 노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체주의 독재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체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일정하게 공통적인 조치와 정책을 유발하지만, 그 의지와 노력의 강도, 구체적인 추진 양상은 시간에 따라 또한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¹¹⁾

나. 1970~1980년대 수정주의론

두 번째 단계인 1970년대 전체주의론은 이론적·정치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수정주의자들에게 학문적 패권을 상실한다. 전체주의론이 도전을 받게 된 배경은 학문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¹²⁾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면, 1950년대부터 점차 두드러진 공산주의 진영의 분화와 내부 대립,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개혁 동향은 전체주의론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방과 서방 간의 긴장완화에 따른 냉전적 대결 의식의 약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대 및 신좌파의 대두는 전체주의론이 함축하고 있던 정치적, 감성적 금기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당시 젊은 세대 연구자들은 전체주의론의 타당성을 학문적으로 문제시했다. 이들은 전체주의론의 이론적 기본틀을 중대하게 수정하고자 했기에 수정주의라는 이름을 얻었다.¹³⁾ 즉 전체주의론이 말하듯이 소련 사회가 정권의 조작과 동

11) *Ibid.*, p. 16, p. 23, p. 25.

12) Abbott Gleason,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1995); Achim Siegel, "Introduction: The Changing Fortunes of the Totalitarian Paradigm in Communist Studies,"; Klaus von Beyme,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A Reassessment after the End of Communist Rule," Achim Siegel (ed.), *The Totalitarian Paradigm After the End of Communism* (Amsterdam: Rodopi B.V., 1998), pp. 9~35.

원의 수동적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 소련에 관련해서도 사회사(social history)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한다는 것, 정권과 사회 또는 그 일부 사이에 협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자 했다. 전체주의론이 국가의 억압과 지배를 분석의 핵심축으로 놓고 즉 ‘위로부터의’ 관점에 의해 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고 하면,¹⁴⁾ 수정주의적 연구는 사회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기반에 대한 연구를 즉 ‘아래로부터의’ 분석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했다.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은 또한 사료를 중시하고 연구의 학문적 객관성을 강조했다. 1970년대 지배적인 전체주의론자들과 당시 소수파이자 도전적인 수정주의 젊은 학자들 사이의 논쟁에서는 ‘색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정주의자들은 전체주의론자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찌들어있다고 비난했고, 전체주의론자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스탈린의 범죄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는 맑스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사회사 연구 역사학자 중심의 수정주의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련연구에서 영-미 학계의 주류로 정착했다.

수정주의의 대표적 학자 중의 한 사람인 Sheila Fitzpatrick은 개인적으로 전체주의론과 관련하여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¹⁵⁾

첫째, 전체주의 모델은 냉전적 반공산주의 방식의 매우 강한 가치를 담고 있었는데, 이는 역사가는 비당파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상

13)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Soviet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no. 4 (2007), pp. 77~91;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Retrospective: A Personal View,” *Slavic Review*, vol. 67, no. 3 (2008), pp. 682~704.

14) 한국의 북한연구 경우는, 북한에 대해 냉전적 적대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체주의론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체주의론처럼 ‘억압과 지배’를 핵심축으로 놓는 방식의 북한연구 경향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잘 서술된 대표적 저서로, 안희창, 『북한의 통치체제: 지배구조와 사회통제』(서울: 명인문화사, 2016).

15)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Retrospect: A Personal View,” pp. 682~704.

반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론은 “소련체제를 악으로 또한 자유 세계의 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소련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의문시하는 것은 소련이 악이자 적이라는 것을 의문시하는 것”과 등치했다는 것이다.¹⁶⁾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전체주의론이 ‘소련을 완전히 꼭대기에서 아래로 가는 실체’로 인식한 것을 문제시 했다. 즉 다음과 같은 소련 인식을 문제시 했다.

“(전체주의론에 따르면) 자율적 결사의 파괴 및 사람들 간 유대의 파괴는 무기력하고 수동적 사회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사회는 정권의 통제 및 조작의 대상에 불과했다. 통제의 주요 메커니즘은 테러였고, 부차적으로 선전이 동원 도구로 활용되었다. 정권(정권-‘당’-‘스탈린’의 세 단어는 서로 구별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되었다)은 단일체로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에 나와 있고 소련의 모든 선언에 인용되어야 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행동이 향도되었다.”¹⁷⁾

그런데 수정주의자들이 볼 때, 어떤 정권도 전체주의 모델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토록 사회를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즉 어떤 정권도 단순히 사회를 억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행위의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또한 계획에 입각하여 사회를 희망된 방향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야망찬 시도를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⁸⁾

셋째, 수정주의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체주의적 인식이 등장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체주의론자들이 소련의 공식 문헌에만

16)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Soviet History,” p. 80.

17) *Ibid.*

18)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Retrospect,” p. 683.

집착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 접근은 주로 정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 주요 자료 원천이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와 레닌과 스탈린 저작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프라우다와 스탈린 저작만 본다면, 모든 것이 위로 부터 통제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원자료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련의 공식 그림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림이고 당이 완전 통제하고 있고 당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의 그림이다. 소련 공식 문헌은 이 그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체주의자들은 똑같은 그림을 수용하고 재생산한다. 단지 그들은 그 그림의 가치 평가는 뒤집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¹⁹⁾ 다시 말해 소련 공식 서술에서는 당이 항상 올바랐다고 하는 데 비해, 전체주의 서술은 당은 항상 틀렸다고 주장한다.”²⁰⁾

수정주의에 속하는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은 각기 나름의 상이한 관점에서 전체주의론을 비판했다. 수정주의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사 학자들은 역사 연구에서의 원자료, 즉 아카이브 활용을 강조하면서, 전체주의론자들이 공식문헌에만 의존하고 또한 (반-소련적인 한에서) 소문과 풍문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비판했다. 수정주의 정치학자들은 전체주의론자들이 소련을 주로 나치 독일과만 비교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은 두 대상이 전체주의적 동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에 비해 수정주의 정치학자들은 (사회적 이동성, 정치 참여 등과 같은) 서방 사회과학의 개념을 활용하고 소련과 서방 또는 제3세계와의 비교를 시도했다.²¹⁾

19) *Ibid.*

20)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Soviet History,” p. 81.

21) *Ibid.*

넷째, 전체주의론이 위로부터의 억압과 통제에 주 관심을 두었다면, 스탈린시대를 연구하던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문제와 기타 ‘아래로부터’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1980년대 후반기, 소련 아카이브가 일부 비밀해제됨에 따라 온갖 종류의 반-정권 행동을 보여주는 원자료를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항 연구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했다.²²⁾

여기서 수정주의자들의 넷째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넷째 사항은 수정주의자들이 위로부터의 억압과 통제를 중시하는 전체주의자와는 거의 상반되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관련한다. 수정주의자들의 다수는 사회사 연구자이거나 그러고자 했으며, 소련을 꼭대기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묘사하고자 했다. 이들은 결사와 그룹의 표현에 심한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회는 정권 통제의 단순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것이라 상정했고, 정치체제가 진실로 단일체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었고, 공식 이데올로기적 선언들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들은 테러만으로는 순응을 만들어 낼 수 없고 특히 2차 대전과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정권의 생존도 보장하고 또 승리하기까지 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 정권이 생존을 넘어서 전쟁승리와 같은 업적을 내자면, 누군가가 이러한 체제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정권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지가 존재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 이들은 보았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수정주의의 주요 과제는 ‘소련 사회가 정권이 행하는 조작과 동원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

22) *Ibid.*, p. 86.

23) *Ibid.*, p. 81.

는 것'²⁴⁾ 또는 정권이 테러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²⁵⁾이었다. 다시 말해, 수정주의자들은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수준과 성격, 사회가 ‘아래로부터의 주도성’을 발생시킬 능력, 사회 또는 그 일부가 정권과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²⁶⁾ 그런데 특히 ‘정권에 대한 대중적지지’가 존재했음을 긍정하는 식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에는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된 것이 1920년대 말 (당시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의) ‘문화 혁명’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수정주의자들은 “주도적 행위가 위로부터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들이 볼 때, 전통주의자들은 오직 “위로부터의 혁명”만을 보고 있었다. 수정주의자들은 노동계급으로부터의 상향이동을 엘리트 형성의 수단이자 정권 정당성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930년대 소련공산당은 “전체주의적” 통제를 통해 전 사회를 장악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²⁷⁾

이러한 식의 서술은 당시 전체주의적 통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통념은 스탈린이 모든 것을 주도했고, 당-정기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관념에 입각했다. 이에 대해 수정주의자들은 권력은 통치자가 독점하여 주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치체제에는 다양한 이익그룹과 상충되는 지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수정주의자들은 권력은 ‘위로부터/아래로부터’ 쌍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관료적 및 직업적 이익 그룹이라는 관념, 제도적 및 중앙-주변 갈등이라는 관념을 소련

24) *Ibid.*

25)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Retrospect,” p. 683.

26) Sheila Fitzpatrick, *Stalinism: New Directions* (New York: Routledge, 2000), p. 6.

27) *Ibid.*, p. 7.

역사에 도입했으며, 행정위계 및 직업 그룹의 중간 층위에서 투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성공적이었다.”²⁸⁾ 이와 같은 복잡성 때문에 지도부의 의도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라서 “총체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²⁹⁾

다. 1990년대 이후 1: 신-전체주의의 검 탈-수정주의론

세 번째 단계는 정-반-합의 ‘합’의 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1991년 냉전 이후의 국면이다. 이와 관련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냉전종결 및 소련/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전체주의론은 학문적 백안시(白眼視, ghetto)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르네상스를 맞았다.³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1980년대부터 동유럽 반체제 지식인 사이에서 전체주의론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론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³¹⁾ 둘째, 정치적 그리고 연구 환경의 변화는 미국의 소련 연구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냉전의 종식은 소련연구를 따라

28)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Retrospect,” p. 699.

29) 스탈린시대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로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으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리하르트 로렌쯔, 『소련 사회사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30) Uwe Backes, “Nach dem Zusammenbruch des Kommunismus: 25 Jahre Totalitarismus forschung,” *Argumente und Materialien zum Zeitgeschehen*, heft 104 (2016), pp. 15~23; 이와 같은 사례로 다음 참조. Eckhard Jesse, *Totalitarismus im 20. Jahrhundert: Eine Bilanz der Internationalen Forschung* (Bon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Klaus-Dietmar Henke, *Totalitarismus* (Dresden: Hannah-Arendt-Institute für Totalitarismusforschung, 1999); Achim Siegel (ed.), *The Totalitarian Paradigm After the End of Communism* (Amsterdam: Rodopi B.V., 1998); Juan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New York: Rienner Publishers, 2000).

31) Jacques Rupnik, “Der Totalitarismus aus der Sicht des Ostens,” Eckhard Jesse (eds.), *Totalitarismus im 20. Jahrhundert: Eine Bilanz der Internationalen Forschung*, pp. 423~449.

다니던 정치적 부담을 소멸시키는 한편,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 가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의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³²⁾ 또한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함께 소련의 아카이브가 열리기 시작하여 특히 1990년대에는 연구의 자료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세대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이 주요하게 등장했다.³³⁾ 다른 한편에서는 일련의 학자들은 전체주의론자와 수정주의자를 공히 비판하는 한편, 양자의 관점을 통합하는 견해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전체주의론자의 ‘위로부터’ 억압과 지배에 주목하는 국가중심의 관점과 수정주의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는 사회 중심 관점이 각각이 함축하고 있는 일면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양자 주장의 핵심 방향을 수용하여 통합했다.³⁴⁾ 즉 스탈린주의는 양자를 통합해야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 억압적이고 총체적 통제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국가 즉 ‘위로부터’ 관점, 다른 편에서 그러한 국가의 시도에 대해 저항하거나 지지하거나 회피적/독립적인 또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서로 상이한 이익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 그리고 개인과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동태성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연구자 집단은 신-전체주의론 겸 탈-수정주의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전체주의론은 전통 전체주의 개념이 가지고 있던 정서적 정치적 투쟁 도구로서의

32) Sheila Fitzpatrick, *Stalinism: New Directions*, p. 2.

33) *Ibid.*

34)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Astrid Hed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New Perspectives on Communist Regime,”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2 (2004), pp. 166~184.

35)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참조.

성격을 탈피하고 단지 학문적 분석적 차원에서 재선택되고 있다. 탈-수정주의는 전통 전체주의에 대한 반-명제(anti-these)라는 일면적 편파성을 극복하면서 그 개념을 학문적 분석적 차원에서 재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전체주의 겸 탈-수정주의의 대표 주자는 Stephen Kotkin이다. 그는 전통 전체주의와 수정주의를 공히 비판하면서도 두 개념이 내포하는 생산적 측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해 내었다. Kotkin에 우호적인 Igal Halfin과 Jochen Hellbeck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소련 질서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볼셰비키 프로젝트를 배경에서 형성하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맑스주의-레닌주의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 많은 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전체주의적 해석은 소련 사회를 정권의 유토피아적 야망의 희생물로 축소시켰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론에서 소련 사회의 위상은) 전능한 사회공학자가 다루는 실험대상이라는 위상이었다. 많은 수정주의 학자들은 스탈린주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도전했고, 볼셰비키 과업에 주민의 큰 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고유한 결점이 있었다. 수정주의는 소련체제의 작동을 탈-이데올로기화했으며, 소련 체제로부터 이득을 본 그룹의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그 내구성을 설명했다.”³⁶⁾

전체주의 및 수정주의의 두 견해와 비교할 때 Kotkin 주장의 핵심 방향을 단순화해서 요약한다면, “(수정주의자들이 견지했던) 주체(subject)에 관한 적극적 견해를 수용함과 동시에 (전체주의자들이

36) Igal Halfin, Jochen Hellbeck, “Rethinking the Stalinist Subject: Stephen Kotkin’s ‘Magnetic Mountain’ and the State of Soviet Historical Studies,” *Jahr 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44, no. 3 (1996), p. 456.

내세웠던) 볼셰비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³⁷⁾이다.

Kotkin은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출발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이루어 내었다. Mark Edele가 평하는 바에 따르면, Kotkin은 각 측면에서 Michel de Certeau, Michel Foucault, Pierre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개념을 활용했다. 첫째, De Certeau가 ‘국가의 대전략’과 ‘거주지에서의 작은 전술들’을 구별한 것이 Kotkin이 ‘위로부터’ 역사와 ‘아래로부터’ 역사를 하나의 정합적 모델로 통합할 수 있게 따라서 국가 대 사회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개념적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Kotkin의 초기 대표작 *Magnetic Mountain* (1997)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국가의 대전략’이고, 2부는 ‘사회주의를 살다: 거주지에서의 작은 전술들’이다. 그는 “공산당 프로젝트의 무거운 강압력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것이 “개인의 행위가 발생하는 행위영역을 이룬다”고 본다. 즉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보통사람이나 고위층이나를 막론하고 사람 생활의 일부를 이루며, 그들의 행동과 대응행동, 정책과 반응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우회되는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매우 우세하지만 양측 간에 ‘쌍방향의 투쟁’이 발생한다.³⁸⁾

둘째, Foucault와 마찬가지로, Kotkin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권력 차이를 오인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정치적 포괄적 질서가 개인의 실천에 그리고 개인 자신의 내부에 뿌리를 두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 Kotkin은 Foucault가 “주체성(subjectivity)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 또는 국가의 주도성 아래서 개인이 주체로

37) *Ibid.*

38)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 21.

만들어지고, 또한 스스로를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³⁹⁾ 즉 스탈린주의에서는 ‘보통사람들의 꿈과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의 꿈’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통합’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것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⁴⁰⁾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사람이 또한 모든 경우에, 또한 동일 수준으로 공식 레토릭(rhetoric)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레토릭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배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개인의 사고와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개인 시민 수백만의 개인 실천을 통해 재생산된다.”⁴¹⁾

이 경우, ‘권력은 단순히 중앙 기구에 위치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메커니즘은 국가 기구체제와 나란히, 한층 더 일상적 차원에 즉 상호 감시 그리고 (권력과) 자기-동일시의 메커니즘 같은 한층 더 일상적 차원에 존재한다. 이러한 일상 차원의 권력이 국가를 -경찰을 포함 주요 국가기구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⁴²⁾ 다시 말해, 스탈린주의 정치체제는 그(=정치체제) 이외 사회에 대해 또는 개인에 대해 단순하게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와 개인 모두의 일부라는 것이다.⁴³⁾

39) *Ibid.*, p. 22.

40) *Ibid.*, p. 23.

41)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vol. 8, no. 2 (2007), p. 368.

42)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p. 23.

43)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p. 368.

셋째, Bourdieu와 마찬가지로, Kotkin은 제약하는 구조들이 어떻게 행위성의 기초가 되는가(그리고 따라서 구조적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De Certeau처럼, 그의 개인은 전체주의적 조종자의 실놀림에 놀아나는 수동적 꼭두각시가 아니라 국가가 그어놓은 힘의 장 내에서 적극적 행위자였다.⁴⁴⁾ 즉 Kotkin이 그의 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심각한 강압적 힘’을 가지고 있는 당과 그 프로그램은 한편에서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방해하고 금지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의도했던 안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즉 통치와 권력은 생산적 측면도 가졌다는 것이다. 즉 Kotkin의 책은 억압 또는 금지된 것만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 것 또는 생산된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연구는 어떤 이슈를 문제라고 설정할 때 발생하는 종종 기대하지 않은 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을 도입하는 시도, 그에 뒤따르는 투쟁, 특히 어떤 조건으로 투쟁이 일어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의론이 공산주의 정권이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 자유비밀 선거,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 등의 폐지와 같이) 무엇을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다면, Kotkin은 스탈린주의 정권이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냈는가에도 주목한다. 즉

“사회 파괴를 통해 거대 국가를 만들어 낸 것만으로 스탈린주의를 특징지을 수는 없다. 그 독특성은 거대국가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소유관계, 사회구조, 경제의 조직, 정치 실천과 언어에 나타나 있다. 스탈린주의는 자본주의의 거부에

44) *Ibid.*, p. 365.

기초한 특별한 사회주의 문명의 등장을 의미했다.”⁴⁵⁾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소련 국가를 상대하는 경우에서처럼, 자신에 대한 강제의 무게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Kotkin 책에서 분석 대상인) 도시 거주민이 단순한 수동적 억압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 권력은 효과를 낳는바, 그것은 경험, 정체성, 저항이다.⁴⁶⁾ 즉 “도시 거주민이 영위하게 된 바의 그러한 생활, 그들이 형성하게 된 바의 그러한 정체성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숭고한 행위 속에서 전개되는 일상생활의 방식에 대한 열성적 참여, 그 방식의 빈번한 회피,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지략 있지만 지역적으로 국한된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⁴⁷⁾ Kotkin이 설정하고 있는 바의 파괴/금지와 생산성 또는 제약구조와 행위성, 또는 강제와 높은 자발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소련의 검열이 단순하게 정보를 억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종류의 정보를 매우 활동적이고 끈덕지게 전파했으며, 또한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특별한 프레임을 반복적 방법을 통해 머리에 심어주었다.”⁴⁸⁾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 방식의 검열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단순한 조작의 문제로서만 고찰되어서는 안된다. 효과적이자면, 선전은 사람들이 일정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스토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스토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능력이 있

45)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p. 2.

46) *Ibid.*, p. 22.

47) *Ibid.*, p. 21.

48) *Ibid.*

어야 하며, 사람들이 배워서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사회에서 허가된 단어와 가치를 자기 자신의 말로 표현해 내는(Speaking Bolshevik!) 과정은 전혀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그것은 단순하게 식량과 주택에 대한 접근과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친척의 안전과도 연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절묘하든 조악한 것이든 강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발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진실된 이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⁴⁹⁾

이와 같은 Kotkin이 내세우는 이론적 입장의 특징을 수정주의의 대표자인 Fitzpatrick의 평가에 따라 재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달리 설정되고 있다. 즉 “전체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를 표준적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탈-수정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를 세계관 그 이상으로, 즉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무엇으로 이해한다.”⁵⁰⁾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밝혀내고자 했다면, Kotkin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즉 Kotkin은 스탈린주의를 (반-자본주의적인 새로운) ‘문명’으로서 간주하면서,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체적 사회적 건조물로 이해한다.⁵¹⁾ 셋째, Foucault식 관점에 입각, 권력 관계는 불가피 다면적이고 또한 중심이 없기(multiple and decentered) 때문에 전체주의론 식의 ‘위로부터’의 접근, 그리고 수정주의식의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⁵²⁾

49) *Ibid.*, p. 358.

50) Sheila Fitzpatrick, “Revisionism in Soviet History,” p. 88.

51) *Ibid.*

52) *Ibid.*, p. 89.

라. 1990년대 이후 2: Mark Edele

Edele는 전체주의, 수정주의, (Kotkin의) 스탈린주의 문명론을 비판하고 승계하면서 종합하고자 한다.⁵³⁾ 과거의 이러한 상이한 접근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 더 큰 전체의 상이한 측면들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⁵⁴⁾ Edele 논리 전개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핵심적이다. 첫째, 소련 사회란, 소련 영토위에서 존재했던 사람들 사이의 공식 비공식 관계의 체계로, 국가는 사회의 일부라는 것, 둘째, 소련 사회는 복합적이라는 것과 완전히 ‘전체화’되지 않았었다는 것, 셋째, 소련 사회에는 사회를 와해 방향으로 몰고 가는 다양하고 강력한 원심력이 존재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소련 시민을 서로 통합시킨 사회적 힘은 ‘어려운 경제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즉 Edele는 스스로가 ‘신-전체주의 정치경제학’이라 일컬은 새로운 관점을 통해 소련 사회의 통합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Edele가 전체주의, 수정주의, 스탈린주의 문명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수용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우선 Edele는 냉전시기 냉전의 도구로 통속화되었던 전체주의론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전체주의론은 “극도로 효율적 초국가가 사회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개인들을 원자화시켰으며, 이데올로기로 세뇌하고 경찰로 테러화했으며, 그리하여 스스로 행위 할 수 없게 만들었다”⁵⁵⁾는 관념에 입각했다. 이러한 통속적 전체주의론 대신, 그는 1950년대 당시 미국의 최고 사회학자들이 참여했던 Harvard Project on the Soviet Social System (HPSSS, 이하 Harvard Interview Project)가 발전

53)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p. 369.

54) *Ibid.*, p. 352.

55)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p. 217.

시킨 전체주의 개념을 재상기시켜 되살린다.⁵⁶⁾ 이에 따르면 소련 사회는 ‘소련식 전체주의 산업사회’였다. 즉 소련 사회 체제는 전체주의적 정치 구조를 가진 산업사회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형태였다.⁵⁷⁾ 여기서 전체주의 사회란, “정치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의 모든 물질적 인적 자원, 나아가 사적 감정과 주민의 정서까지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사회”⁵⁸⁾를 의미한다. “소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시도가 만들어낸 실제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것, 그리고 혁명이 전 과거부터의 연속성⁵⁹⁾ (또는 가족, 민족, 종교와 같이 전체주의적 통치자들이 주어진 것으로 당면해야 했던 문화적 사회적 패턴, 또는 전통)⁶⁰⁾이 포함된다. 전체주의적 측면과 소련적 측면은 러시아의 장기 지속성(long duree)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자 동시에 20세기의 완전히 새로운 특수한 사회구성체로 소련체제를 개념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소련의 사회조직이 서방의 대규모 산업사회의 사회조직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유사성은 직업구조와 사회적 계층화, 그리고 임금 노동, 사회적 계층화, 도시화, 대중매체에서 발견된다.

하버드 학자들은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내포

56) 두 권의 대표 저작이 존재한다. Raymond A. Bauer, Alex Inkeles, and Clyde Kluckh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Alex Inkeles and Raymond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57)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p. 358.

58) Raymond A. Bauer, Alex Inkeles, and Clyde Kluckh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p. 20.

59)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p. 354.

60) *Ibid.*, p. 359.

하는 소련 사회의 이미지는 냉전시기 통속적 전체주의론과 매우 달랐다. 즉

“하버드 학자들은 “전체주의”라는 관념을 사용했지만, 이 관념 때문에 소련 국가를 개인의 주도성을 완전히 분쇄하고 언설을 완전히 통제하며 또는 개인을 서로 간에 “원자화”시킨 그러한 단일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복잡한 산업사회와 경제를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지도부가 설정한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자원을 과다 책정하고 사회를 항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다양한 “비공식적 적응 메커니즘”을 발생시켰다. 즉 호혜적 교환의 네트워크(blat), 생산의 허위 기록, 또는 상호 보호 그룹(“가족 그룹”)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행위의 “일탈”적 방법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⁶¹⁾

다음으로 Edele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자. 그 비판의 핵심 과녁은 수정주의자들의 국가 대 사회라는 이분법이다. 우선 이러한 이분법은 냉전시기 천박한 통속적 전체주의론에 비교할 때 분명히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가/사회 구별은 5~6개 징후로 이루어진 모델이라는 뜻에서의 한층 더 조잡한 전체주의 이론으로부터 사회사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사회 구별은 국가의 사회사를 서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국가 자체가 특수한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국가/사회 구별은 비-국가 과정과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국가/사회 구별은 또한 “인민”을 국가행동의 대상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국

61) *Ibid.*, p. 356.

가/사회 구별은 전체주의 이론의 천박한 형태에 대한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였다. 전체주의 이론의 천박한 형태는 분석적 범주라기보다는 더욱 더 냉전의 무기로 보였다.”⁶²⁾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에서 ‘사회’는 비-국가를, 다시 말해 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아닌 모든 것, 국가에 외재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⁶³⁾ 즉 수정주의자들이 “국가를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바깥에 그리고 사회에 반대하여 존재하는 독립체로 개념화했다”⁶⁴⁾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한계를 기록할 때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은 어떤 무엇이 발생할 때마다, 그 때 ‘사회’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콜호즈(집단농장)에 강제로 편입되기 전 농민이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경우, 그 농민이 술을 먹고 취하여 소련 권력을 욕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작동했다. 사회가 마누라를 폭행하고, 상하이동을 하며, 정권을 지지하거나 저항하고, 상호 보호 네트워크를 만든다. 비판가들이 볼 때, 이러한 용어는 ‘잔존 범주’로 이러한 범주는 ‘국가에 외생적인 모든 것’이라는 식으로 제대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⁶⁵⁾

이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의 국가/사회 이분법에 대해 Edele는 하버드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고전사회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는 사회의 중요한 일부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한다. 즉

62) *Ibid.*, p. 363.

63) *Ibid.*, p. 362, p. 216.

64) *Ibid.*, p. 362.

65) *Ibid.*

“국가는 일정 지리 영역 내에서 강제적 사용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도와 조직의 모임 또는 체제이다. 국가와 다른 사회 형태(네트워크, 친척관계, 계급 등)는 서로 겹치고, 상호 작용하며, ‘상호-침투’한다. 이들은 서로 분리해내기가 어려우며, 그러나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모두 합쳐 이들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이룬다.⁶⁶⁾ 또한 국가는 다른 사회적 형태의 복잡한 거미줄 망에 내장되어 있으며, 소련체제가 행동적 국가와 수동적 또는 저항적 사회라는 이중성이 아니라 여러 사회 형태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며, 이 경우 국가는 주요한 행위자이지만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⁶⁷⁾

Edele는 Kotkin의 논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국가/사회 이분법을 극복했다. 둘째, 조직으로서의 국가와 일상생활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분석했다는 것, 즉 국가가 행위의 장을 만들며, 국가 외부에서 개인의 행위성이 국가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Kotkin의 이론에서는 한편에서 국가 다른 편에서 상호 연결이 없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만이 개념화되어 있지, 그 차원을 넘어서는 바의 사회에 관한 이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⁶⁸⁾ 즉 국가 권력은 말 그대로 모든 곳에 존재하며,⁶⁹⁾ 그 행위자는 국가 전략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고, 스탈린 사회는 국가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효과로 나타나 있고,⁷⁰⁾ 또한 전체주의 국가가 일상을 구조화하는 유일한 원칙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⁷¹⁾

66) *Ibid.*, p. 364.

67) *Ibid.*, p. 370.

68) *Ibid.*, p. 365.

69) *Ibid.*

70) *Ibid.*, p. 365.

71) *Ibid.*, p. 357.

Edele에 따르면 소련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첫째,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인 통제만을 행했고, 신민 다수의 충성을 누리지 않았다.⁷²⁾ 즉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적 전사는 그들의 목적 달성에 가까이조차 가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또한 재난과 재앙의 연속 속에서도 사회적 자기-조직화가 복구능력이 있고(resilient)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⁷³⁾

둘째, 소련 사회는 전반적으로 통합되어있다고보다는 원심력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룹과 하위그룹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 민족, 교회, 계급과 신분 그룹, 국가 정책의 이득자와 손해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공산주의자와 비당원, 지역, 지방 및 중앙의 행정가 등이다.⁷⁴⁾ 통일이 아니라 파편화, 통합이 아니라 와해, 동의를 아니라 아노미가 격동속의 이러한 사회의 중요 표지들이었다.⁷⁵⁾

셋째, 소련에서 국가권력은 ‘불구의 거대한 짐승’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채찍질하고 파괴하고 공포를 유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회변화를 통제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는 절뚝거리는 거대한 짐승이라는 것이다.⁷⁶⁾ 넷째, 소련 사회는 하나의 공통적 이데올로기, 우주관 또는 문화체계에 의해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적이 없다.⁷⁷⁾ 다섯째, 이러한 원심

72)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p. 193.

73) *Ibid.*, p. 5.

74) *Ibid.*, p. 7.

75) *Ibid.*, p. 193.

76) *Ibid.*, p. 5.

력 속에서도 전체 사회를 통합하고 지탱했던 것은 이데올로기 또는 안정적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현실에 있었다. 파편화된 주민을 묶어내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사항이었다.⁷⁸⁾ 소련 사회의 통합은 ‘신-전체주의 정치경제’학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즉

“공식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지 않고서도 스탈린 치하에서 사는 것은 가능했다. 특히 도시 바깥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 의례에 주변적으로만 참가하고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굶어죽지 않으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⁷⁹⁾ 결핍의 경제는 소련 시민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끌어 모아 붙잡아 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 중앙에는 재화와 서비스 접근에 대해 엄격히 계층화된 체계가 존재했는데, 이 체계는 많은 자원을 (그 체계가 통제하지 못하는 곳으로) 재지향시키는 복잡하고 자발적인 교환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이한 과정들이 함께 하여 경제적 강제의 체계를 만들어내었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이라도 하자면 그 체계가 제기하는 전반 요구를 수용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배제했다. 사람들은 그 체계가 자신에게 최저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했고, 그리하여 그 체계를 수정하는 동시에 재생산했다.”⁸⁰⁾

여섯째, 소련 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문화적 복잡성을 국가-사회 또는 국가의 행위성-일상의 저항과 참여라는 식의 단일 차원으로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회 전체의 여러 측면들 사이에

77) *Ibid.*, p. 3.

78) *Ibid.*, p. 209.

79) *Ibid.*

80) *Ibid.*, p. 195.

존재하는 상호의존과 상호 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련의 사회와 역사는 적어도 세 가지의 복합체, 그리고 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 상호 겹치기, 상호-침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전체주의적 당-국가의 변혁 시도와 그것이 야기한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산업사회로의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야기하는 여러 차원, 그리고 전체주의나 산업사회와는 무관하게 애초부터 존재했던 가족, 친구관계, 종교, 민족, 성관계 등의 소련식 특징의 복합과 상호 영향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⁸¹⁾ 즉

“우리가 결국 마주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치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러시아 특유 형태로서의 스탈린주의라는 이론인데, 이 형태에서는 권력을 쥐 자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에 따라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건하고자 시도하며, 국가는 생산 뿐 아니라 분배에 관한 계획을 대부분 담당하고자 시도했다. 이 사회는 “준국가(para-statal) 복합체”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통합의 다양한 비-국가 형태들에 의해 붙들어 유지된다. 다양한 비-국가 형태들은 가장 중요하게 친척관계, 상호 호혜적 도움주기와 교환의 네트워크, 공식 체제의 취약점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관계의 매우 다양한 비공식 실천들이다. 일상생활 차원에서 이 사회는 재화, 서비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구조화 되어있었다. 이러한 사회 계층화는 희소한 정보와 희소한 재화를 획득하고, 또한 전체주의 사회공학이 만들어낸 상품과 정보의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들을 산출했다. 전체 체제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동일 실천들은 처음부터 체제에 내장되었던 심각한 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소련체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했다.”⁸²⁾

81)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p. 369.

82) *Ibid.*, pp. 360~361.

2.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스탈린주의 연구와 비교할 때,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공통성 뿐 아니라 상당한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공통성은 양자 모두 1950~1960년대 초기 연구에서는 전체주의 모델에 입각했다는 점이며, 그 이후의 연구는 전체주의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그 이외의 점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도 크다. 스탈린주의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는 보다 거시적 틀에서 정권 대 개인 또는 정권 대 집단의 양자 간 동태성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모택동 시대의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기업 내부 또는 단위 내부에서 간부 대 노동자 또는 간부 대 농민이라는 보다 미시적 대상을 연구 주제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시대와 관련해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사회관계의 동태성이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분권화와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보다 선명해지고, 이에 따라 양자 간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 주요 흐름과 개념 정의

Harry Harding과 Elizabeth Perry에 따르면, 중국연구는 탈-모택동 개혁과 함께 제3세대 진입했고, 이 제3세대 연구의 주제가 국가-사회 관계였다.⁸³⁾ 이러한 중국연구에서 3개 세대는 정치 환경과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다. 1960년대 제1세대 중국연구는 냉전의 영향 하에 진행되었고, 1970

83)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1984), pp. 284~307; Elizabeth J. Perry,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no. 139 (1994), pp. 704~713.

년대 제2세대 연구는 1960년대 중하반의 문화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제3세대 연구는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과정을 중심 주제로 했다.

제1세대는 국가 사회주의가 중국에 어떻게 강요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로 전체주의론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었다. Harding이 제시하는 바에서 이 시대 중국 정치 연구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서 보면,⁸⁴⁾

- “1) 개별 학자는 크고 다양한 주제를 일괄하여 다루는 경향, 또한 과도한 일반화 경향이 있었다.
- 2) 이론적 또는 비교 시도를 소홀히 하고 서술적(descriptive) 차원에 머무름으로써 과소개념화(underconceptualization) 경향이 있었다.
- 3) 이 시대 연구자들은 중국학 전통에 집착하면서, 중국 정치를 독특한 사례(unique case)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 공산 체제는 중국의 전통, 혁명시기, 소련 경험 또는 공산당의 맑스-레닌주의 유산에 의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비교정치학에 입각한 일반적 개념이나 모델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
- 4) 공식 문건을 토대로 연구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프레임으로 중국 정치를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 연구는 중국 정치 실제 작동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공식 문건에 주석을 단 해설서라고 할 수 있었다.”⁸⁵⁾

84)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pp. 286~290.

85) 당시 중국 정치 연구에서의 이러한 특징은 1990년대까지 한국의 북한 정치에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북한 특수성론, 주체사상 결정론, 지도자 결정론, 북한 헌법을 대체로 그대로 재생하는 것에 머무르는 북한의 국가체제 설명 방식 등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의 많은 부분은 초기 기초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박형중, “북한 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27권 4호 (1997), pp. 160~187.

제2세대는 (전체주의이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했던) 문화혁명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여러 종류의 다원주의적 모델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제2세대에 속하는 학자들은 정치테러와 대중 동원이 감소하면, 정치통제의 틀 내에서도 관료 집단 간에 정치경쟁이 재발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경쟁은 다원적이라 서술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Harding이 제시한 제2세대 연구의 방법론상 특징을 요약해 보면,⁸⁶⁾

- 1) 1세대가 공식문건의 서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공산체제의 공식 표면에 초점을 맞추었음에 비해, 2세대는 한편에서 공식적 표면이 아니라 홍위병 자료가 보여주었던 바의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 정치 작동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세대는 홍위병 자료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모택동주의자의 정치 관점, 그들의 자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중국 정치 모델을 넘겨받아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 2) 1세대가 대주제 연구와 과도한 일반화를 특징으로 했다면, 2세대는 정책 영역, 지리적 영역 등에서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었다.
- 3) 2세대는 1세대에 비해 개념화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단순 자료 축적을 넘어서 보다 일반적 모델 건설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중국연구와 비교정치를 통합하는 과정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4) 중국 정치연구는 아직까지 비교정치학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여전히 중국학적 편견이 강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독특하며, 따라서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 문화와 정치는 매우 복잡하여 이러한 연구에 전체 인생을 건 사람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86)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pp. 291~300.

제3세대는 국가-사회 모델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 건설, 시민 사회, 시장과 민주주의와 같은 주제가 중심으로 등장했다. 정치변화의 원인, 성격, 그리고 결과가 국가 기구와 사회 전반이 서로 상호 작용한 생산물이라 해석되었다.⁸⁷⁾ 첫째, 둘째 세대 연구가 국가의 막강한 힘을 강조하고 당-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조직상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에 침투하고 사회를 형성하고자 할 때 사용했던 행정 메커니즘과 기술을 검토했다.⁸⁸⁾ 이에 비해 셋째 세대 연구는 국가와 사회 간의 쌍방향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행사를 중심으로 국가-사회 관계를 연구한다. Harding이 파악했던 바의 제3세대의 연구 방법상의 특징은⁸⁹⁾

- 1) 과거에는 활용 불가능했던 정보원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현장 연구라든지 아카이브 연구, 보다 다양해진 공간행물들 등이다.
- 2) 이전 시기 학문적 축적을 지적으로 종합하고 일반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다.
- 3) 중국 정치연구의 비교정치학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특수성(Chinese exceptionalism)론이 거의 소멸했다. 중국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서의 개혁비교,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개발의 비교 등 비교정치학적 연구가 발전했다.
- 4) 중국 정치를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

87) Elizabeth J. Perry,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p. 705.

88) David L. Wank, "Political Sociology and Contemporary China: State-Society Images in American China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7, issue 18 (1998), p. 214.

89)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pp. 303~307.

그렇다면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는 어떻게 개념정의 되었는가? 이와 관하여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상이한 개념 정의가 존재한다. David Wank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는 나라의 정치체제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권력 관계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당-국가는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려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반응, 이익 및 전략과 상호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작용이 권력, 권위와 영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관한 관심은 ‘국가와 사회’라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⁹⁰⁾ 다른 표현으로, 국가-사회 관계론은 대중의 사상과 실천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순치했는가를 검토했으며, 그리고 사회의 에이전시(능동성)를 더 많이 강조했다.⁹¹⁾ 또는 ‘국가와 사회’는 국가 정치에서 정치지도자와 피지도자간의 권력 관계를 지칭한다.⁹²⁾ 또는 “‘국가와 사회’는 사회적 계급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관계로 개념정의 된다.”⁹³⁾ 그에 따르면, 국가가 여러 사회계급에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사회계급이 국가 노력에 순응하는 수준이 주요 관심이다.

전성흥은 국가-사회 관계의 연구 대상으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와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는 당(이른바 당-국가), 그리고 통제로부터의 자율 그리고 부분의 이익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개인 및 집단)간의 역학관계 또는 상호작용(이익의 분배, 갈등의 조정, 통제와 자율, 억압과 저항 등)의 과정”⁹⁴⁾을 설정한다. 그는 국가-사회 관계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와 수준을 기준으로 ‘개체’ 차원의 접

90) Elizabeth J. Perry,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p. 205.

91) *Ibid.*, p. 216.

92) *Ibid.*, p. 205.

93) *Ibid.*, p. 213.

94) 전성흥,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 2000), p. 78.

근과 ‘집단’ 차원의 접근을 구별한다.⁹⁵⁾ 1980년대 주류였던 ‘개혁’ 차원에서 국가-사회 관계는 도시의 기업과 농촌의 인민공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간부 대 사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의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로 즉 간부-노동자 및 간부-농민의 관계로 나타난다. 분석의 중심은 양자 간의 상호 교환관계이며, 분석의 결론은 개인으로서의 농민과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간부와와의 관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주류를 이루었던 ‘집단’ 중심의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한편에서 국가 그리고 다른 편에서 개혁 이후 새로이 등장한 각종 경제단체, 그리고 농민, 노동자 및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행위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주제로 설정한다. 연구의 주요 관심은 새로이 등장한 각종 단체의 자율성 및 세력화 정도, 이들 간의 횡적 연대, 국가에의 도전과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상호 작용, 그리고 그 효과로 나타나는 정치 변화의 가능성이다. 개혁 이후 새로운 단체의 등장과 관련한 정치 변화에 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평가하면, 시민사회의 등장 및 그로 인한 민주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견해는 둘째, 기업가와 그 단체가 여전히 국가 관료와 공생적이고 후견주의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 그리고, 셋째, 국가가 여전히 새로운 단체들을 통제하고 국가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관계한다는 코포라티즘론(corporatism)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개괄적이고 단순화시켜 언급했던 흐름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의 주요 경향과 주요 성과들에 관한 개괄적 검토를 다른 논문은 이상에서 언급한 논문 이외에도 상당 수 존재한다.⁹⁶⁾

95) *Ibid.*, pp. 78~80, pp. 94~96.

96) 이미 언급한 논문 이외에도 Harry Harding, “The Contemporary Study of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The China Quarterly*, no. 139 (1994), pp. 699~703;

여기서는 이를 또 다시 반복함이 없이 또한 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나. 전체주의론

먼저 전체주의론에 입각한 중국연구이다. Andrew Nathan은 전체주의 개념을 모택동 시기 중국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⁹⁷⁾ 그 기본 내용은 고전 전체주의론과 다르지 않다. 모택동 시대를 전체주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주요 특징은,

- 정치통제의 포괄 범위가 넓다는 것 - 모든 시민사회 그리고 거의 모든 개인적 자율성의 억압, (단위, 계급 딱지 붙이기, 정치 캠페인, 당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통제 메커니즘의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제 기술에서 독특한 성과를 냄.
- 정치체제가 유일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 - 정치 권위는 소규모 사람들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어떤 정치체제도 총체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지 않으며, 모택동의 중국도 그러했다. 모택동 중국에서도 중앙 당국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서 관료체 위계 계선들 그리고 지방 정치 단위의 필요와 절차가 제기한 관료체적 장애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은 만약 원하는 경우에는 관료체가 우선 추진하는 사업들을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지녔다.

Teresa Wright, "Review: State-Society Relations in Reform-Era China: A Unique Case of Postsocialist State-Led Late Development?," *Comparative Politics*, vol. 40, no. 3 (2008), pp. 353~374; Tony Saich,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ost-1949* (Leiden: Koninklijke Brill, 2016).

97) Andrew Nathan, *China's Trans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 50.

- 통제 체제에서 사상적 믿음과 테러가 공히 핵심적이었고, 이 두 사항은 일종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사회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성까지 총체적으로 재형성하려 했던 야망이 존재했다.
- 주민을 통제할 뿐 아니라 동원하려고 목적을 설정했다.

다음은 보다 좁은 의미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모택동 시기의 국가-사회 관계를 다룬 분석들이다. 이 분석은 앞서 전성홍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개체론적 관점에서 즉 간부-노동자/농민의 차원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198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택동 사후 개혁 이후 집단적 관점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다룬 분석들이다. 앞서 지적한 데로 여기에는 시민사회/민주화론, 후견주의론과 국가 코포라티즘론(state corporatism)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시장 확대 이후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 갈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상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단위 체계 모델

여기서는 모택동 시대의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을 ‘단위 체계 모델’이라는 틀에서 종합하고자 한다. 먼저 ‘단위’(單位)의 의미이다. 단위는 중국 사회 구조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며, 중국에서 국민조직화의 기초제도이다.⁹⁸⁾ 중국에서 단위는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예를 들어 기업, 관청, 학교, 연

98) 趙宏偉, 『中國の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p. 114.

구소, 병원 등 모두를 ‘나의 단위’라고 부른다. ‘단위제’ 하에서는 각종 조직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립되고 통제/관리되는 것으로, 그 기능과 활동범위/방법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배분하고 규정한 것의 결과이다.⁹⁹⁾ Xi Chen은 단위제도의 특징을 가장 간명하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한다.¹⁰⁰⁾ 1) 개인의 단위에 대한 조직화된 의존(organized dependence), 2)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에서) 관계에서 개인별 편파적 처우, 3) 비교적 폐쇄된 지역 공동체(즉 단위)에서 권위체(당국 또는 간부)와 보통 사람 간에 높은 밀도의 상호 관계 발생이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소유의 대기업이지만, 이러한 권위 관계는 중국에서 모든 직장과 조직, 다시 말해 단위의 기본 특성이 된다. 단위로서의 특성은 당-국가 기구와 국가소유 기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집체 기업에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농촌의 집단 농장에서 발견된다.

Andrew Walder는 그의 책 *Communist Neo-traditionalism (1987)*을 통해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밝혀내는데서 선구적 기여를 했다.¹⁰¹⁾ 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가 당과 국가 관료와 접촉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업에서이며, 따라서 중국 기업에서 권위 관계는 이러한 유형의 국가와 사회에 특징적인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주장한다.¹⁰²⁾ 그는 전체주의론을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감시와 정치 통제의 체계가 시민의 행위를 제약하는

99) 鄭抗生·奧島孝康, 『中國の社會: 開放される12億の民』(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2002), p. 43.

100) Xi Chen, *Social Protest and Contentious Authoritarianism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14), p. 60.

101)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8).

102) *Ibid.*, p. 1.

것은 맞지만 반면 시민이 공산통치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긍정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인센티브의 핵심은 조직화된 의존(organized dependence)¹⁰³⁾이다. 이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노동자는 기업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여타 물질·사회적 이득은 기업을 통해서만 공급되며 다른 경로로 획득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노동자는 경영진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한다. 경영진은 노동자의 모든 독자적 정치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노동현장의 정치조직 및(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물질적) 보상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를 자신이 원하는 정치활동으로 동원한다. 다음으로 노동자는 상급자에 의존한다. 상급자는 승진, 봉급 인상, 비임금 이득 제공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 노동자가 이러한 혜택을 획득하려면 상급자에 순응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공산당의 활동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비 인물적(impersonal) 일반적 기준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활동에서는 일반주민과 충성분자를 개별적으로 차별하는 편파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rincipled particularism).¹⁰⁴⁾ 즉 공산당은 출세에서 우대, 물질적 특혜와 같은 수단으로 충성분자에게 편파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그들과 안정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통치에 활용한다. 이와 같은 수직적 네트워크 또는 후견주의는 노동자 내부에서 협력적이고 특권적 활동가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일반 노동자 사이에 상호 적대감을 만들어 낸다.

셋째, 당을 주축으로 형성된 후견-피후견 관계의 네트워크이며,

103) *Ibid.*, p. 13.

104) *Ibid.*, p. 25.

여기서는 한편에서 당과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적 충성, 다른 편에서 당 지부 관료 개인과 그 피후견자 개인 사이의 인간적 충성이 서로 섞이게 된다.¹⁰⁵⁾ 이를 배경으로 “보통 노동자들은 노동장소에서 때로는 작은 부패를 내포하는 사적 교환과 상호 지원의 활발한 하부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 이득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감독자와 관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¹⁰⁶⁾ 나아가 (직장을 바꿀 수 없어서) 고용관계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도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게임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복잡하고,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숨 막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¹⁰⁷⁾ 이러한 이미지는 전체주의가 말하는 개인의 원자화, 그리고 당-국가 조직의 마치 기계와 같은 작동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 대신 당 통제로부터 벗어난 수단적-인물적 유대가 만연하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Walder가 중국의 도시 기업에 대해 전개한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Jean C. Oi는 중국의 농촌에 대해 전개한다. Oi는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모델은 엘리트가 비-엘리트를 동원하고 통제하는 노력을 강조하지만, 비-엘리트가 엘리트에 영향을 주고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려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모호하게 인지한다”¹⁰⁸⁾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그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은 국가가 곳곳에 미치고 있는 권

105) *Ibid.*, pp. 24~26.

106) *Ibid.*, p. 13.

107)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Xiaobo Lu and Elizabeth J. Perry,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rmonk: M. E. Sharpe, 1997) p. 178.

108) Jean C. Oi,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World Politics*, vol. 37, no. 2 (1985), p. 239.

력 때문에 비-엘리트가 원자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중의 이익은 당-국가의 목표와 동일하지 않고, 독립적 주장이 억압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이 ‘행정되는 사회’의 정치적으로 단지 수동적 행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Oi가 중국의 농촌에서 국가-사회 관계 또는 간부-농민 관계를 분석하는 핵심은 후견주의이다. 후견주의란, 기회, 재화, 자원에 대해 엘리트가 독점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엘리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그러한 것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엘리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엘리트와 비-엘리트 간에 비대칭적 거래를 통해 상이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말한다.¹⁰⁹⁾ 이러한 경우, 후견자-피후견자 관계의 특징은 “보통 수단적 교환, 불평등, 권력에서의 비대칭성, 그와 동반한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 및 개인상호 의무라는 맥락에서 표현되는 외관상의 연대성의 어떤 배합”¹¹⁰⁾이다. 이러한 뜻에서 Oi는 그룹 또는 개인이 의미있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중국의 지방정치가 후견주의적 라인을 따라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농촌을 대상으로 비-엘리트가 정책 실행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특수 이익을 증진하는 수많은 방법을 연구한다.¹¹¹⁾ 그가 볼 때, 후견주의를 발생시키는 농촌마을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는 ‘집체 단위 내외에서 팀 리더가 소득 기회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 그리고 배급제도하에서 공식적으로 농민에게 배정된 복지기금과 기초 재화에 관한 개인적 통

109) Jean C. Oi,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p. 240; S.N. Eisenstadt and Luis Roniger, “Clientelism in Communist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IV, no. 2&3, (1981), p. 234.

110) S.N. Eisenstadt and Luis Roniger, “Clientelism in Communist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p. 235.

111) Jean C. Oi,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p. 240.

제'¹¹²⁾이며, 농민은 팀 리더를 상대로 개인적 관계 등과 같은 비공식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 경우 인간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적이고 상호적인 유대가 국가와 사회 간의 또는 간부와 농민 간의 중요 연계이다. 정치행위가 주로 경제 자원 특히 지역 차원에서 경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기 때문에 후견주의적 행위는 스스로 권위도 없고 지방관료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아서 자원에 대한 대안 원천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 유대에 기초하여 국가의 분배 행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전략을 발전시킬 때 나타난다. 후견주의는 (중앙 또는 특히 지방) 국가에 종속된 자들이 도구적 인간 유대라는 하위문화를 활용하여 겉보기에 경직된 권위 체계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중국 농촌의 정치현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통제가 공식적이며, 사람 비-차별적이며(impersonal),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는 관점'을 주장하는 전체주의 모델과 매우 다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 농촌에 만연하는 후견주의 모델은 '통제 행사에 있어서 유연성, 주관성과 개인적 감정 개입이 상당한 정도로 더 높다는 것을 상정'하며, '이러한 것들은 국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기여했을 수도 안했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¹¹³⁾

Walder의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 분석이 함축하는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는 한편, 비판적 측면에서 Brantly Womack은 '단위 사회주의'(work unit socialism)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Walder의 신-전통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중앙 권력 대신 지방권력을 분석하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둘로 갈라져 병치되어 있고, 국가는 인민의 적이라 상정한다는 것,¹¹⁴⁾ 그

112) *Ibid.*, p. 241.

113) *Ibid.*, p. 240.

114) Brantly Womack, "Review Essay: Transfigured Community: Neo-Traditionalism and Work Unit Socialism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26 (1991), p. 321.

리고 지방 지도부의 총체적 권력이 이러한 체제의 잠재적 현실이라는 주장하는 것¹¹⁵⁾에서 국가 권력에 편향된 초점을 맞추는 전체주의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¹¹⁶⁾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상정하는 Walder의 신-전통주의와는 달리, Womack의 단위 사회주의론은 국가와 사회의 통합이 중국 당-국가의 핵심 특징이자, 동시에 주요한 내부 모순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 내부 모순은 한편에서 국가의 거역할 수 없는 권력과 다른 편에서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단위 멤버십의 움직일 수 없는 영속성이라는 양자 간의 긴장 때문에 발생한다.¹¹⁷⁾ 일상에서 중국의 정치와 사회가 서방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중국에서는 단위라고 하는 작고 구획된 공동체 생태계라면, 서방의 경우는 무한정하고 대규모의 사회라는 생태계라고 했다. 노동 단위는 더 큰 체제의 정치와 필요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 체제의 요구에 종속하고 원칙적으로 그 간섭에 취약하다. 그렇지만, 단위는 일생에 걸쳐 관계를 바꿀 수 없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그 멤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위 사회주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들이 고정된 그룹 내부에서 상호 간에 장기적이고 다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일면 개인으로서 그리고 타면 그룹 멤버로서 맺어야 하는 개인들간의 공히 복잡하고 독특한 상호 관계이다.¹¹⁸⁾ 이러한 속에서의 개인들 간의 관계는 신중하고 공의 기여적이어야 한다. 지도부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위계적이라거나 후견주의적이라거나 수단적이지만은 않다. 둘째, 단위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공개적 대결을 회피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분쟁 이후

115) *Ibid.*, p. 320.

116) *Ibid.*, p. 323.

117) *Ibid.*, p. 314.

118) *Ibid.*, pp. 325~326.

에도 당사자들은 서로 보면서 계속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의 정치(*consensus politics*)가 지배적 현상이 된다.¹¹⁹⁾ 이 동의 정치에서 지도자가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룹 멤버십은 영구불변한 반면,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다. 셋째, 그룹의 안정성과 그 환경이 매우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그룹 내부에서는 한 번의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것 보다는 양자 관계의 장기적 흐름과 앞으로도 거래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¹²⁰⁾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판시(关系)가 매우 중요하다.

라. 개혁기 국가-사회 관계 분석의 세 조류

Walder, Oi 그리고 Womack이 대상으로 분석했던 중국 현실은 대체로 1950년대 말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모택동식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한 연구 주제도 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기본 논점은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²¹⁾ 첫째, 모택동 사후 개혁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조직과 단체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를 진짜로 생산해 내었는가 또는 낼 것인가, 아니면 둘째, 비-국가 조직은 아직도 국가의 통제 하에 있고 국가의 후원에 심히 의존해 있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입장에 긍정적 대답을 하는 것이 민주화/시민사회 모델이며, 두 번째 입장과 관련해서는 후견주의 모델과 국가코포라티즘 모델이 존재한다.

119) *Ibid.*, pp. 326~327.

120) *Ibid.*, pp. 327~328.

121) Wei Shan, Lijun Yang,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ontemporary China* (New Jerse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2017), p. 18.

민주화/시민사회 모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¹²²⁾ 모택동 사후 개혁과정은 새로운 사회 세력과 행위자가 등장하고 국가에 새로운 요구와 제약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경제 자유화는 사회가 강력한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며 국가의 힘이 후퇴하도록 강제한다. 그에 따라 국가의 직접 통제 영역의 바깥에 있는 사회적 공간이 증가한다.¹²³⁾ 사회는 국가로부터 더욱 더 독립적이 되고 국가 통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한다. 개혁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그룹과 단체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시민 사회는 추가적 정치적 자유화를 결국 요구하고 획득하며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경제 개혁은 정치적 자유화 압력을 항상 발생시키며 결국에는 실현시킨다고 하며 또한 경제 개혁의 첨단에 서있는 사람들은 정치 개혁도 선도한다는 견해도 주장한다. 경제발전에 의해 등장하는 중간 계급은 국가 통제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는 적어도 시장 보호 목적으로 획득된 자유는 국가가 정치적 자유를 삭감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방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성홍에 따르면 시민사회 낙관론자들은 “실제 시민사회 성장의 정도와 형태보다는 맹아단계이더라도 존재 자체를 중시하고, 발전과정에서의 편차나 문제점 보다는 궁극적인 사회진화의 방향이나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피력하는 경향이 있다.”¹²⁴⁾ 한편, Scott Kennedy,¹²⁵⁾ Teresa Wright,¹²⁶⁾ Kellee S.

122) Margaret M. Pearson,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 23~32; Gordon White,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Era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123) Wei Shan, Lijun Yang,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ontemporary China*, p. ix.

124) 전성홍,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 p. 95.

Tsai는 중국의 지방경제와 또한 기업가의 사회적 경제적 성격은 다양하다는 것, 후발 개도국 기업가는 국가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항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화로 연계되자면 기업가의 존재 이외에도 다른 복잡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어, 기업가의 등장을 민주화의 맹아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한다. 민간 기업가들은 중국 정치에 구조적 영향을 주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구조 이론이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해가는 가운데, 기업가들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국가의 공식 정치제도를 바꾸어 왔다. 중국에서 공식 기구의 주요 개혁은 민간 부문의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 안전을 높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차원 제도 개혁은 사업 소유자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¹²⁷⁾

이는 정권 교체가 없더라도 중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적응차원의 비공식 제도가 국가의 정치적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키는지 또는 강화시키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것이다.¹²⁸⁾

125) Scott Kennedy, “Fragmented Influence: Business Lobbying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Scott Kennedy (ed.), *Beyond the Middle Kingdom: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na’s Capitalist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13~135.

126) Teresa Wright,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127) Kellee S. Tsai, “Comparing China’s Capitalists: Neither Democratic Nor Exceptional,” Scott Kennedy (ed.), *Beyond the Middle Kingdom: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na’s Capitalist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 138.

다음으로 후견주의론을 보자. Walder가 신-전통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분석한 이러한 후견주의는 초기 개혁 시기 중국 공산주의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의 개혁 과정은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후견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개혁의 진전에 따라 당의 권위가 공장 단위에서 붕괴했고, 당 위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던 공식적 당 후견주의도 붕괴한다는 것이다.¹²⁹⁾ 다시 말해, 개혁에 의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당-국가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서, 종속관계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관계의 확대에 의해 사람 비-차별적인(impersonal) 시장이 과거에 만연했던 비공식적이며 지방 차원 인적 유대를 대체해 가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인간적 관계의 필요성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앞서의 민주화/시민사회론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비공식 후견주의가 모택동 사후 중국에서도 실행가능하고 중요한 전략으로 존속한다. 사업가-정부 관계에서 공식 채널의 제도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비공식 관계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율적인 경제엘리트의 정책 이익은 증가하지만 이를 기존 정치체도에서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적 유대는 관료와의 상호작용 수단으로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시장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 후견주의는 존속할 수밖에 없다. Margaret M. Pearson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한다.

128) Kellee S. Tsai, "Comparing China's Capitalists: Neither Democratic Nor Exceptional," p. 158.

129) You Ji, *China's Enterprise Reform: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After Mao* (London: Routledge, 1988) 참조.

“첫째, 국가는 그러한 체제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적 권위는 시장에 부분적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 관료는 여전히 일련의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많은 것을 관장한다. 경제 자원의 배분은 과거처럼 경직적이지는 않지만, 지방 관료가 엄청난 권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관료들은 비-국가 부문과의 인적 유대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지방 관료가 아직 통제하는 자원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경제 행위자에게도 인적 유대는 여전히 유용하다.

둘째, 부분적 시장화 상황에서 시장 관계가 제대로 개념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회적 행위자들은 보다 명확한 권위(관료)에 자신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공식적인 연계가 아닌 경우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서 그러하다. 시장 관계가 심화되어도 인적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가-정부 관계의 핵심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인적 유대에 대한 의존이 미국에서처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개연성이 없을 가능성을 대두시킨다.”¹³⁰⁾

결국 후견주의는 국가 강화론과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당-국가는 개혁의 시초부터 새로운 사회적 힘을 구조화하는데 참가해왔고, 새롭게 대두하는 사회가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경제 활동, 민간 기업 그리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중요 자원을 획득하자면 국가의 후원과 지원이 강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간에 공생관계가 등장했다. 현존하는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생 관계는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안정화시켰다”¹³¹⁾는 것이다.

130) Margaret M. Pearson,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참조.

131) Wei Shan, Lijun Yang,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Contemporary China*, p. x.

유사한 관점에서 장경섭은 ‘국가중심적 계급관계’(state-centered explanation of class relations)론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계급관계를 국가권력과 분리된 사회계급들 사이의 상호 역학관계로 보지 않고 계급적 위계나 지배가 각 사회계급의 ‘국가권력에의 근접도’(access to state power)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¹³²⁾ 개념이다. 그는 “개혁기 중국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각각의 계급적 지위 및 상호간 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혁 과정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채택하거나 당/국가 엘리트들이 자의적으로 취한 정치/행정적 조치들이 이들 사회집단의 계급적 지위 및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갑자기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¹³³⁾라고 주장한다. 앞서 ‘시민사회’론자가 시장화 진전에 따라 국가의 약화를 전망했다면, 장경섭은 오히려 국가 강화론을 주장한다. 즉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시장원리에 의해 대체되기보다는 시장원리의 작용 범위와 방향을 전략적(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¹³⁴⁾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국가권력에의 근접도 차이가 시장경제적 상황에서 계급적 지위와 상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³⁵⁾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기 들어서 국가권력에 대한 연출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과 갈등은 개혁 이전 못지않게 치열하다”¹³⁶⁾고 한다. 중국에서의 부분적 시장화는 현실적

132) 장경섭, “개혁기 중국 계급구조 변화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함의,” 『성곡논총』, 제28권 3호 (1997), p. 214.

133) *Ibid.*, p. 219.

134) *Ibid.*

135) *Ibid.*

136) *Ibid.*, p. 224.

으로 볼 때, “국가(당)가 국가기업의 노동자, 각급 당/정 간부 등 국가의존적 집단들의 기득권적 이해관계는 과거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한편, 농민, 이농노동자 등 시장화된 부문에 속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하도록 방치하고 국가의 경제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는 일종의 차별적 우대주의로 귀결되고 있다”¹³⁷⁾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기업가 이미지는 앞서 언급한 시민사회론이 그리고 있는 기업가 이미지와는 다르다. 기업가의 시민사회론적 이미지는 사유재산, 수평적 계약 관계와 시장의 자유와 같은 것들에 대해 긍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가는 자율성을 원하며, 다른 사회 그룹과의 동맹과 같은 행동을 통해 그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후견주의론에 나타난 기업가 이미지는 자신의 사업을 번성시킬 목적으로 관료와의 유대를 중시하며, 현존 정치질서가 자신의 사업 번영의 토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장활동이라는 차원의 구조적 자율성이 반드시 정치적 자율성 신장을 위한 활동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¹³⁸⁾

세 번째는 국가코포라티즘론이다. 이 논리는 모택동 사후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기능 단체 또는 시민단체는 대부분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자율성도 가지고 있는 이

137) *Ibid.*

138) David L. Wank, “Political Sociology and Contemporary China: State-Society Images in American China Studies,” p. 223; Bruce Dickson,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Berke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Margaret M. Pearson,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Teresa Wright,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Dorothy J. Solinger, *China’s Transition from Socialism?: Statist Legacies and Market Reforms, 1980~1990* (London: Routledge, 1993).

중적 측면에 주목했으며, 이를 국가코포라티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했다.¹³⁹⁾ 국가 코포라티즘의 경우 국가가 각종 비-국가단체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고, 이 단체들은 기능영역에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받지만, 크게 보아 국가이익에 봉사하며 국가의 궁극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국가코포라티즘은 국가의 지배적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는 결사체의 숫자와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며, (일정 기능영역에서) 그 단체의 독점을 보호한다. 국가코포라티즘은 비-국가 조직들을 중앙집중화하고 결사체의 범주를 규정하며, 국가가 허가하는 조건에서 결사체의 형성과 작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며, 지도자 선출과 이익표출에 대해 통제를 가한다. 국가 코포라티즘적 제도를 성립시키는데 성공할 개연성이 높은 국가는 조직상의 힘과 이데올로기적 통일이 상당하고 자원에 대해 광범한 통제를 가진 나라이다. 사회주의 코포라티즘이라는 개념은 권위의 존재이유와 흐름, 사회주의 개혁가들이 사회적 자율성을 허락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의 성장과 범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내재되어 있는 제도적 구조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국의 레닌주의적 체제는 당에 의해 고도로 침투되고 지배되는 체제이면서도, (국가가 보기에) 산업화를 달성하자면 당-국가 구조 외부에서 경제이익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추구를 허락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국가는 국가를 약화시킬수도 있는 사회그룹의 독립적 조직을 방지하는 것을 원한다.

139) Margaret M. Pearson,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pp. 35~42; Tony Saich,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ost-1949* (Brill: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2016), pp. 18~32.

3. 소결

국가-사회 관계라는 문제 설정은 한국의 북한연구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문제 설정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북한 연구에는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정치에 관한 연구, 정권의 사회 통제에 관한 연구 또는 북한 인권 연구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고전적 전체주의론의 관점에 경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중앙 통제의 매우 높은 효과성, 국가/정권과 사회/개인의 일체성을 묵시적으로 또는 현시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대세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1990년대 이래 전통 북한체제가 와해되면서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상황이 전개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도 중앙 통제가 약화되고 시장이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과거에는 일체로 보였던 정권 대 사회가 이제 서서히 분리해나가는 것으로도 인지되고 있고, 그 양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스탈린시대 연구 그리고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과 논쟁은 한국에서의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스탈린시대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한국의 북한연구에서 지배적인 전통적 전체주의론적 접근과 분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전통 전체주의론적 접근을 명시적으로 옹호하고 명시적으로 그에 근거를 둔 연구는 드물다. 그렇지만 한국의 북한 정치 연구는 대체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사회 통제의 매우 높은 효과성, 국가/정권과 사회/개인의 일체성이라는

시야의 좁은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¹⁴⁰⁾ 스탈린시대의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연구의 성과에서 한국의 북한연구가 최소한 수용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권력은 압도적이고 주도적이지만 사회나 개인 역시 수동적이지만은 않으며, 따라서 양자 간에 갈등 또는 투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⁴¹⁾ 또한 북한에서도 당과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공식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시키는 역기능을 완화하고 또한 사회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비공식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개인들과 조직들 간에 매우 두텁고 만연하는 비공식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1980년대 말까지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모택동 시기 중국의 단위 체제와 관련한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상당부분 그대로 북한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동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 개혁기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래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북한에서의 시장화나 사회와 개인의 자율성 증가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택동 사후 변화를 놓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사회론, 후견주의론, 국가코포라티즘론이 존재한다. 북

140)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3~59.

141) 북한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 관념에 가장 가까운 기존 연구 사례로, 박형중,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적 동원 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 투쟁,” 『현대북한 연구』, 2권 2호 (1999), pp. 73~120; Charles K. Armstrong, “North Korea and the Education of Desire: Totalitarianism, Everyday Life, and the Making of Post-Colonial Society,” Alf Lütke (ed.), *Everyday Life in Mass Dictatorship: Collusion and Evasion* (London: Palgrave, 2016), pp. 165~183.

한의 경우에도 변화에 대한 해석에서 시민사회론과 후견주의론에 상응하는 논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견해 모두 중국의 경우에서 만큼 보다 명료하고 정치하게 발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론은 대체로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 또는 한국식 방향으로의 변화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대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민사회론에 등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돈주가 장차 봉건시대 신흥 부르주아처럼 민주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시장화가 북한 현존 체제를 약화시키리라는 기대 등이 존재한다.¹⁴²⁾ 반면 중국연구에서의 후견주의론에 가까운 견해도 존재한다. 북한의 시장화의 주역은 정권 기관 산하의 상업적 회사이고, 시장화가 정권을 반드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¹⁴³⁾

스탈린시대 연구 그리고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을 어떻게 북한연구에서 창조적으로 소화하고 번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다음 장의 핵심 주제이다.

142) 이러한 여러 논의에 관하여 박형중·박영자,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53~128.

143) 이 같은 맥락의 여러 주장에 대한 김토로,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2012), pp. 207~224.



Ⅲ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모델 시론

박형중 (통일연구원)

이상으로 소련 스탈린시대의 국가-사회 관계 및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 그리고 그들 사이의 논쟁을 간략히 검토했다.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시론적 모델을 정립해보는 것이다. 여기서 정립된 시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 IV장은 ‘북한식 전체주의와 조직생활사회’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의 구체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을 서술한다.

III장의 1절은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개념틀을 정립한다. 이 시도는 신-전체주의론 즉 냉전 종결 이후 재해석된 전체주의론을 중심으로 한다. 2절은 소련-중국-북한의 사회주의 모델을 서로 비교하면서 소련 대 중국/북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비교한다.

1. 신-전체주의 모델 개념틀의 적용

냉전시기 전체주의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공산주의 정치에 관한 분석개념이자 다른 편에서 반-공산주의 투쟁 개념이었다. 냉전의 와중에서는 이 양자가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았었다. 한편에서 냉전 시기 동안 전체주의론은 대중에의 접근성 및 투쟁 구호로서의 효능을 높이는 가운데 단순화되고 통속화되었다. 다른 편에서 경제 개혁 및 정치적 자유화 진전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변화에 따라 전체주의론은 분석적 효능도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탈냉전이후 전체주의론은 학문적 개념으로 재평가되고 재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냉전 종결에 따라 전체

주의론을 활용하여 투쟁해야할 투쟁 대상이 소멸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공산주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공산주의 연구는 더 이상 ‘적에 대한 연구’가 아니게 되었고, 또한 비교정치학에서 2000년대에 흥성했던 독재 연구 맥락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독재 유형 가운데의 하나이자, 민주주의 또는 다른 독재 유형과의 비교 대상으로서 분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⁴⁴⁾ 독재 연구에서 전체주의론은 독재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 중의 하나이며, 분석 개념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채택 또는 포기되고, 또는 II장에서 다루었던 ‘탈-전체주의 겸 탈-수정주의’ 경우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정-반-합을 거쳐 지양되어 새롭게 복원되고 있다.

여기서는 탈 냉전 이후 재정립되고 있는 전체주의론을 냉전시기의 전체주의론과 비교하여 ‘신-전체주의’론이라 편의상 명명한다. 물론 신-전체주의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냉전시기에도 존재했던 전체주의론 중에서 일부 이론 시도를 재발견하고 재평가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1950년대 초 Harvard Interview Project, 1990년대 Juan Linz와 Alfred Stepan, 2000년대 Wolfgang Merkel과 Mark Edele의 개념 정의 시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개념을 검토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들을 정립한다.

144)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aul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London: Palgrave, 2009); Steffen Kailitz, “Varianten der Autokratie im 20. und 21. Jahrhundert,” *Totalitarismus und Demokratie*, vol. 6, no. 2 (2009), pp. 209~251.

가. 전체주의 프로젝트의 위치 설정

1950년대 초 소련연구를 개척했던 Harvard Interview Project는 소련체제의 ‘전체주의적’ 측면, ‘소련적’ 측면, 그리고 ‘산업사회적’ 측면을 구별했다. 다시 말해 소련 사회는 단순히 전체주의 체제인 것이 아니라, ‘소련식 전체주의적 산업사회’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 상대적으로 독자적이지만, 상호작용하고 상호 겹치기도 하고 상호-침투한다.

이상과 같은 Harvard Interview Project의 개념틀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북한사회는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주의적’ 측면은 ‘정치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의 모든 물질적 인적 자원, 나아가 사적 감정과 주민의 정서까지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적’ 측면은 공산통치 수립과는 무관하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가족, 민족, 습속과 같은 전통적 제도와 가치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의미한다. ‘산업사회’적 측면은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의 사회 변화를 의미하는 공업화를 거쳐 북한의 사회조직이 서방 산업사회의 사회조직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는 도시화, 임금제 공장노동, 직업 구조와 사회의 계층화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를 약칭하여 ‘북한체제’라고 한다. 즉 ‘북한체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정치단위의 영토 내에 나타나 있는 전통적 제도, 전체주의적 제도, 그리고 산업사회적 특징의 독특한 전체적 총체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개념설정은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느 한 가지 협소한 관점을 통해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시 말해 냉전 전통의 북한연구에서처럼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특성만을 포착한다든지,¹⁴⁵⁾ 또는 북한사회에 나타나는 ‘한국식’ 전통만을 과대평가 한다든지 하는 협소한 환원적 관점¹⁴⁶⁾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즉 북한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변형 시도’는 공산통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했던 한국적 습속과 가치와 제도 그리고 지정학적 제약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공업화와 공업 사회의 건설이라는 독립적 과제에도 당면한다. 이 세 가지의 상호 독자적 요소는 상호 작용하고 상호 겹치기도 하며 상호 침투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 설정은 북한체제를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 한국과의 비교,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산업 사회적 특징과의 비교와 같은 작업에서 분석적으로 분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체제가 ‘북한식 전체주의’라는 것은 ‘총체적 통제 시도’라는 전체주의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제도와 규범을 공유하지만, 북한의 전체주의가 소련 또는 중국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되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남북한체제 비교에서 ‘한국식’ 공유부분이 남과 북에서 각각 자유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 프로젝트에 따라 어떻게 불변 또는 변형 되었는가,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프로젝트가 남과 북에서 산업 사회적 불가피성을 어떻게 다르게 규정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할

145) 최근에는 주제와 분석 명제 설정이 다양화되었지만,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정치)연구에서 주제와 설명 논리 설정은 지도자와 유일영도체제, 주체사상과 사상 교화, 특수성론 등에 주로 주목했다. 이는 전체주의론에 대한 가치 평가 또는 주관적 호불호는 달랐지만, 결국 전체주의론의 기본 분석틀을 수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27권 4호 (1997), pp. 160~187. 이와 같은 방식의 주제설정과 설명 명제 설정은 냉전시기 초기 중국연구에서도 거의 그대로 등장했었다. Linda Chelan Li, *Center and Provinces, China 1978~1993: Power as Non-Zero-Sum*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 8;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1984), pp. 284~307.

146) 예를 들어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유교적 전통의 발현으로 환원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참조.

수 있게 한다. 산업사회적 측면에 따로 설정하는 것은 공업화와 공업사회적 측면,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정착과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 전체주의의 국가별 시기별 양태 변화

여기서는 국가별 시기별 또는 분야별로 전체주의적 프로젝트의 양태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체주의 개념을 설정한다. 냉전 시기 전통 전체주의론은 여섯 개 징표라는 매우 단순한 획일적 잣대를 통해 전체주의를 정의했다. 이러한 전체주의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그 개념이 너무 경직적이고 조잡하여 해당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전체주의론의 기본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Merkel 그리고 Linz와 Stepan의 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주의 프로젝트의 추진시도에 있어서 그 추진 의지의 강도, 실제 추진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가 정치, 경제, 사회의 분야별로 또한 지리적 시간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전체주의 개념과 이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Merkel은 정치체제를 민주주의-권위주의-전체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¹⁴⁷⁾ 그 기준은 여섯 가지이다. 지배정당성, 지배에의 접근, 지배의 독점, 지배구조, 지배 권역, 지배 방식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양 극단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또는 ‘완전한’ 전체주의는 개념상의 이념형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된다. 전체주의 정권의 ‘본질’은 무엇보다 시

147) Wolfgang Merkel,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Empi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0), pp. 21~26.

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총체적 지배, 시민의 행동, 의견과 사고에 대한 통제이다. 전체주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 파시즘적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이란과 같은) 신정주의(神政主義)적 전체주의 체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개의 기준을 따라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된다. 즉

- 1) 지배접근: 전체주의 공산 체제에서 지배에의 접근은 완전히 막혀있다.
- 2) 지배독점: 공산당은 지도 역할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 사실상 지배에의 접근은 공산당 정치국 또는 총비서가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통제한다.
- 3)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일원적이며,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다원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4) 지배권역: 지배권역은 완전하며 지배당하는 자의 의식까지 포괄한다.
- 5) 지배방식: 지배권역을 총체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은 모든 반대와 이탈을 억압적이고 테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파괴까지 불사하여 압제하는 지배방식을 통해 유지된다.
- 6) 지배정당성: 이는 당과 포괄적인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도움을 받아 총체적 지배 요구를 현실로 실행한다.¹⁴⁸⁾

그런데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라 하더라도, 여섯 개의 기준을 놓고 보면, 기준별로 나라마다 또한 시기마다 그 강도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면, 국가별로, 또는 한 나라에서도 시기별로 전체주의의 변화상을 밝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이 정치독점을 하는 경우에도 정치독점의 강약 또는 다원주의 허용 수준은 국가마다 또한 시기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배권역

148) *Ibid.*, p. 52.

의 차원에서 보면, 공산당적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사회와 개인으로 침투시키고자하는 노력과 강도와 방식에서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주의의 어떤 시기와 어떤 국가에서는 대규모의 물리적 테러와 숙청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식의 기준을 놓고 적용해 보면, 한 나라에서도 전체주의의 양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Merkel은 국가 기구의 사회에 대한 침투와 통제의 강도에 따라 공산당 독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¹⁴⁹⁾ 먼저 전체주의적 공산 독재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그리고 (스탈린, 모택동, 차우체스쿠, 김일성 등과 같은) 공산 지도자 독재를 들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공산독재이되 전체주의적 공산독재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산독재라 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공산독재이되, 집단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최소한의 다원주의가 수용되고, 지배는 일상 생활의 모든 구석에 까지 미치지 않는 공산독재는 공산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소련의 경우, 1924~1929, 1953~1956, 1985~1991의 시기,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공산 체제의 전체 시기, 중국은 1990년대부터가 이에 해당한다. 1945~1980년간 유고슬라비아에서 매우 인물화된 티토의 지배는 권위주의-공산주의적 지도자 독재의 유일한 사례이다.

Linz와 Stepan도 전체주의를 비교정치체제론의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전체주의와 탈-전체주의를 구별한다.¹⁵⁰⁾ 두 사람은 다섯 가지 유형의 정치체제를 구분한다. 즉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

149) *Ibid.*, p. 43, p. 52.

150)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주의, 탈-전체주의, 술탄주의이다. 분류 기준은 각 정치체제마다 네 가지 요소 즉 다원주의, 이데올로기, 동원, 지도부 성격(통치 한계 유무)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가이다. 전체주의의 경우 다원주의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유일적-유토피아적 지도 이데올로기가 정권 정당성의 근거이고, 동원 수준은 높고, 지도부의 통치의 한계가 불확정적이고 자의적이다. 탈-전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¹⁵¹⁾

- 다원주의: 정치적 다원주의는 부재(유일 정당이 공식적으로 권력 독점), 사회적·경제적으로 제한적인 다원주의 존재, 당-국가 내에 정권이 창출한 조직 그리고 비공식 시장 또는 국가-주도 시장 실험의 형태로 제한적 다원주의 존재
 - * ‘성숙한’ 탈-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제한적 사회적 다원주의가 지하 시민사회 조직의 ‘병렬문화’ 또는 ‘이차문화’로 확대, 지하 시민사회 조직은 소련 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자적으로 지하문건을 출판했던 바와 같은 초기 민주 야당을 지지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
- 이데올로기: 당은 여전히 지도 이데올로기를 고수하지만 당지도부나 당간부도 이데올로기 신봉 수준이 낮아지며, 사회 내에 정권 비판이 증가.
- 동원: 높지만, ‘공허함’. 공식 조직과 활동에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참여는 열성이 없는 반복적 일상일 뿐임. 시민들은 사적 생활을 더 중시. 예를 들어 개인은 혁명적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에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당원이 되고자 선택.

151) *Ibid.*, pp. 40~50; Linz의 전체주의론은 1975년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edited by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and published by Addison-Wesley)에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라는 항목으로 등장했다. 이는 이후 보강되어 같은 제목인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으로 출판되었다.

- 리더십: 전체주의 정권에서처럼, 탈-전체주의 지도부는 혁명정당 또는 운동 멤버로 제한되지만, 지도자들의 관료적 및 테크노크라트적 성격이 강화되고, 지도부 재량의 자의성과 절대성이 감소.

탈-전체주의는 초기 탈-전체주의, 동결된 탈-전체주의, 성숙한 탈-전체주의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초기 탈-전체주의는 전체주의의 이념형과 매우 비슷하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유럽 국가 중 불가리아가 1988년까지도 초기 탈-전체주의 단계에 머물렀다.¹⁵²⁾ 동결된 탈-전체주의는 탈-전체주의적 변화가 진행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동결된 경우이다. 시민사회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일정 수준 허용되지만, 당-국가의 통제가 다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하면서 장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977~1989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브레즈네프~체르넨코 시기 소련, 호네커 시기의 동독이다. 성숙한 탈-전체주의는 탈-전체주의 변화가 계속 진행된 경우인데, 공산당의 지도 역할은 정치적으로 신성시되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1970년대부터 폴란드, 1982~1988년 헝가리,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차우체스쿠의 루마니아와 김일성의 북한은 술탄주의적(=수령독재식) 전체주의로, 1988~1989년 폴란드는 권위주의적 공산주의로 분류된다.

Linz와 Stepan은 전체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로의 변화의 다양한 양상과 함께 그 동력의 근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한다. 첫째와 둘째는 정권 내부에서 세 번째는 정권 밖에서 그 동력이 발생한다.¹⁵³⁾ 먼저 정권 엘리트가 그러한 변화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post-totalitarianism by choice’)이다. 이 경우, 종종

152) *Ibid.*, p. 294.

153) *Ibid.*, p. 51.

개인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 엘리트는 수령급 지도자의 완전한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고 (테러가 중요했던 경우) 테러의 역할을 제한하기로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과거 거의 완전히 평정되어 있던 시민사회에서 비공식 조직이 약간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쇠락에 의한 탈-전체주의’ (또는 내키지 않는 순응을 통한 탈-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선택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무능력 또는 외부압력에 대한 내키지 않은 순응 때문에 이데올로기 신봉이 공허화되고, 동원은 틀에 박힌 관료적 조치로 타락하며, 저항 또는 상대적 자율성의 공간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그 동력이 정권 바깥에서 오는 경우로 ‘사회의 쟁취에 의한 탈-전체주의’이다. 이 경우 시민 사회 그룹이 상대적 자율성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고 획득한다.¹⁵⁴⁾

이상에서의 논의와 통찰을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 연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체제가 기본으로 전체주의 체제라고 해도, 그 전체주의적 프로젝트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약, 가용 자원, 수단의 종류와 배합 양상, 사회의 협력과 저항,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Giovanni Sartori가 실험적으로 제시했던 것처럼,¹⁵⁵⁾ 이러한 양상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시기별로 관찰하고 판정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전체주의의 역사적 양상 변화를 관찰해 낼 수 있고, 아울러 공통의 기준에 입각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도 가능해질 수 있다.

154) *Ibid.*, p. 293.

155) Giovanni Sartori, “Totalitarismus, Modellmanie und Lernen aus Irrtümern,” Eckhard Jesse (ed.), *Totalitarismus im 20. Jahrhundert* (Bon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5), pp. 538~556.

다. 전체주의 개념

앞 장에서의 연구리뷰에서 보면, 통속화된 고전 전체주의론에 대한 논쟁에서 비판점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전체주의론은 1) ‘꼭대기로부터 아래로’의 시각에 입각하고 있고, 2) 당-국가가 정부와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체제였다고 보며, 3)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데올로기, 테러와 강제, 정보 통제,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때문이고, 4) 공산주의 사회는 정권의 통제와 조작의 대상에 불과하며, 내적으로는 ‘원자화’되어 있다는 것, 5) (구제도의 파괴, 결사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억압과 부정 등과 같이) 파괴하고 억압하고 부정한 것만을 중심으로 개념정의 되었다는 것이다.

1970~1980년대 수정주의와 1990년대 이래 탈-전체주의 겸 탈-수정주의론,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에서 전개된 비판과 관련 논쟁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적 국가-사회 관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일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는 ‘위로부터’의 시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가의 무거운 강압력을 부정하면 안되지만, 이에 대응하는 개인 또는 ‘인민’을 국가 행동의 수동적 대상으로서 보아서만 안되고 행위 주체로도 상정해야 한다. 국가가 매우 우세하지만, 국가-개인(인민) 간에 쌍방향 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 당-국가의 강압적 프로젝트는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과 대응행동을 발생시키고, 이는 그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개인마다 집단마다 상이한 열정 수준에 기초하는 바의 참여, 우회와 회피 또는 일상적 저항을 발생시킨다. 이는 그 프로젝트의 실행과정,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바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당-국가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도 못하였고, 유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체제도 아니었다. 전체주의 프로젝트는 그것이 시도되기 전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해당 사회의 전통과 습속 및 규범과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상호 침투하고 또는 그를 방치하고 무시해야 했으며, 가족, 친구 및 친척 관계와 같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까지는 효과적으로 침투하고 통제하지 못했다. 복잡한 산업사회와 경제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시도, 그리고 지도부가 과다 설정한 계획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자원과 사회를 항시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시도는 체제 전반에서 혼란과 무질서와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과 개별 조직 차원의 다양한 비공식적 적응 메커니즘을 발생시켰다. 여기에는 간부-노동자/농민 간의 후견주의적 관계, 상호 보호 그룹의 형성, 부패와 시장적 거래를 포함한 호혜적 네트워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탈 행위는 체제를 작동시키고 또한 그 체제에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셋째, 전체주의는 단지 (구제도의 파괴, 단체와 개인의 자율성의 억압과 부정과 같이) 파괴하고 억압하고 부정한 것만이 아니고 생산적인 것도 포함했다. 그 중의 하나는 전체주의적 공산 통치에 상당 수준의 자발적 참여가 존재했으며 이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가 재생산되었고 안정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Kotkin이 의거했던 바의 언설이론에 기초한 ‘참여적 전체주의’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¹⁵⁶⁾ 공산통치하에서 이데올로기는 간단히 말해 회피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어도 표면상의 동조 여부에는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소 생존의 물질적 복지 수혜 여부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의 여부가 달린 문제였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해

156) Astrid Hedin, “Stalinism as Civilization: New Perspective on Communist Regimes,”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2 (2004), pp. 166~184.

당 사회의 언어와 조직에 철저히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대안적 정보와 사고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개인과 대중은 그 이데올로기를 내용상 특별히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의미와 상징의 세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했다. 결국 개인의 차원에서는 헤게모니(hegemony)적 언설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형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Edele가 주장했던 ‘신-전체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이 체제 그리고 이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결핍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가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이 체제가 제기하는 전반 요구를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체제가 자신에게 최적으로 불리하도록 활용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때문에 그 체제는 수정되는 동시에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¹⁵⁷⁾

2.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소련/중국과 비교한 특징

전체주의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일정하게 공통적인 조치와 정책을 유발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Friedrich/Brzezinski 등의 고전 전체주의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는 이데올로기적 내용과 사회적 기반 등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해도,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존재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통치구조, 제도와 절차, 그리고 정책이 유발되고, 그에 의해 ‘중요한 효과’가 공유된다면, 양자는 전체주의적이란 측면에서 본

157) Mark Edele, *Stalinist Society, 1928-1953*, p. 195.

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Friedrich/Brzezinski의 전체주의론도 국가마다 또한 시기별로 전체주의적 프로젝트의 의지와 노력의 강도, 그리고 구체적 추진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았다.

국가마다 전체주의의 구체적 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은 Harvard Interview Project에서의 전체주의 개념에서 보다 명확히 표현된다. 이 프로젝트는 소련체제를 ‘소련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로 규정했다. 이는 소련체제가 전체주의라는 단일요소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적 특성과 산업사회적 불가피성과 특징과의 복합적 혼합물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적 특성에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여건과 국내정치 특성 및 러시아식 전통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볼셰비키가 전체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상황으로 당면해야 했던 조건들이다. 산업사회적 불가피성과 특성은 공업화와 공업사회를 건설하고 당면해야 했던 필요 및 그 결과물의 효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소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고 상호 겹치고 상호 침투한 구체적 결과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인식 틀에서라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공히 전체주의로서의 본질을 공유하지만, 소련체제, 중국체제, 북한체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가. 상호 관계의 개관적 비교

스탈린 통치 시기 성립된 소련체제는 2차대전 이후에 탄생한 공산주의 국가 사회 체제의 기본 모델이었다. 그렇지만 각국의 공산주의는 스탈린 시대의 소련체제를 완전히 재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국의 공산 체제는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요하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되었다. 첫째, 공산 체제 수립 이전에 각국에 이미 존재하

고 있던 전통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¹⁵⁸⁾ 그리고 지정학적 특성, 둘째,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프로젝트가 제기하던 바의 사회의 총체적 변형에 관한 요구의 구체적 양상 (의지와 노력의 강도 그리고 선택된 방법), 셋째, 공업화 또는 산업사회 건설에 따르는 사회 구조 및 계층 변화의 요구이다. 이 세 가지는 각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겹치며 상호 침투했다.

중국에서 성립했던 모택동 체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Andrew Nathan과 Martin King Whyte의 대표적 두 가지 고전적 견해를 소개한다. Nathan의 견해에 따르면, “모택동 정권은 스탈린주의적 발전 모델을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현실에 강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노력으로부터 결과한 바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독특한 복합체(ensemble)이다.”¹⁵⁹⁾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모택동 중국의 제도는 절반만 실현된 애초의 스탈린주의 패턴과 다른 여러 가지 패턴 사이의 혼합이다.”¹⁶⁰⁾ 여기서 여러 가지 패턴에는 공산당의 연안 경험에서 도출된 일련의 패턴, 장개석의 국민당과 일본전통으로부터의 일정 패턴, 경제적 또는 정치적 당면 문제에 대한 실험적이고 현장성 적응으로부터의 일정 패턴이 포함된다.¹⁶¹⁾ 이러한 역사는 모택동 체제가 스탈린 체제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정권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158)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63~98;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pp. 235~254.

159) Andrew J. Nathan, *China's Transition*, p. 51.

160) *Ibid.*, p. 54.

161) 여기서 언급된 패턴의 영향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Xiaobo Lu and Elizabeth J. Perry,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rmonk: M.E. Sharpe, 1997);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Whyte는 모택동 체제와 스탈린 체제를 보다 선명하게 구별하는 주장을 한다. 그에 따르면, 모택동 체제는 첫째, 중국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이념에 의해 영향받고, 둘째, 소련의 조직 형태와 현대 기술 및 의사소통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셋째, 국가의 사회에 대한 극단적 수준의 지배를 만들어 내고자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먼저 그가 말하는 ‘전통적 전체주의 이념’을 설명해 보자. 과거 제국적 중국은 ‘지배주의적인 전체주의적 비전’에 의해 기반하고 있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중국 국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통제를 행사하고자 했지만, 자원의 제약, 주민의 가난과 무지 때문에 이러한 비전은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의 제국적 통치자들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지배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했다고 한다.¹⁶²⁾ 청나라의 멸망 이후 다윈주의를 인정하고자 했던 개혁가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실패하고,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승리했다. 그리하여, 국가-사회 관계는 개혁가들이 승리했었을 경우에 비해 한층 덜 혁명적이고 더 ‘전통적’인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1950년대 주로 소련식으로 수행된 조직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중소 분쟁의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특히 1956년부터 새로운 중국식 내용을 첨가했다. 그 결과로 성립한 중국식 또는 모택동식 공산주의는 소련의 조직 모델보다 결과적으로 한층 더 ‘국가의 사회에 대한 극단 수준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였다.

초기 중국체제와 마찬가지로 초기 북한체제도 공히 소련체제를

162)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Kenneth Liberthal, Joyce Kallgren, Rderick MacFarquhar, Frederic Wakeman, Jr., editors, *Perspectives on Modern China: Four Anniversaries* (New York: M.E. Sharpe, Inc, 1991), pp. 255~257.

전범으로 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다. 중국의 경우 공산 혁명은 소련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수행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었을 때도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했으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 소련의 중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이 당시 소련체제를 전범으로 자신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중국은 소련을 소련의 관련 문헌 번역이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학습했다.¹⁶³⁾ 소련이 원조와 전문가 파견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간은 1953~1956년에 불과했다. 이와 비교할 때, 북한 공산주의는 1945년 소련군의 북한 점령, 그리고 1948년까지 이어진 소련 군정을 배경으로 건설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체제 건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소련은 간접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했다면, 북한체제는 소련 군정 주도하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상황이 변화했다. 1950년 발생했던 6·25 전쟁에 소련은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직접 참가했고 조선인민군을 중국군 지휘 하에 두었다. 또한 중국은 1953년 휴전 이후에도 1958년까지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시켰다. 1950년대에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비중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국체제는 1956년경부터 급진화하면서 모택동식 체제의 고유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대로 북한에서도 동조되어 등장했다. 다시 말해, (다음에 보다 자세히 서술할 것이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체제도 중국에서의 사태 진전에 발맞추어 소련식 체제보다는 모택동식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¹⁶⁴⁾

163)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3~18.

164)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의 성격과 강도를 비교한 서술로서,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210~218.

나.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북한

우선 스탈린 체제의 모택동 체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모택동 체제는 스탈린 통치의 한 유형을 모방했고 그것을 나중에 한층 더 급진화된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스탈린 통치도 시기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변화했는데, ‘절정기 스탈린주의’ (1946~1950)는 그 가장 극단적 유형이었다. 1950년대 초반 모택동 체제는 ‘절정기 스탈린주의’를 전범으로 삼아 건설되었다.¹⁶⁵⁾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 자체가 이 모델을 비판하고 포기했지만 중국은 이 모델에 집착했다. 그러다가 1956년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및 중소 분쟁의 영향 하에서 중국의 정책은 ‘절정기 스탈린주의’를 한층 더 급진화시켰다. 이는 1956년 시작된 대약진운동 (1958~1960/1961)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행정체계가 스탈린주의 방법과는 진실로 다른 것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특정 유형을 그대로 복사한 것”¹⁶⁶⁾이고, 또한 이를 더욱 급진화하는 것을 통해 소련 모델로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이탈한 것이었다.¹⁶⁷⁾ 모택동 체제의 본질은 이처럼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을 모방 및 급진화한 것이었고, (이 보고서의 주제인)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말하면 결과적으로 소련체제보다 한층 더 ‘국가의 사회에 대한 극단 수준의 지배’를 시도했다. 모택동 체제는 1950년대 말에 공고화되었고 그 체제의 핵심 요소는 모택동 사망 시기까지

165)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의 특히 공장관리가 중국과 북한에 수용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1), pp. 147~208.

166)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p. 5.

167) Deborah A. Kaple, “Agents of Change: Soviet Advisers and High Stalinist Management in China, 1949~196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8, no. 1, (2016), p. 29.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개혁 이후에도 지탱했다.

그 구체적 경과와 내용을 보자.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중국은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리와 조직의 전범을 찾았는데, 그것은 전후 소련의 경험이었다.¹⁶⁸⁾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소련은 2차대전에서 승리했었고, 전쟁피해를 빠른 시간에 복구했으며,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소련 사회에서 ‘절정기 스탈린주의’(1946~1950)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적어도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스탈린이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시기였다. 그는 1930년대 숙청을 통해 내부의 적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고, 2차대전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스탈린은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 권위자로 통했다. 당시 스탈린이 누리던 절대적 지위는 모택동도 동경하는 바였을 것이다.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이러한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련 내부적으로는 정치적·경제적 위기의 시기였다. 1930년대에 성립했던 스탈린적 지배와 생산의 체제는 전쟁을 거치면서 흐트러져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탈린 정권은 전쟁 전에 성립했던 지배와 생산의 체제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는 정권이 사회에 대해 엄청난 강제를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재장악하고, 생산을 재건해야 함을 의미했다.¹⁶⁹⁾ 따라서 둘째, 이 시기는 경제, 정치체제와 문화에 대한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전쟁에 지친 주민이 파괴된 경제 복

168) *Ibid.*, pp. 5~30.

169) Donald A. Filtzer, *Soviet Workers and Late Stalinism : Labour and the Restoration of the Stalinist System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가혹한 관리 방법을 특징으로 했다. 이는 대중동원 방법, 교육과 재교육 기술, 강압, 그리고 투옥 위협을 포함한다.¹⁷⁰⁾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결국 폭력적이고 강압적 방법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체제였다.¹⁷¹⁾ 셋째, 산업관리와 관련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측면을 가졌다.¹⁷²⁾ 즉 공장 관리에 대한 당 통제, 대중동원 방법의 활용, 공장 관리의 광범한 군사화, 노동자의 교육과 재교육, 계획완수와 애국주의를 동일시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방법의 첫 번째 특징은 노동자를 계획 완수로 몰고 가기 위해 소련 공장에서 당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강요적인 방법이었다. 이 모델의 둘째 특징은 캠페인과 같은 ‘대중’ 동원 방법의 활용이었다. 당의 강력한 감독 하에서, 대중 동원은 돈 안 들이고 큰 목표를 달성할 목적의 방법이었다. 당의 대중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과 청년 그룹과 같은 대중 조직이 설치되었다. 셋째 방법은 (경제) 관리 문헌에서 군사적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차대전 동안 소련 사회가 군사화된 것을 반영했다. 네 번째 특징은 노동자가 교육되고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스탈린주의적 믿음이었다. 공산당의 프로그램은 맑스-레닌주의의 교리를 노동자에게 가르치는 것, 노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정치 의식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했다. 1946~1950 소련 모델의 마지막 특징은 경제목표를 애국주의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각자의 과업이 사회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기업

170) Deborah A. Kaple, “Agents of Change: Soviet Advisers and High Stalinist Management in China, 1949~1960,” p. 6.

171) *Ibid.*, p. 29.

172)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p. 7.

내의 모든 직업은 국가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고 들었다.”¹⁷³⁾

이러한 ‘절정기 스탈린주의’의 공장 모델은 소련의 산업 관리의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모델 중에서 독특한 시기였다.¹⁷⁴⁾ 이러한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을 중국 공산당이 전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중국식 체제의 세 가지 특징을 함축했다. 즉 첫째, 최고 지도자의 매우 강한 권위를 앞세우며, 둘째, 당의 권위와 강압과 협박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에서 정치 우선을 앞세우고 당의 통치를 강화한다는 것, 셋째, 산업관리와 관련해서 당은 거북하고 강제적 방식으로 공장관리에 참여하고 또한 공장 내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1950년대 초기 절정기 스탈린주의를 모방하였는데, 이것을 급진화하여 모택동식 또는 중국식 체제로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1957년 말에 들어서였다.¹⁷⁵⁾ 이를 추종하는 변화가 북한에서는 1959년 말 등장했다.¹⁷⁶⁾ 중국에서는 1957년 말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수많은 중국 국유기업들은 성(내각)이 아니라 지역당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공장 내에서는 당위원회가 공식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착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이 ‘절정기 스탈린주의’로부터 끌어낸 아이디어의 핵심 즉 당위원회가 행정을 장악하며, 활동가를 중심으로 공장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 등의 아이디어가 한층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더욱 완전하게

173)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pp. 110~111.

174) Michael Gelb, “Roots of Soviet Industrial Management, 1917~1941,”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3, issue 1 (1981), pp. 55~66.

175)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pp. 196~233.

176) 이 시기 북한에서 경제관리체계의 형성에 관하여, 박형중, “1960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지방당 중심의 공업관리체계 수립 과정과 내용,”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2003), pp. 89~132.

실행되었다.¹⁷⁷⁾ 북한에서는 1959년 ‘당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1961년부터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불리었고, 이와 함께 중국에서처럼 내각 중심이 아니라 지방당 중심의 경제관리체계 건설로의 변화가 발생했다.¹⁷⁸⁾

이 때 성립한 기본 구조들은 중국의 경우 모택동 시기 전성기를 누렸고, 개혁·개방 시기에는 크게 약화되었지만, 일부 잔존했는데, 북한에서는 그 기본구조가 큰 변화 없이 현재 (2018년 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Keaple은 이 때 성립한 체계가 그 이후에 중국의 발전에 미친 주요한 영향으로 네 가지를 지적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다섯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 첫째, 중국 국내 상황이 다른 경우에 그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더 빨리 정치화되었다.
- 둘째, 소련의 경우에 비해 중국 공산당은 사회와 기업 관리에서 더 많은 권력을 사용했다.
- 셋째, 중국 공산당이 관리에 침투하고 강압했던 수준은 - 이 수준은 중국 공산당이 소련에서 작동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수준이었지만 - 중공 역사의 이른 초기에서부터 매우 높았다.
- 넷째, 중국 공산당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정치 관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계급 노선이 더 깊게 그리고 더 일찍부터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⁷⁹⁾

177)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p. 18.

178) 북한이 과거의 ‘지배인유일관리제’를 ‘대안의 사업체계’로 바꾸면서 내놓은, 전자에 단점에 대한 혹독한 과잉 비판, 그리고 후자의 장점에 대한 과잉 찬양의 구체적 내용은 중국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중국측 논리에 관하여, Franz S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263~283. 북한측 논리는 박형중, “1960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지방당 중심의 공업관리체계 수립 과정과 내용,” 참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반적으로 과도한 목표를 내걸고 정치우선을 바탕으로 당 조직의 강압과 대중 동원에 입각하는 생산 방식은 부작용이 매우 크다. 이는 중국에서의 당위원회 주도 동원적 생산 방식의 부작용이 소련의 지배인 유일책임제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현저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상 계획경제이지만, 과도한 목표와 과도한 자원 및 인적 자본 투입을 예견하는 계획 수행 과정은 도중에서 끊임없이 병목 현상과 혼란을 초래하며, 결국에 계획 과정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획이 수행되려면 계획이 도중에 끊임없이 변경되는 가운데, 허위보고, 호혜적 교환 네트워크의 성립(중국의 경우 판시), 상호 보호 그룹의 형성 등 수많은 ‘일탈’이 발생해야 한다. 또한 혼란과 일탈을 제어하면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권적 조정과 개입, 그에 대한 절대복종 요구가 체제의 구성적 요소가 된다.¹⁸⁰⁾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소련에서 절정기 스탈린주의 시기 앞서 설명한 이 시기를 특징지었던 방법으로는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당시 5개년 계획은 수행 도중 1957년 포기되었는데, 포기되었다는 사실은 비밀이었다.¹⁸¹⁾ 중국에서 대약진운동(1958~1960/61)은 절정기 스탈린주의 경제방식을 한층 더 급진화한 것이었는데, 도중에 4,500만이 기근과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의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¹⁸²⁾

179)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p. 114.

180) Paul Gregory and Mark Harrison, “Allocation under Dictatorship: Research in Stalin’s Archiv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3, no. 3 (2005), pp. 721~761;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181) Deborah A. Kaple,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p. 111.

182) Frank Dikötter, *Mao’s Great Famine: The History of China’s Most Devastating Catastrophe, 1958~1962* (Hongkong: Bloomsbury Paperbacks, 2018).

다. 중국/북한 모델과 소련 모델 간 기본 구조에서의 차이

그런데 스탈린 통치의 전체 시기에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보다 온건한 모델이 존재했었다. 공장 관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스탈린 집권 시기였던 1930년대 5개년 계획들 초기에 적용되었던 모델은 지배인 유일 관리제였다.¹⁸³⁾ 이 모델은 1950년대 초 중국(그리고 북한)에서 일시 채택되기도 했었다.¹⁸⁴⁾ 이 모델은 스탈린 사후 개선을 거쳐 나중에 보다 일반적으로 소련 그리고 그 영향 하에 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관리 및 공장관리를 대표하던 모델이었다.¹⁸⁵⁾ 이 모델은 전체 체제의 정치행정구조와 경제 운영 및 그 축소판인 공장관리와 관련하여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과 다른 특징을 가졌다. 아울러 지배인 유일관리제 모델과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 간의 차이는 소련체제와 모택동/북한체제의 차이를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 보여준다.¹⁸⁶⁾

첫째, 지배인 유일관리제 모델은 행정의 각급 레벨에서 권위를 단일 인물(지배인)에 집중하는데, 그 인물은 해당 단위의 생산계획 달

183) Hiroaki Kuromiya, “Edinonachalie and the Soviet Industrial Manager, 1928~1937,” *Soviet Studies*, vol. 36, no. 2 (1984), pp. 185~204.

184)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01~216;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pp. 263~308.

185)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System of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53~19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186)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pp. 17~18; 唐亮, 『現代中國의 黨政關係』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7); 趙宏偉, 『中國의 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毛里和子, 『毛澤東時代の中國』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박형중,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과 소련의 비교,” 『북한 연구학회보』, 12권 1호 (2008), pp. 73~94.

성에 책임을 져야 했다. 다시 말해 (공장) 당위원회가 아니라 지배인이 공장운영에서 유일적 책임을 진다.

둘째,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현실에서 기업에 대해 엄격한 위계적 관료적 질서를 강요했는데, 이는 ‘절정기 스탈린주의’의 강한 동원적 성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체제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테크노크라트적 및 관료적 필요를 엄격히 반영했음에 비해,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이를 무시하면서 당의 지도와 대중동원을 앞세워 보다 더 높은 생산 목표 달성을 지향했다.

셋째,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에서는 당-정-인민회의-사회단체가 당의 주도하에 통합되어 당 중심의 일원적 체제의 특징이 강하지만, 지배인 유일관리제 모델에서는 당-정-소비에트-사회단체가 제한적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갖추었다.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에서는 당이 정치사업 뿐 아니라 행정적 역할에도 깊이 간여함으로써 당-정의 구분이 한층 모호해지는 한편, 당이 인민회의와 노동조합 등의 대중 단체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단지 동원과 교육의 수동적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인민회의 그리고 당-사회단체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러나 지배인 유일관리제 모델에서는 경제관리 일반 그리고 공장 관리에서 당위원회가 아니라 내각의 행정 계선 및 지배인이 우위를 차지했으며, 소비에트는 당-정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며, 노동조합 등의 대중단체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해당 멤버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노동조합의 경우 공장 내에서 관련 복지공여 및 노동조건 교섭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¹⁸⁷⁾

187)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pp. 175~178.

라. 중국/북한에서 국가의 사회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중국에 ‘절정기 스탈린주의’를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에 대한 (소련의 경우) 보다 더 철저한 통제 체제의 도입과 동반되었다. 중국의 체제는 호구 등록, 이주통제와 배급을 혼합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식량과 소비재에 대한 광범한 배급이 시행되고 노동시장이 폐지되어 (도시지역 내에서도) 자발적 직장 이동이 금지되었고, 호구 제도를 통해 특히 도시-농촌간의 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비해 소련은 ‘절정기 스탈린주의’(1946~1950) 시기를 제외하면,¹⁸⁸⁾ (1930년대 스탈린 통치 하대-테러 시기를 포함) 적어도 파업 시도 등 공개적·정치적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직장 변경, 도시-농촌간의 주거/직장 이동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직장과 대중 조직 및 거주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도의 면에서 중국보다 현저히 이완된 체제였다. 또한 소련의 경우 필요한 소비재를 배급 또는 (오직) 직장을 통한 공급이 아니라 (물론 상품이 항상 부족했지만 그리고 때로는 소속 직장이 희소물자 구입에 도움을 주었지만) 시장에서 구입했다. 이와 같은 소련과 중국의 차이는 거의 그대로 소련과 북한의 차이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언급하는 측면들에서 중국과 북한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아래 서술은 소련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한정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다음 IV장에서 시도된다.

188)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System of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53~1964*, p. 8.

(1) 직장 이동 금지

소련과 비교할 때, 중국/북한식 체제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소멸이며, 한번 배정된 직장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으며, 한번 배정된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되었다.¹⁸⁹⁾ Barry Naughton은 직장 이동과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즉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노동자는 직장을 빈번하게 바꾸었다. 노동자가 자기 직장을 버리고 동일한 도시에서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소련의 노동시장은 매우 활발했다. 1970년대 말까지 소련국가의 피고용인은 2주 전에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 둘 수 있었다. 1987년에는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했다. 자발적 직장 바꾸기는 단웨이(单位, danwei) 시스템 하 중국에서 보다 소련에서 백배 정도 흔했다. 소련에서는 모든 고용의 3분의 2가 기업의 직접 고용이었고, 다른 10%는 도시 노동자가 주선한 자발적 선택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중국의 도시 거주자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단위(직장)를 배정받았으며, 이후 직장생활의 전 시기를 단일한 단위에서 보냈다.¹⁹⁰⁾ 1960년대 초부터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최초 직장의 거의 9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정했다. 이로써 개별 기업에서 고용 유동성이 사라졌다.”¹⁹¹⁾

189) 북한의 경우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84), pp. 910~911.

190)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p. 173.

191) *Ibid.*, p. 172.

(2) 농촌-도시 이주 금지와 차별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가 불가능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직장은 국가 소유인 국유기업에 소속된 직장이었고, 농촌에서는 농민은 집체/협동 소유인 인민공사/협동농장에 고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 금지는 호구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동시에 농촌-도시 간의 차별이 구조화되었다.¹⁹²⁾ 도시별로도 위계가 존재하여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우대 받았다. 애초에 농민의 도시 이주 금지가 실시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농업으로부터 탈출이 너무 지나쳐 중국의 농업이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둘째, 수백만이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직장을 바꾸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호구제도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고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을 명확히 구분했다. 호적의 차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켰다. 소득, 주택, 식량배급, 교육, 의료와 기타 서비스, 고용과 퇴직의 모든 면에서 도시는 농촌에 비해 그리고 국가부문 노동자는 인민공사 농민에 비해 우대 받았다. 그러나 일단 어떤 호적에 등록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특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는 매우 곤란했다.¹⁹³⁾ 이로써 농민은 토지에 결박되었고, 농촌의 과잉인구는 도시로 갈 수 없었다. 농촌과 도시에 다면적으로 매우 차이가 컸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금지는 농민에게 낮은 생활수준을 강요하는 것이었다.¹⁹⁴⁾ 호구제도에 의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금지

192) Tiejun Cheng and Mark Selden, "The Origins and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Hukou System," *The China Quarterly*, no. 139 (1994), pp. 644~668; 이동진, "'제2 시민'으로서의 중국 농민 - 아파트하이드 시각에서," 『아세아연구』, 제56권 4호 (2013), p. 265~304.

193) 鄭抗生·奧島孝康, 『中國の社會: 開放される12億の民』, p. 38.

194)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p. 54

는 1980년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3) 직장(단위)의 구조와 역할

도시에서 직장이동 그리고 호구제도에 의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금지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사회통제를 상호 강화시켜 주는 두 개의 체제가 중국과 북한의 도시에서 발전되었다. 그 하나는 단위였고, 다른 하나는 주거지역에서 조직된 가두 조직이었다. 북한에서는 ‘단위’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의 직장은 중국에서의 단위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문헌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한 서술은 중국의 단위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실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를 보자.¹⁹⁵⁾ 1950년대 말 직장이동 금지에 의해 노동시장이 폐지된 것은 도시민이 자신의 직장(단위)에 영구히 고용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직장(단위)는 개인에 대해 정치(가부장적) 기능과 사회적(어머니적) 기능을 했다. 전통적 가족에서처럼 직장(단위)은 아이들을 규율하고 제재하는 가부장이자, 동시에 보살핌과 일상수요를 어머니처럼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했다.¹⁹⁶⁾ 먼저 사회경제적 기능을 보자. 중국의 경우에 관해 Whyte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1950년대 말 노동시장의 사실상 제거가 의미했던 것은 도시민은 자신의 단위에서 ‘영구적 고용’의 형태를 발견했고, 물자부족과

195) 鄭抗生·奧島孝康, 『中國の社會: 開放される12億の民』, pp. 43~46; 이종희,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계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7권 3호 (2003), pp. 85~120; 차이옌웨이, 정해영, “중국 도시 ‘단위’ 공간의 형성과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72권 (2016) pp. 119~133.

196) Xiaobo Lu and Elizabeth J. Perry,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p. 8.

배급의 환경에서 피고용자는 직장을 통해 취득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에 매우 의존하게 되었다. 단위는 많은 경우에 주거, 탁아소, 병원, 식당, 휴양시설을 제공했으며, 배급표와 희소 재화를 피고용자에게 분배했다. 단위는 그 구성원의 휴식 시간 활동을 감독했으며, 지역 청소 운동을 벌였고, 예방주사 맞기를 조직했고, 해당 주민을 범죄위험에 대해 경계하도록 동원했으며, 개인 간 그리고 부부 간 분쟁을 중재했고, 결혼과 이혼 서류를(그리고 궁극적으로 임신 통제) 검토했다.”¹⁹⁷⁾

중국과 북한에서 이러한 직장(단위)의 ‘복지’ 또는 ‘사회보장공급’ 기능 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간섭과 통제¹⁹⁸⁾는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복지 기능은 국가 소유의 대단위 기업/기관에서 더 잘 갖추어져 있고, 더 잘 기능했다. 북한에서는 ‘대안 체계’의 후방공급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특히 경제난의 악화에 따라 국가 배급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정치적 위계상 서열과 능력에 따른 ‘기관공급’이 소속한 종업원의 ‘후방공급’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주택공급, 사회보험과 연금이 기업소 책임이었지만, 소련과 북한에서는 국가 공급이 기본이었다.¹⁹⁹⁾ 중국에서 기업은 전체 주택의 큰 부분을 소유하고 대부분의 도시 신규 주택을 공급했다. 이와는 달리 북한과 소련에서는 주택 공급과 배정의 권한을 도시경영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었다.²⁰⁰⁾

197)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p. 262.

198) 북한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p. 909~913.

199)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pp. 178~18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 1002;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 (서울: 자료원, 1995), pp. 328~330.

200) Barry Naughton, “Danwei: The Economic Foundations of a Unique Institution,” pp. 178~18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p. 1042~1043;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pp. 250~255.

그러나 경제난의 심화에 따라 나중에 서술하듯이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주택공급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기업소/기관별 담당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장(단위)의 정치적 기능을 보자. 중국의 경우 ‘단위’의 정치적 제도에는 ‘당기층조직에 의한 일원적 지도제도,’ ‘사상정치사업제도,’ ‘당안제도’가 거론된다.²⁰¹⁾ 북한의 경우도 이와 대칭을 이루며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안의 사업체제 원칙에 따라 당조직에 의한 지도, 사상정치사업, 그리고 평정제도가 그것이다.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직장(단위)의 지도부는 (공장 지배인과 같은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해당 당비서와 당조직이며, 당조직은 독점적, 강제적, 교화적 차원의 사상정치사업을 한다. 중국의 당안제도와 북한의 평정제도는 그 내용을 비교하면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당안/평정이라는 것은 농민을 제외하고 모든 취로인구의 개인별로 일생에 걸쳐 작성되는 ‘정치행위기록’으로서 그 성격은 정치성, 비밀성, 처벌성, 연좌성, 종신성 등에 의해 집약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²⁰²⁾ 결국 당안/평정은 중국/북한 정치체제의 말단 지배장치로서의 직장(단위) 지도부의 권력과 ‘강제력의 증강’과 ‘구속력의 증대’라는 두 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⁰³⁾ 다음 인용문구에서 (중국의) 당안을 (북한의) 평정으로 바꾸어도 완전히 뜻이 통한다.

“만약 ‘당안’의 ‘위험한 자료가 인용될 경우의 결과에 관해 고도의 불안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안의 기록이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안을 작성하는 지도부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안의 기록이 결정하는 것은 승진, 승급, 주택

201) 趙宏偉, 『中國の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 p. 116.

202) *Ibid.*, pp. 116~117.

203) *Ibid.*, p. 118.

신청, 그리고 장래에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반과 정치적 과오에 대한 처벌 정도, 정치캠페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또한 사람이 직장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만약 ‘단위’ 지도부가 ‘당안’을 전직갈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전직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단위’ 지도부는 ‘당안’을 무기로 하여 사람들을 인신적으로 ‘단위’에 구속하고 복종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²⁰⁴⁾

(4) 중국의 가도(街道)위원회와 북한의 인민반

도시에서 사회통제의 두 번째 기둥은 중국에서는 가도위원회와 거주민 소그룹,²⁰⁵⁾ 북한에서는 인민반과 5호담당제였다. 중국의 가도위원회와 북한의 인민반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거주민위원회는 100~800 가구를 포괄했고, 가도(街道)위원회는 15~40 가구를 감시했다. 두 위원회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생활을 감독했다. 북한의 인민반은 15~20세대로 구성된다. Whyte는 중국의 가도 조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민반도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²⁰⁶⁾

“노동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러한 이웃 조직은 청소운동과 예방주사 맞기 운동을 벌이고 양호실과 탁아소를 설립하고, 반범죄 회합과 시민 순찰대를 조직했으며, 개인 간 부부 간 분쟁을 중재하고, 결혼과 이혼을 승인했다. 이들은 또

204) *Ibid.*

205) 朴尙洙, “1950년대 北京 街道 ‘공간’과 居民委員會의 작동 방식,” 『중국근현대사연구』, 64권 (2014), pp. 213~245; 朴尙洙, “중국 도시 人民公社 건설 시기 街道 공간의 국가와 사회, 1958~1965-北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6권 (2015), pp. 145~178.

20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p. 905~906;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서울: 자료원, 1995), pp. 88~100.

한 외부 노동 단위에 속하지 않는 거주민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치 학습과 상호 비판 회의를 조직하여, 당의 최근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암흑점’이 사회에 없도록 하였다. 많은 도시 가족들은 양쪽 모두의 일반대중 사회통제 체제에 속해 있었고 두 개의 별도의 관료적 감시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와 이차 그룹을 교체하거나 선제 장악한 소련 형 조직에 더하여 고도로 침입적이고 침투하는 체제가 건설되어 도시 일반대중에서 일차 그룹에 대한 공식 통제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²⁰⁷⁾

(5) 농촌에서의 주민 통제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농촌과 농민은 도시와 도시민에 비해 매우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공히 농촌에서 토지개혁과 집단화는 혈통, 종교 집단, 양반이 지배하는 전통적 지배구조를 해체했다.²⁰⁸⁾ 그 대신에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의 일원적 체계를 중심으로 농촌 대중 조직과 개인을 지배하고 동원하는 체계가 성립했다.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의 국유기업에서 당비서가 정치적 경제적 자원배분과 관련한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자신에 개인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인식적 지배를 바탕으로²⁰⁹⁾ ‘소왕’ 노릇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팀 리더가²¹⁰⁾ 북한에서는 작업반장이 ‘소왕’ 노릇을 했다.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농민은 도시로 이주할

207)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p. 262.

208) 이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언으로서,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pp. 450~462.

209)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8), pp. 20~23.

210) Jean C. Oi,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World Politics*, vol. 37, no. 2 (1985), pp. 238~266.

수 없는 불박이 신분이었는데, 농민의 직장인 인민공사/협동농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도시의 기업과 비교할 때 그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 따라서 농촌에는 성분이 가장 나쁜 개인들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Whyte는 중국 농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데, 이는 북한과 거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농민은 원래 자기 마을에 감금되었다. (주요한 예외는 여성이었는데, 결혼하면 보통 다른 마을에 있는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했으며, 그 후에는 새로운 지역의 거주지에 감금되었다). 중앙 집권적 쿼터 그리고 가격 설정과 경제생활에 관한 국가와 인민공사 규정은 일반적으로 농민 농사 자율성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고, 또한 농촌 소득에 제한을 가하였다. 일련의 새로운 농촌 조직들, 즉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 동맹, 부녀동맹, 농촌 의용군, 작업반과 분조장 그룹이 만들어져, 농민의 생활을 감독했으며, 일정 정도로 정치학습을 감독하고, 여가 시간 활동을 감독했고, 방송 네트워크를 연결시켰으며, 여타 수단이 농촌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되었다.”²¹¹⁾

(6) 당과 당 비서의 지배적 역할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소련공산당에 비해 훨씬 더 깊이 사회에 침투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교육하고 동원했다.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모든 종류 단위의 최하층 조직을 제외한 모든 수준의 조직에 당원을 두었고 당원들은 어디에 위치하든 직장/단위에서 지배적 인물이었다. 직장/단위 내에서 통상 당 비서가 지배적이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다.²¹²⁾ 당은 가히 모든 단위에 위치하면

211)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p. 262.

212) Andrew J. Nathan, *China's Transition*, p. 56.

서 행정 기능도 맡아서 했다. 당은 군림했을 뿐 아니라 통치했고, 사회를 지도했을 뿐 아니라 사회 내의 대부분의 직장/단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²¹³⁾ 이에 비해 소련에서 당과 당 비서의 위상과 권력은 중국/북한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직장에서는 당 비서가 아니라 지배인이 최고 책임자이자 1인자였으며, 당은 기본적으로 행정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당의 완전한 하급기관이 아니라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비에트와 대중매체에서의 독자 여론도 일정하게 견제 역할을 했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에 중국/북한의 당 비서에 비해 소련 당 비서의 권한은 제약되어 있었다. 북한/중국의 경우 노동자는 영구적으로 불박이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당 조직과 당 비서를 회피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소비재가 직장의 배급을 통해,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정치적 기회가 직장을 통해 당 비서의 영향력 하에서 공급되었으며, 소조단위의 정치학습과 비판-상호비판 또는 조직생활 등을 통한 정치적 통제가 훨씬 강했다. 따라서 소련의 경우에 비해 북한/중국의 직장(단위)에서 노동자는 해당 당 조직 또는 당 비서에게 현저하게 더 종속적이고 불리한 위치에서 있었다.

(7) 중국과 북한에서 계급 신분 차별

소련과 중국/북한을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북한에서 성분제라고 불리는 바의 계급적 신분 체계에 의한 차별이다. 이러한 ‘성분제’식 차별은 소련에서는 1920~1930년대에만 존재했었는데,²¹⁴⁾ 중국에서는 모택동 시기인 1950년대에서 1979년까지, 북

213) *Ibid.*, p. 57.

214) Sheila Fitzpatrick, “Ascribing Class: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in Soviet Russia,”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65, no. 4 (1993), pp. 745~770.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소련의 경우 성분과 관련한 명문화된 제

한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존재한다.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택동 시기 중국에서 개인은 계급적 성분에 따라 구분되었다.²¹⁵⁾ 계급적 성분은 본인의 계급원천(아버지의 계급)과 본인의 계급(통상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것)에 의해 규정된다. 성분은 불량, 중간상태, 양호의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양호한 성분에는 노동자, 빈농과 하위 중농, 혁명간부, 혁명군인, 혁명열사가족이 있었다. 불량한 성분에는 지주, 부농, 자본가, 반혁명분자, 악질분자, 우익이 있었다. 중간 성분은 중농, 지식인층, 자유업종사자, 종교인, 영세수공업자, 영세상인, 영세노점상이 있었다.²¹⁶⁾ 鄭抗生, 奧島孝康(おくしま たかやす)에 따르면, 1979년 폐지될 때까지 이런 계급구성은

“사회 구성원의 취업, 결혼, 입학, 입당, 입대 및 직장에서의 승진 등과 같은 지위 변화의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그의 사회자원의 획득 유무와 그 다과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졌으며, 아울러 각 신분집단 간에서의 구성원의 유동에 관하여 큰 제한을 가했다.

도상의 차별은 매우 짧은 시기에만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에도 정치적 경계와 편집증적 적대감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탈린 주도로 시행된 1937/38년 ‘대테러’에서 70만 명이 ‘반-혁명죄’로 처형되었다. 스탈린은 외부의 군사위협이 높아질수록 내부의 ‘숨겨진’ 적대분자의 공모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숨겨진’ 적들이란, 평시에는 체제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스스로 충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만, 외부의 적이 간섭하는 경우 스탈린이 보기에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숨겨진’ 적들은 이미 어떤 저항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잠재적’ 또는 ‘무의식적’(unconscious) 즉 (배신할 생각도 없고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제5열들이었다. 스탈린은 이들을 미리서 제거하고자 했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경고하지 않고 비밀스레 대량으로 처형하는 것이었다. Mark Harrison, “Dictator and Defense,” Mark Harrison (ed.), *Guns and Rubles: The Defense Industry in the Stalinist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 9~10.

215) Anita Chan, “Images of China’s Social Structure: The Changing Perspectives of Canton Students,” *World Politics*, vol. 34, no. 3 (1982), pp. 295~323; Jonathan Unger, *The Transformation of Rural China* (London: M. E. Sharpe, 2002), pp. 29~48.

216) 현인에,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p. 9.

각 신분집단 간에는 비교적 강한 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었다.”²¹⁷⁾

소련 그리고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에서 주민 성분 분류와 그에 따른 주민 차별은 훨씬 장기간에 걸쳐 훨씬 엄격하고 가혹하며 세밀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의 성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20%(400만)가 핵심군중, 50%(1,100만)가 기본군중, 30%(600만)가 복잡군중이다.²¹⁸⁾ 중국의 경우, 1964년 전체 주민의 8~10%가 ‘적대적’이라 간주되었다.²¹⁹⁾ 소련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까지만 신분차별이 존재했는데, 당시 소련 내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전체 잠재 유권자 중에서 3.5%~3.9%가 투표행사권이 없었다.²²⁰⁾ 그리고 1935년 12월 소련정권은 고등교육 입학 자격에서 사회적 범주를 철폐했다.²²¹⁾ 추가적으로 중국 농촌의 사례를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이든 계급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1950년대 토지개혁 이전 중국 농촌의 경우도, 빈농, 중농, 부농, 지주 순으로 숫자가 줄어든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농촌의 계급구조는 역피라미드가 되었다. 역피라미드 최상층에 과거 빈농, 최하층 꼭지에 과거 지주가 위치했다.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의 어느 농촌 마을에서²²²⁾ ‘좋은 계급’으로 간주된 과거 ‘빈농-중하층 농’이 전체 주민의 80~85%를 차지했다. 역피라미드의 중간을 차지하는 중간층은 과거 중농과 중상층 농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주민의 10~12%를 차지했다. 과거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로 이루어진 ‘나

217) 鄭抗生·奧島孝康 『中國の社會：開放される12億の民』, p. 37.

218)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p. 85.

219) Bala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p. 217.

220) *Ibid.*, p. 216.

221) *Ibid.*

222) Jonathan Unger, *The Transformation of Rural China*, pp. 30~32.

쁜 계급’은 4~5%에 불과했다. 이 마을에서 과거 지주는 특히 극심하게 배척되었는데, 이들은 마치 ‘문둥이’처럼 취급 받았다. 중국 농촌의 계급구조가 역피라미드였고,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는 노동자-농민독재의 양상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성분구조는 위가 좁고 가운데가 블록하고 아래가 넓은 항아리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 중국, 북한을 놓고 비교하면, 북한에서의 성분제 신분차별이 현저하게 심하며 또한 가장 오랜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주민의 30%를, 중국은 1950년대에서 1979년까지 대략 주민의 8~10%를, 소련은 20년대와 3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주민의 4%미만을 내부의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왜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극심한 신분 차별이 생성되고 유지되었는가는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한 정치적 내부 스트레스가 북한에서 다른 경우보다 현저하게 심했을 것이며, 그것이 북한의 정치 또는 국가-사회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에서 애초의 계급 분류가 6·25 전쟁 이후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 행적과 피해 수준에 따르는 성분분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²²³⁾ 이후 남북의 분단과 대결이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된 것, 그리고 내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분 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내부적 이유도 중요한 작용을 했을 수 있다.

북한에서 성분 분류는 인민보안성이 담담해온 주민등록 사업의 핵심이다.²²⁴⁾ 북한에서는 적어도 4번에 걸쳐 성분 분류 사업이 진행되었다.²²⁵⁾ 즉 1958~1960년 사이 중앙당 집중지도, 1964~1969

223)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pp. 79~91.

224) 이재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pp. 112~124.

년 주민등록 사업, 1969~1970년 51개 성분 분류 사업, 1972~1978년 주민 요해 사업이다. 북한은 1990년경 주민성분분류체계를 개편했다.²²⁶⁾ 여기에 더하자면, 1997~2000년 사이 심화조 사건도 성분 재조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심화조는 사회안전성 각급 단위에 1997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6·25 전쟁 당시 간부들의 행적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중앙당 고위 간부를 비롯 2만명 이상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⁷⁾

(8) 중국에서 소조와 정치학습 및 비판-상호비판, 그리고 북한에서의 조직생활

소련 대 중국과 북한의 또 하나의 차이는 소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의례 즉 조직화된 정치학습, 상호 비판과 자아비판의 활동의 사회적 포괄성과 강도이다. 소조 차원의 정치의례의 출발점은 불세비키 당 세포 활동이었다.²²⁸⁾ 이는 앞선 시기 러시아 나로드닉(Narodnik) 혁명 그룹의 유사한 활동방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소조 차원의 정치의례는 공산당과 청년조직 콤소몰(Komsomol, 전연방 레닌주의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에까지만 확장되었다. 소련에서 이러한 정치의례는 노동조합과 같이 당이 통제하는 대중조직의 일반구성원에게까지 확장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일반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련에서 소조 차원의 정치의례는 엘리트와 일반주민을 구별하는 차이 중의 하나였다.

22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p. 301~313.

226)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p. 122~124.

227) 김철주, “2만명이 처형된 북한 심화조 사건의 끔찍한 비극,” 『프리미엄 조선』, 2014.8.20.

228) Martin King Whyte,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 24~25.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소조차원의 정치의례가 당을 넘고 대중조직을 거쳐 일반주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중국의 경우 소조차원의 정치의례가 당을 넘어 그 바깥으로 확장된 것은 연안시절부터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소조 차원의 정치의례는 모든 노동자, 지식인과 도시주민, 그리고 여러 형태의 피고용인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²²⁹⁾ 중국에서 소조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작업조와 같은 특정 조직의 말단행정 단위를 기초로 조직되었다. Whyte는 중국에서 소조 차원의 정치의례의 기본방식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소조원은 조직상의 행동 (예를 들어 노동, 군사훈련 또는 학문적 연구)을 수행하는 것에 추가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정치학습을 한다. 이러한 학습 행위 동안 소조원들은 정기적으로 상호 비판 또는 비판과 상호비판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분석하며, 배정된 학습 자료의 기준에 비추어 사고와 행동을 비판적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은 자신의 결점을 비판하고, 여타 소조원의 비판을 수용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결점도 지적하도록 되어 있다.”²³⁰⁾

중국의 소조와 정치의례에 상응하는 것이 북한의 조직생활이다. 조직생활은 당조직 공장과 기업소 학교 협동농장 군대 등 북한의 모든 기관과 대중단체의 기층 단위(10~15명)를 기초로 수행되며, 당회의 월요학습회 수요강연회 아침 독보회 인민반회의 생활총화와 같은 모임을 포괄한다.²³¹⁾ 조직생활의 핵심은 생활총화인데, 이는

229) *Ibid.*, p. 33.

230) *Ibid.*, p. 3.

231)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2008), p. 122, 125.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에 비추어 북한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행사이다.²³²⁾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4단계의 변화를 거쳤다.²³³⁾ 첫째 단계에서 1962년 초부터 생활총화가 제도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소련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당 조직과 민청(민주청년동맹)만을 포괄했다. 둘째 단계는 1970년대 김정일에 의해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또한 사로청, 농근맹, 직업동맹, 여맹, 소년단 등 전 주민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 또는 1988년부터 생활총화를 포함 조직생활 전반이 완화되었다. 넷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난 때문에 생활총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여맹의 조직생활은 더 강화되었다.²³⁴⁾

이상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소조와 정치의례 또는 북한의 생활총화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소조 차원 정치의례의 목표와 특징은 “소조와 정치의례는 전 사회에 걸쳐 비공식 1차 그룹에 침투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며, 이 통제를 엘리트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열성을 창출하게끔 사용하도록 고안된 조직상의 혁신이다”²³⁵⁾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엘리트에 의해 소조로 구성되고, 소조 내에서는 공식 요구를 지지하는 개인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치학습과 상호 비판을 통해 그룹 내부 압력을 만들어 여타 구성원들이 공식 정책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조와 정치의례는 중앙의 메시지를

232) 노정민, “북 생활총화 수첩 내용 들여다보니...,” 『자유아시아방송』, 2015.4.13.

233) *Ibid.*, pp. 130~140.

234)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pp. 140~141; 김종수, “북한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2008), p. 29.

235) Martin King Whyte,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p. 11.

주민에 전달하고 대중의 순응을 얻으며, 또한 위로부터의 리더십과 아래로부터의 열성을 혼합해야 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조와 정치의례는 개별 소조원의 행위를 검토하고 나쁜 행위를 교정하며, 개인들 간의 갈등치리와 적대감 형성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소조와 정치의례와 조직생활은 두 가지 점에서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먼저 위로부터 악용될 수 있다. 소조 차원 정치의례의 원래 취지는 상급자가 대중의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지만, 상급자는 하급자를 통제하고 조작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하급자 행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상호 감시와 사소한 나쁜 행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수단으로 상급자가 소조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²³⁶⁾ 다음으로 구성원 간의 소외와 적대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즉 “그룹 내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도 비판함으로써 상급자의 칭찬을 받고 승진과 특혜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면, 그는 그러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²³⁷⁾

중국에서 소조활동 대 북한의 조직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조직생활과 관련한 한국의 연구는 대체로 주민통제 기능을 강조하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생활총화보다 광의의 개념인 총화가 통제 감독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생활총화가 주민 통제 목적이 강한 의례라는 점을 보여 준다”²³⁸⁾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1990년대 중반 경제파탄 속에서도 북한체제를 지탱시켜 준 핵심 제도의 하나로 간

236) *Ibid.*, p. 58.

237) *Ibid.*, p. 57.

238)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p. 129.

주된다.²³⁹⁾ 생활총화는 중앙당이 주민 개개인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이며, 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체제 불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에서의 소조 활동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았다. Whyte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

“소조 의례는 대부분의 조직 환경에서 고도로 일상화되었고 주로 ‘유지’ 기능을 했다. 다른 말로, 소조 의례는 활동성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기존하는 정치 활동가가 조직 내의 여타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촉진하는 데는 가치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나날이 태도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사상 개조 사업을 특히 밀도있게 수행한 것은 보면, 주민의 태도변화의 속도에 대해 엘리트들이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⁰⁾

3. 소결

1949년 이후 모택동 집권 시기에 중국은 소련에 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현저히 더 강력한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그 시작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절정기 스탈린주의’(1946~1950)의 소련 제도를 중국에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당을 중심으로 주민과 기업을 통제하여 정치안정과 생산 증대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절정기 스탈린주의’는 산업 관리에서 다섯 가지 사항

239) 김종수, “북한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p. 13.

240) Martin King Whyte,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p. 232.

을 기본으로 했다. 즉 공장 관리에 대한 당 통제, ‘대중 방법’의 활용, 공장 관리의 광범한 군사화, 노동자의 교육과 재교육, 계획완수와 애국주의를 동일시이다. 이러한 ‘절정기 스탈린주의’의 이식은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효과를 생산했다. 첫째, 국내 상황이 더 빨리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화된 것, 둘째, 중국 공산당이 사회와 기업 관리에서 더 많은 권력을 사용하게 된 것, 셋째, 중국 공산당이 산업 관리에 침투하고 강압했던 수준이 더 높았던 것, 넷째, 중국 공산당의 지배적 정치적 역할이 계급 노선의 강화를 초래한 것, 다섯째, 강압과 동원에 의한 생산 방식이 경제의 혼란과 부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절정기 스탈린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기초하여 중국에서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국가 통제 체제가 성립했다. 도시에서는 직장이동이 금지되고 호구제도에 입각하여 농촌으로부터 도시 이주가 금지되었으며, 배급제도가 광범하게 실시되었다. 중국과 비교할 때 소련에서는 직장, 주택과 소비재 분배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 컸으며, 개인은 자신의 직접 상급자에게 의존성이 더 약했다. 소련 시민은 직장과 주거를 바꾸는데서 중국보다 더 자유로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도시에서의 직장(단위)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개인을 통제하며 역할을 담당했다. 직장(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은 가도위원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통제되었다. 도시에 비하여 권리와 혜택이 열악하였던 농촌에서는 농민공사가 그 주요한 통제 기구였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에 비해 훨씬 더 깊이 사회에 침투하고 훨씬 더 강하게 교육하고 동원했다. 모든 단위에 존재했던 당 조직에서 당 비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소련에서는 개인의 계급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그에 따라 매우 광범하게 개인의 사회적 정치

적 기회가 제약당했다.

결과적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북한의 시민에 비해 소련의 시민은 더 약한 국가 통제 그리고 더 넓은 사적 생활 영역을 누릴 수 있었다. 소련에서의 지배가 테러와 경찰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면, 중국/북한에서의 지배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정치사업’의 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의 생활총화 거주지에서의 인민반과 같은 주민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에 비해 중국/북한에서 당과 인접 인전대 조직의 주민 장악이 강했으며, 또한 일반 주민에 대한 정치학습, 상호 비판, 조직상의 규율이 훨씬 강하게 적용되었다.²⁴¹⁾ 또한 결혼, 이혼, 육아와 같은 개인생활의 사사로운 패턴을 국가개입의 목표로 간주하고자 하는 노력은 소련에서보다 중국/북한에서 훨씬 강력했다.

241) Andrew J. Nathan, *China's Transition*, p. 56.



IV

북한식 전체주의와 조직생활사회

최사현 (사단법인 임진강)

박형중 (통일연구원)

여기서는 앞서의 연구 성과를 북한에 적용한다. 1절은 앞서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북한체제를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 사회’로 규정한다. 또한 북한체제에서도 시기별로 ‘총체적 통제’의 강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도한 바와 실제 실현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술한다. 1절의 서술이 주로 논리적 서술이었다면, 2절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식 전체주의의 특성, 또는 ‘총체적 통제’의 시도의 북한식 특성을 한 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서,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직생활사회가 1970년대 중반 성립하기까지 그간 역사의 경로를 서술하고, 북한식 특징으로서의 조직생활사회가 등장하는 데 기여한 기본 요인으로 동원경제를 설정하며, 이어서 동원경제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서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체계, 주체사상, 식량배급제, 주민등록, 대규모 소개 추방, 조직생활과 관련한 포상과 징벌에 관하여 서술한다. 이어서, 북한의 각급 단위에서의 조직생활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서술한다. 3절은 이러한 북한식 ‘총체적 통제’ 시도가 결과하는 바의 의도하지 않은 상황, 주민의 수동적 저항과 적응이 발생시키는 상황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조직생활 사회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어떻게 변화해갔는가를 소설체를 빌어 서술한다.

1. 기본 특성

여기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그 하나인 ‘총체적 통제’는 한국가에서도 시기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지와 실천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 프로젝트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실제로 실현되는 양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에 기반하여, 북한에서의 전체주의 프로젝트도 그러한 변화 과정을 밟아 왔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 북한 역사에서는 ‘총체적 통제’의 의지가 가장 강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제도와 운영의 체계를 갖춘 조직생활사회가 성립했음을 밝힌다.

가. ‘총체적 통제’의 국가/시기별 차이 가능성 - 개념적 고찰

앞서의 서술은 공산 국가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과 개념을 검토했다.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논쟁은 일종의 정-반-합으로 전개되었다. 그 출발은 1950~1960년대 전체주의론이었고, 1970~1980년대 이를 둘러싼 수정주의자들의 반론, 그리고 1990년대 이래 전체주의와 수정주의를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시도가 존재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상의 기본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식, 전체주의, 산업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전체주의적 측면이고 그 핵심은 ‘총체적 통제’ 시도이다. 앞서 인용한 Harvard Interview Project가 정의 했듯이, 전체주의란 ‘정치권력을 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물질적, 인적 자원,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적 감정 및 주민의 정서까지도 조정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총체적 통제’ 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현실에서 의도한 바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총체적 통제’ 시도와 관련한 의지와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산 정권이라 해도, 정권에 따라 또는 같은 정권이라든 시기에 따라, ‘총체적 통제’의 의지 그리고/또는 능력이 동

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의 서술은 Linz와 Stepan에 따라, 전체주의, 동결된 탈-전체주의, 성숙한 탈-전체주의와 같은 개념을 구분했다.

둘째, ‘총체적 통제’의 구체적 실행 체계는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서의 서술은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전체주의라고 대분류되더라도, 중국의 모택동 체제와 소련 스탈린 체제를 상이한 하위 유형으로 구분했고, 북한체제는 중국 모택동식 체제와 동일한 하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소련/스탈린 체제와 비교할 때, 모택동 체제와 북한체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총체적 통제’에 관한 의지가 강하며 그 포괄 범위가 더 넓고, 그에 적절하게 제도체계가 성립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총체적 통제’ 시도가 반드시 의도한 바대로의 결과만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총체적 시도 자체가 무리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야심찬 시도는 실행과정에서의 정책 자체의 혼란 그리고 개인과 주민의 적응과 오펜된 저항을 내장하고 있다. ‘총체적 통제’의 강도와 범위가 야심찰수록, 혼란과 저항은 비례하며, 혼란과 징벌에 대응하며 자구적 생존모색을 위한 비공식 적응의 필요성은 강해진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총체적 통제’의 프로젝트를 기축으로 하는 공식적 표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편에서 그 표면을 유지·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비공식적 이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 사회는 중앙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또한 꼭대기로부터의 작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작용이 공존한다.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위계, 통제와 질서가 엄격하게 또한 강고한 것처럼 존재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것은 그 이면에는 광범한 혼란과 그 혼란을 수습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매우 광범한 비공식 활동이 존재한다.

나. 1970년대 중반 ‘총체적 통제’의 현격한 강화와 조직생활사회의 탄생

전체주의론에서는 파시즘적 운동이든지 불세비키 운동이든지, ‘총체적 통제’가 지향하는 바는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전체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다. 이러한 언급은 해당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까지는 적절한 평가이지만, 그러한 ‘개조’가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회에는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명제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70년대에서처럼) ‘개조’를 끝낸 사회주의 또는 성숙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도, ‘총체적 통제’의 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태의 사회주의에서 ‘총체적 통제’ 의지가 강화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원적 경제 운영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또는 자원 투입을 고도로 동원적으로 운영하고자 할수록, ‘총체적 통제’에의 의지와 필요는 증가하고, 역으로 (개혁사회주의에서처럼) 경제운영과 자원투입을 보다 정상적 수준에서 행하고자 할 때, ‘총체적 통제’의 의지와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명제에 입각하여, 1960년대 초 북한식 전체주의 ‘총체적 통제’의 하부구조를 완수한 북한이 1970년대 중반 어떠한 이유에서 ‘총체적 통제’ 시도를 현격히 강화시키고자 했는가를 설명한다.

이러한 기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이 더 노력하도록 추동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능력주의 원칙, 선거에서 승리 추구, 기업들끼리 경쟁, 이윤추구, 실업 또는 파산의 공포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추가 노력 추동 기제를 제거하거나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능력주의 원칙은 특히 공장 노동자

의 경우 자본주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강도로 적용되었다.²⁴²⁾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추구, 기업들끼리 경쟁, 이윤추구, 실업 또는 파산의 위협과 같은 기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무의미해졌다. 실적 증대 또는 추가 노력 추동을 담당할 대안적 기제가 없다면, 이러한 경제는 정체하거나 주저앉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과 생산성을 추동할 수단은 무엇인가?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가용자원에 비해 매우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정치적으로 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각 단위가 극대 생산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가용자원의 통상적 사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바의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능력에 준하는 식으로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해놓는 것이다. 가용 자원의 무리한 사용에는 노동력의 과잉 투입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소비를 극단으로 억제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수령을 위해 또는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적 자기 능력을 훨씬 뛰어 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이는 스탈린주의 시대 소련, 1950년대까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 특징이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소련 또는 사회주의 사회의 작동 원칙의 상당부분 그리고 소련 또는 사회주의적 생활의 조건들이 왜 우리가 발견했던 양상으로 존재했는가를 설명한다.²⁴³⁾ 자원의 과잉 투입 의도는 애초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현상 또는 대부분의 내부 문제를 초래했다. 이를 보면, 만연한 물자부족 현상, 또는 보다 심한 경우 배급의 불가피성, 물자부족 방지대책으로서 (개별 기업의) 재고 증가 시도, 통제 회피 시

242) Donald A.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London: Routledge, 1976) 참조.

243) Raymond A. Bauer, Alex Inkeles, and Clyde Kluckh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p. 46.

도, 그리고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와 개인들 간의 비공식적 연줄 관계의 만연 등을 결과한다. 정권 측에서 가장 우려스러웠을 것은 소비를 극도로 억제한 가운데 초인적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공개적 또는 잠재적 저항, 그러한 저항의 한 형태로 서의 태업의 가능성이다. 정권 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과다 투입과 초인적 목표달성이라는 애초의 의도를 관철하려면, 당을 이용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여 동원 수준을 높이든지, 아니면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불만을 제거하든지, 국가적 안보 위기를 조장하여 애국적 헌신이라는 명목 하에 공짜 추가 노동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여 결핍을 구조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야 한다.

물론 소련경제도 전체 역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서방 경제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동원적 경제였다.²⁴⁴⁾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전범으로 삼았던 ‘절정기 스탈린주의’ 시기는 그러한 동원적 의지가 가장 강했고 그에 적절하게 당이 생산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제도체계를 운영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소련 경제도 동원적이었지만, 모택동 중국과 북한의 경제는 소련보다 일반적으로 한층 더 동원적 충동에 기반하여 건설되었다.²⁴⁵⁾ 이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역설과 부작용이 중국과 북한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다. 한편에서 정권은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내걸고, 온 사회와 모든 조직과 모든 개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직하고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당과 국가 체계의 위계와 기율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탈분자와 저항분자를 제어하기 위해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주민 동원에서

244) Vladimir Kontorovich and Alexander Wein, “What did the Soviet Rulers Maximise?,”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9 (2009) pp. 1579~2961.

245) 박형중,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과 소련의 비교,” pp. 87~89.

강제를 절약하고 ‘자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대내외 위기 조장이 이루어지고 사상 교화가 강조된다. 다른 편에서는 이와 같은 무리한 목표 추구는 체제전반에 앞서 언급했던 혼란을 강화시킨다. 혼란의 와중에서도 당과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절대복종과 강력한 조직규율이 요구되며, 구조적으로 부족해지는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항시적이고 즉흥적인 강압적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식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무리하고도 강제적 목표 추구는 생활상의 여러 곤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게 되는 개인 간의 비공식적 적응과 문제해결 시도를 만연시키는데, 이는 당과 국가에 의해 ‘불순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당과 국가가 무리한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노력할수록 개인적 비공식 적응 현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당과 국가의 통제 의지가 강화된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의 북한식 특성 그리고 시기적 변화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식 특성을 보자.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중국 모택동 체제와 북한체제는 소련의 ‘절정기 스탈린 체제’를 모방하고 이식하는 시도에서 출발했지만, 독자적인 특징을 발전시켰다.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소련/스탈린 체제를 중국/북한체제와 비교할 때, 그 차이의 핵심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현저하게 강력한 통제를 의도하고 그에 적절한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면서, 소련 및 스탈린 체제와의 구조적 차별성을 만들어 내었던 요소들로 다음의 것들이 언급되었다. 즉, 직장이동금지, 농촌-도시 이주 금지와 차별, 모든 직장(단위)에서 당과 당 비서의 지배적 역할, 노동자의 직장(단위)에의 조직화된 의존, 거주지(인민반) 조직, 농촌에서 주민 통제, 성분제적인 계급 신분 차

별, 당과 청년 동맹을 넘어 전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조활동/조직 생활이다.

소련체제와 비교할 때, 중국/북한체제는 구조적으로 동질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상이한 하위유형이지만, 양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중국식 모택동 체제와 구별되는 북한식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식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중국의 경우 ‘총체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시도는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혼란과 파손에 직면했고, 또한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 해체 과정에 들어선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1970년대 초중반 내부적으로 직면한 여러 문제를 처리하고, 남북 경쟁의 강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체제를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통제’의 시도는 과거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강화되었다. 북한에서 이 시기 즉 ‘총체적 통제’의 시도가 가장 강력했고 또한 가장 체계적인 체계와 운영을 갖추었던 양상을 여기서 조직생활사회라고 부른다.

요약하면, 이렇다. 애초부터 공산주의 프로젝트는 ‘총체적 통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정권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여러 부작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총체적 통제’의 필요성과 욕구가 더욱 증가한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1950년대 또는 1960년대,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 경제 개혁 과정에서 과도하고 강제적 자원 과다 투입의 의지가 약화되었다. 이에 부수하여 따라왔던 것은 정치적 통제 그리고 행정적 사법적 강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아울러 여타 부분에서도 통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국가안보위기와 애국심을 조장하고 활

용해야 할 필요성도 낮아졌다는 점이다.²⁴⁶⁾ 그렇지만 1950년대 탈-스탈린화를 거부했던 일련의 국가, 즉 중국과 북한 그리고 쿠바는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²⁴⁷⁾ 소련 및 동유럽과는 반대로 당시 중국과 북한은 동원경제를 강화했고, 개인승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안보와 관련해서도 서방과의 긴장완화가 아니라 극좌 모험주의적 대결 노선을 걸었다. 이러한 노선은 결국, ‘총체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를 강화시켰으며, 그에 부응하는 제도와 운영을 탄생시켰다.

Ⅲ장 2절에서 소련/중국의 체제와 북한체제를 비교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직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국가는 단위(또는 소속직장)라는 중간 매개항을 통해 개인과 대면한다. 역으로 개인은 단위라는 중간 매개항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와 대면한다. 단위에서는 당 비서와 당 조직이 핵심 경영진과 핵심 근간을 이루며,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개인은 한 번 단위에 소속되면 대체로 일생동안 해당 단위에서 소속되어 살아야 한다. 같은 절에서 소개한 Walder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개인 또는 노동자는 직장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 (당이 주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의존, 그리고 상급자에 의존이라는 구조화된 의존(organized dependence)을 통해 단위에 종속된다. 해당 단위는 소속 개인에 대한 의식주를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단위는 개인을 해당 조직 내부의 소조에 소속시키고 정치학습, 비판과 상호비판과 같은 정치의례를 치르게 한다. 단위와 소조는 이러한 정치의례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사상적 동향 뿐 아니라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

246) Raymond A. Bauer, Alex Inkeles, and Clyde Kluckh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p. 46.

247)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pp. 300~343.

하며, 개인을 생산증대와 정권 충성으로 지향시킨다.

이와 같은 중국 모델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단위체제 모델이라고 불리었다면, 이러한 모델이 북한식으로 표현된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 조직생활 모델이다. 다시 말해 단위 모델과 조직생활 모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1961년 대안체제가 수립되었고, 1962년 생활총화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중국의 단위 제도 및 소조의 정치의례에 비견할 수 있는 기본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제도는 1970년의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로청, 농근맹, 직업동맹, 여맹, 소년단 등 전 주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또한 김정일 후계 구축과정에서 1973년 한층 강화되었다.²⁴⁸⁾ 1974년부터 경제의 동원적 운영이 한층 고도화되고, 여러 다른 조치가 겹치면서, 조직/직장을 매개로 하여 개인을 ‘총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격히 강화되었다. 여기서는 개인의 직장에서의 구조화된 종속과 더불어 이처럼 생활총화 강화를 위시하여 국가의 직장을 통한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가 강화된 상황을 조직생활 사회의 성립으로 개념정의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조직생활은 북한정권이 직장(단위)를 매개로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며, 조직생활사회는 조직생활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타 하부구조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은 조직생활사회라는 하부구조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그러면 조직생활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북한의 공식 서술 분석을 보면, 조직생활은 네 가지 목적 달성을 지향한다. 첫째,

248)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2008) pp. 121~145.

기본적으로 해당 조직/직장에서 맡은 바 기본 업무의 충실한 이행, 둘째, 정치적 충성의 고양, 셋째, 개인 생활과 사고에 대한 통제와 감시, 넷째, 조직규율의 강화이다. 먼저 해당 조직/직장에서 기본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조직생활의 가장 중요한 1차적 목적이다. 즉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은 해당 조직에서 분공을 받고 그 실행을 보고하며 다시 새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이며 혁명활동으로서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적 조직생활은 회의에서 사업을 토의하는 활동과 맡은 분공을 실행하는 활동을 다 포괄한다.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²⁴⁹⁾

둘째, 정치적 충성 고양을 보자. 조직생활에 대한 『정치사전』의 해설에는²⁵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 ‘당성을 단련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는 조직생활의 목표가 개인의 수령과 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충성 고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충성교양’과 ‘교시관철’에 문제가 많을수록 이 원칙은 강조될 것이다.

셋째, 개인 생활과 사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보자. 조직생활에 대한 『정치사전』의 해설은²⁵¹⁾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즉 ‘모든 조직들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여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한

249)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45.

250) 위의 책, pp. 1045~1046.

251) 위의 책.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원칙적 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혁명적 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가 다 비판 속에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판과 상호비판은 결국 지도부가 개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사생활과 머릿속 사고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조직 규율의 강화를 보자.²⁵²⁾ 『정치사전』의 서술은 마지막으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 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며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질서 밑에서 대중의 통제 속에서 생활하도록 습관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조직생활을 통한 엄격한 규율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자각적인 규율’ 유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총체적 통제’를 북한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역사적·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에 그 절정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이전 즉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식 ‘총체적 통제’의 기초 하부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절정에 이르렀던 ‘총체적 통제’의 체제가 점차 완화되고, 부분 붕괴되고 부분 대체되었다가, 재수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총체적 통제’ 시도와 관련된 의지와 실현의 강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역사의 지식을 동원해 본다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해 볼 수 있다.

252) 위의 책.

첫째 시기는 1945~1958/1961년에 이르는 시기로 ‘총체적 통제’를 위한 기본 제도를 건설되어 가는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1961~1974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총체적 통제’의 기본 제도가 건설되고 운영되던 시기이다. 셋째 시기는 1974~1980년대 중반이다.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공표되는 등 조직생활사회의 기본제도 및 운영 체계가 확립되었다. 북한 역사에서 ‘총체적 통제’가 가장 강력하게 관철되던 시기이다. 넷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의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조직생활체계가 완화되다가, 1990년 초중반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다섯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이다. ‘총체적 통제’가 상당수준 포기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다가 2013년 8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배포되었다. 여섯째 시기는 2013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과거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만에 개정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발표되고 재차 기층 당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는 시도가 등장했다. 이를 보면, 북한 정권이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차 ‘총체적 통제’ 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단 북한식 ‘총체적 통제’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 즉 1970년대 초중반까지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제1시기 1945~1958/1961년을 보자.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 이미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친소 공산 세력을 제외한 정치세력은 소멸했다. 중국과 북한은 공히 50년대 초까지 당시 스탈린주의 모델을 전범삼아 자신의 체제를 구성했다. 이 경우, 1945~1948년간 북한은 소련의 군정 치하에 체제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소련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참전을 거쳐, 1953~1958년간 중국의용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체제 건설의 정책과 방향이 중국에서의 그것과 동조하기 시작했다.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을 계기로 중국은 체제 건설과 운영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소련과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1950년대 초 전범으로 삼았던 ‘절정기 스탈린주의’를 급진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대약진운동(1958~1961/62년)을 거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모습으로 정착하여 모택동식 중국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모택동 체제를 소련 체제와 구별 짓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즉 노동시장 철폐(직장이동금지), 도시-농촌의 이주 금지와 격차 유지, 단위(직장) 제도의 정착, 직장에서(지배인에 대한) 당비서 우위 체제 수립 등이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 체제를 잡았다. 이러한 체제의 요소들은 같은 시기에 북한에 도입되었으며, 북한식 체제의 기본체제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1958년까지 농업 협동화가 완료되었고 같은 시기 공장제도도 개편되어 1961년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아울러 1958년까지 대체로 상층 권력 투쟁이 일단락되고 빨치산파의 우위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중하층 주민을 성분제에 따라 분류하는 ‘중양당 집중지도’(1958~1959)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북한식 ‘총체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기본 성립했으며, 1961년 4차 당대회는 내용상 이를 기념하는 집회였다.

제2시기는 1961~1974년까지의 시기이다. 중국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기틀을 갖춘 모택동 체제는 그 후 1966~1968년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총체적 통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것이 야기했던 혼란상은 오히려 1950년대 매우 공들여 만들어 놓은 사회생활에 대한 관료제적 조정체계를 해체했고, 비교적 자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생각의 교환, 독자적이고 비판적 사고의 공간도 열어주었다.²⁵³⁾ 모택동 통치 말기(1969~1976년)에는 기층생활에

대한 정교한 관료 통제를 재건설하고자 시도되었지만, 문화대혁명이전만큼 효과적인 체제를 만들 수는 없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60년대 초 정립된 기본 체제는 문화대혁명과 같은 수준의 혼란과 파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정치문화적 풍조의 영향, 그리고 1960년대 후반 대남 공격 노선과 경제적 곤란이 야기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총체적 통제’의 의지와 실천의 전면 강화를 지향하는 수령 독재 체제의 건설로 나아갔다.²⁵⁴⁾ 이는 1967년 4기 1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북한의 절대 지도자로 내세우는 정치 체제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제3시기는 1974년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인데, 제2시기의 성취를 배경으로 북한식 ‘총체적 통제’는 1970년대 초반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단 절정에 이르렀다. 이를 보면,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수령 지위의 법제화, 1973년 남북대화 파탄과 함께 (그간 북한우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남북 본격 경쟁시대 돌입, 1973년 전주민이 생활총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 수립,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발표, 1974년 70일 전투 개시, 1974년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 1974년 전국사회과학자토론회에서 주체사상 일차 총괄(계급투쟁에 기초한 계속혁명 노선,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기조로 하는 사상혁명 노선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언급된 여러 사건과 조치가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시너지 종합의 총체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정치공학적 사항이 진행된다. 첫째, 역사와 인식에서 다른 정치 파벌의 흔적을 말소하고, 파벌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일파만의 역사적 궤적을 현재

253)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pp. 255~256.

254)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214~223.

의 정치 편익에 맞게 조작하여 신화화할 목적으로 항일유격대 전통 및 백두 혈통의 계보 및 사대주의적 대국주의 타파(주체)가 확립되어 집권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며, 둘째, 정권 충성과 생산 동원의 강화 과정에서 집요한 사상교화를 통해 노골적 강제를 절약할 목적으로 인간개조와 관련 전사회 혁명화, 노동계급화 기풍을 세워 노동자, 농민 인테리의 사상개조가 이루어지며, 사람과의 사업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모든 일을 정치사업으로 처리하게 되고, 셋째, 사회개조와 관련 수령-당-대중의 구조요소로 된 조직생활 시스템형 사회개조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조직생활 시스템형 사회는 온 사회가 수령의 단일의지 하에서 마치 기계와 같은 정확성과 엄밀성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의 기계식 작동이 저절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설치되었다. 먼저 기계에는 윤활유가 필요한 바, 사회라는 기계의 작동을 위한 윤활유로 사상적 윤활유인 정치사상과 도덕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생활 집단을 운영관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회라는 기계 작동과 관련한 분야별 정치공학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부서로서 선전부, 조직부, 보위부 등 공안관료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넷째, 경제적으로는 ‘총동원 대건설’의 구호 아래 사회주의 국가 고유의 합리적 계획경제 운영을 포기하고 ‘혁명적 기풍’ 수립에 의거한 인해전술적 사회동원, 외화벌이 및 수매계획 할당 등 전근대적 군사적 생산법이 적극 추구되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포상과 처벌의 관리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열의와 기술적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도덕적 자극과 함께, 4.15 선물운동, 그 반응과 보답으로써 충성의 외화벌이운동, 농촌지원, 대건설 동원, 집단배치, 사회동원 건설 등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각종 혁명적 및 계급적 사건이나

정치행사(축제)를 계기로 생활총화의 사상투쟁 분위기 확립, 그 생활 총화 제도의 정규화/제도화 및 개별적 당원 및 동맹원들에 대한 철저한 생활평정 제도의 실시가 시행되었다. 행정적으로는 조직생활 환경 속에서 항상 전쟁준비, 간첩 및 반당혁명 분자 색출, 주민소개 및 추방, 통신·이동·이주·이직의 통제 관리 강화가 시행되었다. 여섯째, 감정조직을 위한 선전선동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예술선동 수단이 동원되었다. 감정조직은 사회적 풍조로서 패기와 정열이 충만하도록 하였고, 고용살이 근성이나 맥없고 나쁜(즉 늘 크데한) 현상을 대상으로 참신성 투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감정조직은 사회운동과 대중운동에 동반되어, 건설·생산 돌격대 운동, 절약 탐구와 예비동원 운동, 반탐오·반낭비 반대 투쟁을 가열차게 만들어야 했다.

1974년과 그 전후로 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과 계기, 그리고 대응 조치가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1974년은 분명 북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상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여러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설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격 시작된 남북 경쟁에서 북한측의 우위를 계속 유지 또는 확보한다는 대(大) 목표 아래, 이를 위해서 전체 당과 국가, 주민이 최대 동원되는 체제를 성립하고자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대 동원을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는 ‘총체적 통제’의 강도 증강이었다. 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전개하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조직생활과 엄격한 생활총화를 통하여 전 주민을 수령과 후계자를 중심으로 통일 단결 시키며, 수령과 후계자가 내세운 핵심 목표에 온 주민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또한 (당 및 외곽단체에 근거한 조직생활 강화를 통해) 개인과 소속직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침투와 최대 수준의 통

제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대한 조직규율을 강화하고 그 열정을 인위적으로 고조시켜 최대한 동원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식 체제 운영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안정과 생산성증대라는 양대 목표²⁵⁵⁾를 북한식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 북한이 도달한 ‘총체적 통제’의 최고 강도와 최고의 철저성과 관련한 제도와 운영의 체계를 종합하여 조직생활사회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명칭을 택한 이유는 이 명칭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머리속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험이자, 북한식 전체주의가 구체화한 바의 ‘총체적 통제’의 양태의 특징을 가장 잘 잡아내 주기 때문이다.

2. 하부구조

조직생활사회는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정착했지만, 그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고, 그것이 성립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하부구조가 건설되어야 했다. 그 핵심은 네 가지이다. 첫째, 경제적으로 동원경제와 식량배급제, 둘째, 제도적으로 대안의 사업체제, 셋째, 사상적으로 주체사상, 넷째, 조직생활사회를 유지하는 정치·치안적 하부구조이며, 이는 주민등록, 대규모 소개와 추방, 여행증 제도, 조직생활에서 포상과 징벌을 포함한다. 이러한 하부구조는 분단 이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구비되어 오는 가운데, 1970년대 중반 ‘총체적 통제’ 의지가 현격히 강화됨에 따라 그 제도의 체제와

255) Balint Balla, *Kaderverwaltung: Versuch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 sowjetisch-volksdemokratischen Typs* (Stuttgart: Ferdinand Enke Verlag, 1972) 참조.

운영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언급하는 네 개의 하부 구조는 별개로는 존재할 수 없고, 개별 하부구조는 다른 하부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식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다른 개별 하부구조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양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3절은 조직생활사회가 가장 성숙해 있던 1970년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그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가. 경제적 하부구조 - 동원경제와 식량배급제

경제적 하부구조는 기본으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동원경제, 둘째, 식량배급제이다.

(1) 동원경제

북한 경제 운영의 중요한 특징은 동원경제라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동원경제로 시작하여 동원경제로 지속되고 있다. 조직생활은 한편에서는 충성 강화를 통한 정치안정의 기제이지만, 그 충성 강화는 생산 증대를 통해 즉 동원경제에의 열성적 참여를 통해 일차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조직생활은 정치적 안정과 생산 증대라는 이중 목적의 성취에 기여해야 한다.²⁵⁶⁾ 1절에서 서술하였듯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총체적 통제’에의 추가적 동력은 비현실적으로 목적을 높이 설정하고 온 사회와 조직과 개인을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강제적으로 추동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시도는 불가피한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 혼란을 제어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압적 개

256) Balint Balla, “‘Bürokratie’ oder ‘kader’-Verwaltung?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volksdemokratischen Typ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a. 2, heft 2 (1973), pp. 101~127.

입, 위로부터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 의무, 이를 위한 절대적 조직규율, 그리고 사상적 반주음악이 필요해진다. 즉 언급된 사항들이 기능하게 만들자면, 사상예술적 효과음악과 장치로써, 대내외적 적들과의 실제적 그리고 ‘환상적’ 또는 사상적 투쟁의 분위기, 그리고 수령의 무오류성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굳은 신념, 그 권위의 확실성 그리고 권위에 절대적 복종을 보장하는 일련의 연성/경성 강제체계가 필요하다.

북한식 동원경제의 원형은 1946년 설립된 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주도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이었다. 1950년대 후반의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 과정도 그 걸모습은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이나 ‘5개년계획’이라는 식으로 계획경제에 기반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노선/세력 갈등과 관련한 반종파투쟁의 정치적 분위기를 배경음악으로 펼쳐진 ‘혁명적 대고조 운동’, 즉 대중동원 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까치 법칙이든 까마귀 법칙이든 우리는 모른다”면서 공칭능력을 타파한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강철 증산운동’, 덕천과 기양에서 ‘자동차 트랙터 생산운동’, 평양시 북구에서의 ‘평양속도 창조운동’,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에서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인민군대가 동원된 함흥의 ‘2.8비날론 공장 건설운동’ 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 스스로가 평가하는 바의 ‘기적적’ 대중동원경제에서는 합리적 경제학적 관리방식은 설 자리가 거의 없었다. 남북 분단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북한 지역에서의 동원경제는 그 기본구조를 유지한 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로 성숙한 양태로 진화했다. 동원경제는 1970년대 그 절정에 이르렀다. 1970년대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남측에 유리하게 변화하던 시기이자 조직생활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북한에서 동원경제의 특징은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령의 현지도이다. 북한은 수령의 권위를 극대화했고, 그 극대화 된 권위를 동원경제의 추동력으로 삼았다. 이러한 양태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60년대 초에 있는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수령의 현지도였다. 이 현지도는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늘 현실에 들어가 모든 것을 정치적 방법, 당적 지도 방법으로 해결” 한다는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정립했다. 주민을 강제 동원하는 것에 기초하는 동원경제가 유지되고자 하는 한, 수령의 권위와 교시 집행체계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유지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동원경제와 수령독재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수령의 권위를 강화하고 절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정식화되었다.

둘째, 동원경제는 혁명투쟁, 계급투쟁, 사상투쟁을 추동력으로 하여 근로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의거했다. 북한은 이를 ‘주체형의 경제건설’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투쟁식 군중 노동동원은 세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가 유지되어야 했으며, 그것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할 때 인위적으로 조장되어야 했다. 다음으로, 혁명투쟁, 계급투쟁, 사상투쟁을 추동력으로 하는 경제방식은 무보수 노동을 추진하며 또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최저한으로 억누르며, 사회 전체 소비수준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혁명투쟁, 계급투쟁, 사상투쟁의 강조와 일상화는 개인이 자율성을 버리고 전체의 대의에 따라 전체가 요구하는 것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 또는 설득하는 효과적 장치였다.²⁵⁷⁾

셋째, 동원경제는 증장기적으로 생산력 감퇴를 불가피하게 했는

257) 정치도덕적 자극, 전투적 노력동원운동의 정치와 경제에 관하여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pp. 126~189.

데, 이를 동원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생산력 감퇴를 야기하는 동원경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생산력 감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동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동원경제가 생산력 감퇴를 야기하는 이유는 동원경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단기 충격적인 노력집약적 방식이었고,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생산기술이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동원에서는 통계나 경제과학적 노동관리, 원가관리, 생산관리, 기술관리보다는 수령의 권위, 반제투쟁, 계급투쟁, 사상선전과 정치도덕적 평가 등이 중시된다. 특히 정치적 방식, 사람과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동원경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동원경제 방식에는 계획-집행-평가분석-재계획의 인간활동 기본주기조차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산력 감퇴의 이유 때문에 동원경제를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동원경제는 수령의 권위체계, 혁명투쟁/계급투쟁/사상투쟁이 함축하고 있는 대내정치적 안보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동원경제를 해체한다는 것은 언급된 두 가지 사항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넷째, 조직생활의 강화는 투쟁식 군중노동동원에서 청년들을 주력군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1970년대 초부터 청년기 인생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10년 동안 국가를 위해 무보수 노동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 나아가 이들은 그것을 (강제에 의해 억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발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겉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조직생활의 강화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조직생활의 강화시기도 1970년대 초였고, 청년들이 전투원이라기보다는 무보수 노동제공자로서의 10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했던 시기도 1970년대 초반부터였다. 북한이 조직생활 사회

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70년대 초, 사회동원의 종류로는 〈충성의 야간돌격대〉, 〈생산현장 지원〉, 〈대건설 동원〉, 〈모내기〉, 〈김매기〉, 〈가물막이전투〉, 〈추수전투〉 등이 이미 존재했다. 그런데 이에 추가하여 1970년대 초부터는 당과 수령의 지도하에 청년노동력은 내각(당시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으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신 편제하에서 북한 청년들은 〈돌격대〉, 〈군인 건설자〉 등의 정치적 미명하에 각종 정치적 노동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다. 이 시기부터 북한 인민군대의 가치는 군사력보다는 오히려 노동력 원천으로서의 비중이 더 컸다. 1970년대 초반, 당이 외화벌이를 시작하고 국가 계획경제의 내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120여만 명에 달하는 인민군대도 업적쌓기 및 외화벌이에 진입했다. 이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인민군대의 서해갑문건설(1981~1986)이었다.²⁵⁸⁾ 군대는 (국가 예산의 지원없이 자체 자금으로 또한 단기간에) 서해갑문을 건설하겠다는 데 대한 허락을 받아 내었다. 그런데 그 허락에는 그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가 외화벌이 사업도 행할 수 있다는 허락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부식물 자체생산’이라는 부산물도 따라 붙었다. 인민군대는 이때부터 명실 공히 군사력보다는 노동력으로서 그 질과 가치가 바뀌었다. 백년대계 교육의 시점에서 보면 한창 공부할 10대 후반에 인민군대에 나가 10여 년간 변변한 책 한 권 읽지 못하고 이치를 따지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오로지 명령체계에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부르짖으며 하루 12~15시간 육체노동에만 종사했다.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학령기, 혼령기 다 놓치고 체력도 쇠진해 결국 단순 노동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1980년대 이와 같이 군인 노동력

258) 특수기관 외화벌이, 그리고 그에 의한 계획경제 침식과 장마당 번성에 관하여,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56~75.

동원과 군대 외화벌이 사업을 바탕으로 행해진 대규모 건설에는 서해 갑문 건설 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²⁵⁹⁾ 평양-원산 고속도로(1978년 개통), 평양-남포 고속도로(1970~1978년 개통)²⁶⁰⁾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섯째, 동원경제가 야기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권력층의 외화벌이, 주민층의 장마당 활동을 조장했다. 북한에서 배급제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마당이 번성하는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동원경제는 앞서 지적한 내생적 문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키지만, 1960년대 후반 등장했던 다음과 같은 외생적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화되었다. 즉 (전후 인구폭발 시기 태어난 세대가 인민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른) 학령 인구압, 1969년 평양시 수해, 1966년 시작되었던 병진노선, 구소련의 차관상환, 1966~1968년 중국의 문혁 그리고 (북송사업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일제 상품 보급로 역할을 했던) 재일교포 귀국자 공동체의 시장자극 등을 들 수 있다.²⁶¹⁾ 1970년대에 농민시장이 크게 번성하여, 국가가 강력 조치를 통해 그 억제에 나서야 할 정도였다. 이 시기 장마당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국영경제의 난조에 따른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게 된 일반 주민의 장마당 활동이 증가했고, 둘째, 계획경제의 배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특권층의 사치적 소비욕구가 증가했다. 셋째, 김정일이 장마당을 활용하는 특권적 외화벌이를 통해 대량의 정

259) 1987년 부흥역과 봉화역을 연결하는 천리마선이 개통되었다. 공사는 조선인민군 8총국이 담당했다. 이 노선은 기존 천리마선(1973년 9월 개통)의 연장이었다. 혁신선은 1975년 일부 영업 시작, 1978년 9월 완전개통되었다.

260) 이 때 건설된 도로는 현재 평양-남포간 1급 도로라고 불린다. 현재 평양-남포 고속도로는 1998~2000년에 건설된 청년영용도로이다.

261) 이에 관하여 림근오, “경제 주기성의 파탄과 ‘시장화-조중무역,’” 『임진강』, 10호 (2010), pp. 71~72.

치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다. 사실 사회주의 배급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북한의 수령과 그 후계자였으며, 따라서 장마당 바이스에 가장 취약했다. 1970년대 말에 이미 전국적 시장화(장마당+외화벌이)가 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동원경제 원칙은 농업 부문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 첫 단계는 1950년대 “농업협동화 운동”이었다.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공업화를 가속하기 위하여 농촌의 ‘핵심군중’, 청장년 노동력을 도시로 인구 이동시켰다. 그리하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 토대가 미약한 농촌에는 여성과 노인 등 노약자 노동력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경제적으로 관리하자면, 집단경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농업협동화는 농촌을 동원경제에 편입함을 의미했다.

다음 단계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농촌동원이었다. 이는 국가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마디로 전당, 전국, 전민을 농사일에 동원시킨다는 것이었다. 농촌동원은 1960년대 중반 중공업우선정책, 국방력 강화정책, 해외원조유입 중단, 도시 인구 급증 등으로 식량 사정은 악화되는 가운데 농촌에 노력과 자금이 부족한 것을 메꾸고자 채택된 방법이었다. 농촌동원과 함께 주체농법이 채택되었는바, 이는 식량 자급을 이루려는 정치적 (허황된) 희망책으로써, 소비자인 도시주민을 식량자급형 노력동원에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주체농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노력집약형 농법이었다. <옥수수는 밭곡식의 ‘왕’>이라는 대중적 구호를 내걸고, 기존의 채소, 감자, 공예작물 등의 경작면적 대부분을 배급용 식량 소출을 위한 옥수수 면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다수확 작물인 옥수수는 영양단지법으로 재배하되, 여기에 필요한 분토(糞土, 인분을 기초로 한

비료)수집 및 반출과 단지이식(移植), 김매기와 수확, 건조에 필요한 방대한 노력 및 소농기구는 애초부터 도시주민의 동원 및 지원 방법으로 해결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특히 보통교육 단계의 소, 중, 대학생을 연 3개월 이상씩 노력 동원하였다. 채소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그 여파로 “김장전투”가 연례행사로, “김장은 반년 양식”으로까지 되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채소를 김장용 가을 채소(무우, 배추)에 집중하여 염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보존용 김장감으로 공급하되, 분수식 관수와 화학비료 시비량을 늘이는 식으로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여 면적 감소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 가을채소는 반드시 울종(조생종) 옥수수 2모작 뒤그루로 경작하되 생육기간 보장을 위해 역시 모 이식법을 도입했다. 이상의 노력집약형 채소경작에 드는 이식, 수확, 유통 노력도 소비자인 도시 주민의 동원으로 보충했다.

또한 주체농법은 “쌀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농사구호를 내걸면서 벼농사 역시 노력집약형으로 전환했다. 냉상모판, 모내기, 김매기, 추수에 필요한 방대한 노력과 자재를 전당, 전국, 전민의 동원 및 지원으로 옥수수, 채소 농사처럼 해결하고자 했다. 동시에 “순가락을 드는 사람은 농촌동원에 다 나가라”는 당 조직의 정치 도덕적 요구를 온 사회에 내밀었다.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사 준비로써의 퇴비생산, 분토반출, 흙갈이(객토채취 및 반출), 소농기구 보장, 농업용 외화 등도 전당, 전국, 전민, 전군의 농촌동원과 농촌지원으로 다 해결했다. 1960년대 말에 고안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 주체농법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봉착했다. 사실 1960년대 말부터 도시주민 배급에 필요한 공급량의 10% 이상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당시부터 보름에 이틀 분 자원 식량수매를 비롯하여 강제적 미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만성적 절량을

강화하던 가운데, 1990년대에는 배급제 전면 붕괴를 맞이했다. 한편 농촌동원에 의한 식량생산방식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데, 식량 분배 방식에서는 평양시용, 군량미, 기관책임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장마당은 국가가 포기한 주민식량분배를 대체하는 자연적이면서도 강력한 미래지향형 방식으로 등장했다.

(2) 식량배급제

일반적으로 배급제는 극도의 물자부족 상황에서 실시된다. 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전시 경제 시기에 배급제는 흔히 등장하였다. 북한에서의 배급제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물자부족 때문이다. 북한은 오랜 동안 중화학공업 및 군수생산에 전체 사회의 자원을 몰아서 과잉투자 하는 한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소비수준을 낮추고, 농업 및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식량과 소비품이 과소 생산되며, 따라서 배급제가 불가피했다. 둘째, 통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때문이다. 식량배급제는 국가가 개인과 집단의 의식주에 관한 가능성과 선택을 독점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는 기제이다. 셋째, 이러한 배급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체제 선전의 소재가 된다.

북한에서 식량배급제는 조직생활이 발생되던 1970년대를 훨씬 거슬러 1950년대 전시 및 전후 중공군의 북조선 주둔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은 그 스케줄을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진전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름으로 영락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생적 기초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적 전민배급제가 실시되

있고,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만방에 과시하는 선전소재가 되었다. 전민배급제에는 식량, 의류, 연료, 주택(주거), 일자리(직장), 보건위생, 공교육 등 ‘의식주 문제’를 포괄했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농업소득에 대해 현물로 바치는 세금인 ‘농업현물세 완전 폐지’²⁶²⁾의 명목 하에 1966년부터 현물 분배방식을 없애고 숫자로 된 종이쪽지 분배방식을 취하다가 드디어는 농민들도 배급제로 모두 전환시켰다. 사회 발전적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고 강압적이라 할 이 제도를 등소평 중국은 ‘선부론(先富論)’,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깨부수며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 김일성-김정일 북한정부는 후계자 추대 완수의 기쁨에 매달려 배급제도를 지속했다. 이러한 선택 때문에 결국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배급 미공급 사태를 맞아 최대 200만 아사자를 내고 사회질서가 파괴되는 극적인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었다.

북한의 전민배급제는 무상교육, 무료교육, 헌법에 의해 규정된 노동능력 연령자 100% 고용제와 식량공급제를 포함하는데, 그중의 핵심은 식량공급제이다. 북한은 식량배급(공급)을 모든 노동의 기본 지불수단으로 설정했다. 식량공급 증서는 ‘배급표’로 불리는 식량공급표이다. 손바닥 1/3정도 크기의 기다란 종이오리 형태인데 그 2/3 면적을 차지하는 오른쪽에 공급대상에 따른 보름 분 공급량이 15칸에 나뉘어 찍혀 있고 왼쪽에는 ‘식량공급표’라는 글자와 발급일자가 명시되어 있다(1980년대 중반에 ‘식량배급표’로 명명되면서 형태가 잠시 바뀌었던 적 있는데 얼마 안가 원래 형태로 되돌아왔다). 식량

262) 북한의 농촌에서는 1946년 3월 8일 ‘토지개혁’의 실시와 함께 3.7제(수확량의 3할은 세금으로 내고 7할은 자유처분제)를 실행했다. 이 제도는 1946년 6월 폐지되고 농업현물세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은 수확량의 25%만 ‘농업현물세’로 납부하면 그 나머지 농산물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었다. 농업현물세는 1956년 21.1%, 1959년에는 8.4%로 인하되었고 1966년에는 완전 폐지되었다. 그 대가로 농민들이 얻게 된 것은 한 달 주기의 식량배급제였다.

공급표는 급수와 공급일자에 따라 갖가지 연한 컬러로 차별화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전시비축미 명분으로 전 민이 보름분 식량에서 2일분을 강제 저축 당했는데 그리고도 식량공급표는 보름분이 그대로 명시되어 나왔다. “보름분 식량공급표에서 주지도 않는 2일분 식량을 왜 준다고 표시하느냐?”는 항의가 제기되면서 식량공급표에는 미공급 2일분이 별표 처리되어 공급되게 되었다. 주민들은 식량공급표의 1일 공급분을 입말로 ‘한 눈깔’이라고 부른다. 지각 세 번하거나 결석 1일 하면 이 한 눈깔(1일 공급량)이 잘려 나온다. 또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면 1일 600그램이 나오며 1일 700그램의 기본 식량공급 대상자가 진단 7일 받으면 역시 보름분 식량공급표에서 하루분에 해당하는 한 눈깔이 잘려야 한다. 이 식량공급표를 통한 농간을 막기 위해 식량공급소(보통 배급소)에는 매년 기관 및 인민반 확인에 의해 갱신되는 세대별 식량공급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 공급카드와 식량공급표가 일치되어야 배급수수료를 지불한 주민의 식량공급은 가능하게 된다. “량정은 곧 정치입니다”라고 도·군 급 양정사업소 입구에 커다랗게 새겨진 김일성 교사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가 배급에만 매달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보름분 식량 배급표에서 1일분 700그램이 잘리느냐 유지되느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수 십 년 간을 처해 있었다.

이 공급제의 기본은 직업이 있는 노력자(세대주)에게 부양자(부인이나 자식, 노부모)의 공급표가 달려 나오도록 가족을 세대주에게 묶어놓아 가족을 하나의 통치단위로 만든 데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북한의 구호는 식량공급제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바 성인이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1일 300그램, 7살 어린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1일 배급량 400그램과 보충미 100그램을 더해 명목

상 400그램, 실제 500그램의 식량을 받도록 하였다. 가족구성원 중 아내가 일을 하면 남편 쪽이 아닌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서 700그램의 개인배급표를 공급받는다.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부터는 500그램/1일+보충미 100그램/1일=600그램/1일, 대학생은 600그램/1+보충미 100그램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적 식량배급제도는 그 수급자들을 크게 ‘로사(로동자, 사무원)가족세대’, ‘군인세대’, ‘농민세대’, ‘기타’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국가가 집행하는 식량배급 통계대상은 ‘본인’ 혹은 ‘세대주’라고 불리는 자들로 대표되는 단위를 개별적 ‘수급자’로 했다. ‘세대주’가 국영기업 및 국가기관 종업원 즉 노동자 혹은 사무원이면 그 개별 수급단위는 로사세대이다. 이 경우, 그 부양가족은 세대주 직장에서 보름단위로 재교부, 발급되는 수급권(노동자 1인 1일 명목 정미 곡물 700그램)에 곁붙어 먹을 권리를 계획적으로 배정받는다. 자녀 중에 성인으로 성장하여 직업을 가진 미혼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 즉 ‘본인’이라는 명칭이 따라 붙는다. ‘세대주’ 혹은 ‘본인’의 직업이 ‘군인’, ‘농민’인가에 따라 배급내용과 질, 배급방식이 다 다르다. 사회주의 공업국가인 북한에서 로사세대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에 배반한 북한의 경제, 특히 산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파탄되자 ‘로동계급의 정권’은 ‘선군후로(先軍後勞)’로 탈바꿈하여, 로사배급을 자구(自救)²⁶³ 경제로 떨쳐버리고 국내 농산물 등을 군대를 비

263) 자구경제: 즉 ‘기관, 기업소 배급’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부에서 국가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위별로 소속 성원들의 식량배급 규정량 현물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을 허용한 일종의 소집단적 배급형태이다. 다시 말하여 국가가 승인한 소여 규정량과 구입 활동 범위 하에서 소여 단위 스스로가 마련한 자금과 운송수단, 토지, 농자재 등을 운용하여 상업적 혹은 농경적 방법으로 소속 종업원에게 공급할 식량 현물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배급 독점권이 하부 소단위에 이양된 분권적 형태로서 전 인민적 소유 개념보다 등급이 낮은 소집단적 소유 개념이 실제로 현실에 작용되었다.

롯한 무력부문에 전용시키고 말았다.

나아가 ‘로사세대’의 ‘본인’ 식량공급표는 선호도가 낮은 공장 기업소의 노력관리에 무기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인민군대에 10년씩 복무하고도 광산, 탄광, 군수공장 등 비선호대상에 강제 배치되어진 데 항의하며 이직을 요구하는 무직인에 대해서는 배급표를 자름으로써 국가의 배치에 복종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배급표(700그램)를 받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 조직생활 참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체계에 불복하여 원하는 곳으로 직업을 옮기려는 자는 최소한 반년 이상의 식량을 지원해주는 후원군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그러한 자는 조직생활에 참가 안해도 되는 데 만약 당원이려면 출당을 각오하여야 하였다. 또 당원이 아니라 해도 3개월 이상 무직이면 노동단련 대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의 식량배급정책은 전시도 아닌 평화 시에 전 국민을 전시 동원하듯 하는, 조직생활이 목표로 하는 전민동원 국가의 본질적 제도였다. 사람의 식욕을 완전 지배조종하며 ‘가족에게 사료 공급하듯’ 동원시킬 국민에게 똑같은 먹거리를 배급 주는 이 정책은 조직생활 제도의 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임금 노동에 대비되는 경제개념으로서의 ‘배급노동’은 근로자 세대(가계)의 가족부양이나 개인축적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인 바, 노동의 대가는 노예사회나 강제수용소에서 볼 수 있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 비용 지불에 불과했다.

나. 제도적 하부구조—대안체계

북한 사회주의는 고도동원,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권적 정치사상적 동력을 발생하고 유지하며, 또한 고도동원이 야기하는 혼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북한에 정착한 것이 대안의 사업체제이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대안의 사업체제는 김일성의 독창적 창조물이며 수령의 대표적 업적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대안의 사업체제 기원은 모택동 중국에서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 성립했던 당위원회 중심 공장/산업관리체제이고, 이것의 기원은 스탈린 시절 가장 동원적이었던 ‘절정기 스탈린주의’(1946~1950)의 공장관리 체제였다. 대안체제는 내각과 성이라는 행정관료체가 아니라 지방당과 공장당 위원회라고 하는 당적 관료체계를 그 기반으로 한다. 당적 관료체계에 입각하면, 당적 강권과 규율의 강제 적용, 정치사상사업 위주의 노동자 관리와 인센티브 적용, 계획적 경제적 필요보다는 급변하는 정치적 수요의 우선시, 계획적 체계적 운영 보다는 임기응변적이고 동원적 운영을 통한 경제, 애로 돌파와 혼란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의 무조건 달성과 같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바의 정치동원적 경제운영은 나중의 1970년대식 조직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된다.

1961년 공장관리모델로 도입된 대안의 사업체제의 공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핵심체제는 4대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중앙집권적 행정-경영체계이다. 즉 1) 중앙집권화된 기업관리(정부기관이 곧 하나의 동원회사=관료체계), 2) 말단집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전위당 체제), 3) ‘계획경제’에 따른 3-1) 전국적 일원화 및 세부화, 3-2) 생산에 대한 종합적 기술관리, 3-3) 책임적 원자재 공급+판매 등 생산보장 내지 영업체계, 4) 근로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후방공급체계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안의 사업체제는 분배 및 물류 통제체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인민봉사 및 상업관리 체계’나 ‘재정은행 관리체계’ 또한 행정-경영 체계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애초에 공장관리와 관련하여 도입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북한 내 모든 조직체의 기본원리가 되었다.²⁶⁴⁾ 다시 말해 공장과 기업소 뿐 아니라, 행정조직을 망라하여 모든 조직의 구성원리가 되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당의 수위가 국가의 수위에 앞서며, 도급에서는 도당이 도 인민위원회를, 시/군급에서는 시/군당이 시/군 인민위원회를 앞서는 식으로 되었다. 또한 경제 관리에 있어서도 내각 계선 보다는 지역당 중심의 관리체계가 성립했다.²⁶⁵⁾ 물론 겉보기에 이는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의 원칙인 당의 영도원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소련의 경우를 보면, 국가와 당의 최상층에서는 당 조직이 국가조직에 우선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경제관리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계선이 해당 수준의 지역당 계선에 우선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른바 지배인 유일책임제로서, 당위원회가 아니라 지배인이 공장과 기업소의 최고책임자인 것을 의미했다. 소련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공장관리에서 지역당이 아니라 관련 상급 성의 관리를 받았다. 중국체제와 북한의 대안 체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당이 최고 관리자가 되어 해당 지역의 산업, 인민회의, 노조 등 대중조직 등 모든 지역 조직을 하급자로 거느리는 식이었다면, 소련식 체제에서는 산업조직, 소비에트, 대중조직은 각각 최우선적으로 해당 상급 기관에 종속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당 조직에 대해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했다.²⁶⁶⁾

소련식 체제가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앞세우는 체제였다면, 중국/

264) 조선노동당규약(2010년 9월 28일) 제13조는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참모부이다”고 규정한다.

265) 박형중, “1960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지방당 중심의 공업관리체계 수립과정과 내용.”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pp. 89~132.

266) 趙宏偉, 『中國の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 pp. 137~142; 박형중,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과 소련의 비교,” pp. 87~89.

북한식 체제는 전문성에 대해 정치를 앞세우는 체제였다. 다시 말해, 대안체제는 앞서 설명한 동원경제가 가동할 수 있게 하는 하부구조였다. 계획경제가 경제적 합리성을 앞세우면서, 이를 전문 경제 테크노크라트와 경제관료체계를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체제였다면, 동원경제는 계획경제의 합리성을 타파하고, 수령의 권위와 사상/계급/혁명 투쟁을 통해 현저하게 높은 성취를 이룩하고자 시도했다. 이것이 실무에서 통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을 재현하고 있는 내각과 지배인 계선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정치적 투쟁과 동원에 의해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지방당과 공장당조직 중심의 국가운영과 기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와 같은 정치 우선의 원칙, 당의 실무 조직에 대한 우선 원칙은 국가 내의 모든 크고 작은 조직체의 일반 구성원리였다.

도시화 혹은 산업화에서는 대안체제였다면 지방과 농촌 근대화에서는 농업지도체제로서 이른바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지도체제’라는 행정-경영 관리체제도 생겨났다. 이는 산업관리의 대안체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중국을 대충 모방·도입한 것이었고, 산업관리의 대안체제를 농촌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한 군을 기본단위로 하여 지방 혹은 농촌의 행정을 계획경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였고, 여기에도 대안의 사업체제와 유사한 기구를 도입, 특히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이른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 깊숙이 개입되어 경영보다는 군사적 통제가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혁명적 식량부족, 혹은 만년기근 지대를 설립하고 농촌동원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낭비 악폐를 창궐시킨 근원으로 되었다. 이와 관련 북한 내에서 떠도는 유명한 풍문이 있다. 1980년대 가족단위 도급제라는 농업경영 개혁 실험을 통하여 평균 3배 이상의 식량 증산이 확보되자 ‘주체농법’ 창시

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부르면 혁명성은 희박해진다’는 반비례 법칙이었고, 이는 김일성의 지지를 얻어 냈다는 것이다.

다. 사상적 하부구조 -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조직생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조직생활 사회에서 ‘총체적 통제’를 위한 하드웨어가 작동하는데 필요하고, 그 구성원이 조직생활 사회의 목표인 ‘총체적 통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인간로봇으로 만드는 데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는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 체계가 등장하는 시기였다. 이는 나중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북한식 이데올로기 체계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상투쟁에 기초하여 ‘계속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소련과 중국의 대국주의에 대항하는 반-사대주의로서의 주체의 강조였다. 이러한 1960년대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북한식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고 그것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관장되었고 세련화되었다.

주체사상의 출발을 보자. 북한은 1960년대에 전개된 복잡한 대내외적 정세에 대응하는 가운데, 북한식 이데올로기와 정책 방향을 발전시켰다. 그 배경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1967년 4기 15차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갑산파가 숙청되고 수령 독재에의 길이 열렸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함께 반-개인숭배, 친-개혁 논조를 띠던 소련의 수정주의에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친-지도자 독재 및 반-개혁론을 발전시켰다. 셋째,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자신의 내부 권력 투쟁에 간섭했던 것, 그리고 1968년 중국이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낙인 찍은 것 등에 반발하면서 ‘주체사상’(반-사대주의 사상)식 초기 사고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론적 정교화의 측면에서 1960년대 가장 많은 발전을 본 것은 위의 둘째 사항, 즉 친-지도자 독재 및 반-개혁 논리이다. 그 결실이 1972년 4월 15일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 총괄되었다. 그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다.

1958년의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에도 조선은 계속 사회주의완전승리에 도달할 때까지 과도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계급투쟁의 지속, 즉 계속혁명의 과업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제도 수립 이후의 그 계속혁명 내용은, 추상적으로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이며, 구체적으로는 ‘소부르쵸아 근성의 소유자인 농민’과 ‘부르쵸아 잔재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그 로동계급 마저 발달하지 못한 조선에서 그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구체적 목표는 유일하게 혁명적 수령의 사상, 김일성의 사상과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으로 수렴된다. 지속적으로 계급투쟁을 해도 경제발전에 지장도 없을 것인바, 그 이유는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오직 승리와 영광에만 이끄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인민을 향도하고 있는 한 사회의 정치사상적 혁명적 열의는 부단히 양양될 것이다. 지난 항일대전과 1950년대 전쟁과 종파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력사적 승리가 그것을 담보하고 있다. (필자요약)

이는 당시 소련식 맑스-레닌주의 교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농업협동화 완수를 기점으로 1958년에 ‘사회주의 승리’를 선언했

었다. 그런데 소련식 논리에 따르면, 사회주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혁명 과제의 완수이며, 따라서 계급투쟁과 프로독재가 소멸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혁명도 중지된다. 북한은 이를 수정하여, ‘사회주의 완전승리’ 때까지, 과도기가 연장되고, 계급투쟁이 지속된다는 것 즉 계속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도 사회발전 추동력은 역시 계급투쟁이다. 다만 계급투쟁의 구체적 대상은 (눈에 보이는 지주와 자본가 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며 그 형식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고, 그 방식은 조직생활이다. 이는 과도기 연장의 종결의 의미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란 통속적으로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머릿속을 우선적으로 통제한다’는 정치공학적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인 ‘총체적 통제’ 프로젝트의 북한식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 준다. 이와 관련한 정치공학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즉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는 일차적으로 교육·교양에 의한 인간개조 및 사회개조를 중심에 두고 시행된다. 교육·교양의 학습 본보기는 개인독재적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며 활동, 그 방법은 주입과 통제, 그 실행방식은 수령 체제 조직생활, 그 목적은 수령위업의 실현으로 ‘all 수령’, 즉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다시 말하자면 현대판 10계명에 기반한다. 북한식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에 따르면, 수령위업과 그 사상의 학습을 통해 일종의 자기식 근대화를 실현할 수 있고, 낡은 사상을 교양개조해 나가면 얼마든지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의 통념적 경제발전 이론에서 나온 균형과 속도 조절개념은 북한에서

필요 없게 되고 역사적인 사대주의 해악으로 근절될 것이었다.

1972년 1차적으로 정리된 북한식 이데올로기 또는 주체사상은 그 후 후계자인 김정일의 책임 하에 세련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1982년 3월 31일 후계자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주체사상은 두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일반철학으로서의 정착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철학으로서의 체계화이다. 첫째 시도는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자 즉 혁명철학으로서의 체계화는 주체사상(혹은 김일성주의)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는 식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조직생활 사회의 운영에 부합한 정치공학적 소프트웨어였다. 즉 주체사상은 북한식 전체주의 사회 즉 조직생활 중심 사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구성과 운영원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조직생활이 굴러갈 수 있는 사상적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실질적 방도는 사상단련 및 사상투쟁의 조직생활이다. 수령, 당 및 대중의 전 일체로 구성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성원 모두는 수령 덕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한다. 수령은 우리 사회의 두뇌이며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신격화된 존재이다. 수령의 사상과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승리에 이르는 것은 당과 인민대중 앞에 나선 혁명위업, 수령위업이다. 당은 수령과 대중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치조직, 초국가적 존재로서 행정과 사법 등 모든 인민정권기관들을 령도한다. 그 당활동은 유일관리제이며 이 유일관리제란 수령의 사상과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시키에 있어서 제기되는 온갖 문제를 오직 후계자에게만 집중하는 유일지도체제 운영을 의미한다. 당조직과 그 산하의 모든 근로단체 조직은 혁명초소 단위로 꾸리되 사회의 모든 성원은 여기에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 조직은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여 대중을 혁

명과 건설에 총동원한다. 당은 각 성원에 대하여 정치도덕적 및 계급적 조직사상 생활평정을 내리고 결함이 나타난 자들에게 책벌 주며 필요한 혁명화 대책을 세운다. 프로독재 기구는 그 책벌제정에 따른 사법집행을 한다. 모든 사람은 자각적으로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또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모든 것을 조직에 숨김없이 스스로 보고하고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총화 받아야 한다. 이 조직 생활총화와 생활평정은 10대 원칙에 기준하며 주 및 2일 총화체계로 정기화 한다. (필자 요약)

이 같은 논리에 따르자면, 후계자가 운전대를 잡은 바탕 위에서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인간 치차(톱니바퀴) 기구가 되어 오직 수령의 사상, 요구만을 실현하는 획일화된 정사일체, 총동원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직생활은 주체사상과 그 발생의 궤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제2차로 선포된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는 곧 조직생활의 방법 및 이론의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조직생활은 ‘혁명적’이어야 했고, 강한 ‘사상투쟁의 용광로’이어야 했다. 김정일은 그의 글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이 되자면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생활방식이며 혁명적단련의 학교입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랄수 없고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정치적생명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되고 빛내여 나가는 것입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언제나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며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혁명적조직생활을 틀어쥐고 사

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합니다.”²⁶⁷⁾

이러한 내용을 조직생활측면에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사상투쟁) 및 사상교양의 학교(정확히는 교화소)이다. 조직생활의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있다. 조직생활사회가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령은 두뇌, 당은 팔다리로 되는 대중을 두뇌에 연결하는 몸통으로서 유일한 정치조직인데 유일관리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까닭에 있다. 유일관리제란 수령의 사상과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시킴에서 제기되는 온갖 문제를 오직 후계자에게만 집중하는 유일지도체제 운영을 말한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전 사회화된 조직생활제도 없는 안 될 무기로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직생활 사회의 숭고한 공식 표면의 아래에서 세속적인 이면이 발전하고 있었다. 즉 주체사상이 뒷받침했던 수령 독재하에서 권력과 주민 간에 대조적 현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다. 주민들이 각자가 맡은 본신 혁명과업, 즉 고정분공에 대한 정치사상 생활총화로 끊임없이 ‘계속혁명 계속전진’ 하는 속에 거세게 총동원되고 있는 이면에서, 그와 비례하여 권력의 사치와 부귀영화는 더 짙어져갔다. 조직생활이 강화될수록 ‘사회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갔으며, 온 사회에 ‘로동계급’의 생활문화가 고창되는 속에 권력 상층부는 부패향락으로 치달았다. ‘주체’의 간판이 커질수록 국가의 법은 대중의 것과 권력에 대한 이중기준(二重基準)에 점점 밀착되어지고 그 은폐를 위

26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9 (1979.4.~1982.3.』 (조선로동출판사, 2011), p. 485.

한 비밀과 허위도 극심해졌다. 계급투쟁과 조국통일의 대의명분으로 인해 봉건 세습적 ‘왕조’, ‘(김씨) 가계’는 핵처럼 굳어졌다. 당연히 국제적 고립과 긴장도 그에 비례하면서 증대하였다.

라. 정치치안적 하부구조

소련 및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조직 생활은 정권의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 시도’라는 전체주의적 의도를 북한식으로 가장 철저하게 체현하고 있다. 조직생활사회는 이러한 조직생활을 필요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구조를 이룬다. 앞서서 조직생활사회의 경제적 하부구조로서 동원경제와 배급제를, 제도적 하부구조로서 대안 체계를, 사상적 하부구조로서 주체사상을 거론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 하부구조의 작동을 정치·치안적으로 보조하는 장치에 대해 서술한다. 이에 네 가지를 거론한다. 주민등록, 대규모 소개와 추방, 여행증 제도, 조직생활의 포상과 징벌이다.

(1)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전체 주민을 정권이 추정하는 충성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정치적 신분을 매기고 그에 상응하는 특권과 배제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²⁶⁸⁾

북한에서 주민등록은 총체적 지배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1958년 중앙의 당과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벌어진 상층에서의 ‘반당종파투쟁’이 일단락되자, 일반 주민 전체에 대한 중앙당 집중지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의 집중지도 실시 시기(1958~1959)는 중

268) 현인에,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연구,” pp. 36~59.

국의 반 우파투쟁 시기(1957~1959)와 일치했다.

먼저 전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당 집중지도 및 그에 따른 제1차 중앙소개(疏開)그룹의 활동을 보자. 1958년 12월, 권력 상층에서의 반 대파 숙청 정리를 끝낸 김일성은 곧바로 ‘전쟁 및 반종파투쟁 총화’로서 전국의 일반주민 속에 있는 반혁명 세력의 대대적 ‘숙청’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숙청 업무는 김영주 당중앙위 부부장이 담당하고 중앙기관에서 7,000명이 동원된 ‘중앙당 집중지도’로 실시되었다. 집중지도는 우선 주민 성분조사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열성핵심, 중간, 반혁명의 세 가지 대부류로 구분하고 그중 반혁명 부류는 다시 일곱 가지로 나눴는데 전주민의 3분의 1이 이에 해당했다. 일곱 가지로 분류된 반혁명 부류는 다음과 같다.²⁶⁹⁾ ① 월남자와 치안대 및 그 가족, ② 과거 종교인, 지주, 기업가, 상인과 그 가족, ③ 귀환병과 그 가족, ④ 일제시기 관리와 그 가족, ⑤ 군 감옥 출옥자와 그 가족, ⑥ 형기 복역자 및 출소자와 그 가족, ⑦ 종파분자와 그 가족. 이 집중지도는 애초부터 중국의 경험을 모방한 것으로 균중적 방법을 기초로 했다. 즉 균중집회에서 고발과 단죄가 벌어지게 하는 한편 밀고와 자수(회유)를 중용하는 형식도 병행했다. 집중지도 실시에 따라 전국은 완전히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1962년 10월 23일, 제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정부 구성과 함께 내무성으로부터 ‘사회안전성’이 갈라져 나와 확장되었다. 사회안전성의 주요기능은 주민등록 ‘심화사업’이었다. 사회안전성은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계급투쟁 정권의 무기로서 일종의 정보정치 기구, 특히 사회제도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는 주민들을 체포 구속하는 정치경찰 전문기관이었다. 이에 소속된 이른바 ‘안전원’들은 주민들 속에 위장 침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민조사 정보 사

269) 최진이, “조선의 평양시 인구관리,” 『임진강』, 제21호 (2014), p. 41.

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안전성이 주민등록 심화사업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등록의 성격은 한층 더 명확해졌다. 1963년 2월, 제4기 8차 전원회의의 보고 “현 남조선 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당의 과업”에서 3대혁명역량(북반부, 남반부, 국제) 준비과업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요 임무의 하나가 사회안전부를 동원한 주민등록 심화였다. 사회안전부는 북한의 전 주민에 대한 성분 재조사를 비밀리에 시작, 그에 따른 주민 이주 사업을 1969년까지 지속하는 한편 이때 성분 재조사를 통하여 재작성된 개인들의 신원문건은 그들의 대학 진학, 인민군대입대, 노동당입당, 간부 등용의 척도로 되었다. 한편 이 신원문건은 곧 개시된 조직생활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에 맞게 다루어 조직생활에 묶어세우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부터 ‘심화사업’ 혹은 ‘주민등록 심화사업’이라는 말은 주민들 속에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전국의 성분 나쁜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기도 알지 못 할 친척 중 성분 나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2) 대규모 소개 추방

이는 정권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치적 불충성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특권을 박탈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방의 공포는 비-추방자가 열성적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공포라는 처방 약제이다.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 주민들의 대형추방은 계속되었다. 그 기반은 계속혁명사상이었다. 이러한 추방 사업에서 핵심은 평양 주민 추방 사업이었는데, 그 시초는 김성애 중앙여맹위원장 시기 1968년 출범한 평양시 중앙 소개 사령부였다. 이 기구는 ‘혁명수도’건설을 구실로 평양시 주민의 추방, 이주를 전담했

다. 평양시 추방사업은 지방별 추방사업과도 연동되었다. 평양시 중앙소개사령부에서 소개사업이 발생하면, 지방의 도/시/군들에서도 추방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그 대상은 성분 나쁜 자, 조직생활에 순응하지 않는 자 등이었다. 이들은 농촌이나 산골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추방 사업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메커니즘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강력한 사회통제가 필요할 때마다 발동되었다.²⁷⁰⁾

평양시 중앙소개사령부의 주도에 의한 평양시 주민의 대대적 추방은 지금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68년 첫 소개 및 추방 명목은 <가정혁명화>(남편이 아내나 자식교양을 못함)이었다. 이때부터 가정혁명화는 평양시민들에게 초기에는 희화적 소재로,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의 대명사로 새겨져 갔다. 1976년 8·18 판문점 도끼사건으로 전국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면서 평양시 주민,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소개 및 추방사업이 약 2~3년간 벌어졌다. 이 시기 추방대상은 성분 나쁜 자 및 그의 가족과 중앙기관 소개였다. 당시 추방에서 특징적인 점은, 추방자에 대한 사회적 적개심이었다. 이때부터 <가정혁명화>라는 약간은 희화적이었던 <추방> 개념은 명실 공히 공포의 의미를 담은 <추방>으로 교체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추방은 비생산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례행사식의 소규모적 형식으로 진행되곤 하였는데 그 특징은 <농촌자원진출>로 포장된데 있었다.

조직생활 운영자들에게 추방은 조직원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강력한 무기로 변신되어갔다. 조금만 ‘조직의 규율’을 어겨도, 즉 베란다에 빨래를 널거나 외국음악을 들어도 “추방될려 그래?”하는 으름장이 당장 날아왔다. 이는 나태하거나 경직된 자들의 개성과 지적 지향을 제어하는 무기로 점점 활용되어져 갔다.

270) 이에 관하여 최진이, “조선의 평양시 인구관리,” pp. 34~56 참조.

(3) 여행증 제도

다른 것과 함께 주민 이동 통제는 ‘총체적 통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안성이고, 여행증 제도의 지속은 보안성의 조직 기득권 고수와의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여행증 제도는 1968년 북의 청와대기습에 대한 한국의 보복(최용건 승용차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을 향한 사죄가 군벌주의 처벌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남북대화(1972년 남북공동성명) 개시로 이어졌다. 즉 남북관계에서 긴장과 평화의 무드가 쌍으로 겹쳐지자 평양시를 그에 맞게 꾸려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면은 남한의 기습에 대한 대비²⁷¹)이나 표면으로는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시를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자”였다. 즉 평양시는 남한 대표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각 기관에서 생산물의 60%를 평양시에 보내게끔 제도화하고 이에 불참한 단위에 대해서는 계획수행 미달대상으로 분류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결국 평양시에 물자가 풍부해지는 반면 이로 인해 지방 주민들이 수도에 몰려들자 이를 여행증 제도로써 차단시켰다.

관용어로 일명 <통행증>, <출장증명서>라고도 하는 통행증은 여행증과 출장증명서 2종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일반, 수도, 분계연선 및 국경연선으로 구분이 된다. 그 증서 명칭은 여행은 <여행증명서>, 공적 용무의 출장은 <여행(출장)증명서>인데 이는 정부가 발급한, 즉 해당지역을 가기 위한 검열초소들을 당자가 통과 또는 통행하는 것을 허가하였음을 밝히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는 사진이 부

271) 최용건에 대한 남측 특공대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그 전까지 개방되어 있던 평양시의 중앙당과 김일성 도로가 폐쇄되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활동도 ‘신변안전’을 빌미로 구속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김일성이 부관, 운전수만 데리고 자유로이 어디에나 다닐 수 있어 카리스마적 존재로서의 각광을 나타내었는데, 이제는 인민과 자유로이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 군부 강경파의 행위가 예상 이외의 후과를 낳은 것이었다.

작성된 공민증 혹은 신분증과 일치하는 경우라야 당사자가 검문초소를 통과 할 수 있다. 그 증서 발급은 일반 여행 및 출장증명서는 기관, 혹은 동사무소 여행증업무 담당자가 지방 인민위원회 제 2부(통행증 발급부서명)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신청하여 증서가 나오는 기간은 출장용은 약 1~3일, 여행용은 7~15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수도 여행증은 평양시 2부에서 발급한 승인번호가 있어야 한다. 평양시 여행 및 출장증명서에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왼쪽 하단 모서리까지 대각선으로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 그 명칭이 <통행증>으로 되어 있는 분계연선, 국경연선 통행증도 해당지역 승인번호가 떨어져야 발급이 가능한데 평양시 여행증에 비해 승인번호 발급이 더 엄격하다. 그리고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파란줄이 그어져있다. 여행증 사용기간은 사적용무는 3개월인데 비하여 분계연선, 국경연선, 지역은 1개월이다. 여행증제도에는 여행 혹은 출장 목적이 현지 확인되도록 행정상 구조가 세분화되어 있다. 여행 및 출장 목적으로 타지에 온 자는 숙소로 정한 친척집이 속한 인민반(혹은 여관 책임자)에 그날로 보고하고 인민반장(혹은 여관 경리)이 주는 ‘숙박등록부’에 이름, 생년월일, 여행 및 출장 목적, 숙박기간 등을 기록하여 동 인민반장(혹은 여관 책임자)의 도장을 받은 후 동 분주소에 가서 보고하고 여행 및 출장자의 증명서에 여행 및 출장을 확인하는 도장을 받아야 돌아갈 때 검열에서 통과 될 수 있다.

이 여행증 제도는 여행증 검열 및 위법자(여행 날짜가 지났거나 여행지가 다르거나, 현지분주소 확인 도장이 없거나 여행증 분실 등) 처벌제도로서 집결소와 그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1998년 고난의 행군 때에는 평양시 중앙병원 입원환자용 승인번호가 500원(당시 장마당 시세로 쌀 12킬로그램 값)에 장마당에서 매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행증 제도는 보안성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외국 이동은 물론 국내 이동조차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직생활에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조직생활의 포상과 처벌

조직생활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은 조직/직장으로부터 포상과 처벌이다. 그 방법은 정치도덕적 자극(혁명화, 입·출당)과 물질적 자극(교시, 말씀, 훈장, 선물)을 적절히 배합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은 각 조직성원에 대하여 정치도덕적(10대 원칙 기준) 및 계급적 조직사상 생활평정을 내리고 결함이 나타난 자들에게 책벌과 혁명화대책을 세운다. 프로독재기구(보위, 검찰, 재판, 보안)는 당조직의 책벌제정에 따른 사법집행을 해야 한다.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각적으로(강제적이 아님)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 것을 조직에 숨김없이 보고(프라이버시 공개)하며,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총화 받아야 한다. 이 조직생활총화와 생활평정은 10대 원칙에 기준하여 주 및 2일 총화체계로 정기화한다.

이 같은 포상과 징벌에서 나타나는 두 극단은 한편에서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 다른 편에서 혁명화 관리소의 운영이다. 이 양자는 사실상 조직생활 사회에서 동전의 앞뒷면이다.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는 조직생활의 포상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은 주민의 최고의 영광으로 치부된다. 그 당사자는 성분이 개조되거나 거주지 변동, 온 가족의 출세, 좋은 집이 주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노동당 입당도 빠르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호 집권사진: 이 당사자의 미래는 거의 담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원하는 학교에 보내주고 먹을 일 있는 직업에 배치시켜주는 것이 통례이다. 노동당 입당도 비교적 쉽다.

- 교시, 말씀: 교시, 말씀 받은 자는 기본계급의 징표이며 권세 있는 직업 배치에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노동당 입당이 아주 쉽다.
- 훈장대상: 국기훈장 1급, 노력훈장 이상은 연로보장 후 일일 식량 600그램, 돈 60원(1990년대 중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북한이 미공급사회로 전락된 후 그 가치는 희석되었다.
- 각종 명절선물: 1.1., 2.16., 4.15. 명절에 트렁크 선물, 굴 선물 등 간부의 급수나 일의 실적에 따른 선물이 내려간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조직에서 당의 신입 받는 자로 지명된다.

조직생활 관련 처벌에서 핵심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것이다. 이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관리소는 정치범을 일생동안 수감한다. 교화소는 상당 기간 동안 수감하나 일생동안 수감하지는 않는다. 교양소는 정치범과 일반 잡범을 동시에 수감하며, 교화소 보다 수감 기간이 짧다.²⁷²⁾ 이러한 시설은 국가보위부 또는 안전부가 관리한다. 정치범 수용소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17개가 존재했고, 1950~1953년 6·25 전쟁 중에 상당히 증가했다.²⁷³⁾ 정치범 수용소는 1960년대 초에 갑자기 증가했다.²⁷⁴⁾ 이는 주민을 성분제로 재분류한 ‘중앙당집중지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2년에는 김일성의 주도하에 사회안전부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가 분리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건설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범을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소로 이관시켰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선포된 직후의 시기인 1980~1982년 동안에

272) 관리소의 일반적 실태에 관하여 다음 참조.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64~374; 소련의 굴락(gulag)과의 비교로서, Sungmin Cho,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Prison Camps,” Michael David-Fox (ed.), *The Soviet Gulag: Evidence,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6), pp. 268~285.

273) Sungmin Cho,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Prison Camps,” pp. 274~275.

274) *Ibid.*, p. 277

만 그에 반대하던 15,000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4개의 수용소가 신설되었다.²⁷⁵⁾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 영향으로 수용소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관리소에 보내는 과정과 관리소 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관리소’는 노동당 조직이 개인 평정문건을 강짜로 만들어 혁명화 대상으로 점 찍으면 사회안전부(현재의 인민보안성 전신, 혹은 국가 보위부)에서 그의 ‘죄’를 날조하여 말 그대로 생사함을 잡아 들여보내는 수용소이다. 어떤 당원이 당 조직에 의해 혁명화대상으로 지정되어 ‘정치범’에 걸리면 6개월 정도의 예심기간을 걸쳐 죄과를 강제인정 당하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 구성원들은 변호사커녕 단 한 번의 형식적 재판도 없이 혁명화관리소로 강제 이송 당한다. 그 이유는 경제범처럼 재판을 통해 본인만 통제구역에 보내는 경우 남은 가족이 진상을 밝히는 일에 달라붙어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려는 데 있다. 관리소에 들어온 집은 우선 이삿짐을 마당에 풀어놓게 한다. 관리소는 들어온 가족의 재산을 약탈하기 좋도록 신품 특히 전기제품, 사진기 등에 대해 ‘회수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가족과 이삿짐을 실은 차를 몰고 온 안전원들이 먼저 달라붙어 물건 회수규정을 구실로 물건들을 강탈하여 차에 싣는 데 순식간에 한 차 가득 찬다(이는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이 혁명화 대상의 타겟으로 되는 주요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면 차를 몰고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빼앗아 싣고 간다. 관리소는 주변에 빙 돌아가며 전기 철조망을 쳤고 그 밑에 차단도랑을 깊이 파서 그 속에 예리한 창들을 뿔뿔이 박았다. 주변 숲 사방에는 멧돼지 잡이 덫들도 숨겨 놓았다. 거기에 걸린 사람은 팔다리가 멧돼지 덫에 꼭 물려 달아나지 못한다. 또 철조망 옆 나무들 위에는 판자를 깔아 그 위에 돌을 가득 올려놓고 보이지 않은 노끈을 늘어 놨는데 그걸 건드리면 순간

275) *Ibid.*, pp. 278~279.

에 돌벼락을 맞게 되어 있다. 관리소에 들어간 주민은 공민증을 바치고 새 공민증을 교부받는데 그 뒷면 하단 혈액형란의 ‘O형’ 글자가 새까맣다. 원래의 공민증은 ‘O형’ 글자가 붉은 색이다. 관리소 해제의 최종 단계인 사회복귀 때가 오면 공민증을 다시 교부하여주며, 그때는 피형이 붉은 색으로 찍혀져 있다. 관리소 주민 구성에는 이주민, 해제민, 대내민(수용소 관리민) 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처음 끌려 온 사람들은 모두 ‘이주민’으로 분류 된다. 혁명화 대상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이에 속한다. ‘온 가족이 일을 잘 하면’ 해제시키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해제(민)’로 분류된다. 30년 동안 해제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만일 해제민이 이주민과 결혼하는 경우 그 해제민은 이주민으로 하강해야 하기에 마음 맞는 이주민 대상과의 결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간혹 일 잘하여 표창 결혼이 허가된 부부는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도록 작업배치가 되어 부부생활이 거의 어렵다. 관리소 안에는 웬만한 사람, 좀 말쑤(까다로운) 사람을 무조건 (기)죽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무보수’로 불리우는 곳이 있다. 사회에서 노동단련대와 같은 곳이다. 또 무보수 안에는 급수가 훨씬 더 쎄,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교양소’도 있다. 아찔한 콘크리트 벽으로 주위와 완전 폐쇄되어 웬만한 고함소리는 밖에 새지 않는다. 계다가 벽체 위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 철조망울 더 높이 둘러 쳤다. 이 교양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교양생’이라고 부르는데 6개월 이상부터 1~2년의 형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선 머리카락을 뽁뽁 깎아 버린다. 이곳은 노동강도는 센데 먹이는 건 거의 없고 죽이기 딱 좋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두 달만 지나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뼈만 남는다. 관리소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재해도 가지가지이다. 불량한 전력 케이블에 붙어 죽고, 막장으로 타고 내려가던 호스²⁷⁶가 일주(逸走)하는 바람에 죽고, 굴이 무너져 죽기도 한다. 오히려 사고 없는 날이

276) 호스(horse): 갠내 운반기구의 이름인 바, 옛날에 부리던 말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상할 정도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 관리소 사람들은 “가 운명이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의 장례에 가족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사고로 누가 죽으면 부모도 보기 전에 즉시 매장하고 만다. 부모가 시체를 보겠다고 보여 준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저 묻는다. 머리가 터지는 등 시체가 너무 스산해선지 지옥 같은 관리소에서의 고생을 털어 버렸다고 생각해서인지 부모는 대체로 시체를 보려 하지 않는다. 흔히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처리한다. 3일장 풍습은 지키지 않는다. 관리소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묘지로 그냥 갈 뿐이다. 병에 걸리거나 늙어 죽어도 장례가 특별히 없다. 관리소에서 나오는, 대패질도 안 한 막판자로 관을 짜서 시체를 넣은 후 묻으면 다다. 관리소는 사고 많은 탄갱들 때문에 공동묘지가 많은데 여기저기 마구 시체를 묻는 곳이다, 주인이 없는 묘 정도가 아닌 시체 매장지들이다. 이런 관리소에서 몇 년간 혁명적 단련을 받게 되면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이 뼈속까지 들게되며 그 마저도 얼마 더 지나면 영혼이 없는 육체가 되어 관리소에서 시키는 일만 수족수족하는 마소로 변해 버린다. 그러기에 조직생활 하는 자가 조직책임자에게 맞서는 경우 “너 관리소 맛 좀 볼래?”하면 “그래, 맛보겠다!”며 대들 자가 누구도 없게 된다.”²⁷⁷⁾

3. 제도와 운영

III장 2절에서 서술하였다시피, 소련 및 중국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비교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직 모델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은 그 제도와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보다 철저한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한 중국

277) 이에 관하여 다음도 참조. 공영길·최진이, “1994년, 정치범 수용소인 ‘제18호 관리소’에 들어갔던 체험자의 증언,” 『입진강』, 제2호 (2008), pp. 16~55; 류경원·최진이, “제18호 관리소의 흑막,” 『입진강』, 제3호 (2008), pp. 47~77.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조직생활 보고 체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식 단위 모델에 비해 북한식 조직생활 모델에서 ‘총체적 통제’의 의지가 강하고 그에 부합하게 제도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생활사회에서 조직생활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당 조직과 그 산하의 모든 근로단체조직을 혁명초소(정확히는 생산단위)로 꾸리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빠짐없이 소속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에 조직생활체계가 세포화되어 있다. 북한의 조직생활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치조직인 조선로동당과 그 외곽단체인 소년단, 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 조직들에 의해 운영된다. 북한에서 태어나 소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나이부터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수령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

이하에서 첫째, 조직생활 단위가 혁명초소 단위(직장)와 일치한다는 것, 그 단위는 개인의 출근 및 입사와 퇴사에 대해 엄격히 통제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의 이동 및 거주, 결혼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는 것을 서술한다. 둘째, 개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소속될 수 있게 조직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즉 소년단, 청년동맹, 노동당, 여맹, 인민반과 직맹의 순서로, 조직생활체계를 서술한다. 셋째, 조직생활 보고 체계를 서술한다. 이에선 조직선-행정선-보위부선의 3선 보고와 함께, 조직별 자체보고라인, 3대혁명소조 보고라인, 중앙당 1호 신소체계, 인민반 보고 체계가 포함된다. 넷째, 조직생활의 학습 체계를 서술한다. 서술의 주제는 신년사학습, 간부 및 당원근로자 학습, 수요 강연회, 문답식 학습총화, 당원근로자 학습과제이다.

가. 조직생활 단위의 구성원칙과 권한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에서 조직생활 단위는 혁명초소(생산행정, 광역적으로는 기관·기업소 행정) 단위와 일치했다. 또한 조직생활의 기본과업은 ‘본신희명과업 수행’으로 못 박혀 있었다. 이는 조직생활 기능이 곧 조직원들의 생산과제수행 통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에 대한 구체적 장악의 확실한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45조에서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여 당원들을 혁명과업 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당세포를 비롯한 모든 단위의 조직생활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본신희명과업, 즉 자신이 처한 경제생산단위에서 물질적 성과를 내는 데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직생활 단위와 혁명초소 단위의 일치 관계 정도를 보면 <표 IV-1>과 같다.

북한에서 조직생활단위는 중국에서의 단위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단위의 경우에서처럼 북한의 조직생활단위는 국가가 개인과 대면하거나 역으로 개인이 국가권력과 대면하는 매개체이다. 중국에서의 경우처럼 조직생활단위에서는 당 비서와 당 조직이 주도하는 가운데, 생산 및 행정과 결합해 있다.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의 모든 일은 조직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행정이 곧 조직생활 속에 있고 생산은 곧 조직생활의 산물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직생활사회를 행정, 특히 사법과 분리시켜 내려는 이 작업은 매우 어렵다. 중국에서처럼 개인은 조직생활단위에 대한 의존이 구조화되어 있다. 개인은 직장에 영구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치적으로 상급자에 의해 평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직장에 구속된다.

〈표 IV-1〉 조직생활 단위와 혁명초소 단위의 비교

혁명초소		조직생활	
혁명초소 단위	관료직 명칭과 역할	조직생활 단위	관료직 명칭과 역할
연합기업소 (종업원 2천명 이상) ²⁷⁸⁾	•지배인 •연합기업소 산하 공장 지배인들 대상	당위원회 (1~2급 공장 기업소 이상) ²⁷⁹⁾	•책임비서 •근로단체 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²⁸⁰⁾ 들을 대상
공장 (종업원 2천명 이하)	•지배인 •공장 산하 직장장 대상	초급당위원회 ²⁸¹⁾ (당원 31명 이상)	•초급당비서 •초급당 산하 부비서, 부문 당비서들을 대상 •공장 사로청위원장, 직맹위원장
직장 (종업원 1천명 이하)	•직장장 •직장 산하 작업반장 대상	부문(마을, 직장) 당위원회 혹은 분초급당위원회 (당원 10~30명 정도) ²⁸²⁾	•부문당비서 •부문당 산하 세포비서 들을 대상 •직장 사로청위원장, 직맹 위원장, 여맹위원장 대상
작업반 (종업원 100명 이하)	•작업반장 •작업반원 대상	당세포위원회 (당원 5~30명) ²⁸³⁾	•당세포비서 •세포 당원들을 대상 •사로청원, 여맹원, 직맹원 지도

출처: 필자 작성

278) 공장, 기업소의 급수 구분 기준은 종업원 수에도 있지만 핵심은 생산액에 있다. 즉 계획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기업소와 공장의 급수 구분이 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광산, 탄광, 수산, 임산의 경영방식은 공장 처럼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연합기업소들인 광산, 탄광, 기업들은 그 후방기지로 자체의 농장, 수산지 등을 갖고 있다. 연합기지에 속한 농장이라도 농사일에 대한 평가는 공수제, 즉 농장운영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연구소, 학교, 병원, 탁아유치원 등의 운영은 정액제 경영이다. 경영형태가 다른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다양한 경영방식을 연합하는 연합기업소의 형태가 적합하며 이는 공장과 기업소의 급수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279) 당 조직의 당원수가 몇 백명을 넘는 기업소는 그 일의 중요도나 종업원 수에 따라 1급, 2급 기업소로 나뉘는데 이러한 당 조직의 당 비서는 당원들의 당비에 의한 인건비 지불 유무에 의해 유급당 일군, 무급당 일군으로 구분된다. 또 승용차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당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 당 조직의 당 비서가 유급당 일군이 되려면 산하 당 조직의 당원이 250~300인은 되어야하며 유급당 일군이 많은 당 조직일수록 일하기가 편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각 당 조직들의 자기 당원 이동에 대한 관리는 당 일군들의 이해관계와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는 당원들의 직업 이동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단위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직장은 국가가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를 행사함에 있어서 핵심 매개 기구이다. 아래에서는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 즉, 첫째, 직장 출근(결근, 병결, 지각), 둘째, 입·퇴직시 조직의 역할, 셋째, 주민의 이동 및 거주, 넷째, 결혼에 대한 조직의 관여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한다.

(1) 직장 출근(결근, 병결, 지각)에서 조직의 역할

북한의 조직생활은 매 조직원들의 노동시간 및 노동현장 이탈현상을 조직생활총화를 통하여 엄격히 통제한다. 이때 특징은 문제의 대상이 속한 해당조직 및 당 조직, 행정 조직, 인민반 조직, 사법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작동한다는 데 있다. 우선 매 기관기업소는 그날 종업원 출석상황을 출석장부 담당자(노동과 출석담당, 또는 경리나 부기)가 아침 첫 시간 자기 기업소의 급수

280) 나폴레옹이 만든 3:3:3제 체제(한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가 10인 미만이라는 데서 발생된 체제)에 의한 것으로써 예를 들어 함경북도에 20개 군이 있다고 하면 20개 군당 책임비서와 그 군 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수 십 명의 초급당 비서들을 도당 책임비서가 직접 지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도당위원회에 <시, 군 초급당비서과>와 <공장, 기업소 초급당비서과>가 있어 이 부서들에서 해당 분야의 당 관료들을 전문 지도관리한다. 당 생활총화 지도과는 시, 군당 책임비서들의 당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281) 당원이 31명 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42조 2항)

282)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 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 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42조 2항)

283)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당원이 5명 못되는 단위에는 따로 당세포를 조직하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들과 후보당원들을 가까이 있는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사업의 성격과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두 개 이상 단위의 당원들을 합하여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는 시(구역), 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42조 1항)

에 따른(구역, 도, 기업소 내) 보안서 접수에 가서 보고한다. 보안서 접수실에는 ‘출근동태 장악’ 장부가 있어 보고를 받은 보안서 실무자가 장부정리를 한다.

(가) 사례 1: 1988년 5월, 평양시 중앙열망사업소 모란직장 월향
작업반 노동자가 이유없이 3일 결석한 사례

함경북도 무산(평양시 순안구역에서 추방됨)에 사는 한 청년(필자의 애인의 동생)이 평원군 누이네 집에 왔는데 평양까지는 갈 수 없고, 꼭 보고 싶다는 편지가 필자에게 날아왔다. 평양 1000리 밖에서 100리 밖까지 왔는데 더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럽다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 일요일 아침 일찍 떠나면 적어도 월요일 아침엔 돌아올 수 있으리라 가볍게 타산하고 떠난 걸음이 사달난 것이었다. 주소에 밝혀진 평원군 누이에 집에 필자는 월요일 오전에야 도착하였다. 편지의 주인은 출타 중이었다. 사방 허허벌판이라 직장에 전화한통 할 데도 없었다. 결국 그곳에서 이틀 후에 있다는 평양행 군부대 자동차를 기다렸다 타고 오니 수요일 하루일이 다 끝나가는 저녁 무렵이었고 직장에서는 난리가 있는 대로 난 것이었다. 필자가 사로청 초급단체 위원장이었던지라 부분사로청위원장이 “어떻게 된 일이야?”하고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니 “그래도 어떻게 알렸어야지! 지금 큰 일 났어!”하고 현재의 분위기를 암시해주었다. 필자를 만난 작업반 당세포비서(여성)는 아무 리유 없이 결근한 필자를 찾느라 평양시 병원들의 사체실을 다 뒤졌다고 하였다. “3일 결근은 남조선에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이니 정치범으로 처리하라는 김일성동지 교시가 있어, 네가 무슨 일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 필자는 할 말을 잃었다. 다음날, 직장 로동과에서 부르다해서 가니 필자를 해직시키고 새로 인원모집을 시작하는 정화조시실 공사장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였다. 뭐 보내니 가야하나부다고 여겼는데 큰 오빠 쪽에서 천둥 같은 벼락이 떨어졌다. 지금 김형직사범

대학 작가반 입학생 입학절차가 다 끝나고 중앙당 료해만 남았는데 대학 입학 3개월 앞두고 리직을 하면 그런 사람 신뢰가 가겠냐고, 그러지 않아도 작가들이 자기 자식들 서로 입학시키려 경쟁 벌리는 판에 이 사실을 알면 필자를 당장 명단에서 떨구겠다고들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로회한 직장장을 설득시켜 리직을 원상복구 시키느라 보름 이상을 아주 진땀을 빼야 했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은 “3일 결근자는 남조선에도 갔다 올 수 있으니 정치범으로 취급하라”는 김일성법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조직생활총화에서 자기비판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조직책임자들은 “아직 다 안 나왔다”, “솔직이 꺼내놓으라”고 자기비판자를 압박하기 십상인데 이는 당사자에게 2중, 3중의 심리적·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온다.

(나) 사례 2: 1979년 하반기, 집단배치 받은 자전거공장 퇴직을 위해 무직 생활한 사례

자전거공장 퇴직 시도는 대학도 못간데다 최하층 직업에 강제로 집단배치 당했다는 필자의 자존심에서 비롯되었다. 자전거공장 행정 측에서는 80명이 집단배치되어 왔는데 필자 한명 때 주면 80명 다 때 줘야 한다며 절대불가 입장이었다. 하도 필자가 강경하게 나오자 구역 로동과에서 배치해줬으니 거기 가서 해결받으라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때부터 필자는 공장이 아니라 서성구역 로동과 수급지도원 방으로 출근하였다. 배급도 로임도 안나왔다. 필자의 계모는 배급표부터 빨리 타와야지 녀자가 무슨 직업타령이냐며 필자의 불루칼러 탈출시도에 시큰둥해하였다. 필자의 큰오빠는 “녀자가 시집 잘 갈려면 직업이라도 좋아야 한다”며 자기 처를 시켜 식량을 집에 보내 오고 사람을 내세워 구역로동과 수급지

도원²⁸⁴)에 교섭을 하는 등 녀동생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필자가 속했던 자전거공장 사로청위원장은 “어떻게 잘 되어야겠는데”하며 사람 좋은 인상만 지을 뿐 이었다. 그런데 인민반장이 문제였다. 필자가 살던 집 바로 뒤에 인민반장이 사는지라 그녀(곽영옥)는 필자를 만날 때 마다 “직장 언제 나가냐?”를 물어보았다. 얼마 지나서는 “15일 이상 무직인 자는 6개월 노동단련대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어!”하며 필자를 압박해왔다. 자칫하면 신고하여 필자를 노동단련대에 보내겠다는 신호였다. 안으로는 계모와 인민반장의 눈치를 보느라, 밖으로는 구역로동과 수급지도원을 설득시키느라 참 긴장한 시간을 보낸지 6개월 만에 자전거공장에서 직을 때는 데 성공하였다. 필자가 입직하려고 했던 금수산의사당 경리국 만수무강연구소 간부와 지도원이 서성구역 로동과 수급지도원에게 전화 걸어 필자의 퇴직을 의뢰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물론 필자는 만수무강 연구소 입직에 실패하였다. 문건료해 결과 외할아버지가 지주로 판명났다는 것이 그 리유였다). 평양 자전거공장 80명 동기들은 필자의 퇴직소식을 듣고 저마다 “영웅이다!”며 환대해주었다. 사람좋은 사로청위원장은 필자를 위해 평정서를 잘 써주었다.

이 두 경우를 보면 사로청 조직은 결정권이 없고 그 권한을 당 조직과 주거조직인 인민반 조직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입·퇴직시 조직의 역할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는 직장을 배치 받는다. 즉 개인은 구직이 아니라, 직장을 배치 받는다는 것이다. 한 번 배치 받은 직장은 그

284) 구역노동과 수급지도원은 집단배치 및 개인 이동에 결정권을 갖는 권한이 막강한 자리였다. 하도 이해관계자들이 교섭을 해오고 뇌물을 먹이는 통에 구역 행정위원회에서 주택과 배정지도원, 노동과 수급지도원은 2년 이상 버티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지성미와는 인연을 담은 듯한 수급지도원의 얼굴표정은 정말 무미건조하였다.

사람의 영구 직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래에 언급하는 사례는 한 당원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직업을 퇴직하려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당 비서는 자신의 산하에 소속되는 당원의 숫자에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 두 사례를 보면, 당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가장 걸림돌은 행정수속절차가 아니라 당 조직의 승인여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례 1: 대학 졸업 후 국가배치에 의해 현장 연구자로 있던 한 지식인의 퇴직 사례(1970년대 후반)

대학 졸업 후 국가 조치에 의해 대기업 현장연구사로 집단 배치 받은 한 지식인은 그 직업을 퇴직하고 싶어하는데 당위원회에서 절대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 지식인은 수를 썼다. 즉 뇌출혈환자 연출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이 행위로 주위에 자신이 환자임을 인식시키는 한편 병원에 퇴물을 주고 노동능력 상실(혹은 감퇴) 의학감정서를 받아 연구소 노동행정에 제출하였다. 결국 당조직은 그의 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사례 2: 군수공장 기사로 있던 필자 오빠의 퇴직 사례 (1996년)

북한에서 군수공장은 한번 배치 받으면 영원한 종신직업이다. 죽어서나 빠져나올 수 있다는 곳이다. 제대되면서 배치받은 한 군수공장에서 야간공업대학을 나오고 기사로 일하던 필자의 둘째오빠는 몇번 퇴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1990년대 중반, 식량 미공급으로 굶고 굶다가 온 몸에 부종이 오면서 아사직전에 이르게 되어 오늘날 하는차에 함께 일하던 부문당비서가 당조직에 제기하여 둘째오빠의 퇴직이 승인되었다. 둘째오빠와 그의 가족은 그 부문당비서가 소개한 평안남도의 농촌으로 이사갔는데 그 농촌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기는 마찬가지였다.

(3) 주민의 이동 및 거주에 관한 조직의 관여

각종 이유로 개인이 직업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참여하는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노동행정 부문, 주민등록 부문, 해당조직이 있다.²⁸⁵⁾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이유에 의한 자유 이동은 없게 하였다. 모든 직업적 이동은 ‘조직적 추천’하에서만 가능하게 하였고 또 개인은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래도 사람의 일인지라 특수한 개인적 이동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노동 능력 상실’ 혹은 ‘노동능력 감퇴’라는 공식적 의학감정 하에서만 진정한 개인이동이 가능하였다. 직장 근무 중 어떤 병 치료로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단위 기간 안에 연 6개월간 병결하면 계획경제 국가의 노동당국은 그 자의 노동능력에 대한 보건부측 의사협의를 의뢰하고 법의 감정이 내려지는지 어떤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 그 판정결과로 근로자는 ‘700(근로자 일당 식량공급량, 그램)의 노력자’로부터 600(앞서와 같음, 경노동 근로자)대상자, 혹은 300(부양)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경노동 대상자들은 해당한 경노동 직장이 시·군에 한두 개씩 있는데 거기에도 조직이 기다리고 있어 조직생활은 연속하게 되어 있고, 가정부양자(대체로 병자로 분류됨)들은 동·리 단위로 조직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이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 식량 공급은 곧 끊어지고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즉 100% 식량배급제도에 의해 그 어떤 개인도 전민조직생활로부터 빠져 나갈 길이 없도록 사회 조직이 치밀하게 설계 되어 있다.

조직이동의 기본 절차는 이렇다. 조직으로부터 조직이동 증명서가

285) 노동행정은 보통 노동성 산하이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배분,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당과 치안의 주요 협력자로 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행정부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 부문도 보안성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나 실지는 성분심화조사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기에 ‘주민등록부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해당조직’은 특정 개인을 소속시킨 당, 청년동맹, 직맹, 농공맹, 여맹 등 개별적 단체들을 다 망라한 일반을 가리키는 술어이다.

발급과 동시에 조직생활 평정서가 발송된다. 노동행정 부문으로부터 채용증 혹은 노력파견장을 받고 노동수첩을 교부하며 이동기관 노동행정 부문에 등록한다. 양정당국으로부터 식량정지증명서를 떼고 이동지에 가서는 불인다. 군사동원부로부터 군사이동증(북한의 모든 혼인 및 미혼 성인남성은 군사동원부 산하 교도대 또는 적위대 소속임)을 교부 받고 이동지에 가서 등록한다. 주민등록당국에서 퇴거 및 거주신청서를 교부 받는다. 또 주택 당국에서 주택 퇴사 수속을 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수속이 신·구 2개소와 각 급을 걸치는 데 그 기간은 15일(2주 간)로서 주어진 법정 소요기일은 턱없이 부족한바, 이 통로를 개인적 목적(자유이동)으로 이용하는데도 강한 제동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 보름동안에 서류수속을 다 마치고 주택 및 이삿짐 문제까지 모조리 해결하면서 이동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자칫하여 3개월 간 당원등록을 못해 무소속으로 당비를 체납하면 자동 출당되는 엄중한 당 조직규율이 당원의 이동을 극력 제동시킨다. 그 반대로, 정권의 요구에 따른 집단적 이동인 경우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속이 이루어진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가지 않으려는 본인의 방해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1980년대까지 개인적 이동은 고작 자기의 직업 이동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인이 기업을 조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아래에 예시하는 사례는 북한에서 거주 이동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경우, 추방된 자가 지시된 바의 추방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보여준다.

(가) 사례: 1998년 평양시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으로 남편따라 농촌진출 당한 필자의 사례

집도 일자리도 없는 함경북도 동해바닷가 마을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온 필자의 거주를 요하는 곳이었다. 구역 행정위원회에 가서 거주 수속은 마쳤으나 필자는 당장 하루밤을 거처할 데가 없었다. 그 바닷가 마을에는 필자의 일자리가 없었다. 남편은 그나마 누이네 집에 얹혔는데 그가 일하게 될 오리목장 당위원회에서 몇달 내에 집을 지어준다고 하였다. 필자는 몇 달이 아니라 하루가 급했다. 오리목장 당비서를 만나 잠자리와 때식 보장을 요구했더니 식사는 안되는데 잠자리는 목장 녀자애들 하숙방에 들어가 자라고 승인해 주었다. 그것도 당분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숙소에 가 사감 아주머니를 만나 초급당비서가 여기서 자라고 승인해 주었다고 말하니 군말없이 처녀 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었다. 등을 누일 잠자리는 생겼는데 먹을 거리가 없었다. 100여리 떨어진 청진시내로 나와 라진, 어랑, 경성 등을 톺으며 아는 작가들을 다 만나보아도 워낙 어려운 시기라 뽀족한 방법이 없었다. 주변 농촌학교 국어선생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필자가 리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미달자로 락인되어 락방하였다. 다행히 라진에서 아는 이의 소개로 만난 분이 새로 생기는 신문사 기자로 받아주겠으니 리혼하고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니 조선 법이 결혼녀는 남편의 거주지에서만 직업을 구하게 되어 있었다. 청암구역에 와 리혼을 하려고, 남편이 '성불구자'라는 의학감정서까지 도병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재판소에 갔으나 부결당하였다. 결국 필자에게는 탈북의 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4) 결혼에 대한 조직의 관여

중국의 단위가 그러하듯이, 북한에서 조직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한다. 그 대표적 예가 결혼 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그 부서의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성분 나쁜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자, 세포비서가 그 젊은이에게 “앞으로 네 앞길이 막힌다”고 진지하게 조언하고 있다.

(가) 사례: 일본 귀국자여성과 약혼했던 필자의 큰오빠 사례
(1968년 여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 후 문예출판사 조선문학편집부 기자로 배치받은 필자의 큰오빠가 누군가의 소개로 잘사는 귀국자 여성과 사귀던 중 약혼식을 올렸다고 하였다. 필자가 큰오빠를 따라 평양 시내 월향청량음료 고급빵집에 가서 “언니라고 불러라”는 큰오빠의 소개를 받고 함께 식사하면서 살펴 본 그 여성은 인물은 없으나 성품은 펍 온화해 보이는, 교양이 몸에 배인 모습이였다. 식사 마치고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오빠, 그 아지미 누구냐?”하고 궁금하여 물었더니 약간 수줍은 톤의 “오빠 색시!”라는 대답이 9살 녀동생 귀에 들려왔다. 얼마 후, 오빠는 그녀와 갈라졌다고 하였다. 큰오빠 부서의 세포비서가 “앞으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니 갈라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큰오빠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울면서 약혼자에게서 떠나갔다고 하였다. 필자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들려준 비화였다.

나. 당과 그 외곽단체의 조직생활 체계

조직생활단위 즉 직장에서의 조직생활은 개인이 소속되는 바에 따라 당 또는 그 외곽단체인 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에만 머무르는 초등교육단계에서는 소년단, 중등교육단계에서는 사로청에 소속된다. 그리고 개인들은 거주지별로 인민반에 의해서 통제받는다. 다시 말해 북한인구의 대부분은 생산행정과 주거행정의 양쪽에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중국에서의 조직체계와 동일한 것이며, 소련의 경우에는 공산당원과 사로청원에게만 의무 지우던 조직생활을 전 인민에게 확대한 체계이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 체계의 기본 기능은 그 구성원을 구속하고 국가와 조직에 순응하도록 순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과 외곽조직을 통한 조직생활은 그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소년단 입단은 자신을 유치원생과 구별해주는 자부심, 사로청 입단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 노동당 입당은 최고 정치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수령의 정치적 생명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부여한다. 여맹은 과거에는 직업이 없어 집에서 노는 여성들로 구성되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장마당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경제활동을 하는 ‘먹을 알’ 있는 여성들의 조직이라는 내적 긍지감이 존재한다. 반면, 직맹과 농근맹은 그 성원들이 조직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조직생활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즉 소년단, 사로청, 노동당, 여맹, 직맹, 인민반의 순서로 설명한다.

(1) 소년단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공식적인 조직생활은 만 7세가 되는 소학교 2학년부터이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하는데,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주석 출생일) 그리고 소년단 창건기념일인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먼저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할 뿐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야 하며 집안성분도 좋아야 한다. 첫 입단식은 아주 거창하게 진행하는데, 행사장에 입장한 입단생들이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주는 식순으로 진행한다. 입단식에는 시(군·구역)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 빨치산 운동이나 다른 일로 훈장을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넥타이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준다. 입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사회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앞으로는 공부만 잘 할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렇게 6·6절 입단식까지 끝나면 지금까지 학교 행정체계에 의해 분류되어 있던 학급 단위에 ‘분단위원회’(학교 단위는 ‘단위원회’)라는 소년단, 즉 첫 정치조직 체계가 겹치게 되는데 이는 첫 분단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단총회의 핵심은 분단(학급)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별 소년반(학습반)조직 구성과 소년반 반장 및 분단 열성자 선거이다. 소년반은 보통 3~6개 정도로 나누어지고 그를 담당할 소년반 반장 1명이 선출, 분단에는 분단을 책임질 분단위원장, 그를 도울 조직부위원장(학급의 행정담당인 학급장 역할 겸임) 1명, 사상부위원장 1명, 학습, 과외활동, 꼬마계획 담당 등의 분단위원 5~6명 정도가 선출된다. 또 이 선거에서는 단위원회(학교 소년단 정치조직)의 위원도 1~2명 선출된다. 분단들이 모인 학교 소년단총회에서는 학교 단위원장 1명, 단부위원장 2~3명, 학급별 수의 단위원들이 선출된다.

〈표 IV-2〉 소학교 행정과 소년단 조직의 비교

행정 조직 체계		소년단 조직 체계	
행정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조직생활 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학교 (5개 학년 각 2~5개 학급)		소년단위원회 (최소 500명 이상)	•소년단위원장 •단위원, 분단위원장 들을 대상
학급 (학생 30~40명)	•학급장 •학급 학생들 대상	분단위원회 (30~40여명)	•분단위원장 •분단위원, 소년반장 들을 대상
학습반 (학급 당 3~5개 학습반, 5~7명 정도)	•학습반장 •학습반 학생들 대상	소년반 (5~7명 정도)	•소년반장 •소년반원들을 대상

출처: 필자 작성

이때부터 새로운 분단위원회(학급)는 학교 소년단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적인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체계의 핵심이 성인들은 생활총화이고 그것이 기층조직 단위로 진행되는데 비하여 소년단 조직생활총화는 그 특성상 기층 조직인 소년반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급 담임선생의 주관하에 분단(학급) 단위로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아직 분별력이 약한 아동들의 생활총화에 선생님이 제어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총화는 주에는 주 생활총화, 월에는 월 생활총화, 분기에는 분기 생활총화, 상(혹은 하)반년 생활총화, 연간 생활총화가 있다.

소년단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분단별 소년단원들은 파철, 폐휴지, 파동, 토끼가죽 모으기 및 각종 약초, 산열매 채취, 그리고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등에 동원되어 할당량을 해내야 한다. 분담 및 총화체계가 명료하기에 누구도 이 개별과제 수행에서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진행된 외화별이 금액은 소년단의 상위조직인 청년동맹에 흡수되고 그것은 청년동맹 활동자금으로 운용된다.

또한 소년단조직을 통하여 김일성 혁명활동 도록, 신년사 통달경기 등 정치행사가 기념일별로 있는가 하면 전쟁발발일이나 ‘전승절’(정전일)을 계기로 웅변대회,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조직, 그에 대한 표창 및 시상식을 통해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한다.

혁명역사연구실 학습 및 청소도 분단조직의 주 계획에 의해 운영되며, 회상기 연구 및 발표, 영화감상발표회 등도 조직의 계획에 맞춰 진행된다. 소년단원의 날인 토요일에는 소년단 지도원의 집행 하에 모든 분단들이 운동장에 정렬하여 분단깃발을 앞세우고 분열행진을 한다. 소년단원이 부모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소년단 조직의 이동절차는 따로 없고 학교 행정에서 떼어 주는 전학증명서와 담임선생이 써주는 생활평정서만 구비하면 된다.

학교 소년단조직의 상위 기관은 군(구역) 연합단체이며, 전국 소년단 조직의 최고 기관은 전국소년단 연합단체이다. 군(구역), 전국 연합단체 총회에서는 소년단 입단식 및 표창식 등이 있다. 이러한 소년단 조직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만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만 14세가 되는 학생(중학교 4학년)은 누구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소년단 입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청년동맹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식인 붉은 넥타이를 풀고 소년단 휘장을 떼고 청년동맹 가입식을 거쳐 청년동맹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

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게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크지만, 지도원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지도원은 학생들이 시(군·구역)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한다. 지도원은 소년단 및 청년동맹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 지도원의 역할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청년동맹의 조직생활체계는 중등 교육기간에는 소년단 조직체계와 크게 차이 없다. 다만 소년단에서 ‘소년반’ 형태의 말단 조직이 중학교 기간 사로청 조직에서는 ‘분조’의 형태로 바뀌며 소년단에서의 학급단위 생활총화 형태는 그대로이다. 사회에 나오면 생활총화 단위가 기층조직 단위로 바뀐다. 청년동맹원은 타곳으로 이동시 맹원 이동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학교 시기의 청년동맹 조직원이 해야 하는 일은 소년단 조직원 때와 거의 유사하다.

〈표 IV-3〉 생산행정과 청년동맹 조직의 비교

행정 조직 체계		청년동맹 조직 체계	
행정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조직생활 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공장 (종업원 2천명 이하)	•지배인 •공장 산하 직장장 들을 대상	청년동맹위원회 (몇 백명 이상)	•청년동맹위원장 •부문위원장들을 대상
직장 (종업원 1천명 이하)	•직장장 •직장 산하 작업반 장들을 대상	청년동맹 부문위원회 (50여명 이상, 중학교 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생략됨)	•청년동맹 부문위원장 •부문산하 초급단체위 원장들을 대상
작업반 (종업원 100명 이하)	•작업반장 •작업반원들을 대상	청년동맹 초급단체위 원회(5~10명 정도, 중 학교는 초급단체가 한 개 학급단위이고 그 밑 으로 '분조'라는 말단 단위 조직 있음)	•초급단체위원장 •담당 초급단체원들을 대상

출처: 필자 작성

(3) 노동당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라면, 노동당은 '자발적' 가입성격의 조직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상 노동당은 국가보다도 상위조직으로서 권한이 막강하기에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의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당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 세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 세포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자격유무가 결정되면 지역 당 위원회의에서 비준이 나온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예외적으로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 단위이다.

노동당 가입자는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입당하지 못하면 30세까지 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지속한다. 30세가 되어도 입당을 못한 주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으로,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직업총동맹 산하에는 세부 직업별로 직업동맹(직맹)이 구성되어 있다.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가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소속을 옮긴다.

기층 당 조직인 당 세포(모든 상위 당 조직들 포함)는 ‘사업 총화 및 새 지도기관(세포비서와 부비서) 선거’를 위해 매년마다²⁸⁶⁾ 열리는 당 세포 총회에서 조직된다. 이렇게 발생한 당 세포 조직의 목적은 세포당원들의 당 생활총화²⁸⁷⁾와 매월 말일에 진행되는 월 생활총화, 분기별로 분기 생활총화, 상(하)반년 생활총화, 연간 생활총화 운영이다.

주 생활총화에서는 세포당원들의 한 주간 생활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말씀을 근거로 본신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의 방식을 통해 날 날이 총화되며 매월 말일에는 주 생활총화를 통해 다뤄진 내용 중 주요사건들과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월 생활총화가 열린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겨진 문제들은 부

286) 이러한 형식의 조직생활 말단조직 선거는 당의 모든 외곽단체들이 동일하다.

287) 중앙기관, 문화예술기관, 중앙당 등에서는 2일 당생활총회를 진행하며, 조선작가동맹 당원 작가들도 이 질서에 포함된다.

문당 및 초급당에 보고되며, 분기에 한 번씩 열리는 초급당 총회(혹은 부문당 총회)에서는 제기된 대상들을 사상투쟁의 무대에 올려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의 방식을 통해 총회를 진행한다. 초급당 총회가 열리는 이 날은 모든 소속당원들이 일을 놓고 아침 첫 시간부터 참석, 만약 안건이 하루에 다 못 다루어지면 총회는 다음날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초급당 총회가 있는 날은 노동일로 취급, 여기에 한 명의 당원이라도 빠지면 비상사건화 한다. 국가 주도 중요 행사나 공무로 인한 지방 출장으로 주 생활총화에 참가하지 못한 당원은 출근한 즉시 세포비서나 부비서를 찾아가 개별적 생활총화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당세포조직의 역할에는 기본으로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당원근로자 학습반,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간부학습반이 있다. 세포당원들이 다양한 학습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가하게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새해 신년사 학습,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전국의 모든 혁명초소에서 진행되는 수요강연회, 반년 단위로 진행되는 전국 주체사상 문답식 학습, 충성의 노래경연, 김일성·김정일 노작 학습이 있다. 또한, 김일성을 칭송한 ‘항일빨찌산 회상기’, ‘인민들 속에서’, 김정일을 칭송한 ‘인민의 지도자’,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등에 나오는 회상실기들을 조직에서 분공 받은 그 이상의 양²⁸⁸⁾을 발취하여 조직의 모두가 검열 하도록 함으로써 세포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한다.

당 세포조직의 역할은 당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동원들에 세포당원들이 열화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88) 회상 실기는 김일성, 김정일쪽이 각각 40~80여 권, 로작도 각각 20여 권씩 발취하여 검열 받아야 한다. 해당 노트들만 해도 벌써 4종을 넘는다. 여기에 간부학습반(당원근로자학습반)노트, 생활총화 노트, 강연회 노트가 추가된다. 따라서 매 개인이 보통 7~8권 이상의 정치관련 노트를 해마다 갱신해가며 구비해야 한다.

이에는 연례행사인 새해 첫 전투, 1호 행사, 당에서 조직하는 기념비적 건설들에 대한 지원, 혁명사적지 견학 및 지원, 인민군대 지원, 농촌지원, 탄광 및 광산 지원, 학교 지원, 철도지원, 식량절약 등이 있다. 세포비서들은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세포당원들의 참가정형을 꼼꼼히 기록해두었다가 사상투쟁의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당 세포조직의(모든 외곽단체 조직들도 마찬가지로) 중요 기능은 자기 당 조직 당원들의 평정서를 쓰는 일이다. 이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의 출신성분과 본인의 조직생활 참여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는 문건으로서 유치원 높은 반 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하며 조직을 옮길 때 마다 따라다닌다. 당 조직에서 과오를 범한 조직원(외곽단체 포함)에게 주는 처벌은 가벼운 조직적 책벌과 강등에서부터, 구금, 고문, 처형, 가족동반 추방 등등의 폭력행사들로써 법 외적으로 자행(恣行)되고 있다. 한편, 당은 소년단이나 사로청, 인민반 조직에서처럼 파철, 파지, 파동, 약초, 산열매 수집 등의 지독한 앵벌이는 지시하지 않는 관계로 권위를 구축하는 면도 한다.

(4) 여맹

근로여성인 직맹원, 협동농장 근로여성인 농근맹원, 그리고 여성 당원을 제외한 여성은 모두 여맹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보면, 도시²⁸⁹⁾에 사는 가정주부와 협동조합 근로자 여성들과 그들의 학령 전 아동은 여맹조직의 통제 하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도시 세대수와 여맹원 수는 250만 명 정도로 거의 일치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1974년 3대혁명 시대 이전, 특히 1964~1973년의 10년

289) 이때 '도시'라는 개념은 수도와 도 소재지, 특별시 및 시, 군의 읍, 노동자구를 통틀어 가리킨다. 이 도시 개념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단지 농촌의 리들이다.

은 여맹의 전성기였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 실세의 정치무대 등장과 관련된다. ‘평양시를 전국의 모범이 되게 하자’는 구호 밑에 벌어진 ‘혁명의 붉은 수도 운동’은 인민반 강화를 통하여 평양시 주민사회에서부터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려던 것이었다. 1958년 사회주의 제도 수립으로 전민배급제가 철저히 실시된 조건에서 북한남성들의 사회적·가정적 역할은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돈되었고 다음 차례가 여성, 즉 여성가정혁명화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독재사회구조 구축의 최종 주요 과제였던 것이다. 인민반을 틀어 쥔 여맹과 국가정치보위부의 협동으로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로 일신할 수 있었고, 1967~1972년 사이에 그 사회구조적 준비가 완성되었다. 때마침 1968년 미국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은 평양시 주민의 30% 정도를 지방으로 소개, 추방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적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렇듯 임무를 완성한 여맹이 김성애의 실각과 함께 ‘결가지’ 정정 작업을 걸치며 점차 위축되고 근로여성들은 직맹과 농근맹에 이전 되었으며 여맹은 그 최소기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고 정부조치가 여맹이라는 사회단체를 위축·약화시킬 수는 있었으나, 가족이라는 보다 자연적 사회 세포에서까지 여성들의 역할과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추세에서의 이탈 등으로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남성들과는 달리 실질가계를 잃어간 여성들은 사그러졌던 시장을 부쩍 재활시켰다. 특히 보위부가 이끈 ‘붉은 수도’ 운동의 나쁜 버릇이 붙어 ‘물고 뜯기’ 잘하는 인민반 여맹의 대표소였던 “8·3” 가내반과 편의협동 등의 여맹조직은 그 시장재활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전면적 사회경제적 붕괴 속에 직맹과 농근맹에 소속된 여인들까지도 자기 가계를

위하여 먼지뿐인 직장을 뒤에 둔 채 탈조직통제 공간 속에서의 식량 자체구입(자구) 활동으로써 그 시장 부활에 대거 참여하였다. 사회 붕괴에 정부가 급급해 난 2002년, 정부의 적극적 여맹부활책으로서 시장활동 및 자구활동 중의 여인들을 재포획하여 결국 지금의 거대한 여맹은 수복되었다.

(가) 사례: 1998년 가을, 양강도 어느 한 군 읍노동자구 지구여맹
(즉 부문여맹)조직의 선거사례

이 녀맹조직은 자기 지구에서 삼삼오오 조직을 리탈해 버린 약 200여명의 녀인들을 13개 초급단체(초급단체당 녀맹원 10~18명)로 묶어내는 선거에 녀맹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선거할 간부 수는 총 20여명인바, 13명의 초급단체 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1명, 조직 및 사상 부위원장 2명, 위원 2~3명이다. 녀맹간부는 본인에게 구체적 실익이 있다. 평맹원보다 세외부담이 적고 자유재량도 생긴다. 또 부문이든 초급이든 장(長)만 되면 평맹원들로부터 퇴물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지원물자 관리 과정을 통하여 그 횡령도 가능하다. 게다가 주권에 대한 상대적 지근(至近)거리로 하여 사회적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실지로 지배적 지위를 향수한다. 이런 이유로 녀맹간부가 되려고 희망하는 자가 있어 녀맹초급단체 일군 선출 및 선거는 가능하였다.

여맹조직의 조직생활을 살펴보자. 여맹 초급단체 별 주 생활총화는 당 조직이나 사로청보다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여맹 조직생활에서는 사회적 노력동원 및 재화부담이 너무 많고 정치사상 학습, 강연회 등이 잦은데다 조직으로부터 옷차림까지 간섭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돈 있는 여맹원들은 조직에 돈을 주고 조직생활을 면제받는가 하면 돈 없는 여성들은 장사를 간다는 등의 핑계로 조직생활을 이탈하기가 일쑤이다.

(5) 직맹

입당을 못하고 청년동맹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조직원들은 30세가 지나면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에,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전업주부인 결혼여성은 여맹에 조직을 옮기게 된다. 역시 생활총화단위는 말단조직인 초급단체 단위이며 조직생활은 당이나 사로청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6) 인민반

인민반은 주거 말단 행정단위이면서 주거 말단 조직생활 단위이다. 북한의 모든 조직이 혁명초소, 즉 생산 행정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주거 행정단위인 인민반도 하나의 혁명초소이다. 결국 북한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학령인구, 노동인구는 생산행정 및 주거행정 양쪽 혁명초소에서 이중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혁명초소 조직생활 참가자가 인민반 조직생활 총화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지만 주거 행정단위인 인민반회의 자체가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생활 총화 성격을 띠고 있기에 ‘2중 조직생활’의 표현은 전혀 무리가 없다. 아래의 <표 IV-4>에서 주거 행정조직 단위와 주거 조직생활 단위를 비교하였다.

〈표 IV-4〉 주거 행정조직과 주거 생활조직의 비교

행정 조직 체계		청년동맹 조직 체계	
행정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조직생활 단위	간부 명칭과 역할
동사무소 (50~100여개 인민반)	•동 사무장 •동 부위원장, 인민반장 대상	당위원회 (혹은 초급당위원회, 백명~수백명)	•동 당비서 •부위원장, 인민반장 대상 •동 여맹위원장, 동 직맹위원장 대상
인민반 (20~40여 가구, 도시는 아파트별로 인민반 구성 소속 가구 수가 더 많기도함)	•인민반장 •인민반원 대상	당세포위원회 (인민반 단위이며 대체로 인민반장이 겸함, 세포당 당원은 약 5~15여명)	•인민반 세포비서 •담당인민반 당원 및 직맹원, 여맹원 대상

출처: 필자 작성

인민반에서 당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수는 많지 않다. 직장이 없는 노인이나 전업주부들 중 당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인민반에서도 노동당원들은 당 조직에, 전업주부들은 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인민반 내에는 노인들이 모여 사회조직생활을 하는 노인분조가 있으며 대다수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은 여맹조직활동과는 별도로 인민반 정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대체로 20~40세대로 구성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별로 인민반을 구성하기에, 인민반 세대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주민은 누구나 인민반 조직원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대주인 남자들, 직장인 여성들은 소속 직장에서 노동당 및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에 인민반 정규활동은 주로 노인이나 전업주부인 가두여성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민반에서는 인민반장의 지도하에 학습회나 강연회가 조직되고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등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조직활동들이 전개된다. 그리고 동에서 각 인민반별로 배정된 과업을 수행한다. 인

민반장 권한이 크기에 직원들이 그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생활에서 빠지거나 과업 수행을 등한시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돈이 주요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인민반조직생활에서 빠지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인민반 조직생활 참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사여행이나 이사를 위해서는 공식적 통제기구를 제외하고도 인민반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 이르기까지 승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 조직의 평정을 잘 받아야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승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민반 조직생활에 불성실할 경우 ‘자유분자’로 낙인찍히는 등 주민들로부터 배척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혁명초소단위의 조직으로 통보되어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민반 조직생활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래 예시된 사례는 인민반장의 지위 및 권한과 역할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가) 사례: 필자가 경험한 1990년대 후반, 평양시 평천구역 원자력총국사택 인민반 조직생활사례

두 개 인민반으로 되어 있는 평양시 평천구역 원자력총국사택 인민반장은 원자력총국 목수의 아내였다. 원래 그녀는 한 개층에 4세대로 구성되고 1층부터 7층까지인 56인민반 28세대 담당인데 8층부터 마지막 층(15층)까지인 57인민반 반장도 겸하고 있었다. 57인민반장으로 일하던 7층 3호집 안주인이 갑자기 관절염으로 운신 못하게 된 탓이었다. 게다가 다들 대학 졸업생인 이 아파트의 주부들이 너나없이 인민반장은 죽어도 안 한다고 우기는 통에 아파

트의 유일한 중졸생 주부인 그녀가 거의 강압적으로 인민반장 직에 임명되는데다 그마저 한개 인민반을 더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그 중졸생 인민반장의 등쌀에 아파트의 모든 대학졸업생 주부들은 한시도 기를 펴지 못하고 시달렸다. 동에서 통지가 내려오면 그냥 스쳐도 될 것을 이 인민반장은 꼭 인민반 회의를 열어 출석을 그어가며 매세대에 빠짐없이 전달하였다. 직장에서 하루일 마치고 뒤 시간의 퇴근 전을 벌려 집에 도착한 지친 주부들을 인민반장은 저녁밥도 짓기 전에 자기집 집 인민반 회의에 불러들여 지시내용을 또박또박 전달해주었다. 그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직장 강연 및 학습에서 이미 들었다든가 반복되는 것들이었다. 준전시상태 포고문 전달이라든가, 준전시상태기간에 집집마다 밤이면 불빛가림막을 철저히 치라든가, 전시 비상용품을 식구당 한세트씩 갖추라든가, 봄철인데 위생문화사업을 잘해야 한다든가, 외국손님이 오는데 배란다에 빨래를 널지 말라든가...

그것도 4·15나 국경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저녁이었다. 게다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집집의 문을 두드려가며 “래일 유효자재수매사업에 빠짐없이 참가하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매 세대가 1원 이상의 폐품을 수매하고 수매증을 바치라고 하였다. “한 세대도 무락되면 안 된다”고, “우리 인민반이 동사무소적으로 제일 꼴지”라고, 우는소리에 엄포를 섞어가며 다그쳐댔다. 세대주이건 늙은이이건 맞다드는 사람마다에 짜증부리고 큰소리 쳤다. 인민반장에게 바른 소리 탕탕 해대는 배짱있는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 한 둘은 못들은 척 하고 한 두 주쯤 흘 넘기기도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인민반원들은 일요일이면 반장의 지시대로 아침부터 집안에서 수매거리를 만들어 수매소에 들고 가, 오전 품을 다 팔며 줄을 서서 수매를 하였다. 다행히 1원을 채운 날은 인민반장의 낫빛이 그만그만하지만 50전이나 70전짜리 수매증을 해다 내면 “아니, 요것밖에 안 했나?”하며 대방이 무참할 정도로 핀잔을 주었다. 또 복도청소는 그 층 4세대가 한주씩 돌

아가며 하고 주변 마당청소는 한층씩 돌아가며 아침마다 하는데 그만 바빠서 청소를 못하고 출근하면 다음날 식전부터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소리소리 지른다. “복도청소(혹은 마당)도 안하고 어떻게 나가느냐?”고, “○○층 복도가 아파트에서 제일 어지럽다!”고.

인민반 세대 중에는 지방의 친척이 평양시 주변구역으로 려행증을 떼 가지고 온 경우²⁹⁰⁾가 종종 있는데 그 친척이 인민반장과 약속한 려행 일자내에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려행증명서에 지시된 날짜보다 지체될 경우는 매일처럼 그 집에 찾아와 성화였다. “왜 무단 숙박 시키는가?”, “동 당에 제기 하라는 가?”, “벌금 물고 싶은가?”, “촌에 쫓겨 나가고 싶은가?”²⁹¹⁾

한번은 동에서 아파트에 청소검열 나왔다가 불합격을 놓고 간 일이 있었다. 인민반장이 세대주(남편들)모임을 열고 상의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를 그녀는 원자력총국 총국장에게 찾아가 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총국장 지시를 받은 원자력총국 간부국장은 새벽 조기작업때 원자력사택 아파트의 전체 세대주, 주부들을 불러내어 환경정리 및 위생사업을 몇일동안 연속 시켰다. 그러자 아파트의 대학졸업생주부들이 “인민반장이 무슨 큰 벼슬자리라고 국가 정무원급 기관책임자를 함부로 찾아가는가?”, “원자력총국아파트를 운동에 망신시키고 원자력총국 위신까지 납작하게 만들어놓았다”, “동사무소에서 잘 한다 잘한다 추켜주니까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 것만큼이나 우쭐해서 돌아다닌다”며 힐난을 퍼부었다. 아닌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주런히 걸린 인민반별 ‘저금경쟁도표’, ‘인민근지원사업경쟁도표’, ‘유효자재수매경쟁도표’, ‘충성의 외화별이 경쟁도표’, ‘파동 수매경쟁도표’, ‘파철 파지수매경쟁도표’ 들에는 평천

290) 평양시 여행증은 ‘부모사망’, ‘본인결혼식’ 외에는 떼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평양 친척집에 올 때는 목적지를 주변구역으로 밝히고 편법을 써가며 들어가곤 한다. 그런 친척이 든 세대에서는 풍나물이라도 한 바가지 사들고 인민반장네 집에 올라가 ‘여사여사한 사정이 있는데 이곳 분주소에 가 숙박등록을 못하게 되었으니 사정 좀 봐 주십시오’하고 공손히 부탁해야 한다.

291) 실제로 인민반장이 어떤 세대를 문제걸어 동 당이나 동 담당안전원, 동 보위원에게 제기하면 그 집은 평양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다.

구역 해운 2동 57인민반이 3등 권 이내에 전부 들고 5등 권 이내는 ‘충성의 외화별이’ 딱 한 가지뿐 이었다. 그리고 57반 인민반장은 ‘모범인민반장’으로 영예 계시관 속보에 사진과 함께 크게 나붙어 있었다. 150여 개의 인민반이 소속된 동사무소에서 1~3등 권내에 들자니 57인민반원들이 인민반장의 등살에 악착같이 시달려 온 것이었다.

언젠가 녀동생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국 인민반장대회가 평양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고 대회장 좌석에 앉은 인민반장 얼굴들이 화면에 한참씩 비쳐지군 하였다. 그것을 보고 있던 녀동생이 “우리 인민반장도 저기 참가했는데 안 나올 가?”하며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저속엔 선하게 생긴 녀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말하여 주위의 폭소를 터뜨렸다. 이윽고 “에이, 저 인민반장 들네 반원들은 또 얼마나 시달렸겠나? 저 얼굴에 내배인 드살들 좀 봐, 우리 인민반장도 아침저녁으로 달달 복구는 데, 아, 정말 죽을 맛이야!”하며 혀를 꼴꼴 찧다. 인민반 조직생활에 시달리우는 인민반 조직원들의 처지는 여기나 저기나 별반 다르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인민반장의 도움이 있을 때도 적지 않았다. 평양시 배정 상품, 옥류관 식당표 등이 동, 인민반별로 배정되어나오기도 하는데 평시에 그토록 으르며 닥달하는데도 온순히 따르는 인민반원에게는 옥류관 식당표 등을 따로 더 주기도 하였다. 또 1990년대 중반 미공급시기 일반 주민들은 3~6개월째 식량이 없어 배급을 못타고 있었는데 금방 낳은 아기를 안고 평양산원에서 퇴원해온 필자의 집에 당장 먹을 쌀이 없자 그 사실을 전달받은 인민반장이 위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산모의 배급표를 들고 배급소에 가 하얀 입쌀이 한 배낭 그득히 든 배급입쌀을 타다 준 것이었다.

인민반 당세포위원회 세포비서를 겸하고 있는 인민반장은 동에서 조직하는 학습회, 강연회, 인민반 분토생산, 노동당에서 제기되는 모든 노력 및 재화동원에 인민반 조직원들(대체로 전업주부, 노약

자, 미직업자 등)을 빠짐없이 동원시키며 인민반 소속 당원들의 생활총화는 물론 외곽단체원들의 주 생활총화(대체로 여맹, 직맹)까지도 주관한다. 나라의 지방 및 중앙 선거는 전국의 동, 인민반 행정 및 당 일꾼들이 총출동하여 그 준비 및 진행, 총화까지 일괄 관리하는 거주 행정단위의 최고 조직행사이다. 또한 소속 주민의 배급이동을 위한 식량 정지 증명서나 해마다 갱신되는 주민배급용 1호 양식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행정 권한이 인민반과 동사무소²⁹²⁾에 지워져 있다.

다. 조직생활 보고 체계

‘총체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전체 사회, 조직과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보고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러한 보고체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보고체계이자, 여러 계선이 각자 따로따로 병렬로 보고하는 체계이다. 보고가 아래서 위로만 향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수직적 통제가 핵심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서방의 자유민주 사회에서 ‘보고’는 대부분 수평적 ‘보고’ 또는 수평적 견제와 균형의 체계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의 ‘보고’ 그리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단체의 비판적 감시 역할 등은 수직적 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둘째, 수직보고는 여러 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 보고의 경우 어느 한 계선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계선의 하부는 상부를 속일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상부를 속이는 것을 견제하

292) 도장란에 인민반장 도장이 안 찍히면 1호 양식 증명서류가 미완성되어 배급을 탈 수 없다.

는 의미에서 여러 계선이 서로 독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북한에는 조직선-행정선-보위부선의 3선보고와 함께, 조직별 자체보고라인, 3대혁명소조 보고라인, 중앙당 1호 신소체계, 인민반 보고 체계가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도록 존재한다.

1973년 7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선전선동부 보고체계의 미비한 현상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당중앙위원회의 핵심부서) 부장으로 이동되면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전국의 3라인, 3일 보고체계, 직보체계가 구축되었다. 여기서 <3라인>이란 ‘당 조직선, 행정선, 보위부선’을 의미한다. <직보체계>란 비상사건이나 인명피해 발생 시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적 지도체제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즉시 전화, 전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핫라인과 같은 체계를 의미한다. <3일 보고체계>는 3일마다 보고하는 체계라기보다는 김정일에게 보고하면 그 답장이 3일 만에 내려오는 체계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작가동맹 시문학 분과에서의 ‘매주 가사 및 시 작품 보고 체계’ 경험상 더 설득력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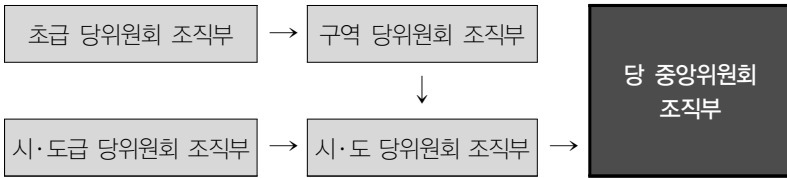
(1) 3라인 보고체계

(가) 당 조직선-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1일 보고체계

북한의 모든 기층당 조직은 초급당위원회 산하에 당내 사찰기구인 조직부(또는 조직부 비서제), 당내 선전선동을 담당한 선전부(또는 선전부 비서제), 외곽단체를 담당한 근로단체부(또는 근로단체부 비서제)를 두고 있다. 그 중 당원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이

는 사업을 담당한 조직부에는 1일 보고체계가 있다. 조직부 보고는 해당 라인을 통해 중앙당 조직부 담당관들을 거쳐 최고 수뇌부에 집결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IV-1〉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1일 보고체계



출처: 필자 작성

(나) 행정선-국가경제위원회 보고체계

국가계획위원회에서 1990년대까지 김정일에게 행정보고 올리는 체계를 보면 1호 보고 전용 팩스기가 설치된 방이 있고 그 방은 전문 경비군인이 총을 메고 보초를 서며 주 중 보고 올리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제의서 올리는 날짜와 시간이 되면 국가경제위원회 산하 상²⁹³⁾들에게서 올라온 제의서들을 국가계획위원회 1호 보고 담당자가 마치 살아있는 김정일에게 보고 올리듯 1호 팩스기 방에 문 열고 들어가 정중히 큰 절을 올리고 흰 장갑 낀 손으로 서류를 팩스기에 넣는다. 일을 마치면 역시 정중히 큰 절을 올리고 방을 나온다. 김정일에게서 답장 팩스가 오는 날짜와 시간에도 담당자가 1호 행사 절차로 팩스방에 들어가 역시 정중히 절을 드리고 팩스기에 도착해 있는 김정일 ‘방침’이 달린 팩스지를 흰 장갑 낀 손으로 꺼내 든 다음

293) 북한에는 31개의 성, 즉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노동성, 농업성, 대외경제성, 도시경영성, 문화성, 보건성, 상업성, 석탄공업성, 수매양정성, 수산성, 식료일용공업성, 외무성, 원유공업성, 원자력공업성, 룡해운성, 립업성, 재정성, 전력공업성, 채취공업성, 철도성, 체신성, 체육성, 화학공업성이 있다. 각 성 책임자인 상들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보 다 반급 낮게 지위가 정해져 있다. 즉 상과 내각 총리 사이에 위원장 직제가 있다.

그쪽을 향해 큰절을 정중히 드린 후 방을 나온다.

(다) 보위부선-국가보위부 보고체계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는 담당 보위원 체계가 있다. 이들은 보이지 않게 박아 넣은 요원들로부터 인민반원, 공장 기업소 기관 직원, 간부들의 동향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는다. 이 보고는 보위부 보고체계를 통해 김정일에게 직보된다.

(2) 기타 보고체계

(가) 라인별 보고체계

북한에서 일련의 특수 기관 당 조직들은 조직부 라인을 걸치지 않고 최고수뇌부에 직접 보고 올리는 자체 보고라인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기관의 직보는 주별로 이루어지는데 기관별로 보고 요일이 제정되어 있다. 이는 보고의 우선권 점위에 따라 특수기관들의 이해 관계를 갈리게 하는 현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보권을 가진 기관은 문화예술부, 혁명학원, 무역부, 무력부, 사회안전성, 보위부, 호위국, 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작가동맹 등이다.

(나) 3대혁명소조원의 매일 간부 5명 동향 보고체계

1970년대부터 시작된 ‘3대혁명 소조 운동’시기 대학교 졸업반 학년 학생들은 당, 무력부, 안전부, 보위부 등 특권 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관, 기업소에 소조원으로 모두 파견되어 나갔다. 당시 그들은 김일성의 명함이 찍힌 신분증을 휴대하였으며 소속은 중앙당 직속으로 되어 있었다. 소조원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일 담당 부서의 5명에 대한 거동 보고를 중앙에 하는 것이었다. 이때

문서 작성의 기술적 요구가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였다. 이때부터 북한에는 모든 당 간부들의 사업 자료를 월 1회 중앙당 3대혁명소조 본부에 보고하는 직보체계가 세워졌다. 이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젊은 지도자, 조직생활 운영 제안자이며 최고 집행자인 김정일이 국가운영권을 재빨리 자기 손에 장악해 낼 수 있었다.

(다) 중앙당 1호 신소 체계

1호 신소는 김일성, 김정일 앞으로 내는 신소이다. 법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우위인 북한에서는 재판소에 상소하기보다도 수령에게 신소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풍조로 되어 있었다. 1호 신소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평양시 창광거리에 있는 중앙당 1호 신소과에 가서 신소편지를 접수시킨다. 신소가 접수되면 적어도 20일 안에 중앙당신소과에서 신소자가 일하는 현지에 요해를 내려온다. 1호 신소내용과 현장 요해 결과가 일치하면 그 문제를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고하여 대체로 본인 의견대로 문제 해결을 해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며 중앙당 1호 신소과는 거의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어 버렸다.

(라) 인민반 보고체계

인민반, 특히 평양시 인민반, 국경연선지대 인민반은 그 임무가 보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민반에 무직자나 외부인 숙박자가 생기면 무조건 사법당국(담당 보안원 및 담당 보위원)에 보고해야 한다. 심지어 외부 친인척의 출입이 잦은 세대에 대해서는 오가는 우편물까지 조사하여 그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라. 조직생활 학습 체계

북한과 중국은 ‘총체적 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 사상 통제에 매우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을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사상, 강제 그리고 물질적 이익 부여이다. 이 중에서 사상을 강조하고 주요한 조종 수단으로 설정하면, 강제와 물질적 이익 부여의 측면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²⁹⁴⁾ 개인은 애국심과 충성심에서 자발적으로 수령과 당과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국가마다 달랐다. 중국은 모택동 시대에, 특히 ‘문화 대혁명기’에 사상적 자극을 극단으로 강조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이 진행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1950~1960년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경제개혁에서의 핵심 논의는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어느 사회이든 사상적 자극의 역할이 높을수록, 해당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 정신상태와 관련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진다. 북한에서도 학습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와 관련이 있다. 학습은 북한의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일부이다. 북한의 조직생활에서 학습체계는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문답식학습으로 나누어진다.

(1) 신년사 학습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북한의 전체 당원, 근로자들은 수령의 신년사가 실린 신문을 구입하여 신년사를 발췌, 혹은 암기한 후 새해 첫 출근한 날 소속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294)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참조.

(2) 간부 및 당원근로자 학습

북한의 모든 당원, 근로자들에게는 수령의 교시와 노작을 정기적으로 학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학습은 대상에 따라 화이트칼라는 간부학습반, 블루칼라는 당원, 근로자학습반으로 나누어지며 공부방식도 화이트칼라는 토요일 10~11시 반, 오후 2~4시까지 연구실에서 진행, 강사는 상급당에서 내려오거나 단위에서 학습 강사로 지정된 초급당 선전부 비서나 부문당 비서, 혹은 초급당 비서가 집행한다. 블루칼라는 첫 주 월요일 하루 노동이 끝난 저녁 6시 이후 한 시간 동안 연구실에서 학습회가 진행된다.

학습내용은 노동당의 정책과 김일성 교시와 혁명적 노작, 최고지도자의 말씀과 노작 등을 공부 하게 된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학습과정안은 간부학습반용과 당원근로자학습반용이 다르며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되어 학습참가자, 또는 강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학습 출석 및 태도 자료는 생활총화에서 사상투쟁자료로 활용된다.

(3) 수요강연회

북한 주민들을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집결시키기 위한 조직생활 학습체계의 하나인 강연회도 김정일이 주목하는 중요 분야의 하나였다. 1973년 8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에게 한 김정일의 담화에서 그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요즘 파철수집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강연회에서 파철수집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를 취급하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강연사업을 개선하자면 강연제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제강을 만들 때 글을 위대한 수령님의 문풍대로 써야 합니다. 글을 수령님의 문풍대로 쓰지 않고 자기 식대로 ‘유식’한 말로 쓰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는 표현입니다. ... 앞으로 강연회 참가 규률을 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자면 강연회 참가정형을 장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리유없이 강연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당조직에 통보해 주어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⁹⁵⁾

강연회는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서 보통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 공장 및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는 매주 수요일 하루 노동시간이 끝난 저녁 6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한 시간 반가량 기관 회의실(또는 강당)에서 진행되는데 화이트칼라, 블루칼라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연회 강사는 초급당 비서나 강연회 연사 교육을 받은 선전부 비서가 보통 담당한다.

강연회 내용은 시기별 당 정책이나 당의 지시 해설, 당의 입장에 맞춘 정세강연이 주를 이룬다. 토요 간부학습이나 월요일 당원근로자학습과 같이 출석체크가 엄격하지 않고 내용도 비교적 덜 지루하다. 하지만 또 ‘뻘한 소리’한다는 불신은 조직생활 참가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말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문답식 학습총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들 사이에 일명 ‘도구 없는 고문’의 악명이 불

295) 김정일,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김정일전집』, 제21권 (1973.6.~1973.10.), p. 180.

은²⁹⁶⁾ 북한의 유명한 문답식 학습총화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의 모든 대학생, 당원, 근로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일종의全民 학습총화제이다.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 학습이 목적인 문답식 학습총화는 시험문제와 답안이 한 달 전에 주어지고 모든 학습 참가자들은 그를 철저히 통달하여야 한다. 누가 언제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에, 특히 화이트칼라들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에 늙은이든 젊은이든 머리를 싸매고 죽어라 공부한다. 공부가 충분하지 못한 대상은 역시 생활총화의 비판감으로 된다.

문답식 학습총화 당일은 기관, 또는 공장 연구실에서 학습반(생산단위는 직장별, 비생산단위는 과별) 단위로 경연(競演)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한 개 학습반을 두 편으로 나누고 매 성원들에게 수험번호를 매긴다. 문답식 학습총화 진행자(대체로 세포비서)는 시험문제가 적힌 종이쪽지(러시아어로 ‘삐렛트’)를 시험장 앞 책상위에 뒤집어 넣어놓고 한쪽 조의 수험생번호를 부른다. 지명당한 번호의 수험생이 나와 적당한 삐렛트를 골라 적혀진 세 문항 중 한 문항씩 읽고 대답한 후 상대조의 수험번호를 부른다(삐렛트의 세 문항 중 세 번째 문항은 김정일 노래가 대부분이다). 지명당한 그 대상은 일어나 보충질문을 한다. 점수는 완전히 대답했을 때 기본내용은 80%, 보충질문은 20%의 점수를 준다. 다음은 반대 조에서 상대조의 수험자번호를 지명하는 식으로 문답식 학습경연이 반복된다. 이 경연에서 우수한 조는 기관, 공장 기업소 문답식 학습경연에 참석하며 이는

296) 초기 김일성종합대학 문답식 학습경연때 토 하나에도 점수가 오르내리는 통에 경연에 참가한 수 백명의 학생들이 점수를 다투며 신경전을 벌이는데 하도 그 분위기가 살벌해 어떤 학생은 질문에 대답하던 중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도 하였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의 가정교사였던 황경희 외국문학강좌 교수는 문답식 경연에 참가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는 사고마저 일었다. 그 사건이 김정일에게 보고되자 “대학교수들은 문답식 학습총화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져 대학 전교직생들의 문답식 학습경연에서 대학교수들이 빠지는 특혜를 입을 수 있었다.

초급당 비서(또는 선전부비서)에 의해 집행된다. 기관, 기업소에서 우수한 조는 도, 중앙 문답식 학습경연에 올라가게 되는 데 이 때 경연참가자로 선출된 선수들은 당 조직의 승인 하에 생산과 모든 활동에서 제외된 채 문답식 학습공부에 몰두 한다. 그들의 문답식 학습경연 준비기간은 노동일로 처리되어 참가자 모두에게 식량과 노임이 정상 지불된다.

(5) 당원 근로자 학습과제

당원 근로자 학습과제는 연간 노작 40~80편, 회상기 60~80편, 덕성실기 60~80편 등을 각 노트에 발췌하여 당원은 물론이고 직맹원이든 사로청원이든 여맹이든 모두가 행정 당 조직 세포비서에게 철저히 검열을 받아야 한다. 학습과제에 있어 간부 학습반이나 당원 근로자 학습반의 차이는 건수에 있고(간부 학습반에 비해 당원근로자 학습반은 10~20건 정도 적음) 그 학습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식이다. 모든 당원, 근로자는 발췌학습 정형 검열에서 통과되어야 문답식 학습총화 참가 자격을 지니며, 여기서 탈락한 자는 종업원총회, 근로단체 총회, 또는 당 총회의 사상투쟁 대상이 된다.

1998년, 함경북도 무산광산에서는 광산 종업원들에게 일정량의 배급을 줄 때 수요 강연 및 당원근로자 학습반 출석부의 출석여부를 확인, 당원근로자 학습과제수행 노트 검열 후 통과된 자에게만 배급을 주도록 부문당위원회가 지시하는 사건이 확인되었다.

4. 문화적 특징과 변천

197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성립한 조직생활사회는 정권의 사회와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시도의 의지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범의 체계가 성립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전체주의론이 말하고 있듯이, ‘총체적 통제’의 의도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의도한 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 통제’를 향한 의지가 강력해 질수록, 그에 상응하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과 역기능이 강해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할수록, 통제당해야 하는 측으로부터의 방어적 대응이 다양해지고 강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애초에는 야심차게 시도되던 ‘총체적 통제’의 강화 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반응과 역기능에 보다 분명하게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권측의 애초의 ‘총체적 통제’ 강화에 관한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실행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 조직생활의 의도와 현실을 대비하고 양자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서술한다. 다시 말해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도가 강했고 그에 맞는 제도체계가 운영되었더라도 조직생활 강화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일반주민들의 적응과 회피와 기만의 시도 속에서, 결과된 현실은 원래 의도와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둘째, ‘총체적 통제’의 북한식 절정기였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지와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시기를 나누어 설명한다. 이는 ‘총체적 통제’ 시도와 관련하여 앞서 거론했던 바의 시기 구분을 계승하여 계속 서술하는 것이다.

가. 조직생활의 의도와 현실의 현격한 격차

북한의 공식 연설에서 볼 때, 조직생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체제는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 또는 후계자가 운전대를 잡은 바 탕 위에서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인간치차(톱니바퀴) 기구가 되어, 오직 수령의 사상, 요구만을 실현하는 획일화된 정사일체, 총동원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는 『정치사전』의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결과되어야 한다. 즉 김일성이 말하듯이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조직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해당조직이 제기하는 분공을 철저히 완수하며 혁명화, 노동계급화 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생활을 통해 조직규율을 지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김일성이 말했듯이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이며 사상투쟁을 통해 인간을 교양개조해야 한다.

이처럼 공식 문건이 주장하는 바에서의 조직생활이 만들어 내야 하는 현실은 (주로 공식 문건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설정된 바의) 전통 전체주의론이 전체주의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Walder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첫째, 전체주의 정당과 그 적극적 추종자 사이의 관계는 양자 동일시 관계이다. 다시 말해 양자의 관계는 비인물적이며 (impersonal) 일반적이고, 사상적인 관계이며, 한편에서 심리학적 충동, 다른 편에서 사려 깊은 정치적 언약으로부터 성장하는 바의 양자 동일시이다. 전체주의 운동은 물질적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심리에 호소한다. 둘째, 사회적 원자화이다. 즉, 당이 추구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모든 사회적 연계는 말소된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핵심은 원자화된 사회로, 개인들은 오직 공동 권위(수령)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서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조직생활에 대한 북한 공식 담론의 이미지 그리고 전통 전체주의론자의 이미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앞서서도 인용한바 있지만, Harvard Interview Project에 참가한 학자들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기본 명제를 가지고 있었다.²⁹⁷⁾ 즉 첫째,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국가를 개인의 주도성을 완전히 분쇄하고 통제하며 또한 개인을 ‘원자화’시킨 단일체로 보지 않았다. 둘째, 복잡한 산업사회와 경제를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지도부가 설정한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자원을 과다 책정하고 사회를 항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다양한 ‘비공식적 적응 메커니즘’을 발생시켰음을 확인했다. 즉 호혜적 교환의 네트워크(blat), 생산의 허위 기록, 또는 상호 보호 그룹(가족 그룹) 또는 북한식으로 ‘알쌈’)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행위의 “일탈”적 방법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서 1970년대 중반 조직생활 사회를 관철하고자 했던 정권의 의도가 초래한 것은 원래 의도했던 상황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조직생활의 압박이 매우 강했을 지라도, 결국에 개인들은 조직생활과 관련한 정권의 공식 버전이 요구하는 바의 수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규율에 절대복종하고, 말은바 분공을 철저히 이행하며 사상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개인들은 조직생활의 압력에 긍정적·부정적으로 적응해 가는 가운데 조직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해 내었다. 그리고 Walder는 일반적으로 지적했지만,²⁹⁸⁾ 조직생활사회로서의 북한에서도 사회적 원자화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총체적 통제’ 시도는 당의 목적에

297) Mark Edele,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day Life,” p. 356.

298)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pp. 5~7.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연계의 파괴가 아니라, 개인들 간에 수단적이고 인물적 연계의 하부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문화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는 우선 ‘총체적 통제’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현된 조직생활 사회에서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한다. 이를 보면, 조직생활의 강화·강요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대응했던 기본틀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판단을 종합하여 일곱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이 북한 주민의 소통 방식이 되었다는 것, 둘째, 조직생활로 인해 프라이버시 공개가 강요되고 이 때문에 개인 인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 셋째, 수령의 권위 훼손에 대해 당위원회에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 때문에, 정치적 위협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그리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 넷째, 끊임없는 호상비판과 사상투쟁으로 개인의 내면세계가 실종되고 사회 내에 상호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것, 다섯째, 조직생활은 모든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국가가 빈틈없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그 결과는 개인들이 국가의 그러한 시도에 반응하는 가운데 오히려 비공식적인 개인들 간의 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만연화시켰다는 것이다. 여섯째, 조직생활은 마치 종교생활처럼 변형되었다는 것, 일곱째, 조직생활의 배경인 동원경제는 부정부패 그리고 장마당의 만연과 번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은 북한 주민의 소통방식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대화방식의 특징은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적(혹은 아침식)이라는 데에 있다. 조직생활사회에서 자기 방어, 또는 그럴듯한 자기 변명, 혹은 아침만이 수용소행과 같은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다는 사실이 몸에 각

인된 그들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내면화 하는 데서 실패하였다. 오로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만약 상대가 나를 비판하는 듯한 분위기만 느껴지면 무의식적인 방어 및 공격태세가 작동되고 있다. ‘나를 호상비판한 상대를 절대로 가만 둘 수 없다’는, ‘그냥 두면 내가 수용소행을 당한다’는 뿌리 깊은 공포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도록 그를 내모는 것이다. 만약 그 상대가 나의 공격이나 비난을 당할 정도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아첨도 먹히지 않을 대상이라면 이쪽은 역으로 자포자기에 빠진다. 즉 심리적 수용소행을 자진 당하는 셈이다. 그들은 대화상대와 마주했을 때 의논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지적 능력이 구비되지 못한 탓에 대부분 상대를 ‘휘두르는’ 방법을 쓴다. 이러한 소통능력의 부재 현상은 북한에서 만든 영화는 물론 국가적 협상에 참여하는 북한측 대표들에게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한다. 꼼수나 생떼 쓰기, 물리적 해결식 사고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한다.

(2) 프라이버시 공개가 이루어 낸 개인의 인격 박탈

조직생활총화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점은 조직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공개이다. 조직원들의 연애는 물론 부부관계, 재산내역 등을 조직이 일일이 간섭하고 심한경우 추적도 서슴지 않는다. ‘숙박검열’을 빌미로 한밤중 식구들이 잠자는 집안에 서슴없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전지불로 잠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보며 식구를 확인하는 이런 상습적 행위들은 역으로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증발시키고 뻔뻔함을 급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게 수 십년 간 유일사상 교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공급 시기가 되자 제 부모처자를 쉽게 버리고 공장, 기업소의 생명인 기계 부속품은 물론 나라의 인프라인 철길의 레일, 못, 전선줄,

견인기 부속품들을 거리낌 없이 뜯어내어 팔아먹었다. 인민군대는 영실이(영양실조)에 걸리는 순간 주저 없이 꽃제비가 되든가 ‘공산군’(여기서는 비적떼를 의미)으로 전락해 주민가옥에 대한 약탈을 서슴지 않았다. 시인이라는 자가 땀감이 없다고 대동강 유보도의 가로수 껍질을 아낌없이 벗겨내어 집에 싸들고 가는가 하면 원로 소설가라는 여성이 기차에서 재떨이를 뜯어다 집에 놓고는 ‘뺄나서, 나도 뭔가 하나 도둑질 해야겠다는 생각에 떴었다’고 무슨 무공을 시위하듯 자랑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던 ‘주체사상’의 나라에서 사람은 짐승수준으로 전락하고 나라에는 도적떼와 사기꾼, 강도가 들끓고 ‘온 세상이 우러르는 주체의 조국’ 북한은 주민들의 말 대로 ‘여우와 송냥이만 살아남은 나라’로 화하였다.

(3) 무조건 순응과 사리분별 능력의 상실

북한의 조직생활체계는 개인별·조직별 보고체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조직생활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 훼손으로 여겨지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즉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에 직접 보고해야한다. 여럿이 함께 들었는데 그 중 보고 안한 자가 있는 경우 그는 조직에 속을 안주는 ‘수상한 자’로 낙인되어 사상투쟁 무대에 오르게 된다. 심한 경우 추방되어 수용소행을 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직생활자들 속에 ‘당위원회 문고리 먼저잡기’ 성향이 강화되었다.

이런 조직생활문화 생태계속에서 사람들의 사고는 점점 단순해져 사리분별 능력을 상실하였다. 조직이 어떻게 후려쳐도 현대판 아큐²⁹⁹⁾처럼 ‘그럴 일이 있는가부다’, ‘내가 맞아줬으니 내가 이긴거나

299) 중국 소설가 노신의 소설 『아큐 정진』에 나오는 주인공. 신해혁명(1911) 직후 중국 사회를 살아간 중국 민중의 전형이자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다.

마찬가지다’는 식의 자위로 대충대충 넘어가다가 결국은 200~300만이 아사로 죽는 고난의 행군을 당하였다. 1990년대를 통과하는 ‘고난의 행군’에서 “여우와 승냥이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방한했던 북쪽 여성응원단의 김정일 현수막 사건이다. 남쪽 현지 주민들이 응원단 환영 의미로 김정일 현수막을 나무에 매달았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응원단 일행 중 한명이 그것을 보고 버스를 세우라 소리치고는 뛰어내렸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을 향해 “태양처럼 모셔야 할 우리의 장군님을 어떻게 나무에 내걸 수 있습니까”, “비오는데 우리 장군님 비를 맞히시면 안됩니다”며 오염하자 버스안의 남은 일행도 와르르 쏟아져 내려 울며불며 소동을 피웠다. 이 이상한 사건은 그전까지의 미녀응원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호의를 순식간에 역전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는, 200만 아사에도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유일사상체계 수립과 함께 등장한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구호를 1990년대 200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그 엄혹한 미공급 시기에도 유치원 탁아소 정문들에 그대로 버젓이 걸어놓고 있었다. 순종만이 각인되어 온 북한의 ‘배급제인들’, ‘조직생활 체제인들’의 전형적인 무기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그 구호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그랬다가 반동으로 몰려 개인이, 국가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랬다가 북한이 눈부시게 창공을 향해 비약할까봐라는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생활사회는 원하지 않는 주입식 학습을 강요하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들은 경청능력 및 믿음을 상실했다. 북한은 이

른바 ‘유일사상교양’의 목적 하에 주민은 원하지 않는 강연이나 학습, 영화, 선동들을 수 십년 동안 자행하여 온 결과 북한 주민들은 타인의 말에 염증부터 느끼고 상대를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는 그런 악습을 지닌 비사회적 존재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난해한 존재로 이질화되었다.

(4) 호상비판과 사상투쟁으로 내면세계의 실종과 상호 신뢰 상실

북한의 40여 년에 걸친 조직생활총화문화가 이뤄낸 부정적 성과 중의 하나는 조직생활자들에게서 내면세계의 실종을 이루어냈다는 데에 있다. 무수한 가시적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 사상투쟁 문화에 익숙해 온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스스로의 정신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가치부여를 하지 못한다. 보이는 데서만 그럴 듯하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다. 매사에 당장의 이익만 손해보지 않으면 그게 ‘현명한 처사’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좇게 되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을 떨어트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가적 신용도로 연결되어 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고 작은 제동기로 작동하게 된다.

아울러 조직생활문화인에게서 자주 보이는 부정적 현상의 하나가 ‘잔 피’, ‘잔 재간’ 등으로 표현되는 교활함이다. 이는 조직생활사회에서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기,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표리부동과 습관적인 말 바꾸기, 모함 당한 조직원을 서로 모르는 척하기, 상급자에게 필요 이상의 아침부리기, 수령에 대한 ‘허위보고’, 충성을 가장한 간부들의 자기 이익 챙기기 등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당과 대중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에서 서로가 건너설 수 없는 큰 금을 그어 놓았다.

(5) 비공식 관계의 만연

북한은 나라가 하나의 조직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짜여진 사회이다. 생산단위의 조직생활에 주거단위의 조직생활이 겹친 데다가 조직생활총화체계, 학습총화체계, 개인별 및 조직별 보고체계, 노력 및 재원동원체계로 전민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생활문화의 사회이다. 그 물샐 틈 없어 보이는 속에도 사람은 기계가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패거리’, ‘끼리끼리’, ‘알쌈’ 등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조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비공식사회이다. 여기서 ‘패거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소집단’을, ‘끼리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개인들 2~5명 정도의 그룹을 의미한다. ‘알쌈’은 흔히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가진 권력자나 부자들이 뽕뽕 뭉친 소집단을 가리킨다. 이는 북한에 널리 확산되어 있어 노동당의 전형적 투쟁대상인바 ‘분파적 행위’라고 지적 된다. 여기서 ‘알쌈’은 총알쌈지를 가리킨다. 것처럼 뻘뻘하고 촘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조직생활이 그토록 엄격한 북한의 조직생활사회에서 이와 같은 비공식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성분주의’라는 계급사회의 모순에 기초한 것이다. 주민성분제도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공식 리더로 선발되지 못하고, 일반 대중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이러한 잠재적 숨은 리더십들이 존재한다. 북한의 간부선발 원칙은 리더십에 의해서라기보다 인물 곱고 성분 좋다고 꽃다발조에 선발된 여성이 김일성에게 꽃다발 드린 동기로 당 학교 교육까지 받고 간부로 등용되는 식이다. 즉 북한의 당 간부가 노동당 간부사업에 의해 선발되어진다면 대중리더는 대중의 마음속 투표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진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당은 대중리더를 철저히 배척한다.³⁰⁰⁾ 당이 독점해야 하

300) 손혜민, “간부사업은 왜 대중형 리더를 배척하는가,” 『임진강』, 제18호 (2012), pp. 73~94.

고, 당만을 따라야 하는 민심이 당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대중리더를 당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전망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배척해야만 당의 이익이 보존된다는 생리가 당 내부에는 작동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최고의 특수 이익집단이다. 즉 자기들의 이익을 특권화하면서 그 유지를 위해 대중에 기생하며 그들의 지지와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을 위한 리더십은 당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다.

(6) 조직생활사회에 구현된 교회통치 원리

북한의 조직생활은 교회통치원리를 사회통치에 접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¹⁾ 모세의 10계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주말 예배는 주 생활총화로(중앙당, 문화예술부에서는 2일 생활총화), 하나님께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문화는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의 양성적 형식을 띤 생활총화로 버전이 바뀌었다. 또한 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와 상담역할은 당 비서가 수령의 사상, 당의 지시를 당원들에게 선전하고 그들의 상담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심지어 교회 성가대문화는 강연회 시작 전, 공장 기업소 선전대원들이 나와 대중 앞에 노래하

301) 김병로도 이미 유사한 논리를 전개했다.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전체주의론 중에는 전체주의 운동과 체제(즉 파시즘,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정치종교’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이 내포하는 내용은 북한체제를 분석하는 데, 그리고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주사파’ 운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의 기원, 활용 사례, 그리고 비판에 대해 Hans Maier, “Political Religion: a Concept and its Limitations,”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vol. 8, no. 1 (2007), pp. 5~16; Hans Maier, “Political Religions and their Images: Soviet Communism, Italian Fascism and German National Socialism,”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vol. 7, no. 3 (2006), pp. 267~281.

고 악기 연주하는 것으로까지 변화되었다. 교회의 십일조 개념의 원조인 교인 10명이 목회자 1명 먹여 살리기는 당 세포의 기본 단위를 10명으로 정해진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교회 십일조 문화는 당비(노임의 2%)를 당 조직에 내어 당원 250명 이상인 당 조직의 당 비서는 당비로 생활비를 충당 받도록 물이 되어 있는데서, 결국 당 비서들은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늘리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듯이 자기 당 조직 내 당원수를 늘리는 것, 즉 자기 당 조직 내 당원이 타 기관 당 조직으로 이동해가지 않게 하는 것에 사활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또 목사가 교인들의 영을 다루듯 당 비서는 당원들의 사상을 다루며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 노력하듯 당 비서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영도를 당원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목사가 설교할 때나 성도들이 타성도와의 논쟁이 벌어질 경우 성경구절을 자기 설교나 논리 정당화에 이용하는 교회문화는 생활 총화에서 자기비판을 하는 자가 서두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일성이나 김정일 말씀을 앉히는 것으로 자기비판의 근거를 취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교인들이 심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어려울 때 목사를 찾는 것은 북한의 당원 근로자들이 어려울 때 자기 직장 당 비서를 찾아가는 것과 너무 꼭 닮아 있다. 그리고 교회건설과 관리에 교인들이 지성을 다하는 문화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들에서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실〉, 〈사적비〉, 〈동상〉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그 관할 소속 당원들이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 신년 예배와 1월 1일 아침 제일먼저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 증정, 김일성 초상화 앞에 절 드리기는 그 본질이 비슷하다. 교인들이 성경책을 경건하게 대하는 문화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교시나 말씀집을 정중하게 대하며 함부로 찢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종교가 타종교를 배척하듯 사회가 하나의 거대종교체인 북한은 내부의 모든 종교를 말살시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는 싹이 하나라도 나타날세라 정치범죄화하여 세탁해내고 있다.

(7) 동원경제와 부정부패, 그리고 장마당

동원경제는 권력층에게는 부패와 ‘허위보고’의 온상이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난맥을 헤치고 살아남기 위한 온갖 비공식 행동을 부추기는 추동력이었다. 먼저 동원경제는 그 동원의 정치성으로 하여 기술경제적 평가를 배제한 것인 바, 이것의 맹점은 정치권력을 남용하여 불로소득이 기생하기에 동원경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수령의 현지도도로 영도되는 동원경제는 국가와 사회를 권력이 좀 먹도록 구조화했으며, 그 결과 빈부격차가 이미 1970~1980년대부터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1960년대 분배상황이었다. 우선 1958년 생산관계사회주의 개조 직후의 분배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불평등한 ‘2중 분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공식자료나 선전에 나오는 이른바 ‘평등’은 우월성 제도 중 기본인 전민배급제에만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래서인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2중 공급은 범죄”라는 국가의 계획적 분배원칙자체에 대하여 권력조차도 의문이 많았다. 수상인 김일성도 “시집간 며느리가 해산하기 위해 친정에 왔을 때”와 같은 경우 노출되는 배급제의 맹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주민 자체도 이러한 현실적 분배난문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면(顏面)’이라는 부정적 사취방법을 대안으로 자동 설치하였다. 대안체계의 후방공급 및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 체제 현실은 분배에서 오히려 계획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창궐시키는 소위 ‘복지제

도'의 온상으로, 기업소를 이익생산의 경제단위라기보다 '국가재산에 대한 집단적 절도(竊盜)·사취(私取)의 장(場)'으로 변질시켰다. 사실 홍길동의 이상촌 건설과 같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다 같이 골고루 사는' 사회경제란 실재 존재하기 힘들었다. 일찍이 지도간부용 10호 상점의 운영³⁰²⁾, 당 군 및 정부 관료들에 대하여 실시한 각종 소비품의 기관제 공급, 인테리를 위한 문화인 대우 제도 등은 그 산증거이다. 또한 중앙당, 무력성, 보위부, 보안성 등 중앙과 지방의 특별대우 기관들은 전민배급제도에서는 겉으로 동일해보였지만, 단위별 특례제도인 '보충미' 명목으로 육류, 기름, 채소, 기호품 및 공업품 등 다양한 우대공급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원리는 기관/기업소별로 후방공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대안체계에 있었다.

북한에서의 장마당은 동원경제가 내장하고 있는 자체 모순인 권력층의 부정부패 그리고 주민 측의 비공식 생존노력 조장이라는 추동력을 타고,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어 1970년대 후반에 전국적 확장에 도달하고 있었다.³⁰³⁾ 먼저 1960년대 북한의 장마당 수준은 다음과 같다. 1958년 협동화 및 사회주의 경제제도 수립으로 재래시장의 주체인 개인농, 도시소상인, 수공업자는 사회계급적으로 청산되었다. 당시 북한은 시장화 수준에서 기록적인 최저 상태에 이르렀지만, 장마당은 마치 잠복된 바이러스처럼 죽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전통적 장마당'이 당시 북한의 근대화 접근 수준에서 인류문화적으로 소멸될 문명의 씨앗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

302) 박사교수, '인민'적 명에 칭호자를 앞세우고 실체는 내각의 상이나 중앙당 부장 이상 간부에 대한 특별 공급소, 1960년대 당시 '10호 상점' 등으로 불리우며 보통강구역 (이후 외성구역, 외성구역이 없어지면서 중구역에 속함) 신원동에 자리 잡은 공급소, 공급대상 간부는 식모와 운전수, 가정교사 등 이른바 전근대적 '하인'을 데리고 있다가 가정혁명화와 그에 뒤이은 신격화 수령 제도 출현에 의해 제도적으로 소멸했다.

303) 이에 관하여, 림근오, "북조선의 장마당과 그 사회문화," 『임진강』, 제26호 (2016), pp. 6~20.

만 당시 장마당은 말 그대로 그 유전자나 겨우 유지될 최소규모였다. 도시의 편의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수매상점에서는 귀국자(유학생 및 귀국민)들이 국내에 반입한 외국제품이 약간 팔렸고, 농촌의 협동농장이 도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매점에 채소를 팔거나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에 설치된 각 도 직매점 매장을 통해 지방에서 만들어진 평양상품을 파는 정도가 당시 장마당의 걸모습이었다. 그런데 암시장으로 운영되는 장마당도 이 시기에 존재했다. 그런데 그 암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오히려 배급 및 공급, 국영상점과 대안체계에서 권력자와 취급자들의 위법적 절도 행위에 의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암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이었는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배급제가 다시금 난관에 조우하면서 장마당이 기지개를 펴는 활성화시기에 들어섰다. 전국의 도시 ‘로사(勞事)세대’에게는 15일 식량배급에서 2일분 자원수매가 사상적으로 ‘장려’되었다. 장마당 활성화의 객관적 이유로는 학령 인구 압, 1969년 평양시 수해, 병진노선, 구소련의 차관상환,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귀국자 공동체의 시장자극 등을 들 수 있다. 벌써 1970년대에는 나날이 확대되는 농민시장의 억제를 위한 국가적 강력조치들도 발동되었다.³⁰⁴⁾ 하지만 1970년대 말에는 장마당 바이러스가 북한에 창궐하여 드디어 계획경제 밖 초특권 외화벌이 진두를 의사당과 중앙당이 독점적으로 점유한다.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 배급제에 대해 북한의 수령과 그 후계자가 가장 불만이 많았고 따라서 시장거래에의 유혹에 가장 취약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 시장화(장마당+외화벌이)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304) 당시 평양시에는 송신시장, 신의주시에는 채하시장, 함흥시에는 고역시장, 청진시에는 청암시장이 가장 유명했다.

나. 조직생활사회 문화의 역사적 변천

여기서 채택한 신-전체주의론의 핵심 중의 하나는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지의 강도와 실현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시기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주의 ‘총체적 통제’ 프로젝트가 의도한 바와 그러한 프로젝트 실천에 의해 파생된 결과 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러한 프로젝트가 너무 야심차서 실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며, 또한 그 프로젝트가 대상하는 주민과 조직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에 전체주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을 마치 로봇 또는 톱니처럼 만들어 중앙이 이끄는 바에 사상적으로 실천상에서 완전하게 동조하고 실현하는 상태이지만, 실제 사람들은 그와는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여준다.

앞에서 서술한 조직생활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이와 관련한 보다 일반론을 전개했다면, 여기서는 시대별 변화가 그 주제이다. 서술하는 방식은 ‘총체적 통제’에의 의지의 수준과 양태에 따라 시대구분을 하고, 각 시대에 관한 개괄적 특징을 서술한 다음, 탈북민인 필자의 기억과 주변 탈북민의 기억을 종합하여, 각 시기별 조직생활 문화 및 개인과 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지의 강도와 그 실현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였다. 여기서의 주된 관심은 이 시기와 함께 그 이후 시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지와 실현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주민과 사회가 그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로부터 결과된 사회 양상은 어떠했는가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1970년대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시대구분과 각 시대마다 주요한 특징에 대해 서술했다. 우선 이를 간략

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시기로 1945~1958/1961년의 시기가 전체주의적 ‘총체적 통제’의 북한식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시기로, 제2시기인 1961~1974년을 그 북한식 하부구조가 북한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숙해 가는 시기로, 제3시기는 1974~1980년대 중반까지로, 여러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총체적 통제’의 의도가 현저히 강해지고 이에 맞게 제도와 운영이 수정되는 시기 또는 북한식으로 가장 강력한 ‘총체적 통제’를 구축한 바의 조직생활사회가 정착한 시기로 설정했다.

여기서의 서술은 제3시기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제4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으로 조직생활사회가 이완되고 그 제도와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던 시기이다. 제5시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3년에 이르는 시기로, 조직생활사회의 기본 하부구조의 일부가 붕괴하고 조직생활이 형식화되는 가운데 선군정치 하에서 ‘비사회주의 투쟁’이 본격 전개되던 시기이다. 제6시기는 2013년부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은 자신이 추구할 미래전략을 대체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국가-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2013년에 ‘당의 유일영도 10대 원칙’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도 ‘총체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제3시기 (1974~1980년대 중반)

제3시기는 1974~1980년대 중반의 시기이다. ‘총체적 통제’의 강화 의지는 1970년대 초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의 후계자 개인 권력 강화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실천되었다. 이 시기는 남북 체제 대결이 새롭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 ‘총체적

통제' 강화와 관련 특히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제정 그리고 조직생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본격적 남북경쟁의 시작, 70일 전투와 같은 극단적 동원경제 발동, 북한이 당시 당면했던 여러 국내 문제,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총괄해야 했던 김정일 후계 체제의 출범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소조를 기초로 한 정치학습,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의 정치 의례는 문화대혁명기(1966~1968)에 극단으로 치달았다가, 이후 말 그대로 일상적 의례로 자리잡았던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1970년대 초중반부터 김정일의 주도 하에 현격히 강화되고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74년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였고 그에 부합하게 여러 제도가 건설되고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전체주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조치와 양상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소설체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북한에서 조직생활문화의 형성은 우선 <개인리기주의>의 명목 하에 개인집들의 부업거리를 거두어갔다. 가구들에서 꾸바닭, 토종닭 등 수십마리의 닭을 치고 송아지만한 돼지를 키우고 토끼와 염소를 기르는데다 집집의 주부들이 해당 공장에서 갖가지 일감 즉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의 사례를 보면 칼라수지줄로 목욕주머니 및 과일주머니 뜨기, 폐다이아에서 피대줄 및 고무줄 뽑기 등의 일감을 가져와 아이들과 달라붙어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일이오칠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배급(식량, 공업품, 식료품)품 구매 등 가계 살림에 보태던 부업문화(副業文化)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당시엔 가구의 돈보다 상점의 상품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도와 고사리같은 저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 국영 공업품 상점 일용품매대에 진열되는 것을 보며 느끼던 뿌듯함을 잃어버렸다. 부업으로 번 그 푼돈으로 거리나 매대에서 파는 복숭아며 토마

토며 참외 등을 사다 먹곤 하던 그 만족감도 잃어버렸다. 처녀들은 일하고 남은 시간에 또래들끼리 이집 저집에 모여 코바늘, 뜨개바늘로 각종 이불보, 문보, 옷장보 식탁보 등등의 뜨개품을 떠내며 님맞이 꿈을 꾸던 그 애뜻한 정서를 잃어버렸다. 풍성하던 상점의 물건들은 급기야 줄어들어 돈만 내면 살 수 있었던 뜨개뜨기용 타래실 등 모든 일용잡화들, 간장 된장을 비롯한 일체 식료품들은 세대별로 공급하는 세대공급용으로 변했거나 그 공급량이 줄었고 조직생활문화는 뜨개바늘을 들 여유시간을 처녀들에게서 앗아가버렸다. 먹거리를 오직 식량배급에 의존하면서 집집의 식생활은 눈에 띄게 피폐해져 문화생활은 빛을 잃은채 아이들은 오로지 먹는데만 사고를 치중하고 어른들은 점점 사나워져 갔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으로 외국 및 력사 책들을 일체 회수하여 불사르는 분서갱유 사건이 년례행사처럼 해마다 일면서 읽을 거리를 잃게 된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도 남을 비난하거나 흥 보기, 상소리 등의 주제들로 단순해졌다. 외국어로 된 책을 읽거나 글줄이 아래로 내려 찍힌 출판물을 공개적 장소에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마나! 저 사람 반동이다!”고 소스라쳐 놀라며 떠들어대기가 일쑤였다. 통행증제도로 이동의 자유까지 상실하면서 볼거리를 잃게 된 사람들은 그 대화 또한 “누가 누구와 부화(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되던 시기 김일성은 식과 성으로 인민들 통제하였다)해서 떨어졌대!”, “○○네 엄마가 코찌보 낳았대!” “학교선생 ○○○는 아이 못낳는 고자래” 등으로 점점 편협해져 갔다. 2·8절 인민군절이면 인민군대에 위문편지 쓰기와 군부대 위문공연 등으로 바빴던 전사회의 ‘인민군대 원호’문화는 군벌주의 청산과 함께 인민군창건절이 4·25로 옮기면서 퇴색되었고 전쟁시기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빨찌산들의 온갖 무훈담들은 그 주인공들이 ‘종파’와 련결되거나 그 참가자들이 <부화>건으로 간부직에서 내리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잠해졌다.

1972년에 들어서며 조선의 모든 당조직에서는 전체 당원들의 당

중 교부가, 사회전반에서는 주민등록제가 벌어져 사회 전반에 숙청, 추방, 소개 공포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뒤이어 김일성탄생 60돐인 4·15를 맞으며 조선의 도시와 농촌, 마을들에서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꽃다발을 손에 손에 들고 동원된 속에 1~5층의 건물로 지어진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소’ 및 ‘○○도 ○○군 ○○리 당력사연구소’ 개관식과 네거리 중심에 설치한 ‘김일성동지 현지도 사적비’ 제막식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학교, 대학, 병원, 기관 중앙현관들에는 김일성의 립상화(후에 석고상으로 교체 되었으나 석고상은 연구실에만 앉히려는 지시에 따라 다시 립상화로 바뀜)가 걸리고 특히 학교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날 때 반드시 경례를 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립상화 앞에는 규찰대가 서 있다가 인사 안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은 이름을 적어 각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주로 급담임)에 통보하였다. 그 해 말, 로동당 총비서인 김일성이 공화국 주석으로 되면서 집집의 가정들에 김일성초상화 모시라는 지시와 함께 초상화 틀의 규격이 하달되더니 며칠 안지나 김일성 초상과 액자를 든 일꾼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아래방(당시 조선의 주택구조는 아래방과 웃방으로 방이 두개였는데 아래방, 즉 큰방에만 초상화를 걸게 하였다) 아래목 벽우에 그것을 걸어주었다. ‘수령님’을 늘 집에 모시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김일성이 쳐다보는 앞에서 밥을 먹고 이불을 펴고 잠을 잔다는데 대해 어색해 하더니 다들 곧 익숙해져 버렸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아닐론세타며 데트론 교복이며 학생복을 정가에 공급하여 학생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더니 이번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가슴에 다는 원형 김일성초상휘장을 내주었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형태인데 동근 플라스틱 판에 측면상이 금색으로 프레스된 직경 45밀리미터 정도 크기의 것이었다. 만수대창작사 등 “1호작품” 제작시스템도 없는 때여서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던 자그마한 공예품공장에서 쉽게 만든 것이었다. 학생들은 가슴에 단 초상휘장을 북한식 뿌로찌 정도로 여기며 신기해하였다. 넘어져서 김일성 얼굴에 흠이 가는 현상

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나왔으나 “너 그거 일없을 가?”하는 정도였다. 또 초상휘장을 잃어버린 학생에 대해서는 “할수 없지 뭐”하는 식이었다. 즉 전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달도록 강요하는 등 초상이 정치사상 꺼리로까지는 아직 변질 안되었다. 1974년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기관, 기업소 초급당단위(대학은 학부)에 일종의 모금(그 중 제일 값 나가는 것이 외화 상점에서 파는 나이론 레스 카텐이었는데 귀국자들이 기증하였다)으로 연구실을 꾸리고 이 연구실에는 관리인 직제가 생겨났다. 관리인은 성분 좋은 미모의 녀인들이었다. 연구실은 점점 이런 녀인들과 당일군의 불륜관계 장소로 공인되어갔다. 그런 녀성들은 로력동원에서 제외받고 자유주의를 허락받았으며 우대물자(각 기관이 외화벌이를 했다)를 공급받는가 하면 당에 입당도 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때 또한 <4·15벽보(경축판)발간> 문화가 생겨나 4·15나 큰 명절만 되면 각양각색의 화려한 경축판들이 학교와 기관 정문앞을 도배하였다.

이 과정에 김일성과 그 일가는 물론 항일빨찌산과 그 집안들은 자연스럽게 조선 최고의 계급이 되었고 성분 좋은 자와 나쁜자, 평양에 사는 자와 아닌자, 인테리와 로동자, 농민, 그리고 간부 사이에는 물과 기름처럼 단절에 가까운 격리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조선사회는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 보다는 포퓰리즘적 리념, 리상인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인민적 카리스마 지위를 획득한 김일성과 그 빨찌산파가 승자로 되어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목표로 조선 사회를 리드해나가게 된다.

이런 환경하에서 그전까지 연말에 한번 진행되군 했다는 <청산리총화> 명목의 생활총화는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당 및 그 외곽단체 조직들에서(중학교 사로청 및 소년단조직까지 포함) 일에 한번씩 의례성이 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총회 참석도 아직은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더니 2일 및 주 생활총화로 바뀌면서 사회가 부쩍 경직되어 졌다. 그 여파는 중학교 소년단 조직에도 미쳐 들었다. 필자가 중학교 2학년(1973년)때 학

생들은 아직 생활총화를 분단총회와 헛갈려 했다. 담임선생 조차도 그 구별을 어려워하는 듯 하였다. 첫 생활총화는 분단총회 형식을 띠고 시작 되었는데 “이것은 분단총회가 아니라 생활총회이며 자기 비판과 호상비판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는 담임선생의 설명에 대답한 녀학생 한명이 교탁앞에 나가 서서 자기비판 토론을 하려 들었다. 그런 그에게 담임선생이 “교탁앞에 서지 말고 그냥 학급 학생들을 마주해 서서 자기비판하면 하면 됩니다”고 정정시켜주었다. 그 학생이 머리를 굽적거리며 교탁에서 물러나와 학생들을 마주해 섰다. 그러자 좌석에서 “와하하!”하는 웃음소리가 났다. 전에 없던 형식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분단위원장님이 학급 학생들을 마주하여 놓은 책상(회의 주석단)위에 분단총회 노트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다. 담임선생은 학생들이 앉은 책상 옆에 서서 앞에 나간 학생을 바라보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띠운 그 녀학생이 자기비판 토론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오려 하자 담임은 “다른 학생 비판도 하고 들어가”라고 지적해 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이 빨갱게 상기되어 “xx동무는 수업시간에 자꾸 옆동무와 말하는데 이런 현상 고치십시오”하고 들어오니 담임이 박수를 쳐주었다. 학생들은 선생을 따라 박수를 치면서 ‘아, 이렇게 생활총회이구나’하고 고개들을 끄덕이었다. 그 다음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소년단 조직생활총화가 시작되었다. 김일성의 교시를 먼저 앉히고 자기비판을 한 후 결함이 있는 학생 호상비판을 무조건 하여야 하였다.

이 무렵 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이 끝나고 총회까지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성장군의 노래”,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노래”, “대를 이어 끝까지 따르십시오” 등의 내곡을 다 부르고서야 하교를 하라는 지시가 추가되었다. 해 짧은 겨울에 수업 끝나고 총회 마치고 노래까지 부르려면 낡은 건물이라 전기시설이 미비한 교실 안은 먹물을 뿌린듯 캄캄해졌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습장 뒷페이지를 찢어 불붙

혀 그것을 핏불처럼 쳐들고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종이는 금방 불에 타 버리고 그 재먼지는 책상위에 떨어져 여기저기서 소동이 일어나곤 했는데 노래를 하는지 볼놀이를 하는지 교실은 잠깐사이에 이수라장판으로 화하기 일쑤였다. 그러더니 얼마 안가 하교전에 노래부르는 절차는 없애라는 학교 당국의 지시가 내려와 노래부름 시간은 학교일과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어떤 충성심 높은 식료상점 매장에는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란”, “전당의 주체사상화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란”, “수령에 대한 신격화란” 등의 질문과 간단한 대답을 붉은색바탕의 마분지 쪽지에 흰색 붓글씨로 써서 상품설명서 마냥 스무곳도 넘는 곳에 걸어놓아 마치 그 모습이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는 새로운 후계자가 일쿠는 신조직생활문화의 강한 기운을 온 몸으로 뚜렷히 느끼게 하였다. 사람들 내면의 욕구에 의해 하나하나 형성되어오던 사회문화는 이제 그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오로지 상부가 내려먹이는 신조직생활문화를 받아먹기만 하는 쪽으로 급선회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이 발표되고 수령 신격화의 봄이 전국에 일어나면서 대중의 눈초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다. 말 그대로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당의 유일사상에 한치라도 드팀 있으면 보고부터 하는 형국이 펼쳐진 것이었다. 김일성의 사진이 찍힌 신문이나 도서는 한 점도 훼손해서는 안되었다. 학교와 사무실에 모신 김일성초상화는 <정성도구>가 든 <충성함>(처음엔 미닫이식 목재제품으로 만들게 했다가 유리장식함으로 바꾸게 함)을 교탁이나 책상 우에 갖춰놓고 그야말로 매일아침 닦지 않으면 안되는 아니, 서로 경쟁적으로 닦으려드는 분위기였다. 물론 가정의 초상화 모심상태도 수시로 검열하여 먼지가 나오면 그 세대주는 직장 조직생활총회에서 비판대상이 되는 판이었다. 개인과 가정들은 점점 프라이버시를 잃어갔다.

출판물에서 김일성 활자는 특별히 크게, 김일성 이름자 앞에는 “국제공산주의 노동운동과 세계혁명의 탈월한 령도자이시며 4천만

조선의 어버이이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등의 긴 수식어가 경쟁적으로 붙기 시작하였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연구론문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개인영웅주의로 배타되어 ‘집체작’으로 발표되었고 저자가 원고료를 요구하면 소부르조아 현상으로 사상투쟁무대에 올라 비판받는 데로 경사해갔다. 평양시의 어느 중앙기관 책임자는 1월1일 아침,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만수대 김일성 동상앞에 충성의 설 인사 드리러 꽃바구니 들고 올라갔는데 그들을 동상앞에 정렬시키고 그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 책임자는 생활총화에서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그날 밤, 그와 그의 가족은 쥐도새도 모르게 수용소행을 당하였다. 1970년대의 새로운 사상투쟁문화 - 조직생활문화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다. 조선 주민들 속에는 뇌출혈, 뇌혈전, 심근경색 등 순환기 질병과 위염, 위 및 십이지장 궤양 등 소화기 질병이 크게 유행되었다. 외국 류학갔던 조선 남성들과 결혼하여 조선에 와 살던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리혼당하고 자기 모국으로 쫓겨갔다. 남편이 유일사상체계에 걸려 정치범수용소행을 당하면서 강제 리혼 당한 어떤 여성은 정신이상이가 되어 남편과 아이들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한달이 넘게 길거리를 헤메었는데 이 소문이 상부에 보고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치범수용소행 남자의 처가 리혼을 못하게 강제하였다.

이 지구상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인간이 누리던 원초적 권리 들인 개인의 주거와 이동, 결혼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조선 사회는 러시아 시인 뿌쉬킨이 말한 “노예와 아부자, 그들만이 있는 나라엔 재난이 있으리라!”는 상태로 급격히 기울어져 갔다.

그런 와중에 그 철석 같은 신념의 소유자일 듯 하던 후계자의 권위 추락 사건이 필자가 공부하던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중학교에서 발생하였다. 해주시 사범대학 졸업반학생들로 이루어진 “3대혁명 소조” 5~6명이 우르르 내려와 6개월간 학교에 머물렀는데 학교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국가검찰의 검열이라도 받는듯한 분위기였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이면 교장을 앞세운 20여명의 선생님이 정문에 우르르 밀려나와 학생들의 등교를 관찰하였다. 담임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그 어느 때보다 반들반들하게 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학생들이 학교 복도를 걸을 때는 조심히 걷고 선생님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하게 하였다. 학생들끼리의 다툼은 더욱더 안되었다. 3대혁명소조가 참관하는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을 잘 하도록 사전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기말도 학과경연 때도 아닌데 갑자기 기본과목 시험을 치르니 공부를 잘 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내주었다. 그리고 제정된 날짜에 시험을 치러 각 과목 선생님이 담당시험 시간마다 교실에 들어왔다. 첫 시험에 앞서 시험담당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번 시험지는 특별히 글씨를 곱게 깨끗하게 써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물론 덤비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본 후 답을 쓰라는 요령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의 여느때 없는 그 모습은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에게 모범 답안지를 써주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학생들에게는 전달되어졌다.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학급학생 53명의 시험지 중 20개를 고르더니 곧 들어온 소조원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3대혁명소조기간 학생들의 성적 향상 효과를 이 시험지를 통해 당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당국과 3대혁명소조, 학생들이 당 - 즉 새로운 후계자에게 하는 허위보고에 담합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아직 빛도 채 드러내지 못한 새 후계자의 권위도 함께 추락시키는 미묘한 심리의 싹을 학생들 마음속에 심어놓았다. 몇 개월 지나 3대혁명소조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학교에 선생으로 발령되어 왔는데 그 평범함이 학생들을 다시한번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후계자의 권위 추락은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때도 드러났는 바 당시에 진행되었던 평양시 중앙기관의 지방소개가 몇 년 안가 도루묵이 되고 만 것이었다. 국가계획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중앙기관들을 내보낼 때는 그렇게 칼로 자르듯 무자

비하게 처리했는데 몇 년 안가 지방에 나갔던 그 기관들이 거의가 제자리에 들어와 버린 것이었다. “네가 사기 치니 나도 사기를 친다”는 식으로 이 현상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었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의 후계자 등극과 함께 공포된, 그때부터 북한 최고의 룰이 되어 사회의 유일사상체계 질서 확립에 기여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조직생활사회의 기준으로 되는 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가장 큰 해독성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반인민성에 있다. 원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왜냐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령도 마찬가지이다. 수령은 인민이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는데다 또한 수령은 인민의 투표에 의해 추천이 된다. 물론 조선은 인민의 이 권리가 당국에 의해 애초부터 형해화 되었다. 원래 인민은 갑이고 수령이 을의 관계라야 정상적이다. 그런데 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그 대자연의 리치를 거슬러 오히려 조선의 모든 아래사람들, 인민들이 그들의 최고 위사람, 수령을 “충성 다해 모셔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엄명하였다. 이런 억지법이 최고의 룰로써 존재하는 이상 조선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일어서는 일은 아주 불가능하다.

또한 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조선의 조직생활사회가 조직생활총화를 통한 ‘사상투쟁체계’(3장 5절, 4장 8~10절, 5장 6절, 6장 3,5절, 7장 2절), ‘김일성의 혁명사상 학습체계’(4장 4~5절), ‘당적 보고체계’(9장 9절)로 특징지어지는데그 반동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의 조직생활사회는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학습’의 개념을 정신 말살 기구로 도용, 수령의 소통용 보고체계는 수령 용위 용도로 변질시켰다. 더불어 조선사람들의

상대의 말 경청 능력까지 하락시켰다. 또 ‘사상투쟁’이란 말은 너무 위험한 바,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이고 이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하는 분야인데 여기에 <투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사람 잡이에 리용될 위험성이 정말 뽕후하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그 수령과 후계자의 사망으로 인해 자기 수명을 다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2013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었다. 무형 ‘사상’을 유형의 ‘령도’로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의 일보 전진은 이룩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10대 원칙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최고 집행자는 수령이 아니라 그 후계자(김정일)로 된다. 따라서 후계자가 없는 김정은 시대에는 10대 원칙 최고 집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처럼 김정은의 후계자가 없으면 ‘수령’인 김정은이 제 밥을 스스로 차려 먹어야 하는, 정치적 푸대접을 자업자득하게 되는 정치적 불안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을 이른바 영생하는 ‘수령’, 김정은을 10대 원칙 최고집행자로 구조 지으려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전당, 전민, 전군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그 신비주의와 비합리성(현실에서는 김정은이 수령의 위치이나 10대 원칙상에서는 최고집행자, 즉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모순)이 초래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제4시기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제4시기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의 시기이다. 1979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중국에서는 앞서 모택동 시대에 수립되었던 ‘총체적 통제’의 체계와 정책이 점진적으로 해체 과정

을 밟아가게 되었다. 북한의 1980년대는 1980년 6차 당 대회가 내걸었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했고 조직생활 투쟁도 여기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공식 노력과 함께 이면에서는 외화벌이 운동의 확산, 충성의 선물운동의 전 국민적 확대가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조직생활에서는 충성 및 군중 외화벌이 할당량 달성을 목표로하는 관리통제가 전개되었다. 다른 편에서는 해외동포 방문단 사업 그리고 해외동포 투자를 중심으로 한 합작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교포 출신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류가 증가했다. 다른 편에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를 통해, 조직생활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통제가 시도되었다. 1980년대 중반 중국과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영향 하에서 구 사회주의 시장으로부터의 고립이 증가했고, 자재와 동력 등의 전면부족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경제체제(독립채산제 실시)와 연합기업소 체계의 도입, 8·3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합영법 제정, 새로운 출퇴근 제도 실시, 교차전력소비체제 등 적응조치가 있었다. 또한 수재교육이 부활되고 이시기부터 이미 컴퓨터 인재 육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또는 1988년부터 조직생활을 비롯하여 ‘총체적 통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³⁰⁵⁾ 그러던 중 조직생활체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난의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급속하게 형해화했다. 이는 ‘총체적 통제’ 시도의 완화를 의미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 시도가 완화되거나 해체되는 이유가 달랐다.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은 정책의지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총체적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총체적 통제’의 약화 또는 붕괴는 정

305) 이우영, 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pp. 130~140.

치적 의도의 문제였다기보다는 능력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총체적 통제’와 관련한 의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특히 경제난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지탱하고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총체적 통제’가 완화되었거나 붕괴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체주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조치와 양상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소설체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70년대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문화 형성기를 거치면서 성인 조직은 물론 중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에서까지도 생활총화를 하게 되었다. 또한 집단체조 훈련을 하다 쉬는 틈일지라도 토요일이면 운동장 한 구석에 초급단체(한 개 학급)가 모여앉아 사로청 초급단체위원장의 사회하에 담임선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한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생활총화가 진행되곤 하였다. 학급 인원이 많다면 그 주에 결함이 많았던 학생들부터 일어나 자기 비판을 하고 그 학생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생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 대해 비판을 하는 식이었다. 이상하게도 생활총화는 전번에 주요 비판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이 다음에도 또 기본 비판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생활총화는 자칫하면 마녀사냥격으로 변질될수 있는 우려마저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김책공대나 남성비율이 높은 대학들에서는 생활총화가 제대군인 남학생들의 자기들 말을 잘 안듣는 녀학생 공격용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사회는 또한 매해 정초에는 김일성의 신년사학습, 상하반년에는 전체 당원 근로자 문답식학습경연, 매주 월요일은 당원근로자학습반, 수요일은 전체 종업원 강연, 토요일은 간부학습반 운영, 매일 아침 신문독보회, 저녁에는 하루 총화 그리고 자체 김일성, 김정일의 로작발췌학습,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발췌, 김정일 덕성실기 발췌, 금요일은 전체 사무원들의 금요일로동 등으로 조직생활문화의 시스템이 짜여져가고 있었다. 1970년대를 걸치며 조직생활문화가

조선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1982년 3월 31일(김정일 논문 거의가 흡수의 날짜들에 발표된 점은 매우 흥미롭다) 김정일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나오면서 조선의 조직생활사회는 다시 한번 요동 치였다. 전국의 기관기업소, 공장, 농촌, 대학, 학교 등 조선의 모든 단위에서는 일제히 주체사상학습에 진입한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이 로작과 관련한 전국 당원근로자들의 ‘주체사상 학습제강’, ‘주체사상 문답식학습제강’을 출판하였다. 온 나라의 당원근로자학습반, 토요일간부학습반에서 주체사상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기관들에서는 아침 첫 출근시간 종업원들을 회의실에 전부 모이게 하고 초급당비서가 미리 준비시킨 기관의 로당원을 연락 앞으로 불러내어 한페이지 정도의 주체사상 문답식학습문제를 대중 앞에 완전 시범통달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다들 이 사람처럼 공부하라”고 못박는 당비서의 말로 아침 조회는 끝났다. 모였다 헤어지는 시간은 25분도 안 걸렸다.

이런 식의 비상 아침조회가 3~5일 정도 반복되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종업원들, 특히 인테리들은 별동지 쭈셔놓은 것처럼 웅성거렸다. 빼도박도 못하고 끌려들어 다들 공부 해야 할 판이었다. 게다가 다행인 것이 지금까지 읽을거리가 특별히 없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뭔가 사회적 추동력에 대한 기대마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새로운 개념들, 단도직입적이고 로골적인 논법들, 철학적 학문이 소수에게 독점된 상태에서 다수는 들어본 적 없는 정신령역의 언어들, 특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와 같은 애매한 주장은 뭔가 그럴 듯 하긴 한데 보위부의 눈도 눈이지만 개인적으로 파고들만한 관련 저서도 없는데다 논리의 복사와 빈틈을 찾아내어 보완하려드는 지적 의욕을 사회는 이미 잃은지 오래다. 따라서 이 김정일 논문을 두고 지식인들의 저변을 공통적으로 싸고 도는 무의식적 사고는 “여기에 한자도 의문을 달아서는 안된다. 어쨌든 새로운 물건이 들이닥쳤으니 맛이랴도 보

자”는 식이었다.

한동안 사회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논문에 대한 열기는 2~3년쯤 지나면서 식어버렸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기대했던, 이 논문으로 인한 사회발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요인은 김일성이 김정일, 김평일 두 예정 후계자 중 실질적 힘을 잃은 김평일을 1984년 8월에 와서 완전 포기한데다 한때 김일성 후계자로 내정되어 전후 쏘련 교육까지 받고 온 김영주가 ‘갑산파’ 관여 건에 1974년 남북적십자회담 실패의 책임까지 떠맡으며 조직지도부장직에서 철직되자 “니네 부자가 다 해먹으라, 난 형도 친척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정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데 있었다. 지금껏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경쟁세력을 꺼꾸러 뜨리며 김일성을 만족시켜 유일 후계자로 되기 위해 전력을 다 해온 김정일이 그 동력을 잃은 것이었다. 1982년 김일성 탄생 70돐 기념 충성의 선물운동으로 시작한 전국 도처의 혁명사적지 건설, 특각 건설들은 점차 간부들의 개인집 마련운동으로 변질되었고 제7차 당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김일성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숨은영웅’ 신화는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른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져 갔다.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건설이라며 김일성이 호언장담하고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순천비날론공장,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등은 김정일의 ‘김일성 구세력 약세화’ 물밑 작전하에 소리없이 잦아들고 조선 사회는 더 이상의 성장동력에 대한 인민의 기대를 잃어갔다. 하지만 조선의 출판물을 도배하는 주체사상기념탑건설, 개선문건설, 왕재산혁명사적지 건설, 삼지연혁명사적지 건설 등 전국의 대기념비건설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도”에 의해 한건도 실수 없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갔다.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더 이상의 사회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생활총화제도의 강도도 점차 느

스해져 갔다. 주 생활총화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쌓여 있다는 비판이 주 메뉴로 등장하였고 김일성 사진이 든 로동신문을 옷장에 구겨넣는데 대해 ‘응당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여겼다. 새집 벽에 도배할 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초벌도배를 하는데 대해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는 배짱이었다. 더 심한 경우는 화장실 휴지가 없자 김일성 선집에서 사진만 뜯어내 불태우고 나머지 종이는 반절로 잘라 화장지로 쓰는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생활총화의 자기비판 주제로 절대 올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올리는 것이 머저리라는 암묵적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였다. 또 호상비판은 받는자가 머저리라며 비판받은 자는 다음번 생활총화에서 보복성비판을 거의가 해대군 하는 통에 호상비판도 점점 두리뭇실하고 형식적으로 되어져 갔다. 생활총화는 사상투쟁 보다는 회수 채우기용도로 그 질이 희석되어져 갔다.

이런 속에 1980년대 후반 사로청에서는 한참 생기발랄한 청년들에게 주 생활총화는 너무 잦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로청원들의 주 생활총화가 월 생활총화로 이행되었다. 청년들은 “야, 살 것 같다”, “월 생활총화인데도 너무 빨리 돌아온다!”며 월에 한번인 생활총화에 대해서나마 대환성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로당원들이 불만이 장관이었다. “아니, 자유주의 분자들인 사로청원들 너네가 생활총화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월에 한번씩만 하면 돼?” 그들은 정말로 사로청원들의 월 생활총화제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립장이었다. 아마 이런 당원들의 신소에 의해서인지 5~6개월 정도 지나자 사로청의 월 생활총화제도는 주 생활총화제도로 도루묵이 되었다. 또 어느 해 겨울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까”는 김정일의 방침이 떨어져 기업소 청년들은 일을 한 시간 일찍 필하고 기업소 회의실에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내주는 간식을 먹으며 그날 저녁을 즐긴적이 있었다. 회의실 무대 아래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꽃전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행

사가 시작되기 전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 단지 김정일 말씀 전달이 전부였다. 청년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처음 듣는지라 ‘아, 크리스마스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춤추는 명절인가부다’며 무작정 즐기는 모양새였다. 또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 김일성에게 “김정숙동지를 대신하여 진달래꽃을 드립니다”고 할 정도로 김일성에게 정이 들었던 독일 녀류작가 루이즈 린저의 비판으로 1960년대에 번역되었던 세계문학들, 외국소설들이 해금되면서 레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니나』, 『부활』, 미하일 솔로호브의 『고요한 돈』과 같은 명작들, 세계문학작품들이 재번역되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또 중앙방송TV에서 토요일 저녁 시간, 일요일 하루종일 외국영화를 방영하는 <만수대>채널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는 외국책이나 밑으로 글이 내려 썩어진 책을 들고 다녀도 마음 놓을 만한 환경이 형성되었다. 또 1980년대 하반기부터 4·15문학창작단 자료실에서는 세계의 명작동화 170여편을 번역하여 시리즈로 묶어 김정일 명의로 전국의 학교들에 3~5부씩 선물로 보내는 보내는 쾌거도 이루어 내었다. 아직 지방까지는 깊이 미치지 못하였지만 평양시에서부터 사회에 불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1980년대를 장식한 1989년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 축전은 이런 환경에 있던 조선, 특히 평양시 청년들을 ‘날라리’로 변질시켜버렸다. 13차 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던 서울 외국어대학 불어과 3학년 림수경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원고 한장 없이 자유자재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린 뭐야?” “우린 재와 같은 또래인데, 같은 대학생인데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우린 왜 죄지은 놈처럼 주눅이 폭 들어있는거야?”며 스스로에 대해 분개해 하였다. 그러더니 림수경이 돌아가자 바람으로 대학생들은 가는 곳마다 록음기를 켜놓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춰댔다. 한번은 평양시 대학생들이 금강산 견학가는 길에 평양에서 하던 방식대로 휴식 때마다 록음기를 켜놓고 춤을 추었는데 지방당에서 중앙당에 곧바로 신

소 올라갔다. “평양시 ○○대학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와 록음기 켜 놓고 음악에 맞춰 춤추었다, 대학생들이 타락했다”는 신소를 받은 중앙당의 문제처리 방식이 재미있었다. 해당 대학 당비서에게 전화로 “앞으로는 지방에 내려갈 때 학생들이 춤추는 것을 주의하라”였다.

김일성의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 리상 및 통일단결의 목소리는 어느새부터인가 가늘어져 가고 있었다.

(3) 제5시기 (1990년대 중반~2012년)

제5시기는 1990년대 중반~2012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부분은 이른바 ‘선군정치’ 시기이다.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북한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었고, 동시에 정권의 사회 장악력 현저한 이완 상태가 발생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의 시기는 또한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시장이 급속하게 또는 완만하게 확장하던 시기이며, ‘비사투쟁’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부분은 당의 조직력에 기초한 조직생활보다는 군대의 강압, 또는 ‘비사투쟁’ 또는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의 경찰력 강화를 통해 정권의 사회 장악이 추구되었다.

이 시기의 전체주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조치와 양상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소설체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994년 7월, ‘주체사상의 창시자’ 김일성이 심장협심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와 동시에 1980년대 말 함경도 쪽에서 남하하여 내려오던 전민 식량배급 미공급제가 평양시내에 당도하였다. 김일성의 생전의 사회건설 리상이었던 “모든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의 꿈은 추풍락엽처럼 사라져 버렸다. 식량구입 명목하에 통행증 대신 술 담배만 있으면 전국을 오갈 수 있게 된 공안질서의 붕괴, 꼬체빅과 아사자의 폭발, 주민가옥의 식량을 노린 영실

이 공산군의 때없는 출몰 등은 그래도 형식만은 유지해온 조선의 조직생활총화제도를 사정없이 위협해 들었다. 식량배급을 못 주니 무소불위의 당은 힘이 빠졌다. 지난시기의 조직생활을 압박하던 위치에서 식량을 내줘야 하는 빗쟁이의 자리로 그 지위가 변한 것이었다. 식량 구입 목적의 려행 및 출장, 기아로 인한 탈진으로 생활총화나 간부 및 당원근로자학습, 강연회에 당원들이 결석해도 조직에서는 이를 사건화 할 엄두를 못냈다. 이러한 속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며 ‘주체사상’의 정립자 황장엽의 한국망명은 북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년로보장 나이가 되어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 들어온 기존 간부 출신의 로인들은 김일성, 김정일 선물 TV나 명함시계를 로골적으로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 그래도 해당 인민반 당세포 생활총화에서는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 현상을 놓고 사상투쟁을 벌이지 못하였다. 아무리 철용성 같은 사회주의 조직생활사회라 해도 백성의 입찰이라도 해주는 기반위에 서 있는 것이였음을, 김일성이 생전에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였음을 무너져가는 조선의 조직생활 사회는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금방 출산한 며느리를 천리 장사길에 내쫓는가 하면 젊은 며느리가 남편과 짜고들어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일이 평범한 일로 되어 버렸다. 여자들은 아이를 버리고 가정은 붕괴되고 식구들은 집을 팔고 맨바닥에 나앉았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몸을 팔수 있는 녀성들은 로골적으로 몸을 팔러 거리에 장마당에 나섰다. 조선의 두뇌들이 모인다는 평성 리과 대학 학생들은 빵 부풀림약 등 장마당의 수요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한편 장마당과 장마당 사이의 물품 되거리로 떼돈을 벌며 장사의 선봉대로 나섰다. 이들의 모습은 사회를 향해 장사를 부르짖는 나팔수를 련상시켰다. 남자대학생들 대부분은 공부보다 자전거 거간으로 돈을 버는 데 시간과 두뇌를 투자하였다. 사회의 머리 좋은 젊은 남성들은 거의 외화벌이 쪽으로 빠져버렸다. 시시각각으로 시

커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전사회적 기아 앞에 나라의 질서란 질서는 깡그리 무너지고 인격도 인성도 자취를 감추었다.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을 매 각자가 사활적 문제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1997년, 조선의 최고 수뇌부는 “이제 사상교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사태를 판단, 선언하였다. “공산주의란 말을 다 없애라!”는 김정일 지시가 전국에 하달되었다. 1990년대 이전 조선의 조직생활, 사회생활의 기본형식은 인민을 유한공간과 통제된 시간 속에서 생활하도록 질서화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한공간’은 몇 명, 혹은 몇 개 단위가 ‘창조’한 ‘긍정적 모범 따라배우기’ 등으로 벌어진 ‘전사회적 운동’을 의미하였다. 례를 들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내세운 <숨은영웅>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숨은 영웅’으로 내세워진 백설희, 박영철, 김상련, 장재산, 홍기복 등을 따라 배운 운동의 사회적 경제적 대량비는 1990년대 곤란과 혼란의 중요한 한가지원인으로 된다.

하지만 1990년대의 사회경제 혼란은 이 유한공간의 현실적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대신 주민의 생활을 생존경쟁이라는 무한공간 속에 강제 이동시켜 버리었다. 그 공간의 개인 시간도 국영기업과 조직이 돈 받고 허용하도록 압박하였다. 이 현실변화에 적응하여 조직생활은 그 기본형식을 <비사투쟁>으로 바꾸었다. 말하자면 통치 모델이 ‘긍정적 모범’으로부터 ‘공개처벌’로 이전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인명에 대한 총살과 사형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도처에서 찍하면 각종 명목하의 공개총살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선군시대 조직생활의 사상투쟁방식인 셈이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경제, 사회에서) 다 없애라, 공짜를 없애라!” 이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1997년 이후 조선 정권의 또 한 가지 중대로선이였다.

‘조직생활총화제도를 유지해야 하나,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하나,’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당국이 안게 된 거대 딜레마였다. 조직생활총화제도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마저 버리면 생활총화제도 외의 정치운영방식에 경험이 없는 조선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조직생활총화제도를 유지하자니 경제발전은 앞이 안보였다.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지도 오랜 터에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조선은 나라의 존속이 위태로웠다.

하여 그 출구를 모색하던 중 2000년 2월에 발표한 ‘새로운 경제조치’의 핵심이 녀성들은 혁명초소 단위의 조직생활제도에서 놓아 주어 장마당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인구의 절반인 녀성들, 비록 그들 속엔 당원이 얼마 없어 대부분이 당의 외곽단체 조직 소속원이긴 하였지만 혁명초소 단위의 조직생활총화제도에서 1차로 해방된 ‘자유인’들이었다. 아직 인민반조직생활체계가 그들을 노리고 있던데 어쨌든 둘 중 한 가지 사슬에서는 풀려난 셈이었다. 하지만 조직생활사회는 이를 ‘시간이 많음’으로 인식하고 온갖 노동력 및 자원 동원에 그들을 쓸 새없이 동원시키고 있다. 가두 녀맹조직 소속의 ‘자유인’ 녀성들은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해 내었다. 그들은 녀맹에서 조직하는 생활총화, 학습총화, 로력 및 자재동원 등의 온갖 조직생활문화를 상품화 해버리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돈으로 ‘모범 녀맹원’의 타이틀을 사고 돈으로 장사활동에 필요한 조직의 권력도 매수해버렸다. 보안원이고 보위원이고 당비서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한 경우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없이 체득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었다.

게다가 2000년전 까지만 해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개인기업 운영이 거의 합법화 되어 주민들의 거주와 이동이 상품화되면서 조직생활은 개인기업의운영체계 형성 용도로 리용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조선의 변화한 조직생활문화는 그 사회인들의 가치변화에로 이어지고 있는 바 2000년대에 탈북한 30~40대 녀성들의 특징은 그 가치가 ‘돈벌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타인을 어떻게 올려메고 속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최

고 가치였다. 그 외의 욕구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할겠다는 계획 같은 것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탈북한 10대에서는 놀라운 모습들이 보였다. 18세 정도에 탈북한 한소녀는 한국에 먼저 온 친구가 “너 한국 오면 ‘소녀시대’를 볼 수 있어!” 하는 말에 훌쩍 반해 조선을 떠났다고 하였다. 또 그 나이 또래의 한 소년은 한국 가면 자기가 원하던 모양과 질과 색깔의 옷들을 철따라 가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탈북했다고 하였다. 봄에는 연분홍빛 셔츠에 무슨 원단의 바지, 여름에는 어떤 셔츠, 가을에는 연푸른 색의 상의에 겨울에는... 그 인터뷰를 청취하고 있던 나는 그만 입이 떡 벌어져 한 동안 다물지 못하였다. 또 14세에 아버지 따라 탈북한 한 중학생소녀는 특별히 영어관련 교육을 조선에서 받은 적 없는데 탈북과정에서 영어가 필요해지자 자기가 도맡아 통역했다고 하였다. 조선의 외국어열풍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였다.

요즘 조선에는 “많이 먹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는 것이 더 영양가 있다”며 사람들 속에 돼지치기가 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강냉이를 돼지에게 한번 돌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어찌면 김일성 생전의 “이밥의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 꿈의 문턱에 조선이 인제야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김일성이 원하고 김정일이 만들어 냈던 조선의 조직생활사회의 진솔한 목표는 바로 전민의 “이밥의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 사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제6시기 (2013년~현재)

제6시기는 2013년에 시작되고 2016년 7차 당대회를 거쳐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2012년 4월 공식적으로 시작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노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 선포되고

2013년 8월 과거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배포되었고, 전반적으로 국경통제와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12월 장성택이 숙청되었다. 2013년의 조치들은 북한 정권이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게 ‘총체적 통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발표된 이후 39년 만에 ‘당의 유일 영도 10대 원칙’이 공표된 것은 ‘총체적 통제’ 의도와 관련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2013년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가 재정비 된 것은 2016년 7차 당 대회 전후로 볼 수 있다.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국가와 당의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로써 재차 당과 당 조직이 정치와 정책, 그리고 사회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제도 체계가 갖추어졌다.

5. 소결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전체주의적인 ‘총체적 통제’ 프로젝트에 실린 정치적 의지의 강약, 그 실행에 동원되는 여러 조치와 제도는 시기마다 달랐다. 그리고 그에 의해 초래되는 국가-사회 관계와 주민의 적응양태, 의도와 현실의 격차도 시기마다 달랐다. 이러한 기준과 인식을 가지고 북한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여섯 개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45~1958/1961년에 이르는 시기로 ‘총체적 통제’를 위한 기본 제도가 건설되는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1961~1974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총체적 통제’의 기본 제도가 건설되고 운영되던 시기이다. 셋째 시기는 1974~1980년대 중반이다.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공포되는 등 조직생활사회의 기본제도 및 운영 체계가 확립되었다. 북한 역사에서 '총체적 통제'가 가장 강력하게 관철되던 시기이다. 넷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의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조직생활체계가 완화된다가, 1990년 초 중반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다섯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2013년까지의 시기이다. '총체적 통제'가 상당 수준 포기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다가 2013년 8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원칙'이 배포되었다. 여섯째 시기는 2013년 이후부터 현재를 거쳐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과거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한 '당의 유일적 영도 10대 원칙'이 발표된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차 '총체적 통제' 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여섯 시기 중에서 제3시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를 여기서는 조직생활사회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사회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하부구조로서 동원경제와 배급제, 제도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계,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이 존재한다. 또한 조직생활사회를 유지하는 정치치안적 하부구조로서 주민등록, 대규모 소개와 추방, 여행증 제도, 그리고 포상과 징벌의 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하부구조는 대부분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남북경쟁의 격화, 후계 체제의 시작, 그리고 당시 북한이 당면했던 일련의 내부 문제에 직면하여, 북한 정권은 '총체적 통제'를 극도로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조직생활사회가 탄생했다. 조직생활사회는 혁명초소(직장) 단위로 조직되며, 이 직장에서의 개인은 중국에서의 단위

처럼 직장에 대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구조적으로 의존하며, 조직은 개인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행사한다. 조직생활 단위 즉 직장에서의 조직생활은 개인이 소속되는 바에 따라 당 또는 그 외곽단체인 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소년단과 사로청이 존재하며, 거주지별로는 인민반이 존재한다. 조직생활에는 보고체제도 존재하는데, 조직선-행정선-보위선의 3선보고와 조직별 자체보고라인, 3대혁명소조 보고라인, 중앙당 1호 신소체계, 인민반 보고 체계가 존재한다. 조직생활에는 학습체계도 존재한다. 신년사 학습, 간부 및 당원 근로자 학습, 수요 강연회, 문답식 학습 총화, 당원 근로자 학습과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경험적 현실에서 볼 때, 북한에서 1970년대 중반 조직생활 사회를 관철하고자 했던 정권의 의도가 초래한 것은 원래 의도했던 상황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조직생활의 압박이 매우 강했을 지라도, 결국에 개인들은 조직생활과 관련한 정권의 공식 버전이 요구하는 수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규율에 절대복종하고, 말은바 분공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상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될 수는 없었다. 그대신 개인들은 조직생활의 압력에 긍정적·부정적으로 적응해 가는 가운데 조직생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해 내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생활사회로서의 북한에서도 사회적 원자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적인 ‘총체적 통제’ 시도는 당의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적 연계의 파괴가 아니라, 개인들 간에 수단적이고 인물적 연계의 하부 문화가 풍성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이 북한 주민의 소통 방식이 되었다. 둘째, 조직생활로 인해 프라이버시 공개가 강요되고 이 때문에 개인 인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셋째, 수령의 권위 훼손에 대해 당위원회에 무조

건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 때문에 정치적 위협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그리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사라졌다. 넷째, 끊임없는 호상비판과 사상투쟁으로 개인의 내면세계가 실종되고 사회 내에 상호 신뢰가 상실되었다. 다섯째, 조직생활은 모든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국가가 빈틈없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그 결과는 개인들이 국가의 그러한 시도에 반응하는 가운데 오히려 비공식적인 개인들 간의 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만연화시켰다. 여섯째, 조직생활은 마치 종교생활처럼 변형되었다. 일곱째, 조직생활의 배경인 동원경제는 부정부패 그리고 장마당의 만연과 변성을 초래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총체적 통제’에의 의지의 수준과 환경이 역사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각 시기별 조직생활 문화 및 개인과 사회의 대응 양상도 달랐다. 이 역시 각 시기마다 전체주의적 프로젝트가 의도했던 바하고, 실제로 초래된 결과와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 양상은 시기별로 달랐다.



V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인권적 관점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 새로운 세대의 부상, 국가-사회 관계 변화 등 다양한 현상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 생활에서의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³⁰⁶⁾ 특히, 장마당 세대라 표현되는 북한 젊은이들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표현하듯 현재의 북한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여러 요소들이 사회 제도 및 문화에서 내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북한체제를 관통하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북한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키워드 혹은 개념들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통제국가로서의 북한의 전체주의와 자유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북한인권 연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개인 혹은 개인-개인 간 발생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다루는데, 이러한 침해현상은 때로는 체제 자체의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개별 가해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체제 및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³⁰⁷⁾ 북한인권 연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국

306) 북한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분석한 연구로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Ralph Hassig and Kongdan Oh, *The Hidden People in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Daniel Tudor and James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North Clarendon: Tuttle, 2015); 주민생활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 기법을 통해 북한사회 변화를 규명한 연구로 Barbara Demick,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New York: Spiegel & Grau, 2010) 참조.

307) 북한인권 침해현상을 북한사회 내 인권침해 요인 및 구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참조.

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를 우선 간략히 소개한 후,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권리별 인권침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국제공동체의 강력한 규범적 도구의 하나가 되었다.³⁰⁸⁾ 인권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를 포함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추구하는 국가-사회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권이야말로 국가의 통제 및 억압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권의 관점은 민주주의 증진(democracy promotion) 및 법치(rule of law) 등 주요 개념과 더불어 국가-사회 관계의 본질을 규명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³⁰⁹⁾

1990년대 북한사회의 위기로 인한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국제사회에 대한 원조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인권 사안은 비로소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각종 결의, 비정부기구의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30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논의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탄생배경에는 국가의 폭력에 대해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녹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인권선언의 탄생배경에 대한 연구로 Mary Ann Glendon, *A World Made New: Eleanor Roosevel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Random House, 2002) 참조.

309)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문제가 다루어졌다.

북한인권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가 본격화한 2012년을 기점으로 북한인권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단순히 북한체제 내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주변국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연계되고, 침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개선방안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이 임명한 제2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보고관이 2013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이하 다루스만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arusman 보고관은 2010년 임기를 시작하여 6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다. 여러 활동과 기여 속에서 Darusman 보고관의 가장 큰 기여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여러 문서들을 통합함으로써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DPRK: COI) 발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일 것이다.³¹⁰⁾ Darusman 보고관은 2013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의 관련 유엔문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침해유형의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였다.³¹¹⁾

310)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일환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기능, 보고서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로 박진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pp. 27~54 참조.

311) 유엔 특별절차의 일환인 특별보고관이 공식적 활동을 개시한 2004년 이래, 유엔에서는 총회와 이사회 차원의 여러 북한인권결의와 사무총장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 북한인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보고서 및 결의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았지만, 구체적 권리침해 정황 및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구조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파편적이

구체적으로 다루스만 보고서에는 북한인권 침해유형이 다음의 아홉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① 식량권 침해, ②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③ 자의적 구금, ④ 정치범수용소, ⑤ 차별, ⑥ 표현의 자유 침해, ⑦ 생명권 침해, ⑧ 이동의 자유 침해, ⑨ 강제 실종이다. 각각의 인권 침해 유형 분류는 그 자체로 고유한 내용을 구성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침해유형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³¹²⁾ 다루스만 보고서의 주요 의의 중 하나는 북한 내 자유권과 사회권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루스만 보고서는 북한 내 체제 본질적 인권침해 사안과 정책적 차원의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식량권 침해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배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의 배분정책은 전 주민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분제도는 차별에 기반한 제도로서 전 국민을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데, 이러한 차별에 의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특히 그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³¹³⁾ 이 경우 북한 내 식량권 침해와 차별의 영역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¹⁴⁾

한편, 다루스만 보고서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있고, 종합적 논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루스만 보고서는 그동안의 북한인권 논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침해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광범위하고(widespread) 조직적이며(systematic) 심각한(gross) 상태라는 점을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312)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313) *Ibid.*, pp. 13~16.

314) 북한 내 계층분화와 경제상황을 인권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정은이,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인권엔 미친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93~124 참조.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 수용소 내 식량권 침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등 자유권과 사회권의 거의 전 영역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¹⁵⁾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당국에 의해 그 존재가 전면 부정되고 있으며, 오직 탈북민의 증언과 외부 위성 사진으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³¹⁶⁾

다루스만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및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³¹⁷⁾ 다루스만 보고서는 이후 COI 보고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사안을 다룬 국가 및 비정부 기구 차원의 분석 보고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유엔 COI는 다루스만 보고서의 북한인권 침해유형 분석에 힘입어 2013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되었다. 이는 또한, 다루스만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북한인권 침해의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가능성 문제제기와도 연계된다.³¹⁸⁾ 다루스만 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권리별 분석을 통해 제시하

315)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20~23.

316)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64~374.

317) 다루스만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박진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 pp. 41~46 참조.

318)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 사안은 이러한 북한인권 침해의 반인도범죄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범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성 규명을 법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조정현,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자 처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pp. 1~25 참조.

였고, 나아가 본질적 차원의 조사를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메커니즘 (inquiry mechanism)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였기 때문이다.³¹⁹⁾ 2013년 출범한 유엔 COI는 1년의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2014년 2월 북한인권 침해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규명하고, 북한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³²⁰⁾

COI 보고서는 다루스만 보고서의 대부분의 분석과 권고를 채택했으며, 북한인권 침해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서는 북한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각 주체별 실천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은 북한 당국에 대하여, 다음으로 국제사회 및 유엔에 대한 권고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근본적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인권개선,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통한 인권개선, ③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연좌제, ‘반민족’ 및 ‘반국가’ 범죄 폐지, ④ 사형제 폐지, ⑤ 독립 언론 허용, ⑥ 선전선동 폐지 및 인권 교육 도입, ⑦ 종교의 자유 보장, ⑧ 주민등록자료 열람을 통한 감시제 폐지, ⑨ 양성평등 보장, ⑩ 시장 활동을 포함한 차별 없는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⑪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아문제 해결, ⑫ 인도적 지원 확보, ⑬ 여행 및 이동 자유 확보, ⑭ 남북자 문제 해결, ⑮ 이산가족 문제 해결, ⑯ 과도기 정의에 관한 국제지원 확보, ⑰ 모든 인권침해의 즉각 중단, ⑱ 강제실종협약을 포함한 주요 협약

319)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12.

320)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비준, ⑩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술지원 수용의 열아홉 가지이다.³²¹⁾

북한에 대한 권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체제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된 사안과 정책적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본적 개혁 관련 사안으로는 정치·제도적 개혁을 권고한 권고사항 ①, 연좌제 및 반민족, 반국가 범죄의 부당성을 언급한 권고사항 ②, 주민등록 및 감시제를 언급한 권고사항 ⑧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안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적 사법행정 메커니즘에 대한 권고이므로 체제본질적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형제 폐지, 양성평등 보장, 인권교육 도입 등은 정책적 권고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인권 침해현상 관련,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인권 침해현상은 북한체제 본질과는 상관이 없으며, 북한인권의 영역은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주로 기인하는 체제내부적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에 의해 북한 주민의 근본적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인권 침해현상은 북한체제 본질의 문제와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데, 특히 북한인권 침해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에서 필연적으로 기인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북한 제도 및 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북한 주민의 근본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COI 보고서의 경우 북한인권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면서, 북한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북한인권 침해현상이 단순히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심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COI 보고서는 양쪽의 관점을 고루 채택하고 있다고

321) *Ibid.*, pp. 16~18.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I는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권고 하면서, 여러 권고 중 ‘근본적인 정치·제도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COI 위원장이었던 Michael Kirby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 이후, 한 언론에 쓴 기고문을 통해 다음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전에 존재했던 전체주의 국가들과 이들의 억압적 행태들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이제 ‘우리가 알았더라면...’이라는 말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애통해 할 순 없다. 지금 세계는 알고 있다. 향후 관건은 효과적인 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실제적으로 취하느냐의 여부이다.”³²²⁾

Kirby 위원장의 강력한 호소는 한국사회를 포함한 국제공동체에 주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 준다. 첫째는, 북한에서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현상은 역사상 존재했던 전체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수준이며, 이는 전체주의 체제 속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 침해의 영역은 국제사회의 효율적 대응 및 제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 상황 변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³²³⁾ 다음 절에서

322) Michael Kirby, “Moment of Truth for North Korea over Human Rights,” *CNN*, November 18, 2014, <<https://edition.cnn.com/2014/11/18/opinion/north-korea-un-resolution-kirby/index.html>> (Accessed October 1, 20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like earlier totalitarian states and oppressive conduct, the world cannot now lament, “if only we had known...” Now, the world does know. An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world will respond effectively and take the necessary action.”

323) 일반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주창(advocacy) 및 개입(engagement)의 균형이 추구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로 한동호·도경욱,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는 북한체제 본질에서 기인하는 북한인권 침해현상을 구체적 권리 별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통제 기제와 북한인권 침해의 연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와 북한인권 침해현상

앞서 살펴본 바대로 소련, 중국, 북한을 비교함에서 핵심적 사안은 전체주의 체제와 이 체제가 집행되는 방식에서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체제 및 북한사회는 소련과 중국의 다양한 면을 모방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흐름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조직생활 사회 모델이다.

북한체제의 조직생활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이라는 사회문화적 기제로 이어졌다. 사회문화적 기제라 표현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는 명백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단지 국가 체제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이다. 인권의 영역에서도 상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등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보편적 인권’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을 인권의 국제기준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없다.³²⁴⁾

북한의 조직생활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여러 권리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 주민을 촘촘히 짜여진 조직의 그물망에 빈틈없이 배치시키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생활 사회의 제도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등록 및 성분제도는 평등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여행증 제도 및 강제추방의 경우, 이동의 자유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북한체제의 본질과 직결되는 근본적 차원의 인권침해 현상과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적 선택이나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적 차원의 인권침해 현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즉, 북한체제의 구조적 질료를 형성하는 구조·제도적 요소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침해 현상과 그 외의 인권침해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인권 침해현상이 체제 본질적 사안과 정책적 사안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변되는 인권의 특성상 많은 경우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³²⁵⁾ 이하에서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과 조직생활로 대변되는 국가-사회 관계변화 동학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도적 기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권리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4) 북한 또한 자유권 및 사회권 양 규약의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등 주요인권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25) 이는 인권의 기본 특성에서 근거하는데, 구체적으로 불가분성(indivisibility),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등을 고려할 수 있다.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Theory and Practice*, pp. 27~33.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현상

북한사회는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질서 및 체계가 규율되는 특질을 지니므로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체제의 전체주의 통제 기제의 필연적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권규약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도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는 개인의 사생활 즉,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해 온 북한에서 발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북한사회가 보여 주는 전근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간간히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권리에서 북한 당국은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물론,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9조에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

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주민들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생활 존중 및 보호가 아닌 국가에 의한 통제와 압박에 대한 증거들은 무수하다. 북한 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실제로는 주민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및 사회통제가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밀수 감소, 도망자 색출을 위한 가택수색 실시, 강제송환 후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감시와 통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생활 침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³²⁶⁾

북한 주민의 사생활 보호권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 특징은 김정은 체제 하 국경지역의 통제수준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경지역 통제 강화는 자연스레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경지역 주민에 대한 조직화된 가택수색 및 감시 체제 지속 등 다양한 차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북한 당국의 사생활 침해는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감시와 수색’을 집행하는 당국의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³²⁷⁾

다음으로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현상을 보자. 북한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³²⁸⁾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는

326)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147.

327) 위의 책, p. 147.

328)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148~159 참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시에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자유’가 국가적 차원의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68조에 기반한 북한 당국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헌법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 중 핵심적인 사안은 종교건물 혹은 종교의식 등 외면적 측면에서의 보장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기재된 종교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사상·양심의 자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다수 북한 주민에게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볼 수 있다.³²⁹⁾ 둘째, 종교의 자유도 북한이 주장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나 국가 및 사회질서에 저해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질서라는 요소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를 조직생활 모델로 분석할 때,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한 종류의 시민의 권리가 없다는 차원의 소극적 결여를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은 국가 차원의 유일사상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연결되는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주체사상만이 온 사회를 규율하는 유일한 사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 사상의 자유권 침해현상은 북한

329)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와 연계된 권리인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수령유일지배체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가 자 기제이기도 하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침해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사회 및 국경통제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1974년 제정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2013년 39년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확립과 수령중심의 당·군·정 일원화 체계가 지속되어 왔다.³³⁰⁾

실제로 종교의 자유와 관련,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 성행하는 미신행위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종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많다. 혹은 종교라는 단어를 들어봤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서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신봉하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주민들 사이에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의 경우, 헌법에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실질적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³³¹⁾

330)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331)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159.

한편, 북한 내 권리 침해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의 ‘자유’ 대 국가 혹은 사회의 ‘질서’의 대립구도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실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5조는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³³²⁾ 하지만,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에서 “인민보안기관은 여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함으로써 ‘여행질서’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사회질서’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의 자유 혹은 권리라는 측면은 언제든지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의 패러다임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동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에서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제한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제한조항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 차원의 질서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의 맥락에서는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자의적 권리해석 및 권리통제 나아가 이에 기반한 질서유지를 상식적으로 표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조항을 적용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즉, 이러한 자의성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사회에서 개인 권리의 발현은 국가 차원의 질서유지 필요성에 의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종교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보여주듯이 헌법상 혹은 법조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의 개념은 법조항 자체에서도 이미 국가에 의한 통제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32) 이동의 자유는 북한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 제12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상·양심의 자유의 경우, 법조항에서도 부재하며, 이에 따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권리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 제한은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기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이다.

다시 북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넘어가 보자. 앞서 제기된 종교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권과는 달리 북한 주민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법조항에서도 부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논하는 것이 북한의 맥락에서 적용되기 어렵듯이 사생활 침해도 마찬가지다.³³³⁾ 그런데, 법조항과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국가-사회 관계변화를 핵심적으로 추동하는 조직생활 사회 모델의 특성상 북한사회에서 주민의 사생활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권리 자체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사회란 타인의 명예, 신용, 평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전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사회 관계의 균형추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³⁴⁾

세계인권선언을 권리별로 상세히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을 구성하는 총 30개조의 권리들은 큰 카테고리 분류될 수 있다.³³⁵⁾ 이 중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는 시민적 권리로 분류될

333)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다.

334) 좋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본적 논의로 최연혁,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시공사, 2016) 참조.

335) 세계인권선언의 여러 권리들은 네 가지 기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3조에서 11조까지는 기본적 권리로, 12조에서 17조는 시민적 권리, 18조에서 21조는 정치적 권리, 22조에서 27조는 경제사회적 권리로 각각 분류된다.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p. 26~31.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³³⁶⁾ 그런데,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상 국가 주도의 조직 및 단체를 제외하고,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형성 및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본적 여건 자체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부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자유권규약 제21조와 제22조는 각각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의사 표현의 자유(제19조), 국정에 참여할 권리(제21조)와 더불어 정치적 권리를 형성한다.³³⁷⁾ 즉,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사생활 보호권 등 시민적 권리 뿐만 아니라 합법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시민의 역동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조직생활이란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당국의 부과에 의한 강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체가 일절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에 대해 조직생활이 강제 부과된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 등 어느 조직이라도 가입해야 한다 ... 당국이 제

336) 위의 책, pp. 137~142. 이러한 시민적 권리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2조)를 필두로, 이동과 거주 자유(제13조), 망명의 권리(제14조), 국적을 가질 권리(제15조), 결혼과 가정의 권리(제16조), 재산을 소유할 권리(제17조)가 각각 해당된다.

337) 위의 책, pp. 167~191.

한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당 외곽단체에서의 활동 및 임무는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결사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제로 규율하는 조직생활을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³³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란 단순히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 혹은 공적영역의 광범위한 침투로만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현상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조차 부재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 조직화된 통제국가로서의 북한체제 본질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될 수 있다. 즉,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제도 및 문화에서 기인하는 사적영역의 붕괴는 인간 내면의 깊은 성찰을 전제하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부재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표면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유일사상과 10대 원칙만을 강조하는 수령제 북한체제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실제로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북한체제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현상

북한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숙청을 거듭하

338)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179~180.

였다. 또한, 60년대부터는 광범위한 주민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체제 위해세력을 제거하였다. 북한사회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 주민에 의한 성분조사 및 그에 따른 차별적 정책이 집행되었다. 전 주민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이한 계층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 전역에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국가 통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각종 공안기구 및 보안세력은 제도적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1990년대 북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분제도는 여전히 북한사회의 핵심 작동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³³⁹⁾ 앞서 언급된 다루스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성분제도가 전 주민을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주민의 식량에 대한 접근, 건강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⁰⁾

국제인권기준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339) 북한 주민의 식량권 실태 일반과 당국의 차별적 식량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208~223 참조.

3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scrimination and the disproportionate or specific effe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n vulnerable groups, in particular women, children,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and returnees.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fact that society is divid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allegiance to the Government. A person’s place in this hierarchy determines the level of access that he or she will have to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access to food, health, education and freedom of movement.”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p. 5.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권규약에서도 제2조 제2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조항 공히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³⁴¹⁾ 즉, 국제인권규범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막론하고 비차별의 원칙을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 내용을 구성한다. 그런데, 북한의 성분제도의 경우 이러한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도 법제도상으로는 비차별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이다. 바로 성분 혹은 토대라고 불리는 북한식 사회계층 분류제도 때문이다.³⁴²⁾

북한사회에서 토대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는 성분제도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통제기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분야이다. 성분제도에 의한 차별정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평적이고 수직

341)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42) 북한사회 내 성분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Strat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참조.

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근본적 차별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실에서는 성분 혹은 토대라고 불리는 독특한 사회계층 분류제가 존재하며 계층 분류에 따라 전 주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 이러한 계층 및 성분 분류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계층 간 이동도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령 탁월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에서 복잡한 군중 계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이나 복잡한 군중 계층에서 기본군중 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대계급잔여분자나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주민요해를 통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지속되는 연좌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³⁴³⁾

이처럼 성분제도에서 파생되는 당국의 차별적 정책으로 주민들의 일반생활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평양 대 비평양으로 나누어지는 대립구도는 평등권 침해를 넘어 주민의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등 사회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³⁴⁴⁾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도시와 시골 간 지역적 격차가 김정은 체제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무상치료제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의 건강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왔는데, 평양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상치료제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과 가족의 치료 비용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343)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192~195.

344) 관련된 분석으로 Robert Collins, *Pyongyang Republic: North Korea's Capital of Human Rights Denial*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참조.

이미 북한사회의 현실이 되었다.³⁴⁵⁾

그런데,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는 차치하고라도 수술 등 종합적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도병원이나 시병원의 수준이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을 중심으로 아동병원, 구강병원 건립 등 일부 시설투자 및 개발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것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계층별 및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강화되었다.³⁴⁶⁾ 또한, 이러한 추세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 사회권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동원경제로 인한 무보수노동, 강제노동, 강제동원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전체주의적 동원 기제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³⁴⁷⁾ 아동의 교육권 관련, 국가에 의한 노동동원 실태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봄, 여름, 가을에는 10일에 6~7일씩 매일같이

345) 북한사회 내 전반적 건강권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224~238 참조.

346)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226~227.

347) 북한 내 취약계층 인권 실태 및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참조.

방과 후 노동에 동원되며,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를 위해, 그리고 가을에는 감자캐기와 강냉이 따기를 위해 수업을 중단하고 한 달 정도 농촌작업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³⁴⁸⁾

이러한 농촌작업 및 건설작업 등 무보수 노력동원 실태는 아동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무보수 노동은 관례화·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자연스레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권이 전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³⁴⁹⁾ 또한, 북한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적응해 나가고 있다.³⁵⁰⁾

한편, 체제를 보위하는 북한 인민군대 내 인권 실태를 이러한 무보수 노동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10년 이상을 군복무 하는 경우 사실상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시기를 국가에 대한 무보수 노동력 제공으로 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³⁵¹⁾ 또한, 복무기간이 길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군인이 민간인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³⁵²⁾ 즉, 북한 군인은 체제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인 동시에, 각 지역 부대단위에서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348)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330~331.

349) 위의 책, pp. 250~252.

350) 이러한 자구책에는 장마당 경제활동, 국경 밀수, 폐기발 경작 등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국가등록 기업소 개인 운영, 씨비차 운행, 인민병원 산하 약국 개인 운영 등 사회주의 국가제도를 개인이 활용하는 차원 등이 다수 포함된다.

351) 북한 인민군대 내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김인성·안현민·송한나, 『군복입은 수감자』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참조.

352) 위의 책, pp. 196~226 참조.

3. 조직생활 ‘동학’의 변화와 그 추세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는 한마디로 북한 전체주의 통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조직생활 사회는 생활총화 및 10대 원칙 등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적 메커니즘부터 전 사회를 당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실행되는 북한 특유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는 김정일의 언급을 재차 상기해 보면, 조직생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상 차원에서 그 유일성 및 순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혁명적 교양의 학교로 대변되는 제도적 집행기제가 이를 든든히 지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생활 사회 메커니즘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북한의 변화’를 수없이 논의해 온 것이 사실이다.³⁵³⁾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마당 경제의 변화와 북한사회의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로 인한 주민의식의 변화 또한 이제는 엄연한 상수이다. 전체주의적 통제기제로서의 북한 국가는 급속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자유화를 경험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체제변화로까지

353) ‘북한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이 근본적인 북한변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각자 제시하는 정의나 논점이 다양하다는 데서 이러한 논의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북한변화를 전문가 논의에 기반한 시나리오 기법으로 제시한 연구로 김갑식 외, 『2030 북한변화 시나리오』 (서울: 통일연구원, 2016); 북한변화를 전지구화, 시장화, 북한이탈주민, 한반도 미래의 키워드로 각각 분석한 연구로 정일영·정대진 편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한반도데스크, 2017); 김정은 시대의 각 분야별 정책과 전략에 대한 통합적 분석으로 박재규 외, 『새로운 북한 이야기』 (파주: 한울, 2018); 김정은 체제 초기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대한 변화와 전망으로 김홍광 외,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서울: 늘봄플러스, 2012) 참조.

추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으로 대변되는 국가이데올로기 또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정착한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주체사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10대 원칙을 비롯한 생활총화 또한 구세대의 유물에 불과하며, 소위 신세대는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³⁵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어느 정도의 주관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증언이 북한사회를 관통하는 변화의 물결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미 그 체제를 떠나 새로운 체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이들의 변화 지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체제를 떠난 이후 구체제에 대한 재평가에 인식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조직생활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통제기제의 근간에 주요한 변화의 기미가 포착된다고 볼 수 있는가? 앞서 제시된 인권적 관점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북한 국가-사회 간 다양한 변화양상은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된 체제 경직성에 대한 주민의 체제 적응적 노력으로 요약된다. 전체주의 기제 하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때로는 체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하기도 한다. 북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

354)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당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사상교육체계는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사상이완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지속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북한 내 '새로운 세대(신세대)'에 대한 연구로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참조.

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조직생활 사회의 동학 변화는 크게 세 가지 권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권 증진과 문화적 변혁 가능성, 둘째, 체제 순응과 체제 저항의 중간 형태로서의 북한 내 부패현상, 셋째, 체제를 벗어나 제3국으로 이주하는 체제이탈 및 탈북현상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한 조직생활 동학 변화 : 의견 및 표현의 다양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일 것이다.³⁵⁵⁾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특히,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표명 및 전달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북한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³⁵⁶⁾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북한사회에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당국의

355)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분석으로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160~175.

356) 정보유입이 북한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Jieun Baek, *Hack and Frack North Korea: How Information Campaigns can Liberate the Hermit Kingdom*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April 2015) 참조.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정보를 경험하고 이러한 정보를 확산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외부 영상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소통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경계하는 비사회주의의 현상을 의미하며, 북한사회 내 자본주의 현상의 확산을 의미한다.

2015년 북한은 형법 개정 시 제222조(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장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즉, 휴대전화는 외부정보를 유통하고, 밀수 및 탈북행위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⁷⁾

북한의 자본주의 확산에 대한 경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2년 10개월 만에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는 자본주의 문화 확산에 대한 경계령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2018년 8월 28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청년들의 힘을 강조하면서, 비사회주의의 문화에 대한 경계령을 강조하고 있다.³⁵⁸⁾ 남북 교류협력 및 개선 분위기를 통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남한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은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를 표명하였다.³⁵⁹⁾

357)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172.

358) “청년들은 반제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노동신문』, 2018.8.28.

359)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확정된 2009년 이후부터 김정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었는데, 가장 핵심적 분야 중 하나가 청년들의 ‘비사회주의’ 풍토를 경계하는 청년사상에 대한 강조였다. 한편, 2018년 들어서도 김정은 체제는 다양한 포고문과 포치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을 데 대한 경계령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면접(2018.10.6, 통일연구원)

이처럼 북한 당국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단속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외부정보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령은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는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당국의 경계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생활 동학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분야가 북한 주민의 의견형성 및 표현의 자유 분야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증대로 나타나며,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이 탈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³⁶⁰⁾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영상물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시청 경험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문화적 영향력에 노출될수록 북한체제의 선전과 선동과는 다른 차원의 사고와 가치관이 도입되게 된다. 물론, 주민들의 이러한 경험이 개인 혹은 일부집단의 문화생활로 한정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가지는 힘은 그 모방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개방성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는 것으

360)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170.

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 간의 형법 개정에 있어 강조된 특정 분야로, 앞서 언급된 제222조와 더불어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를 들 수 있다. 제183조는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외부문화 반입 및 유포를 언급하고 있으며, 2013년 형법부터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으로 지정되어 그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다.³⁶¹⁾

실제로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 실태에서도 그 사유로서 탈북 시도, 마약사용 등과 더불어 ‘불순녹화물 시청 및 유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형법에서는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 등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추세로서 ‘마약 거래행위’ 및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한 증언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³⁶²⁾

이처럼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남한 영상물을 중심으로 노래, 이색적인 문화현상, 비사회주의 현상 등에 대한 경계와 통제가 강화되고, 실제적인 법규정에서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현재 북한사회 내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국의 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북한이 추구해 온 전체주의 통제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확산되고 있

361) 동 조항은 2012년까지는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이었다. 제183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 것을 여러번 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168.

362)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46.

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당국과 주민 간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참여한 긴장상태가 발생된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수록, 그리고 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할수록, 북한 사회 내 의식의 흐름과 인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더 가속화 될 것이다.³⁶³⁾ 이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시장화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며, 인민반, 생활총화, 주체사상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생활 제도 및 문화의 균열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한 주민이 자신의 체제와 그 외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고, 이는 또한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체제 위협요소라는 점이다.³⁶⁴⁾

이러한 사회변화의 추동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북한 내 한류 현상이다. 북한 내 한류 현상은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및 노래를 중심으로 북한 내 퍼져가는 문화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특히 북한 젊은이들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에 태어나 북한체제의 경제적 측면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를 경험함으로써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다른 경험을 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 습득 및 문화 지향은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³⁶⁵⁾ 실제로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가 1990년대 혹은

363)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내부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과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행위주체로서의 북한 주민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주된 동력을 의미하는 입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로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주민의 입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364) Ralph Hassig and Kongdan Oh, *The Hidden People in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p. 119.

365) 북한 내 한류현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증언으로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참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그 속도와 범위에서도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³⁶⁶⁾ 특히, 자신을 북한의 신세대로 규정하는 세대조차도 이러한 속도감과 방식에 대해 놀랍다는 증언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³⁶⁷⁾

이처럼, 북한 내 불고 있는 남한에 대한 동경은 근본적인 문화적 변혁의 거대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부세계의 정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지식을 축적한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북한의 ‘구’체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표출되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표출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이는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사회 전체 차원으로 급속히 파급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체제 차원의 정치·제도적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시민사회가 부재한 북한의 현실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사회 전체적 변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지만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문화적 변혁의 힘이 정치·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³⁶⁸⁾

나. 북한 조직생활 동학 변화 : 부패현상의 지속

북한체제가 경직되고 국가-사회 관계의 분절양상이 보다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적 병리현상 중 하나가 바로 부패 현상이다. 북한 내 부패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인권과의 관련성이 분석된 연구³⁶⁹⁾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366) 북한이탈주민 면접(2016.9.3,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면접(2018.10.6, 통일연구원)

367) 북한이탈주민 면접(2018.10.6, 통일연구원)

368) 유엔 COI 보고서는 권고사항에서 ‘북한의 근본적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인권 개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나,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변혁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전환이 권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사회심리적 좌절과 급격한 체제이탈을 의미하는 탈북현상과 더불어 부패가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⁷⁰⁾ 김정은 체제 하 부패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 사회에서의 많은 부분이 ‘돈’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부 등용이나 중앙대학 진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토대가 많은 작용을 하지만, 입당이나 일반대학 진학과 같이 예전에는 토대를 중심으로 결정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경제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은 뇌물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음을 보여준다.”³⁷¹⁾

앞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북한 내 조직생활 메커니즘에서 사상의 유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정 부패 현상은 배금주의로 대변되는 사상의 이완 뿐 아니라 조직생활 기제를 지탱하는 각종 제도적 기제에 대한 도전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체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조직생활 참여의 의무에 대해서도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뇌물을 내고 참여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69) 북한의 부패현상과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370) 북한사회 내 부패를 포함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 연구로 Daniel Tudor and James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North Clarendon: Tuttle, 2015), p. 119.

371)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 389.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강제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 또한 보고되고 있다. 집회나 동원에 가지 않을 경우 일정 정도 돈을 지급해야 하며, 단속 시에도 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는 증언도 있었다 ... 또한, 관제집회는 일정 수준의 참석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미참석자들은 돈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³⁷²⁾

이처럼 북한사회 내 부패현상은 조직생활에 대한 면제와도 연계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의 이동과 관련한 부패 현상은 이러한 사회질서의 와해를 더욱 잘 보여준다.

북한 내 주민 이동의 자유 확대는 1990년대 이후 북한 내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사회 변화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이동의 자유 확대의 이면에는 광범위한 부정부패 현상이 연계되어 있다.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의 이동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질서의 와해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여행권 제도를 지속하고 평양 출입 및 국경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식량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조차 제한한 측면이 있다.³⁷³⁾ 따라서, 이동의 자유라는 단순히 북한 주민의 자유권 중 한 요소가 제한되었다기 보다는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여타 권리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총체적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원래 여행증(혹은 통행증)은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를 위해 고안한

372) 위의 책, pp. 180~181.

373)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서울: 통일연구원, 2017) 참조.

제도로서 숙박등록 등과 더불어 전 주민을 일정한 공간 속에서 규율·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배급이 끊어지고 각 기관·기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각 시도별로 이동해야 하는 필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이 사사여행, 공무, 친척방문 이외에도 생계를 위한 장사를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계형 이동이 급증하면서, 북한 내 형성되어 온 시장화 현상과 맞물려 기존의 여행증 제도 자체를 초월하는 주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역동성이 보다 강화되게 된 것이다.³⁷⁴⁾ 북한 내 여행증 제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은 일정한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같은 도 내 이동의 경우는 증빙과정 없이 신분증과 일정 금액의 돈을 지참하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³⁷⁵⁾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의 자유 관련 북한 내 부패 현상은 체제 경직성에 대한 주민 차원의 체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과정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북한 조직생활 동학 변화 : 탈북현상의 증가

김정은 체제의 국가-사회 관계 양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는 탈북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총화 및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생활의 동학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체제이탈 즉, 탈북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탈북현상이 촉진되는 배경에는 북한 내 이동성 증가 현상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다.

374) 이러한 역동성은 당국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내 시장화 현상과 관련된 주민의 사회적 모빌리티 증대에 대한 연구로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375)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pp. 103~105.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의 자유는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거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의지 혹은 정책에 우선하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적 측면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자유로이 한 국가로부터 ‘퇴거’할 권리도 포함한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 이러한 ‘합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이동의 자유 확보라든가 혹은 급진적 체제이탈을 의미하는 ‘탈북행위’를 통해 권리 주체로서의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 북한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전체주의 통제체제를 구성하면서 전 국민을 성분에 따라 재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성분에 따라 지역별 배급 차등 지급, 성분에 따른 강제추방 등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앙 당국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전 국토를 정치적·사회적 작동원리로서 구획·통제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체제 속에서 대규모 강제추방에 대한 사실은 과거의 사안으로 남겨 둔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추방 실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소개추방과 국가에 반하는 범죄로 취급될 경우 혹은 정치범의 경우를 중심으로 당사자 공개처형 및 가족 강제추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추방은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권 침해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³⁷⁶⁾

탈북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탈북의 원인과 동기에 서부터 탈북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외부적 조건이 분석되었다.³⁷⁷⁾ 하지만, (잠재적) 탈북행위 자체가 북한체제 전체의 그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북한의 통제 메커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결과론적 분석은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북한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의 숫자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견고히 작동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는 탈북행위에 대해 ‘반국가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³⁷⁸⁾

이는 탈북행위가 북한 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일종의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북한식 전체주의 통제기제는 비록 전체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해 온 탈북행위를 상당한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소련 및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하고 더 오래 지속되어 온 현상에도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체제 공고성이 오히려 작은 탈북현상에 결정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전체주의 조직생활 동학이 작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으로부터 유지

376) 북한 내 강제추방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p. 29~39.

377) 탈북현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은 송영훈, “해외체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쟁점과 동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pp. 57~61.

378) 이는 탈북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형법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자세한 내용은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05~111.

되었듯이, 역으로 사소한 체제이탈 행위도 전체 통제 메커니즘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현상의 의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탈북의 동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김정일 시대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 내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가중되어 왔다. 탈북현상이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탈북현상의 주된 동기가 국가 및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 및 붕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동기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동기가 탈북동기로 작용하였다.³⁷⁹⁾ 그리고 이러한 탈북동기의 다양화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 내 탈북현상이 꾸준히 지속될 것을 예고해 주는 측면이 있다.

다양한 탈북동기를 크게 구분해 보면, 경제적 이유에 의한 탈북, 정치적 이유에 의한 탈북, 사회적 이유에 의한 탈북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체제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가족의 도움이든, 브로커의 도움이든, 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체제이탈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미 탈북한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탈북을 하는 경우나 부모와 함께 탈북하는 자녀의 경우처럼 탈북행위 자체가 탈북동기의 능동성을 자동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체제를 이탈하여 중국,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이주하는 적극적 이주의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³⁸⁰⁾

379) 2000년대 탈북현상의 특징 중 하나로 개인적 결심에 의한 탈북 이외에도 가족의 권유 혹은 먼저 탈북한 가족의 도움 및 지원을 받아 체제를 이탈하는 '기획'탈북 현상의 증대를 꼽을 수 있다.

탈북현상의 추세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표 V-1>에서 드러나듯이,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부터 증가해 오던 남한 입국 탈북자의 숫자가 급감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2,706명에서 김정은 집권 이듬해인 2012년 말에는 1,502명으로, 2015년에는 1,275명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2016년에는 1,418명으로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2017년에는 다시 1,000명대 초반으로 가게 되면서 전체적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다.³⁸¹⁾ 달리 표현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3,000명 가까이 육박하던 남한 유입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김정은 집권 이후, 1,000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표 V-1> 최근 10년 간 남한 유입 북한이탈주민 숫자³⁸²⁾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숫자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488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unikorea.go.kr>>.

김정은 체제 하 한국에 유입되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국경 및 사회통제 강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주된 탈북 루트로 활용되던 양강도 혜산 지역과 그 주변 일대의 삼지연 군 등에 2015년을 기점으로 철조망이 건설되고, 국경 경비가 강화됨에 따라 도강비용을 포함한 탈북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³⁸³⁾ 이에 필요한 돈과 자원을 조달할 수 없는 주민들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탈북의 규모와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80) 송영훈, “해외체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쟁점과 동향,” pp. 55~89.

381)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108.

382) 2018년도 6월 기준.

383) 북한이탈주민 면접(2018.10.6, 통일연구원).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중국행과 한국행으로 구분하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모든 도강자에 대해 ‘한국행’으로 간주하는 등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 존재하는 잠재적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다.

이러한 당국 차원의 감시와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양강도 혜산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혜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상 대부분 주민들이 중국과의 밀수나 외부세계와의 접촉 가능성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당국이 이를 통제할 경우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³⁸⁴⁾ 나아가 혜산과 같은 국경연선지대³⁸⁵⁾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탈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며, 기회가 온다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³⁸⁶⁾

따라서, 김정은 체제 하 탈북숫자의 감소 자체가 북한 주민의 탈북동기 감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는 강화된 국경 및 사회통제라는 내부적 요인 및 중국의 대탈북자 정책 등 외부적 요인의 복합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⁸⁷⁾ 당국의 통제와는 상

384)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혜산시를 평양시와의 비교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조경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참조.

385)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국경연선지역이라고 하면 특수 여행증이 필요한 승인번호 구역으로 불린다. 여타 승인번호 구역으로는 수도 평양시 전체, 나진선봉 등 특수경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전연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 22.

386) 북한이탈주민 면접(2018.10.6, 통일연구원).

387) 일반적으로 탈북현상을 설명할 때, 탈북행위 자체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push factors)과 외부적 요인(pull factors)을 나누어 분석하곤 한다. 북한 당국의 대 탈북자 정책과 북한 내 정치경제적 상황 등이 전자라면, 중국의 대탈북자 정책, 북중관계, 한중관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변화 등이 후자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구분이며, 실제 탈북현상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으로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pp. 114~135 참조.

관없이 북한 내 탈북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 및 연산지대를 중심으로 외부세계의 정보 공유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북한체제를 등지는 이러한 탈북행위는 북한 내에서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조국반역죄’로 엄중히 다루어지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북한 주민에게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의 감시에 직면하거나, 개인 혹은 집단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심리적 좌절을 경험할수록 이러한 동기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세계의 정보,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중국과 한국의 소식이 국경지대 주민들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의 도피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당국의 다양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숫자가 꾸준히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조직생활 사회로 대변되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수많은 제도적 통제기제에 대한 마지막 저항은 체제 자체를 이탈하는 탈북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³⁸⁸⁾

4. 소결

현재 북한의 조직생활 동학은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핵심은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자유주의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개별적·자유주의적 요소가 체제

388) 이러한 체제의 통제와 주민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탈북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체제 통제와 저항으로서의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으로 홍민·박순성 역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참조.

전체적 영향으로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간 분절성이 확대될수록, 보다 선진화된 체제에 대한 주민의식이 확장될수록, 북한체제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직생활과 전체주의 통제기제가 약화될수록, 북한사회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의 관리소 제도 존속여부는 북한이 지향하는 조직생활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주의 통제기제가 향후 여전히 유효할지 혹은 근본적 변화에 직면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여전히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관리소 제도는 북한 전체주의 통제기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사회의 자유화 및 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바로 이 관리소 제도의 존폐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하였듯이, 북한의 관리소는 북한체제의 공고화와 함께 지속되어 온 통제기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전히 관리소가 북한사회에 근원적 공포심을 야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북한 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별 침해현상은 북한체제의 본질에 필연적으로 기인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서부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르는 자유권에서부터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이에 기인하는 식량권 및 건강권 침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억압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를 향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데, 외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표현이 하나의 배출구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 국가 대 사회 관계의 동학 변화는 통제국가로부터 자

유를 추구하려는 개인의 노력 및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때때로 그 메커니즘은 시장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각종 부패현상일 수도, 다양한 범죄 및 일탈행위일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아예 체제 자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탈북현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



VI

요약과 정책적 함의

박형중 · 한동호 (통일연구원)

국가-사회 관계라는 주제는 북한연구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연구의 많은 주제는 암묵적으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선입견이나 독특한 명제를 포함한다. 세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보자. 첫째, 수령체제론 또는 사회통제 연구에는 정치의 주체로 지도자, 이데올로기, 당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정치경찰기구 등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국가의 사회에 대한 장악은 대체로 완벽하고 국가와 사회는 구별하기 어려운 일원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둘째, 1990년대 이러한 관념에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난으로 전통 체제가 기반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시장이 번성하면서 구체제 바깥에서의 활동이 증가했다. 국가와 사회가 이제는 일체가 아니라 분리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직도 국가통제는 강력하지만 개인은 그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워지고, ‘돈주’와 같은 상대적 독립 집단도 등장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도 국가 또는 정권의 개인에 대한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국가-사회 관계의 일부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는 본격적 연구 없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또한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교 사회주의 및 비교 정치학적 연구를 통해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틀을 개척하고 그에 관한 인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스탈린 시대 연구와 중국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에 주목했다. 이 두 연구에서는 사실상 국가-사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인식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의 하나였고, 그리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대 연구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에 대한 여러 이론과

논쟁은 1989년까지 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 연구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모택동 시대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기업과 단위와 같은 미시 대상에서 관료와 노동자/농민간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 개혁기 이후는 국가와 사회단체의 관계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 종결 이후에 재정립된 전체주의론 즉 신-전체주의론에 특히 주목한다. 이러한 전체주의론은 정권이 ‘총체적 통제’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프로젝트 진행의 대내외적 여건 등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현 수준과 양상도 달리 나타난다. 또한 신-전체주의론이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 또는 정권이 강력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사회 또는 개인이 무기력하고 순응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전체주의적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무모하여 실현될 수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과 사회의 순응과 적응 뿐 아니라 저항과 회피에 당면한다. 이러한 가운데 양자 간에는 상호 갈등과 투쟁, 상호 침투와 적응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련-중국-북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비교한다. 국가-사회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북한이 소련에 비해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훨씬 강력한 전체주의적인 ‘총체적 통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애초에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소련의 ‘절정기 스탈린주의’ (1946~1950)를 전범으로 삼아 건설되었다. 그런데 소련 역사에서 볼 때, ‘절정기 스탈린주의’ 체제는 국가의 사회 장악에 대한 의지와 시도는 측면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극단적 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였다.

스탈린 사후, 1950년대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중국은 자신이 받아들였던 ‘절정기 스탈린주의’ 모델을 한 걸음 더 극단화시켰던 모택동 모델을 발전시켰다.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고, 그 후 1958년까지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중국의 영향 하에서 북한은 보다 극단화된 모택동 모델을 수용했다. 중국은 1978년말 이후 개혁의 과정에서 모택동 모델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대체로 그를 보존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체제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소련과 비교할 때 중국과 북한은 일련의 제도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한 차이에는 직장이동 금지, 농촌-도시 이주 금지와 차별, 직장(단위)의 개인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 지배, 중국 거주민위원회와 북한 인민반의 개인에 대한 지배, 당과 당비서의 지배적 역할, 중국과 북한에서의 성분제 식 계급 차별, 배급제, 중국의 소조활동과 북한의 조직생활의 포괄성과 강도 등이다. 중국과 북한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소련과 차별되는 기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제는 소련에 비해 중국과 북한에서 국가의 사회 통제가 현저히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성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소련, 중국, 북한을 비교할 때, 북한식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조직생활 사회 모델이다. 소련 및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조직생활은 정권의 개인에 대한 ‘총체적 통제 시도’라는 전체주의적 의도를 가장 철저하게 또한 북한식으로 체현하고 있다. 조직생활 사회는 이러한 조직생활이 필요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구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아홉 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이다. 주민등록은 전체 주민을 정권이 추정하는 충성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정치적 신분을 매기고 그에 상응하는 특권과 배제를 분배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대규모 소개 추방이다. 이는 정권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치적 불충성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특권을 박탈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방의 공포는 비-추방자가 충성을 열성을 다해 다하도록 만드는 공포라는 처방 약제이다. 셋째, 배급제이다. 국가가 개인과 집단의 의식주에 관한 가능성과 선택을 독점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는 기제이다. 넷째, 조직생활의 경제적 배경으로서의 동원경제이다. 조직생활은 한편에서는 충성 강화를 통한 정치안정의 기제이지만, 그 충성 강화는 생산 증대를 통해 즉 동원경제에의 열성적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조직생활은 정치적 안정과 생산증대의 이중 목적의 성취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생활의 제도적 기초인 대안체계이다. 조직생활의 구조와 운영, 그 목표의 실현은 단순한 관료적 행정체계에 의해서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그것은 당의 정치적 권위와 실행력, 그리고 포상과 책벌의 체계에 의해 뒷받침된 조직 체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를 구현한 것이 대안체계이다. 여섯째, 조직생활 사회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조직생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자기의 것으로 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조직생활 사회에서 ‘총체적 통제’를 위한 하드웨어가 작동하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이 조직생활 사회의 목표인 ‘총체적 통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인간로봇으로 만드는데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조직생활 강화와 보안성의 기득권 유지에 기여하는 여행증 제도이다. 다른 것과 함께 주민 이동 통제는 ‘총체적 통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안성이고, 여행증 제도의 지속은 보안성의 조직 기득권 고

수와도 연계되어 있다. 여덟째, 조직생활의 당근과 채찍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 그리고 혁명화 관리소의 운영이다. 이 양자는 사실상 조직생활 사회에서 동전의 앞뒷면이다. 아홉째, 조직생활은 교회통치 원리를 사회통치에 접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열째, 조직생활이 중요 동력원이 되어 가능해지는 동원 경제의 이면은 부패의 만연과 장마당의 번성이다.

북한의 조직생활은 평화시기임에도 주로 당과 수령이 내리는 지시와 명령 집행을 위해 단체(국가 및 협동단체, 가정)와 개인의 노동력과 재화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넘어 강제동원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노력보장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 조직은 혁명초소(革命哨所), 간단히 말하여 주민의 직장(職場)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개인들을 망라하며 구성된 정치, 사상 교양단체를 사람들은 흔히 ‘조직’이라 부른다. 의식이 미숙한 유아나 지체장애인들을 제외하고 전업주부와 노인들을 위해서는 직장이 아닌 주거단위(인민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조직단위별 조직생활은 개인의 충성보장과 함께 생산 증대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직장 조직은 또한 직장의 출근, 입퇴직시에 관건적 역할을 하며, 주민의 이동 및 거주 그리고 결혼에도 관여한다. 북한 주민은 소년단에서 조직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며, 청년동맹을 거쳐, 조선노동당 또는 직맹, 여맹, 인민반과 같은 조직을 통해 조직생활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제 및 그 기능은 중국에서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조직생활은 당조직선, 행전선, 보위부선의 3라인 보고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신년사 학습, 간부 및 당원 근로자 학습, 수요 강연회, 문담식 학습 총화와 같은 학습체제도 갖추고 있다.

전체주의론이 말하고 있듯이, ‘총체적 통제’의 의도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의도한 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 통

제'를 향한 의지가 강력해질수록, 그에 상응하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과 역기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할수록, 통제당해야 하는 측으로부터의 방어적 대응이 다양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통제'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대한 논의이자, 나아가 국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생활 사회에서의 문화적 특징을 보면, 조직생활의 강화 강요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대응했던 기본틀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이 북한 주민의 소통 방식이 되었다는 것, 둘째, 조직생활로 인해 프라이버시 공개가 강요되고 이 때문에 개인 인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 셋째, 수령의 권위 훼손에 대해 당위원회에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 때문에, 정치적 위협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그리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 넷째, 끊임없는 호상비판과 사상투쟁으로 개인의 내면세계가 실종되고 사회 내에 상호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것, 다섯째, 조직생활은 모든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국가가 빈틈없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였지만, 그 결과는 개인들이 국가의 그러한 시도에 반응하는 가운데 오히려 비공식적인 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만연화시켰다는 것이다. 여섯째, 조직생활은 마치 기독교의 교회통치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했다. 일곱째, 조직생활의 배경이 되는 동원경제는 권력층에게는 부패와 허위보고의 온상이었고 일반 주민에게는 경제난맥을 헤치고 살아남기 위한 온갖 비공식 행위를 부추기는 온상이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공유하면서도 조직생활 사회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앞서 거론했듯이, '총체적 통제' 강화를 의도했던 조직생활 사회의 개시는 그 프로젝트 자체의 무모성, 그리고 주민들의 대응과 저항

에 직면하여, 시간적으로 변화해 갈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최근에 조직생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

현재 북한의 조직생활 동학은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핵심은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자유주의적 요소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국가-사회 간 분절성이 확대될수록, 보다 선진화된 체제에 대한 주민의식이 확장될수록, 북한체제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직생활과 전체주의 통제기제가 약화될수록, 북한사회의 변화는 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요청된다. 이는 변화하는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으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관찰하고, 지속성과 변화를 균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대북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과의 적극적 채널 구축 및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는 비교정치학 혹은 비교 사회주의론의 관점에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대응 및 적응 양상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미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특히, 북한체제의 본질 자체가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의 접근에 대한 경계를 바탕으로 정통성을 구축해 온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체제를 이탈한 체제경험자들의 시각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하는 연구자나 혹은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방법론적 사안이다.

셋째, 본 연구가 제시한 북한 내 국가-사회 관계 양상에 대한 내용을 현재의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국면이 북한사회의 자유화를 어느 정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 양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오히려 내부단속 및 통제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국가의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혹은 그 여파로) 한 체제 내 국가-사회 관계가 유연해질수도 혹은 경직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산가족 및 인도적 지원 등 인도적 사안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남북 간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상 및 논의 과정에서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전쟁 가능성이 소멸된 상태의 소극적 평화의 단계에서 민주주의, 복지, 인권이 총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평화담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과 행복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발전, 인권증진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 북한의 국가 권력과 주민들의 삶』. 서울: 오월의 봄, 2018.
-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김수암 외. 『북한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김인성·안현민·송하나. 『군복 입은 수감자』.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 박재규 외. 『새로운 북한 이야기』.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8.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_____.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 박형중·박영자.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 (2)』. 서울: 자료원, 1995.
- 안희창. 『북한의 통치체제: 지배구조와 사회통제』.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기우. 『북한의 선전선동과 ‘로동신문’』. 서울: 패러다임 북, 2015.
- 정일영·정대진 편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한반도데스크, 2017.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7~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_____.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_____.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3.
- Backes, Uwe and Steffen Kailitz (eds.). *Ideocracies in Comparison: Legitimation-Cooptation-Repression*. London: Routledge, 2015.
- Chen, Xi. *Social Protest and Contentious Authoritarianism in*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14.
- Collins, Robert. *Pyongyang Republic: North Korea's Capital of Human Rights Denial*.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 Demick, Barbara.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New York: Spiegel & Grau, 2010.
- Dickson, Bruce. *Wealth into Power: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China's Private Sector*. Berke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Dikötter, Frank. *Mao's Great Famine: The History of China's Most Devastating Catastrophe, 1958~1962*. Hongkong: Bloomsbury Paperbacks, 2018.
-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Theory and Practice, 2n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Edele, Mark. *Stalinist Society, 1928-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Filtzer, Donald A.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System of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53~19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Soviet Workers and Late Stalinism : Labour and the Restoration of the Stalinist System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London: Routledge, 1976.
- Frazier, Mark W.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6.
- Gleason, Abbott.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1995.
- Glendon, Mary Ann. *A World Made New: Eleanor Roosevel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Random House, 2002.
- Gregory, Paul R.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Hassig, Ralph and Kongdan Oh. *The Hidden People in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 Ji, You. *China's Enterprise Reform: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After Mao*. London: Routledge, 1988.
- Kaple, Deborah A. *Dream of a Red Factory: The Legacy of High Stalinism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Kotkin, Stephe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Linz, Juan J. *Totalitarianism and Authoritarian Regimes*.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Lu, Xiaobo and Elizabeth J. Perry.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rmonk: M.E. Sharpe, 1997.
- Migdal, Joel S.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1.
- Mitchneck, Beth A. *State, Society, and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 Nathan, Andrew J. *China's Trans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Pearson, Margaret M.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Saich, Tony.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ost-1949*. Brill: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2016.
-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Smith, Hazel.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Tudor, Daniel and James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North Clarendon: Tuttle, 2015.
- Unger, Jonathan. *The Transformation of Rural China*. London: M.E. Sharpe, 2002.
-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California

- University Press, 1988.
- White, Gordon.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Era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Whyte, Martin King.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Wright, Teresa.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 唐亮. 『現代中國の黨政關係』.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7.
- 趙宏偉. 『中國の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 毛里和子. 『毛澤東時代の中國』.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 鄭抗生·奧島孝康. 『中國の社會: 開放される12億の民』.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2002.

- Balla, Balint. *Kaderverwaltung: Versuch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 sowjetisch-volksdemokratischen Typs*. Stuttgart: Ferdinand Enke Verlag, 1972.
- Merkel, Wolfgang.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Empi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Wiesbaden: VS Verlag fuer Sozialwissenschaften, 2010.
- Seidel, Bruno and Siegfried Jenkner (eds.). *Wege der Totalitarismus-Forsch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4.

2. 논문

- 공영길·최진이. “1994년, 정치범 수용소인 ‘제18호 관리소’에 들어갔던 체험자의 증언.” 『임진강』. 제2호, 2008.
- 김종수. “북한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2008.
- 김정일.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김정일전집』. 제21권, 1973.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전집 9 (1979.4.~1982.3.)』.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류경원·최진이. “제18호 관리소의 흑막.” 『임진강』. 제3호, 2008.
- 림근오. “경제 주기성의 파탄과 ‘시장화-조중무역.’” 『임진강』. 제10호, 2010.
- 朴尙洙. “1950년대 北京 街道 ‘공간’과 居民委員會의 작동 방식.”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4집, 2014.
- _____. “중국 도시 人民公社 건설 시기 街道 공간의 국가와 사회, 1958~1965 - 北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6집, 2015.
- 박진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27권 4호, 1997.
- _____.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적 동원 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 투쟁.”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 1999.
- _____. “1960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지방당 중심의 공업관리체제 수립 과정과 내용.” 『현대북한연구』. 제6권 제2호, 2003.

- _____. “다층집권 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과 소련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1호, 2008.
- _____.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2012.
- 손혜민. “간부사업은 왜 대중형 리더를 배척하는가.” 『임진강』, 제18호, 2012.
- 송영훈. “해외체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쟁점과 동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오시진.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49권, 2016.
- 이동진. “‘제 2시민’으로서의 중국 농민 - 아파트하이드 시각에서.” 『아세아연구』, 제56권 4호, 2013.
- 이우영·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2008.
-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 이중희.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계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제7권 3호, 2003.
- 장경섭. “개혁기 중국 계급구조 변화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함의.” 『성곡논총』, 제28권 3호, 1997.
- 정은이.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인권에 미친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차이엔웨이·정해영. “중국 도시 ‘단위’ 공간의 형성과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2집, 2016.
- 최진이. “조선의 평양시 인구관리.” 『임진강』, 제21호, 2014.
- 현인에.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 Armstrong, Charles K. "North Korea and the Education of Desire: Totalitarianism, Everyday Life, and the Making of Post-Colonial Society." Alf L dtke (ed.), *Everday Life in Mass Dictatorship: Collusion and Evasion*. London: Palgrave, 2016.
- Beyme, Klaus von.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A Reassessment after the End of Communist Rule." Achim Siegel (ed.), *The Totalitarian Paradigm After the End of Communism*. Amsterdam: Rodopi B.V., 1998.
- Chan, Anita. "Images of China's Social Structure: The Changing Perspectives of Canton Students." *World Politics*, vol. 34, no. 3. April 1982.
- Cheng, Tiejun and Mark Selden. "The Origins and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Hukou System." *The China Quarterly*, no. 139. September 1994.
- Edele, Mark. "Soviet Society, Social Structure, and Every Day Life: Major Frameworks Reconsidered."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vol. 8, no. 2. Spring 2007.
- Eisenstadt, S. N. and Luis Roniger. "Clientelism in Communist Systems: A Comparative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16, no. 2&3. Summer/ Autumn, 1981.
- Fitzpatrick, Sheila. "Ascribing Class: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in Soviet Russia."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65, no. 4. December 1993.
- _____. "Revisionism in Retrospective: A Personal View." *Slavic Review*, vol. 67. October 2008.
- _____. "Revisionism in Soviet History." *History and Theory*, vol. 46. December 2007.

- Gelb, Michael. "Roots of Soviet Industrial Management, 1917~1941."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3, issue 1, 1981.
- Gerschewski, Johannes. "Weltweites Ende oder Renaissance des Totalitarismus?." *GIGA Focus*, no. 4, 2008.
- Gregory, Paul and Mark Harrison. "Allocation under Dictatorship: Research in Stalin's Archiv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3, no. 3, 2005.
- Harding, Harry.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January 1984.
- Harrison, Mark. "Dictator and Defense." Mark Harrison (ed.), *Guns and Rubles: The Defense Industry in the Stalinist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edin, Astrid. "Stalinism as a Civilization: New Perspectives on Communist Regime."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2, 2004.
- Hiroaki Kuromiya. "Edinonachalie and the Soviet Industrial Manager, 1928~1937." *Soviet Studies*, vol. 36, no. 2, April 1984.
- Jesse, Eckhard. "The Two Major Instances of Totalitarianism: Observ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oviet Communism and National Socialism." Achim Siegel (ed.), *The Totalitarian Paradigm After the End of Communism*, Amsterdam: Rodopi B.V., 1998.
- Kaple, Deborah A. "Agents of Change: Soviet Advisers and High Stalinist Management in China, 1949~196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8, no. 1, Winter 2016.
- Kennedy, Scott. "Fragmented Influence: Business Lobbying in

-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Scott Kennedy (ed.). *Beyond the Middle Kingdom: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na’s Capitalist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Kontorovich, Vladimir and Alexander Wein. “What did the Soviet Rulers Maximise?.”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9. November 2009.
- Maier, Hans. “Political Religion: a Concept and its Limitations.”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vol. 8, no. 1. March 2007.
- _____. “Political Religions and their Images: Soviet Communism, Italian Fascism and German National Socialism.”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vol. 7, no. 3. September 2006.
- Oi, Jean C. “Communism and Clientelism: Rural Politics in China.” *World Politics*, vol. 37, no. 2. January 1985.
- Perry, Elizabeth J.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State-Society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no. 139. September 1994.
- Sartori, Giovanni. “Totalitarismus, Modellmanie und Lernen aus Irrtümern.” Eckhard jesse (ed.). *Totalitarismus im 20. Jahrhundert*. Bon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5.
- Sellers, Jefferey M. “State-Society Relations.” Mark Bevir (ed.). *The SAGE Handbook of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 2011.
- Shlapentokh, Vladimir. “American Sovietology from 1917~1991: an Attempt at Diagnosis.” *Russian History*, vol. 22, issue 1. 1995.

- Sungmin Cho,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Prison Camps.” Michael David-Fox (ed.), *The Soviet Gulag: Evidence,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6.
- Szalontai, Balazs.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 Tsai, Kellee S. “Comparing China’s Capitalists: Neither Democratic Nor Exceptional.” Scott Kennedy (ed.), *Beyond the Middle Kingdom: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na’s Capitalist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Wank, David L. “Political Sociology and Contemporary China: State-Society Images in American China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7, issue 18, 1998.
- Whyte, Martin King.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Kenneth Liberthal, Joyce Kallgren, Rderick MacFarquhar, Frederic Wakeman, Jr., editors. *Perspectives on Modern China: Four Anniversaries*, New York: M.E. Sharpe, Inc, 1991.
- Womack, Brantly. “Review Essay: Transfigured Community: Neo-Traditionalism and Work Unit Socialism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26, June 1991.
- Backes, Uwe. “Nach dem Zusammenbruch des Kommunismus: 25 Jahre Totalitarismusforschung.” *Argumente und Materialien zum Zeitgeschehen*, heft 104, 2016.

Balla, Balint. “‘Bürokratie’ oder ‘Kader’-Verwaltung?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volksdemokratischen’ Typ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a. 2, heft 2. April 1973.

3. 기타자료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노동신문』.

CNN <<https://www.cnn.com>>.

통일부 <<http://unikorea.go.kr>>.

조선로동당 규약.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8.10.6,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6.9.3, 통일연구원).

OHCH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57. 1 February 2013.

_____.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영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